발간등록번호
12-B552123-000023-14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정책자료집 – 국가건축정책
2008.12~2013.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2008.12~2013.2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발행일 2013년 1월 31일
발행처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발행인 위원장 이상정
감수 김동호
편집 박병석, 조한권, 김용태, 강권, 김서곤, 이현숙
참여자 허필영, 허병규, 이근호, 오진수, 김용천, 엄운진, 방종식, 김재홍, 권유정, 안종희, 현정규, 임정민, 남선희

주소 우 110-310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율곡로 56
전화 02 397 8313

제작 ㈜공간사

2008.12~2013.2

제1·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자료집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현판식



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3차 대통령 보고회



3차 대통령 보고회



4차 대통령 보고회



대통령 주재 간담회



건축문화 활성화, 전주 한옥마을, 사진 윤준환

발간사 12

제1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출범 배경 및 목적 14
제1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출범 배경 18
제2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과 현황 22
제3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설립 목적: 기능과 역할 30

제2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목표 및 주요 활동 34
제1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비전과 목표 38
제2절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주요 활동 44
제3절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주요 활동 58

제3장 선진 건축문화의 창출 및 기반조성 78
제1절 국가 및 지역의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80
제2절 국가 상징거리 및 지역 대표거리 조성 90
제3절 신한옥의 보급 활성화 114
제4절 한국 전통정원의 조성 및 보급 130
제5절 건축설계산업 육성 및 발주제도 개선 138
제6절 신진건축사 발굴·육성 158
제7절 건축교육제도 개선 166
제8절 건축사 손해배상책임보험 활성화 174
제9절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182

제4장 국격 향상을 위한 디자인 및 친환경 정책 196
제1절 국토환경 디자인정책 198
제2절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 212
제3절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추진 226
제4절 4대강 수변공간 재생디자인 242
제5절 녹색건축 활성화 및 지원 254
제6절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및 효율적 관리 268
제7절 공공공간 가치 창출 및 이용 활성화 280
제8절 녹색도시 해외 수출 지원체계 구축 292

제5장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도시 정책 302
제1절 전국 순회포럼 등 지역 주민·일선행정과 공감대 형성 304
제2절 건축·도시 주요 담론 고찰: 건축·도시 정책토론회 324
제3절 건축문화 행사 내실화 336
제4절 해피하우스: 단독주택지 관리 서비스사업 활성화 350
제5절 도심 저층주거지 근린재생 362
제6절 해피차일드: 보육시설 개선 및 확충 376
제7절 보금자리주택 품격 향상 386
제8절 건축행정제도 개선 396
제9절 2017 UIA총회 서울 유치 지원 404
제10절 2014 도코모모 국제회의 서울 유치 지원 416

제6장 평가와 과제 422
1. 성가와 평가 424
2. 앞으로의 과제 428

부록 430
1.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432
2.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433
3. 주요 과제별 추진 경과 434
4. 1·2기 주요 언론보도 내용 436
5. 주요 활동일지 448
6. 기획단 직원 현황 454

발 간 사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건설위주의 '양적 성장'의 개발시대에서 '질적 도약'의 지식문화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환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건축·도시환경의 품격은 국가의 고유한 자산으로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좌우하고 국가 경쟁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기본법」이 2007년 12월 21일 공포되었으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령 제정과 함께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건축기본법」에 의하여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로 설립되어 2008년 12월 1일 1기 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11년 4월 14일 2기 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설립근거법인 「건축기본법」은 '건축정책의 수립', '건축정책위원회' , '건축문화의 진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관계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한편, 건축문화 진흥과 국토환경개선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국토환경조성과 국민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며 창조적 건축문화를 실현하여 한국건축문화가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 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정책자료집은 1기 위원회와 2기 위원회의 활동내용과 정책성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기 위원회에서는 건축·도시 분야의 최초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국가 차원에서 범부처적으로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기 위원회에서는 이미 수립된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민체감형 건축정책과 미래를 대비하는 건축정책으로 활동방향을 정하고 품격 있는 국토환경 창출을 위한 건축문화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정과제인 '국토환경 디자인 코리아'와 '녹색성장 기반 구축' 등 핵심 국정기조를 건축정책 전반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경관 창출을 위해 4대강 수변공간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보금자리 주택, SOC개발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디자인·경관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여 에너지가 덜 드는 녹색건축·도시를 확산하고,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통합 및 국가 브랜드화, 패시브 디자인 가이드라인, '녹색건축 한마당' 및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개최, 녹색도시 해외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설 위주의 건축설계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변환하고 건축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건축문화로 역량을 키우고 젊은이들에겐 일자리 창출과 유능한 건축사들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한국건축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한류 열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광역경제권역별로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을 총 12회 개최하였고, 그 결과 젊은 건축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신진건축사 발굴·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설계공모'를 2012년부터 시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2017년 UIA 서울 총회' 유치와 '2014년 도쿄모모 서울 대회' 유치를 지원하여 모두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간의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국가건축정책의 중요성에 관한 이해와 그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가건축정책의 비전을 실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아름다운 국토와 쾌적한 삶터'로 가꾸어 나가는 데 본 정책자료집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토의 품격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신 제1기 위원회 정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제2기 위원님들과 기획단 및 관계부처, 그리고 위원회 활동에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건축·도시·조경 분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1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이 상 정

이 상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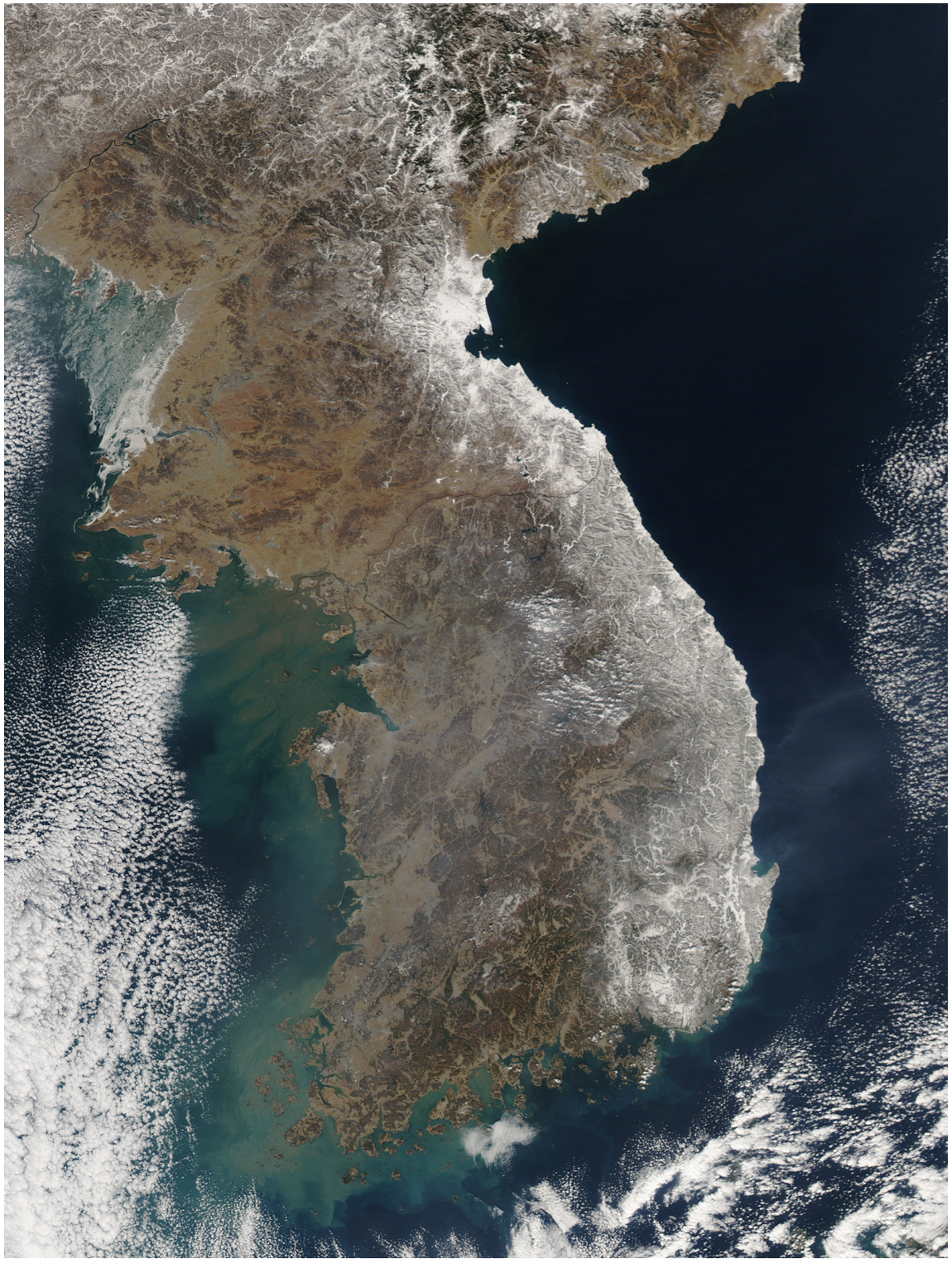


그림 1-1 한반도 위성사진 , 사진출처: NASA

01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출범 배경 및 목적

제1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출범 배경

제2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과 현황

제3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설립 목적: 기능과 역할

제1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출범 배경



우리나라의 국토환경은 경제개발 시대의 공급 중심 정책으로 인해 경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격 있는 환경으로 거듭나지는 못했다. 또한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양적 충족은 이루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그동안 우리의 건축문화는 각 지역이 가진 특성이나 정체성을 살려내기보다는 획일적 개발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특성화된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부처별로 공공시설물을 건설하고 있으나 가격경쟁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설계사와 시공자로는 독창적인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정부부처 간에 정책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중복 투자가 되기도 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국토환경을 구성하는 건축환경이 디자인을 비롯해 질적인 측면의 문제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수준은 세계적이다.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 불국사, 창덕궁, 수원화성 등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만 보더라도 우리의 건축문화유산이 얼마나 찬란한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남겨 놓은 이런 훌륭한 건축자산을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발달한 현대에는 더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개발 중심 시대에서 문화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 시대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건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장기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됐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21일 국토환경 디자인을 개선하고 건축문화 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토의 품격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기본법」(법률 제8852호)을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동 법에서는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부처와 건축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줄여서 '국건위'라고 표기하기도 함)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건축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령 제정과 함께 2008년 6월 22일 시행됐다. 동 법에 근거하여 국건위 민간위원에 대한 인선 작업이 시작되었고 2008년 11월 19일 처음으로 민간위원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축기본법이 제정·공포된 지 근 1년 만인 2008년 12월 1일에 대통령 소속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어 2008년 12월 10일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간위원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명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13명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식에 이어 대통령 주재하에 민간위원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건위의 일반현황과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녹색국토건축환경 구축' 및 '국가상징거리 조성방안' 등 역점 추진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2008년 12월 30일에는 국건위의 운영세칙, 기획단 운영규정 등을 심의·확정한 후 2009년 1월 2일 국건위 사무국인 국가건축정책 기획단이 발족되어 본격적인 국건위 운영을 위한 조직과 제도의 틀을 갖추었다. 이렇게 건축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최초의 법정기구인 국건위를 구성함으로써 건축의 공공성 구현과 문화적 가치 향상 등 국토환경 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국건위가 설립될 수 있었던 근거법인 건축기본법은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기본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기본 이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공동의 노력으로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을 창조하고 조성하여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건축기본법은 총칙, 건축정책의 기본 방향, 건축정책의 수립, 국가건축





그림 1-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현판식(2009년 1월 20일)

정책위원회, 건축문화의 진흥, 이렇게 총 5장, 전문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본법시행령」은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부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 3월 15일(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 여성부→여성가족부)과 2010년 7월 12일(노동부→고용노동부) 각각 두 차례 개정됐다. 이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 중 업무 관련성이 적은 외교통상부장관 등 7개 부처 장관을 제외(16개 부처→9개 부처)하고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민간전문가 확대(13명→18명)를 위해 2011년 1월 26일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그림 1-3 세종시, 첫마을 1, 2, 3단지 공동주택

제2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과 현황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

국건위는 「건축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당연직 위원과 건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임기 2년의 위촉위원으로 나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2008년 12월 최초 국건위 발족 당시 당연직 위원은 15개부(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의 장관과 법제처장 등 16명이었으며, 위촉위원은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13명을 위촉했다(제1기 위촉위원 명단, 표 1-2 참조).

국건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당연직 위원과 건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임기 2년의 위촉위원으로 나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후 당연직 위원 중 업무관련성이 적은 7개 부처(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제처)를 제외하고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민간전문가 확대를 위해 건축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1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2011년 4월 14일 제2기 국건위는 당연직 위원 9개 부처 장관(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과 민간위원 18명을 위촉했다(제2기 위촉위원 명단, 표 1-4 참조). 또한 동 국건위는 국건위 훈령에 따라 위촉위원 간 원활한 업무협의 처리 등을 위해 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을 두었고, 국건위 간사는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단 단장(국토해양비서관 겸직)이 맡았다.

국건위는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동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3개 분과위원회인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건축문

표 1-1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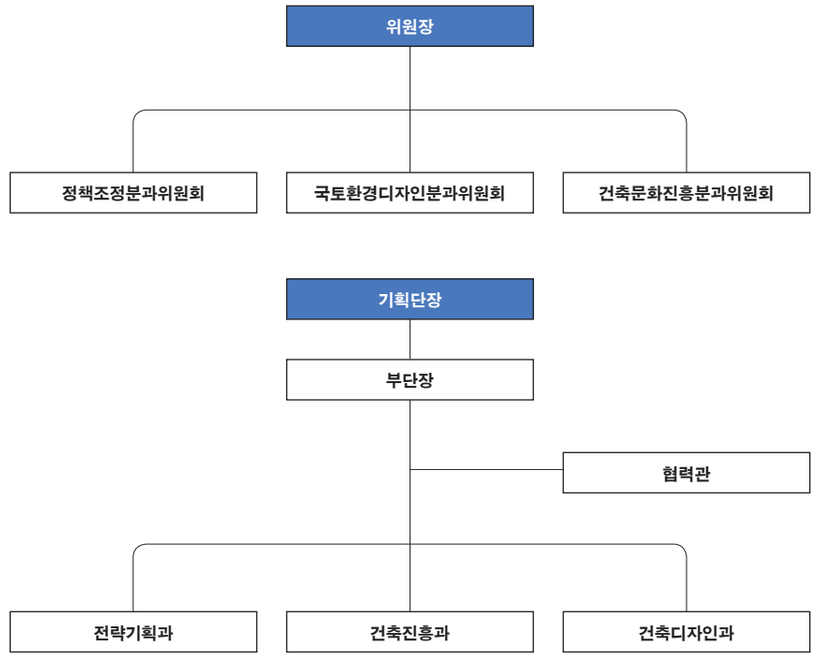


표 1-2 1기 위원 현황

구분	성명	소속(위촉 당시)	비고
민간위원 (13명)	정명원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원장	위원장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민간위원
	김영섭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민간위원
	김인철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분과위원장
	김혜정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분과위원장
	류춘수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대표	민간위원
	손세관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분과위원장
	안건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민간위원
	양윤재	서울시 행정부시장	민간위원
	이진숙	충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민간위원
	채선엽	동부엔지니어링 상무이사	민간위원
	최두남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민간위원
	최명철	단우건축사사무소 대표	운영위원
당연직 위원 (16명)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법제처장		

표 1-3 1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김혜정(분과위원장), 김광현, 김영섭, 김인철, 안건혁, 양윤재, 채선엽, 최명철,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손세관(분과위원장), 김광현, 류춘수, 안건혁, 양윤재, 이진숙, 채선엽, 최두남,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	김인철(분과위원장), 김영섭, 김혜정, 류춘수, 손세관, 이진숙, 최두남, 최명철, 국토해양부장관

표 1-4 2기 위원 현황

구분	성명	소속(위촉 당시)	비고
민간위원 (18명)	이상정	경상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위원장
	구영민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민간위원
	김창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	분과위원장
	배시화	가천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민간위원
	오경은	㈜피아건축 대표	민간위원
	이정면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민간위원
	이정형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민간위원
	제해성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분과위원장
	강준모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분과위원장
	김민수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민간위원
	김현숙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민간위원
	백운수	㈜미래E&D 대표	민간위원
	이제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민간위원
	이진숙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민간위원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민간위원
	김선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디자인처장	민간위원
	김현선	김현선디자인연구소 대표	민간위원
	백명진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민간위원
당연직 위원 (9명)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화진흥분과위원회를 두었고,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들의 희망과 전문 분야를 고려하되 위원이 복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각의 분과위원회는 7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건위는 원활한 사무처리 등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 그리고 계약직 등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두었다. 발족 당시 기획단은 청와대 국토해양비서관이 겸임하는 기획단장 외에 부단장, 전문계약직인 2인의 협력관과 전략기획과·건축진흥과·건축디자인과·도시디자인과 4개과 25명의 정

국건위는 원활한 사무처리 등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 그리고 계약직 등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두었다.

원으로 업무를 추진했다.

이후 2010년 8월 2일부터는 국가건축정책기획단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기획단 조직을 협력관 1명과 과장 1명을 각각 감축하여 부단장 1명, 협력관 1명, 전략기획과·건축진흥과·건축디자인과 3개과 정원 23명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기본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1-5 2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김창수(위원장), 김민수, 배시화, 이제선, 제해성, 최막중, 이정면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강준모(위원장), 김선미, 김현선, 김현숙, 백운수, 오경은, 이정형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	제해성(위원장), 김창수, 구영민, 백명진, 이정면, 이진숙, 강준모

표 1-6 기획단 인원 구성

구분	합계	고위 공무원	전문 계약직		4급	5급		6급		민간	비정규
						국가	지방	이하		파견	
정원	23	1	1	3	4	5	1	5	3		
현원	23	1	1	3	4	5	1	5	3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건축에 관한 전문·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6항에 건축에 관한 전문·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부터 제13조에 각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획단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간사로 지명토록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기 국건위에서는 위원회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가상징거리 조성 TF', '뉴하우징운동 TF', '4대강 수변공간 디자인 TF' 등을 설치하여 운용했다.

또한, 제2기 위원회에서는 2012년 3월 30일까지 3차에 걸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부터 97명을 추천받아 5월 3일 91명을

위촉하였으며, 이들의 임기는 제2기 위원 임기와 같이 2013년 4월 13일 종료되도록 하여 책임성과 일관성을 유지토록 했다. 회의는 정기적인 회의보다 안건과 관련된 연구 용역 검토나 심도 있는 안건 검토가 필요할 때 소집하였으며, 회의 운영은 과제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참석 범위 등을 정해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표 1-7 1기 자문위원단 현황

TF명	성명	소속 및 직위	담당 과제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디자인분과
	김경배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디자인분과
	김명곤	삼성물산 상무(주택CS실 실장)	도시재생분과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이사	디자인분과
	김용창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도시재생분과
뉴하우징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도시재생분과
운동 TF	민병호	행림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디자인분과
	박환용	경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도시재생분과
	배웅규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도시재생분과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프로그램연구실장	도시재생분과
	윤혜경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디자인분과
	임미숙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	디자인분과
	임희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도시재생분과
	최두호	토문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디자인분과장

• 국가상징거리 조성 TF 및 4대강 수변공간 디자인 TF 세부현황은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표 1-8 2기 자문위원단 현황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담당 과제
1	김병선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건축물 패시브디자인 활성화
2	윤용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건축물 패시브디자인 활성화
3	최영준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	건축물 패시브디자인 활성화
4	김병준	삼우설계(연구소 실장)	건축물 패시브디자인 활성화
5	오세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동주택외관 및 단지환경개선
6	조동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녹색건축·도시 브랜드화
7	이강수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연구위원	녹색건축·도시 브랜드화
8	박효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회장	녹색건축·도시 브랜드화
9	김강수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녹색건축·도시 브랜드화
10	이종정	에스와이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학 교육제도 개선
11	임창복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원장	건축학 교육제도 개선
12	이명식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건축학 교육제도 개선
13	김일현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건축학 교육제도 개선
14	이재훈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학 교육제도 개선
15	상형종	삼우설계 상무	건축학 교육제도 개선

제2기 위원 임기는 2013년 4월 13일 종료되도록 하여 책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회의는 정기적인 회의 보다 안건과 관련된 연구 용역 검토나 심도 있는 안건 검토가 필요할 때 소집 했다.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담당 과제
16	이강호	에시드종합설계 소장	건축학 교육제도 개선
17	이상호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학 교육제도 개선
18	유방근	경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학 교육제도 개선
19	유길준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학 교육제도 개선
20	박경립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학 교육제도 개선
21	문창호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건축학 교육제도 개선
22	이강훈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학 교육제도 개선
23	주석중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학 교육제도 개선
24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학 교육제도 개선
25	변소영	STUDIO TWO 건축사사무소 대표	해피 차일드 건축복지운동 전개
26	이영범	경기대학교 건축설계학과 교수	공공건축 총괄관리체계 구축
27	도창환	포항시청 시정 건축가	공공건축 총괄관리체계 구축
28	임홍철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공건축 총괄관리체계 구축
29	최일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공건축 총괄관리체계 구축
30	조광희	대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설계산업 육성
31	윤희철	대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건축설계산업 육성
32	김윤	㈜종합건축사사무소 아이텍	건축설계산업 육성
33	하헌정	구미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건축설계산업 육성
34	박상진	건축사사무소 도모 대표	건축설계산업 육성
35	차득기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국토정보실장	건축설계를 위한 지적정보 활용방안
36	김미연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설계를 위한 지적정보 활용방안
37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건축설계를 위한 지적정보 활용방안
38	현택수	경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건축의 날 내실화
39	김성대	한국건축가협회사업부회장	건축의 날 내실화
40	우동주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의 날 내실화
41	이창현	전북발전연구원 지역개발팀장	한옥의 국가브랜드화
42	남해경	전북대학교 교수	한옥의 국가브랜드화
43	김기연	삼우설계 상무	한옥의 국가브랜드화
44	박진희	용인대학교 교수	한옥의 국가브랜드화
45	김인수	㈜삼한에이텍	한옥의 국가브랜드화
46	고영훈	경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한옥의 국가브랜드화
47	이호열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한옥의 국가브랜드화
48	윤대길	조선건축사사무소 소장	한옥의 국가브랜드화
49	이순미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대표 (사)도시연구소 시중 연구소장	서민 저층주거지 재생 정책방안
50	고은영	여성건축사협회 회장	서민 저층주거지 재생 정책방안
51	김기연	인제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서민 저층주거지 재생 정책방안
52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근린재생 정책방안
53	김영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근린재생 정책방안
54	김태훈	대한지적공사 사업이사	해외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수립 및 제도개선
55	정창무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해외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수립 및 제도개선
56	김홍규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해외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수립 및 제도개선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담당 과제
57	이상문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해외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수립 및 제도개선
58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학회제도위원회위원장)	건축서비스산업의 선진화 기반조성
59	권병조	대한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	건축서비스산업의 선진화 기반조성
60	김의중	서보건축사사무소 소장(사협이사)	건축서비스산업의 선진화 기반조성
61	김태우	디자인그룹아리 대표 (건축가협 이사, 위원장)	건축서비스산업의 선진화 기반조성
62	박순천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소장 (여건협이사)	건축서비스산업의 선진화 기반조성
63	박인수	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 소장 (새건협이사)	건축서비스산업의 선진화 기반조성
64	전영철	열린모임 참건축 대표 (건축사협 전 상근이사)	건축서비스산업의 선진화 기반조성
65	조성환	충남대학교 교수	건축진흥원 설립지원
66	강철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건축진흥원 설립지원
67	이정호	경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진흥원 설립지원
68	정재용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건축도시박물관 설립지원
69	송복섭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건축도시박물관 설립지원
70	이왕기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도시박물관 설립지원
71	이승복	연세대학교 교수	녹색 건축 구조·설비·조경기준 개선
72	김용식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녹색 건축 구조·설비·조경기준 개선
73	하기주	경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녹색 건축 구조·설비·조경기준 개선
74	강철기	경상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	녹색 건축 구조·설비·조경기준 개선
75	조세환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장	녹색 건축 구조·설비·조경기준 개선
76	신현돈	서안 알앤디 디자인 소장	전통 정원 기준, 해외보급 지원방안
77	박철수	서울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계장	전통 정원 기준, 해외보급 지원방안
78	강호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전통 정원 기준, 해외보급 지원방안
79	김창덕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정보호환을 위한 통합 표준체계 구축
80	김홍룡	삼우설계 소장	정보호환을 위한 통합 표준체계 구축
81	조욱환	㈜삼우이앤아이 대표이사 내화건축자재협회장	정보호환을 위한 통합 표준체계 구축
82	조훈희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정보호환을 위한 통합 표준체계 구축
83	김인한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정보호환을 위한 통합 표준체계 구축
84	김지엽	아주대학교 교수	건축사책임보험제도 활성화
85	이강주	창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 활용
86	김승근	강동대학교 건축과 교수	농어촌 경관 제도개선 방안
87	윤충열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국가상징거리 지역확산
88	전영훈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해피하우스사업 추진
89	황재훈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도시경관기본계획
90	안재락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도시경관기본계획
91	이성근	경희대학교 교수	도시경관기본계획

제3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설립 목적: 기능과 역할

「건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건축 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건축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각각의 분과위원회는 「건축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세부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책조정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간 건축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기획·설계 등에 대한 사항
4) 건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디자인 향상에 관한 사항
2) 「건축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추천에 관한 사항
4) 지속 가능한 경관 조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등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초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전문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축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5) 건축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설계기법의 연구 지원 및 첨단기술의 개발 지원 사항 등

또한 국가건축정책 기획단은 「건축기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준비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작성
3)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4) 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모든 업무 지원

2010년 8월 2일 이후 개편된 조직에 따른 국건위 기획단의 각과별 업무 분장은 아래와 같다.

표 1-9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 업무 분장

과명	주요 업무
전략기획과	위원회 운영 및 회의 개최,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설치·운영, 관계부처 정책 조정, 인사·예산·회계·감사·국회 업무, 건축선진화 제도개선, 위원회 업무 지원, 서무 업무 등
건축진흥과	주요 건축정책 수립, 건축정책기본계획 심의·검토,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저탄소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한옥 보전·진흥 및 세계화, 건축 관련 첨단기술 개발 지원, 건축 관련 제도와 법령 및 기준 개선, 공공건축, 공공시설물의 품격 개선 등
건축디자인과	지속 가능 경관 조성 및 환경 개선, 도시·마을 환경개선사업, 공원녹지 개선·확충, 도시공간 제도 개선, 공공시설 디자인 시범사업, 도시재생 기획·설계, 공동주택 외관 및 단지환경 개선,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

국건위의 일반적 업무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국건위 위원들이 모인 합동연석회의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발표하고 리스트를 작성한다. 이때 제시되는 후보 과제들 중에서 사회적 이슈와 파급효과 그리고 국정철학 등을 고려해 과제 리스트를 선정하고 과제 성격에 적합한 담당 분과위원회를 배정한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

해 추진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 합동연석회의에서 심층 검토 결과를 기초로 논의를 확정한다.

과제 검토는 기획단의 사전 검토, 분과위 배정, 분과위 검토 등을 거쳐 합동연석회의에서 최종 검토한다. 필요시에는 분과위 및 합동연석회의에서 반복적으로 과제를 검토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후 반영한다. 타 위원회와 중복성이 있는 과제는 위원회 간 사전 실무 협의 등을 통해서 과제 담당 주체를 결정한다.

과제 검토는 기획단의 사전 검토, 분과위 배정, 분과위 검토 등을 거쳐 합동연석회의에서 최종 검토한다. 필요시에는 분과위 및 합동연석회의에서 반복적으로 과제를 검토하며 아울러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협의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후 반영한다.

표 1-10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업무 처리 절차





그림 2-1 2012 제1회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대상,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사진 박영채

02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목표 및 주요 활동

제1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비전과 목표
제2절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주요 활동
제3절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주요 활동

제1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비전과 목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라는 비전 아래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 분야 녹색성장 기반 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그리고 3대 목표를 이루는 6대 핵심전략과 18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표 2-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목표, 핵심전략 및 실천과제

비전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목표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 분야 녹색성장 기반 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전략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건축·도시 환경 개선	녹색 건축·도시 구현
실천과제	● 지역 및 도시경관 향상 ● SOC 국가기간시설 디자인 제고 ● 공공부문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 공공건축 디자인 쇄신 ● 민·관이 협력하여 도심 재창조	● 탄소저감형 도시환경 조성 ●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 친환경 주택건설 공급 활성화 ● 녹색건축 선도사업 추진
전략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실천과제	●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미래 기술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건축·도시 핵심기술과 설계기법 개발	●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의 보전·활용 ● 지역 건축자산을 재활용한 건축문화 창조 ● 지역별 대표거리 조성 사업 추진	●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실현 ● 건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 ● 건축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

1. 6대 핵심전략과 18개 실천과제

국건위가 추진하고 있는 6대 핵심전략은 ①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② 건축·도시 환경 개선 ③ 녹색 건축·도시 구현 ④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⑤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⑥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등이다. 국건위는 6대 핵심전략을 세우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18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 도시 내에서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체감형 시설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통합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한다. 자연과 조화되는 농어촌 경관을 형성하고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의 해안경관 창출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국토의 품격 향상을 추진한다.
- 친환경 철도를 건설하고 고속도로의 디자인을 정비한다. 항만시설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명품교량을 건설하고 관광자원화하는 등 주요 SOC시설에 대한 디자인 향상 전략을 마련한다.
- 공공부문의 디자인 업무를 개선하여 통합디자인을 실현한다. 발주 방식을 다양화하고 관련 법령과 효율적으로 연계·통합하여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② 건축·도시 환경 개선

-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을 특화하고 환경을 개선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민간부문 건축·도시 환경 개선을 선도한다.
- 공공청사, 교육·문화·체육 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합리적 설계 기준을 마련한다. 학교시설의 디자인 강화, 특별건축구역의 활성화 등 공공건축의 디자인을 쇄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지원 종합대책 마련 등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통한 도심 재창조를 추진한다.

③ 녹색 건축·도시 구현

- 자원순환형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의 조성을 통한 탄소저감형 도시환경을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확대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추진한다.
- 그린홈 공급 확대 및 기술개발을 통한 성능을 높인다. 주택부문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친환경 주택 건설 및 공급을 활성화한다.
- 에너지절약형 저탄소 녹색학교를 보급하고 탄소제로 건축 시범사업 등 녹색건축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④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 건축사 등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축과 관련된 국가적인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신진 우수 설계자를 육성하는 등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 내진 기준과 방재 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축(조경) 관련 기준을 성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건축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활성화 등 미래 기술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 초고층 건축물 등 첨단 설계기술의 개발과 IT기술과의 융·복합화 등 녹색건축 관련 기술 고도화를 통해 건축·도시 관련 산업을 창의성과 기술력을 겸비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⑤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 기존 도심의 한옥지구를 보전하고, 재생한다. 농어촌 한옥마을 조성, 한옥의 산업화와 현대화 기술개발, 한옥의 보급·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등 건축문화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유휴 건축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모델을 마련하는 등 지역의 다양한 건축자산을 건축문화 창조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광화문-한강 구간에 국가상징거리 및 지역대표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정체성 확립과 관광자원화 등 지역 발전을 촉진한다.

국건위가 추진하고 있는 6대 핵심전략은
❶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❷ 건축·도시 환경 개선
❸ 녹색 건축·도시 구현
❹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❺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❻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등이다.
국건위는 6대 핵심전략을 세우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18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⑥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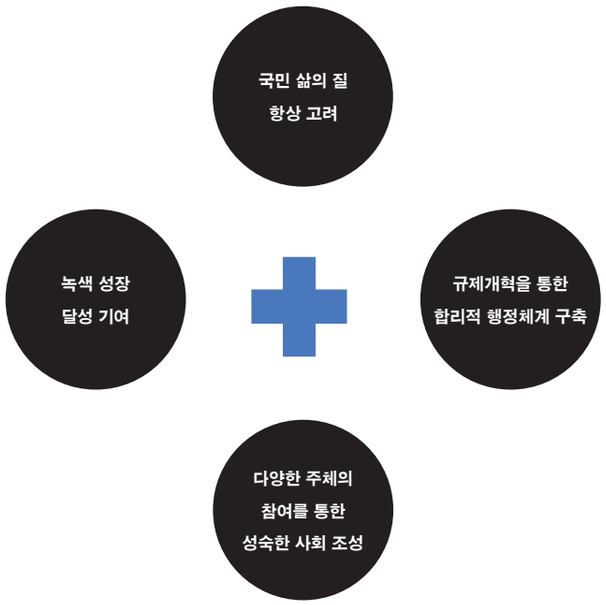
- 각종 건축 관련 행사의 내실화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학생 및 일반인 대상으로 건축문화 교육을 확대하고, 우수한 건축물과 도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를 실현한다.
- 국내 우수 전문가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가(조경가) 국제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해외공관을 활용하여 한국의 건축문화(한(韓)스타일)를 홍보하는 등 건축문화의 국제 경쟁력 향상방안을 제시한다.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건축문화 기록물을 축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적 토대를 마련한다.

2. 핵심전략별 실천과제 선정을 위한 고려 사항

국건위는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6대 핵심전략별로 추진해야 할 18개 실천과제를 선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1)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파급 효과가 있는 과제로서 도시환경의 기반인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2) 국정과제로서 미래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친환경 녹색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했다. 녹색산업, 지식서비스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와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3) 국토환경 전반에 대한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행정 절차 및 법·제도를 개선하여 합리적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도가 높은 과제를 선정했다.
4) 다양한 추진주체가 통합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수단의 합리적인 추진이 가능하고, 이미 추진 중인 국정과제 중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와 연계·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표 2-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실천과제 선정 기준



3. 추진체계와 실행력 제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관과제와 부처별 과제, 지자체 추진과제 등에 대한 추진 현황을 총괄적으로 취합하여 성과평가 자료를 마련하고 국건위에 매년 보고한다. 또한 2년마다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에 대해 국회에 보고한다.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마련해야 하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은 현재까지 서울시, 부산광역시, 경기도에서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전라북도(연구용역완료),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제주도는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거나 수립 중이다. 나머지 모든 광역시·도에서도 지역건축위원회 구성 및 예산확보 등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관과제와 부처별 과제, 지자체 추진과제 등에 대한 추진 현황을 총괄적으로 취합하여 성과평가 자료를 마련하고 국건위에 매년 보고한다. 또한 2년마다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에 대해 국회에 보고한다.



그림 2-2 해운대 마린시티 전경, 자료제공 건원

제2절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주요 활동

1. 대통령 보고회

1) 제1차 대통령 보고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09년 3월 30일 오후 3시에 청와대 세종실에서 첫 대통령 보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민간위원 13명과 당연직 정부위원 7명 등 총 20명의 위원과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경제·국정 기획수석, 대변인, 국토해양·지역발전·미래비전 비서관, 서울특별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건의 안건 보고가 있었는데, 먼저 국건위 위원장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현황 및 활동'에 관하여 보고했다. 이어서 양윤재 위원이 '국가상징거리 조성방안'에 대하여, 손세관 위원이 '뉴하우징운동'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채선엽 위원이 '4대강 수변공간 디자인'에 관하여 각각 보고를 했다. 안건 보고에 이어 위원장 주재로 보고 안건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그림 2-3 제1차 대통령 보고회



그림 2-4 제2차 대통령 보고회

제2차 대통령 보고회는 3개 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의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해 핵심 녹색뉴딜사업으로서 4대강 사업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2) 제2차 대통령 보고회

제2차 대통령 보고회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지역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합동 보고회의 형식으로 4대강 살리기 합동 보고를 2009년 4월 27일 오후 3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했다. 보고회의 목적은 3개 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의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해 핵심 녹색뉴딜사업으로서 4대강 사업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민간위원 59명(지역위 17명, 녹색위 29명, 건축위 13명)과 정부위원 23명(장·차관 등 18명, 국책연구원장 등 5명)이 참석했다. 또한 4대강 주변 자치단체장 5명(경남·경북 지사, 전남지사, 충주시장, 부여군수), 녹색성장협의체 대표 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건위가 4대강 수변공간 재생디자인 기본 구상의 필요성과 사업의 목표와 전략 그리고 전략에 따른 실천과제 등을 담은 '4대강 수변공간 재생디자인 기본 구상'을 보고하였으며, 그 외에도 6개 안건에 대한 보고와 보고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

3) 제3차 대통령 보고회

국건위의 제3차 대통령 보고회는 2010년 5월 3일 오후 3시에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렸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건위의 민간위원 11명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장관과 기획재정부차관 등 정부위원 4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국토연구원 원장, 건축·도시 분야 전문가, 청와대의 경제특보를 비롯하여 정책실장,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과 관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건의 안건 보고가 있었다. 첫 번째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을, 두 번째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보금자리주택 품격 향상방안'을, 세 번째로 손세관 위원이 '국격 향상을 위한 신한옥 플랜'을, 마지막으로 국토연구원장이 '강 중심의 국토 재창조를 위한 친수지역 활용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안건 보고에 이어 위원장 주재로 보고 안건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표 2-3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연도	총계		본회의				분과회의	
	개최실적	안건 수	개최실적	안건 수	주재		개최실적	안건 수
					대통령	위원장		
2008	1	3	1	3	–	1	–	–
2009	25	51	4	7	2	2	21	44
2010	20	47	5	10	1	4	15	38
계	**46**	**101**	**10**	**20**	**3**	**7**	**36**	**82**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체회의

1) 본회의

제1기 국건위 임기 동안에는 총 일곱 차례의 본회의(대통령 보고회 3회 제외)를 개최했다. 국건위 본회의의 개최 일자와 상정 안건 등은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본회의 개최 현황

구분	회의일자	상정 안건
제1차	2008년 12월 30일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심의
		② 국가건축정책기획단 운영규정 심의
		③ 건축기본계획 작성지침 심의
제2차	2009년 9월 4일	2009년 건축디자인시범사업 지정계획(안) 심의
제3차	2009년 12월 8일	건축디자인 기준 심의
제4차	2010년 4월 13일	2010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계획(안) 심의
제5차	2010년 4월 19일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안 심의
제6차	2010년 7월 29일	국가건축정책기획단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제7차	2010년 11월 29일	①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심의
		② 대한민국역사박물과 건립 추진 보고
		③ 공공건축물 품격향상 및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

2) 분과회의

국건위는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안건의 검토 및 사전 심의 등을 위해 분과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제1기 국건위 임기 동안에 3개 분과위원회가 모두 함께 참여한 합동 연석회의는 20회가 열렸다. 각 분과위원회별로는 정책조정분과위원회가 9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가 5회,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가 2회 등 총 16회의 개별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분과회의의 개최일자, 상정 안건 등은 아래 표 2-5부터 표 2-8까지와 같다.

표 2-5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합동 연석회의 개최 현황

연도	차수	회의일자	상정 안건
2009	제1차	5월 26일	①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② 건축디자인 기준 수립 추진현황
			③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시행계획(안)
			④ 수변도시 비전공모 추진계획(안)
			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전략
	제2차	7월 21일	① 위원회 추진과제(안)
			② 건축행정 제도개선 추진현황
			③ 건축·도시 문화 포럼 추진방안
			④ 위원회 중점과제 설명자료
	제3차	8월 25일	①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정계획(안)
			② 도시 공간환경 디자인 강화방안
			③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계획
			④ 국건위 1주년 기념행사 추진계획
			⑤ 하반기 대통령 보고회 추진방향
			⑥ 위원회 중점과제 추진현황
			⑦ 수변도시 비전공모 추진현황
			⑧ 위원회 자문위원 등 위촉 절차

연도	차수	회의일자	상정 안건
	제4차	10월 13일	① 위원회 추진의제
			② 하반기 대통령 보고 주제
	제5차	11월 3일	①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안)
			② 보금자리주택 디자인·품질 혁신방안
			③ 한옥육성방안
	제6차	11월 17일	① 보금자리주택 디자인·품질 혁신방안
			② 국토재창조를 위한 수변도시 비전
			③ 한옥육성방안
			④ 중점과제 추진현황
			⑤ 위원회 과제 추진방법 개선방안
2010	제1차	1월 8일	①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② 보금자리주택 디자인·품격 향상방안
			③ 국가상징거리 조성방안
			④ 한옥보전 및 활성화 방안
			⑤ 건축물 에너지 절감방안 안건 발굴 검토
			⑥ 위원회 홍보브로셔(안)
	제2차	1월 25일	① 수변도시 비전공모 심사결과 보고
			② 수변도시 비전공모 수상작 선정 토의
			② 수변도시 비전공모 시상계획(안) 보고 및 토의
	제3차	2월 9일	수변도시 비전공모 심사결과 재심사 요구(안)
	제4차	3월 3일	① 제1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② 보금자리주택 품격 향상방안
			③ 한옥의 보전 및 활성화 방안
			④ 국토품격 재창조를 위한 친수공간 활용방안
			⑤ 대통령 보고회시 토의주제
			⑥ 위원회 홍보브로슈어 안
	제5차	3월 30일	① 2010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안)
			② 신규 보고안건 발굴 검토
	제6차	4월 13일	① 제3차 대통령 보고회 보고안건
			② 제3차 대통령 보고회 준비일정, 행사계획 보고 및 토의
			③ 제3차 대통령 보고회 토론진행 방향 보고 및 토의
	제7차	4월 20일	제3차 대통령 보고회 토론진행 및 행사준비 사항 등 논의
	제8차	5월 19일	① 안건발굴 추진현황 및 계획
			② '토론회' 추진계획(안)
	제9차	6월 8일	'토론회'추진계획(안)
	제10차	7월 22일	① 토론회 개최결과 및 조치계획 및 토의
			② 연구용역 추진현황(공공건축) 및 계획
			③ 기획단 별도정원 등 보고
	제11차	8월 31일	도시 분야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안)
	제12차	9월 28일	① 제4차 대통령 보고회 상정 예정안건 준비현황
			②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백서 발간추진
	제13차	10월 29일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개최계획(안)
			②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③ 공공건축 품격향상 및 에너지효율 제고방안
			④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백서 발간계획
	제14차	11월 9일	①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② 공공건축 품격향상 및 효율적 관리방안

표 2-6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	차수	회의일자	상정 안건
2009	제1차	2월 12일	건축기본계획 초안 논의
	제2차	3월 4일	건축기본계획 수립방향 논의
	제3차	3월 13일	건축기본계획 수립내용 검토
	제4차	4월 15일	건축기본계획 수립관련 총론 검토
	제5차	4월 28일	건축기본계획 수립관련 각론 검토
	제6차	5월 8일	건축기본계획 수립 총괄 검토
	제7차	8월 25일	건축기본계획(안) 총괄 검토
	제8차	10월 28일	건축기본계획 수정안 총괄 검토
2010	제1차	10월 18일	도시품격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개선방안

표 2-7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	차수	회의일자	상정 안건
2009	제1차	1월 22일	국토환경 개선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방향 논의
	제2차	5월 15일	건축디자인 기준 수립방향 논의 및 사전 검토회의(1차)
	제3차	7월 3일	건축디자인 기준 사전 검토회의(2차)
	제4차	9월 3일	① 2009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② 도시공간 환경디자인 강화방안
			③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계획
	제5차	10월 13일	2009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민간전문가 추천안 심의

표 2-8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	차수	회의일자	상정 안건
2009	제1차	6월 18일	중점 추진과제 검토 및 분과위 운영방안 토의
	제2차	8월 13일	건축문화진흥과제 협의

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최 행사

1) 정책토론회

제1기 국건위는 건축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2회 개최했다.

첫 번째 정책토론회는 '기회의 한국건축'이라는 주제로 2010년 6월 30일 14시에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국건위가 토론회를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로 구성된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이 주관했다. 건축과 관련된 산업계와 학계 인사들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우리나라의 국가건축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1·2부로 나누어진 토론회의 1부에서는, 국토해양부 김일환 과장의 '한국건축의 현황 및 발전 방향', 서울시 이건기 과장의 '건축정책 집행의 현황과 발전 방향', 건축가협회 이광만 부회장의 '국가 품격을 높이는 건축계의 역할', 건축학회 박경립 부회장의 '건축계의 복합성과 네트워킹', 대한건축사협회 전영철 이사의 '건축계의 제도 현황과 제안'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2부에서는 김인철 위원을 좌장으로 주제발표를 한 패널과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벌였으며, 이날 토론회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두 번째 정책토론회는 '우리는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하나'라는 주



그림 2-5 기회의 한국 건축 토론회(2010년 6월 30일)

제로 소통과 실용을 추구하기 위한 도시정책 토론회를 2010년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국건위가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조경학회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했던 토론회는 도시·건축 분야 기술사 등 도시 관련 산업계와 학계 인사들과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300여 명이 모여 도시정책의 현안 및 발전 방향

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첫 번째 발제자로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가 '야만의 도시에서 야망의 도시로'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 협성대학교 이재준 교수가 '도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그린도시 조성'이라는 주제로, 제일엔지니어링 윤중경 사장이 '삶을 디자인하는 도시계획과 정책의 제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최명철 위원을 좌장으로 한 지정토론에서는 김세용(고려대학교 교수), 김찬호(중앙대학교 교수), 선권수(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부회장), 홍기문(LH 녹색경관처장), 유성용(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 진희선(서울시 도시관리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도시 분야 정책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지정토론에 이어서 방청석을 대상으로 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그림 2-6 민간위원 및 기획단 워크숍(2010년 3월 24일)

2) 업계·단체 간담회

제1기 국건위는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관련 단체 등과 4회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건축 3단체와 2009년 7월 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국건위에서는 정명원 위원장과 최명철 운영위원, 김혜정·손세관·김인철 분과위원장, 강성식 부단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의 최영

집 회장과 전영철 이사, 한국건축가협회의 김창수 회장과 이관직 이사, 새건축사협의회의 이필훈 회장과 함인선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건위 현황 및 주요 업무 소개, 국건위 발전 방향 및 국가건축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토의, 정책 제안 건의, 국건위와 건축 3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장기적으로는 발주제도 개선과 함께 가되, 먼저 설계의 중요성과 저변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발주제도의 개선도 건축계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추진해야 하고, 턴키 위주의 획일주의 타파가 중요하다.

(1) 중장기적으로는 발주제도 개선과 함께 가되, 먼저 설계의 중요성과 저변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발주제도의 개선도 건축계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추진해야 하고, 턴키 위주의 획일주의 타파가 중요하다.

(2) 규제완화를 통해 노후된 건물을 그린 리모델링하면 CO_2를 줄일 수 있고, 미관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그린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3) 설계·시공·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건축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활성화를 위해 중소 설계사무소에게 소프트웨어 공동구매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건위는 물론 건축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직이며 많은 역할과 활동을 해야 한다.

(5) 지구온난화 차원에서 기획 중인 '투발루(지구온난화로 사라진 남태평양의 섬) 프로젝트'에 국건위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6) 3개 협회의 다양한 매체와 모임을 통해 국건위의 동정과 주요 추진과제를 알리는 등 홍보에 협조한다.

(7) 앞으로 이러한 모임을 자주 가져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건위의 정책 및 로드맵을 알릴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간담회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도시·건축학회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건축·도시·조경학회 회장단과 2009년 7월 3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위원회의 정명원 위원장, 최명철 운영위원과 김혜정·손세관·김인철 분과위원장, 강성식 부단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대한건축학회의 손장열 회장과 제해성 부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이양재 부회장과 이창수 이사, 한국도시설계학회의 온영태 회장과 김기호 부회장, 한국조경학회의 조세환 회장과 양홍모 수석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학교를 공원 또는 커뮤니티 시설과 결합하는 'School Park', 질 좋은 보육환경 확보를 위한 '보육시설 개선'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공감형 건축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건위 현황 및 주요 업무 소개, 국건위 발전 방향 및 국가건축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토의, 정책 제안 건의 등이 이루어졌다. 간담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건위와 유관 학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경쟁력 있는 녹색 건축·도시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학계의 다양한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건위는 국가상징거리 조성, 4대강 수변공간 재생디자인, 뉴하우징 운동 등 국건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도시 문화 포럼, 제도 개선 등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해 학회의 다양한 의견을 구했다.

이에 대해 관련 학회에서는 국건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학교를 공원 또는 커뮤니티 시설과 결합하는 'School Park', 질 좋은 보육환경 확보를 위한 '보육시설 개선'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공감형 건축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전문가 집단과의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해 건축정책의 수립·기획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건의되었다.

세 번째 간담회는 '건설업계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간의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건설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건설업·단체와 2009년 8월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국건위에서는 정명원 위원장, 김혜정 정책조정분과위원장, 최명철 운영위원, 양윤재 위원, 강성식 부단장 등이 참석했고, 건설협회의 권홍사 회장과 천태삼 기술지원본부장이 함께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업종·업역 간 융합, 발주제도 개선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건설사에서는 대림산업의 최수강 부사장, 포스코건설의 임경호 상무, 현대산업개발의 손성호 상무, 롯데건설의 강대권 상무, 한화건설의 이근포 부사장, 한진중공업의 서정범 본부장, 코오롱건설의 김태홍 본부장, 삼환기업의 김재환 상무, 풍림산업의 김철영 상무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건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및 사업과 건축·도시 관련 제도 개선 등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그림 2-7 건축·도시관련학회 초청 조찬 간담회(2009년 7월 31일)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국건위의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 업종·업역 간 융합, 발주제도 개선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특히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환경·에너지 관련 유사 인증제도의 통합 시행, 중앙집중형 조달 방식 개선, 재건축·재개발 관련 의무규정 완화 등 과감한 규제완화에도 힘써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활성화시켜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도시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네 번째로 국건위는 '건축업계 발전 방향과 건축행정제도 개선, 건축업계 정책 제안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건축 3단체와 2010년 1월 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신년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국건위에서는 정명원 위원장, 최명철 운영위원, 박민우 부단장 등이 참석했고, 대한건축사협회의 최영집 회장과 전영철 이사, 한국건축가협회의 김창수 회장, 곽재환 이사, 이상림 차기회장, 윤석우 전회장, 새건축사협의회의 이필훈 회장과 함인선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합단체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표했다. "통합은 각 협회 간의 컨센서스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고, 당장의 통합은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건축기본법에 친환경 규정이 없어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국건위에서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턴키제도·현상설계 개선, 건축신고제도의 완화 등 건축계가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이 관심을 갖는 새로운 아젠다 개발이 필요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의 시행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다.

특히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환경·에너지 관련 유사 인증제도의 통합 시행, 중앙집중형 조달 방식 개선, 재건축·재개발 관련 의무규정 완화 등 과감한 규제완화에도 힘써 줄 것을 건의했다.

3) 워크숍

제1기 국건위는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현안의 심도 있는 토론 등을 위해 총 5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1차 워크숍은 2009년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위원 12명, 기획단 24명, 국토해양부 5명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전략 및 추진과제',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한 국건위의 역할'과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및 뉴하우징운동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그림 2-8 건축 3단체장 초청 조찬모임(2009년 7월 8일)



그림 2-9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1차 워크숍(2009년 1월 16일~17일)

제2차 워크숍은, 민간위원 12명, 기획단 18명, 건도연 3명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6월 26일 영월 별마로 천문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전략과 추진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함과 아울러, 4대강사업의 '천변저류지'와 관련한 청룡포 등의 현장 시찰과 동강 일대 수변환경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이 진행되었다.

제3차 워크숍은 2009년 12월 29일 위원장 등 민간위원 11명을 비롯하여, 손장열 건축학회장, 황희연 국토·도시계획학회장, 조세환 조경학회장, 최영집 건축사협회장, 김창수 건축가협회장, 이필훈 새건축사협의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등 유관단체장 7명과 기획단의 박민우 부단장 등 과장급 이상 7명,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디자인공간문화과장, 청와대 행정관, 국토부 건축문화팀장 등 총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중구 정동 소재 달개비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송년 워크숍에서는 국건위 기획단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0년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건축·도시·조경 분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 마련 필요성과 추진방안 등을 제시한 중앙대학교 이언구 교수의 '저탄소 녹색건축의 정책 방향'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이어서 이에 대한 토의와 함께 국건위의 발전 방향 모색 등을 위한 자유토론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제4차 워크숍은 국건위 위원장, 김인철·류춘수·이진숙·최두남 위원 등 민간위원 5명과 박민우 부단장 등 총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0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간 구례, 하동, 순천 일원에서 현장 시찰을 겸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위원회 정책 과제 발굴에 대한 전략회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전통사찰 및 신한옥 마을 조성 현장 견학', '섬진강 생태하천 조성 사업 현장 방문', '신한옥 및 생태 수변공간 견학' 등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5차 워크숍은 국건위 위원장, 김인철·김혜정·손세관·채선엽 위원 등 민간위원 5명과 유병권 부단장 등 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10월 22일부터 23일 이틀간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소재 숲체원에서 국건위 기획단의 추계 체육행사를 겸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11년 추진과제 중 기획단에서 사전 연구 및 조사한 '생활 중심 공간으로서의 공원 조성방안', '범죄 방지를 위한 안전도시 조성방안', '지방건축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등이 있었다.



그림 2-10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7차 회의(2010년 11월 29일)

제3절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주요 활동

1. 대통령 보고회

1) 제4차 대통령 보고회

제2기 위원회는 위원 위촉 후 처음으로 2011년 6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녹색성장위원회와 합동으로 제4차 대통령 보고회를 가졌다. 민간위원 17명을 포함해, 정부위원, 청와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건축물 추진성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에너지 절감(주택의 층고, 조명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녹색문제는 경제성문제보다 선후진국 할 것 없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국가의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도시 수출, 한옥 등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책 기획과 국민이 따라갈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 수립을 당부했다.

"녹색문제는 경제성 문제 보다 선후진국 할 것 없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국가의 당면 과제이다."

이명박 대통령

이날 합동 보고회에 앞서 제2기 위원들의 대통령과의 첫 상견례를 겸한 조찬 간담회에서 제2기 위원회의 활동 방향으로 도심 저층 주거지 마을환경 개선, 열악한 보육시설 리모델링(해피차일드)과 단독 주택지 관리서비스 사업(해피하우스)을 활성화하고 4대강 주변 등 농어촌 경관 개선,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및 효율적 관리, 공원·광장 등 공공공간의 확충 및 이용 활성화 등 국민체감형 건축정책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또 국민주택 규모(전용 85m^2 이하)의 조정·검토, 재해·재난에 대비한 임시주택 표준화 및 단지 확보방안, 국가상징거리의 지역 확산, 녹색도시 해외수출 지원체계 구축, 녹색건축·도시 인증제 통합 및 국가브랜드(THE Green) 제정, 건축설계 및 건설산업의 발전방안(건축문화진흥법 제정 등), 신한옥 보급 활성화 등 미래전략적 건축정책에 대해 보고했다.

2) 제5차 대통령 보고회

2012년 4월 25일 오전 11시 반부터 13시 20분까지 청와대 충무실에서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대통령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민간위원 16명, 정부위원 4명과 기획단 부단장, 청와대 경제수석과 대변인, 국토해양비서관과 행정관 2명, 국토연구원장, 주택산업연구원장, 건설산업연구원장, 건축도시연구소장, 국토부 도시·주택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건축문화'라는 주제로 그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추진 성과와 201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중장기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주택공급', 국토품격에 걸맞은 주택디자인의 제고',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리 건축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에 와 있으므로, 정부도 과거에 시행되었던 규제를 앞으로는 변화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은 "우리 건축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시점에 와 있으므로, 정부도 과거에 시행되었던 규제를 앞으로는 변화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주택경기 하락을 트렌드의 변화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거품이 빠져 정상화되는 과정으로서, 앞으로 정책 수립 시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 절감은 인류의 의무이므로, 주택(설계) 분야부터 에너지 절감 노력을 해야 하며 그런 방향



그림 2-11 제4차 대통령 보고회

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찬 자리에서는 "미친 천재 건축가가 나와서 그 사람의 작품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건축이 확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회의를 통해 부처 및 기관과 검토·협의하여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고 국건위의 201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은 청와대 기자단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별도로 설명했다.

"지금의 주택경기 하락을 트렌드의 변화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거품이 빠져 정상화되는 과정으로서, 앞으로 정책 수립 시 감안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2. 위원회 회의

제2기 국건위는 대통령 보고회 2회를 포함하여 총 42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2011년에 12회, 2012년에 30회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회의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회의는 2011년 2회, 2012년 3회로 총 5회를 개최하였고, 합동 연석회의 2011년 3회, 2012년 10회로 총 13회를 개최했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2011년 7회, 2012년 17회로 총 24회를 개최했다.

"미친 천재 건축가가 나와서 그 사람의 작품을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건축이 확 달라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표 2-9 제2기 위원회 대통령 보고회·간담회 개최 현황

일시	장소	주요 내용	비고
2011년 6월 8일	청와대 인왕실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 활동방향 보고	조찬 간담회
2011년 6월 8일	청와대 영빈관	녹색건축물 추진 성과 및 활성화 방안	녹색성장위원회와 합동 보고
2012년 4월 25일	청와대 충무실	국건위 업무성과 및 201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장기 주택정책 방향 토의	

표 2-10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연도	총계(회)	전체 회의			합동 연석회의	분과위원회
		소계	주재			
			대통령	위원장		
2011	12	2	1	1	3	7
2012	30	3	1	2	10	17
계	**42**	**5**	**2**	**3**	**1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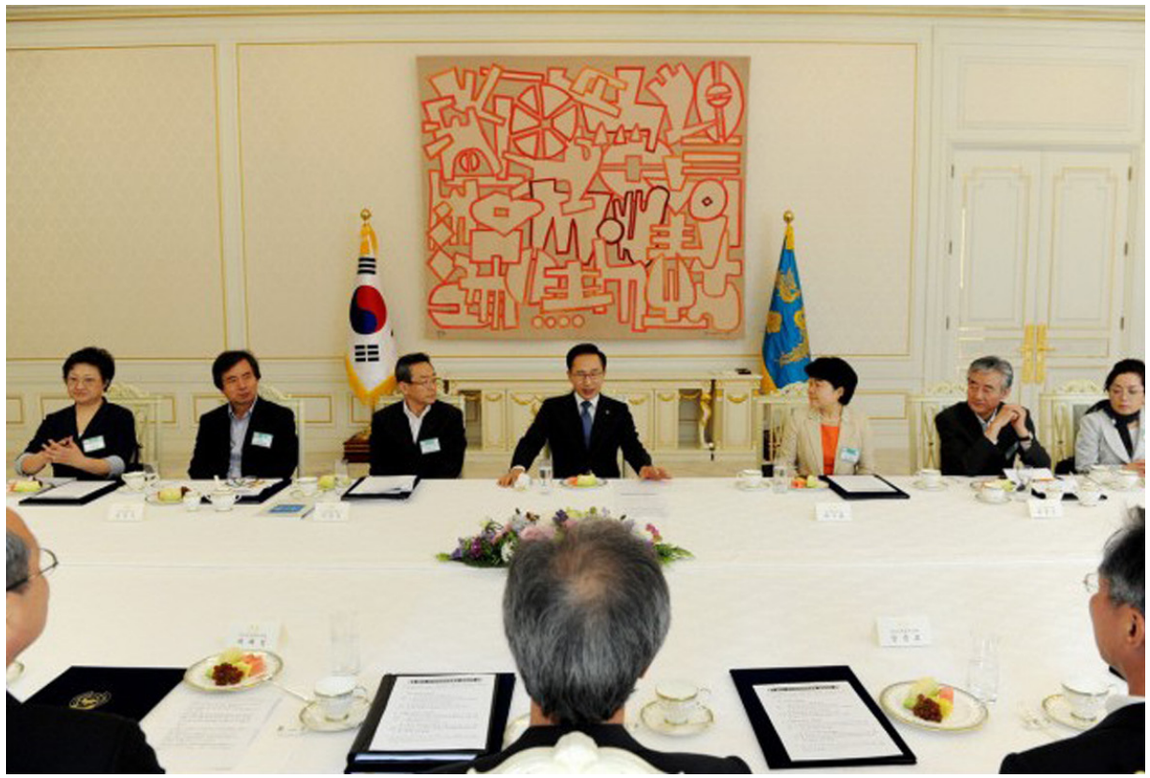


그림 2-12 대통령 주재 간담회(2011년 6월 8일)

신진 건축사 발굴·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으로 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토부 건축문화경관 팀장이 국건위에 보고했다. 주요 보고 내용은 금년에 10개 사업에 대해 신진 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설계공모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1) 전체회의(위원장 주관)

제2기 국건위의 제2차 전체회의는 국토해양부에서 심의 요청한 '경남 거창읍 창조 공공디자인 조성사업'과 '역사도시 홍성 도심 활성화 계획' 사업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안)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2011년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서면심의를 실시하여 국건위 민간위원 18명, 정부위원 1명 등 19명이 찬성 19표, 반대 0표로 원안을 가결시켰다.

김현숙 위원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정형 위원은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국가지정 경관명소 지정사업'이 시범사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사업' 등과 중복의 우려가 있으니 건축기본법 제20조, 동 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수하여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했다.

2012년 4월 5일 제2기 국건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민간위원

17명, 정부위원 1명 등 18명이 참여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정계획(안)과 신진건축사 발굴·육성 방안에 대한 토의를 했다. 또한 2012년 4월 25일 개최될 예정인 2012년 제2차 대통령 업무보고회 리허설도 함께 했다.

이 회의를 통해 2012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8개 후보사업 중 4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선정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선정사업

1위 전남(광양시) 광양읍 공공 공간·건축물 통합마스터플랜

2위 경북(울진군) 울진 보부상 옛터의 재조명

3위 부산(부산시) 동래구청 이전적지 활용을 통한 동래 재창조

4위 충북(충주시)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도심 재탄생 마스터플랜 수립

신진 건축사 발굴·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으로 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토부 건축문화경관팀장이 국건위에 보고했다. 주요 보고 내용은 2012년에 10개 사업에 대해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설계공모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행사를 정례화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행사를 정례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 국건위와 협의하여 행사명칭 등을 마련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에 대하여 국건위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별로 요청하도록 하며, 시범사업 시행과 별도로 중소 건축사사무소 자생을 위한 발주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2기 국건위 제5차 전체회의는 국토해양부에서 심의 요청한 전북 익산시 '고도(古都) 금마시가지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한 역사경관마을 조성사업'과 경기도 안성시 '고도(古都) 죽산의 역사문화 정체성과 조화되는 주거지 경관 환경사업'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안)에 대해 2012년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서면심의하여 국건위 민간위원 15명, 정부위원 1명 등 16명이 참여해 찬성 16표, 반대 0표로 원안을 가결시켰다.

표 2-11 전체회의 개최 현황

구분	회의 일자	안건	주재
제1차	2011년 6월 8일	녹색건축 강국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녹색성장위원회와 합동 보고)	VIP
제2차	2011년 6월 16일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정계획(안)	위원장
제3차	2012년 4월 5일	①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정계획(안) ② 신진건축사 발굴·육성 방안	위원장
제4차	2012년 4월 25일	국건위 업무계획 보고 및 중장기 주택정책의 방향	VIP
제5차	2012년 7월 30일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정계획(안)	위원장

2) 합동연석회의

제2기 국건위는 2011년 5월 31일 제1차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2012년부터는 월 1회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정하여 모두 13회의 합동 연석회의를 가졌다.

제1차 합동 연석회의는 2011년 5월 31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고 민간위원 14명과 기획단 6명이 배석해 VIP 간담회(보고자료 검토, 주제토론자 선정), 녹색 합동보고 대회(안건 보고, 발표자 및 토론자 선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순회포럼(포럼계획보고, 토론자 등 선정),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정계획(안)(보고 및 토론)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제2차 합동 연석회의는 2011년 7월 25일에 열렸고 8월 업무보고 안건 공유 및 검토, 호남권 및 동남권 건축정책 포럼 개최, 위원회 일정 및 분과위별 간사위원 선출에 대해 논의했다.

제3차 합동 연석회의는 2011년 11월 10일 열렸다. VIP 보고대회 준비경과와 건축정책 포럼 개최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제4차 합동 연석회의는 2012년 1월 13일 국건위(9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간위원 10명과 기획단 6명이 배석해 VIP 보고관련 업무계획, 분과위 활성화 방안 및 재구성안, 2012년 회의 운영계획, 시도 공무원 워크숍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5차 합동 연석회의는 2012년 2월 9일 국건위(9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간위원 12명과 기획단 6명이 참석해 2012년 지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 개최계획, 분과위 구성 및 업무분장(안), 시도공무원 워크숍 추진계획, 제2기 위원회 활동방향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6차 합동 연석회의는 2012년 3월 22일 국건위(9층) 회의실에

서 열렸다. 민간위원 15명과 기획단 6명, 관계부처 2명이 배석했다. 국건위 업무계획 및 중장기 주택정책 방향, 건축제도 개선방안, 국건위 자문단 구성협의에 대해 논의했다.

제7차 합동 연석회의는 2012년 4월 18일 국건위(9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VIP 업무보고자료 토론, 정책자료집 발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제8차 합동 연석회의는 2012년 5월 10일 아라뱃길 여객터미널 3층에서 열렸다. 민간위원 10명과 기획단 6명이 참석했고 한옥의 국가 브랜드화, 녹색건축대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제9차 합동 연석회의는 민간위원 9명과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6월 14일 국건위(9층) 회의실에서 열렸고 부산시 건축기본계획, 해외도시개발 활성화, 국내 건축설계산업육성, 건축교육제도 개선 설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10차 합동 연석회의는 2012년 7월 19일 국건위(9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간위원 14명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등이 참석하여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선정계획(안),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재발의 추진, 신진 건축사 발굴·육성 방안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11차 합동 연석회의는 2012년 8월 16일 국건위(9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간위원 12명과 도코모모 국제회의 유치위원회 김종헌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제13회 도코모모 국제회의 유치결과, UIA 추진현황 보고, 정책자료집 발간 진행상황, 녹색건축대전 추진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했다.

제12차 합동 연석회의는 2012년 9월 13일 국건위(9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간위원 8명과 기획단 10명이 참석하여 각 분과위원회별 활동실적과 기획단의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했다.

제13차 합동 연석회의는 2012년 10월에 개최하려 하였으나, 국건위 자문단 워크숍 일정과 중복되는 관계로 2012년 11월 8일 국건위(9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간위원 10명과 기획단 10명이 참석하여 건축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아우리(auri) 유광흠 박사의 발표와 각 분과위원회 활동실적 및 기획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토의했다.

제2기 국건위는 2011년 5월 31일 제1차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2012년부터는 월 1회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정하여 모두 13회의 합동연석회의를 가졌다. 제6차 합동연석회의는 2012년 3월 22일 국건위(9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간위원 15명과 기획단 6명, 관계부처 2명이 배석했다. 국건위 업무계획 및 중장기 주택정책 방향, 건축제도 개선 방안, 국건위 자문단 구성협의에 대해 논의했다.

표 2-12 합동 연석회의 개최 현황

연도	개최일	안건
2011년(3회)	5월 31일	① VIP 간담회(보고자료 검토, 주제토론자 선정)
		② 녹색 합동보고 대회(안건보고, 발표자 및 토론자 선정)
		③ 전국 순회포럼(포럼계획보고, 토론자 등 선정)
		④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정계획(안)(보고 및 토론)
	7월 25일	① 8월 업무보고 안건 공유 및 검토
		② 호남권 및 동남권 건축정책 포럼 개최
		③ 위원회 일정 및 분과위별 간사위원 선출
	11월 10일	① VIP 보고대회 준비경과
		② 건축정책 포럼 개최
		③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추진 현황
2012년	1월 13일	① VIP 보고관련 업무계획
		② 분과위 활성화 방안 및 재구성안 등
		③ 2012년 회의 운영계획
		④ 시도공무원 워크숍 추진계획 등
	2월 9일	① 2012년 지역순회 건축·도시 정책포럼 개최계획
		② 분과위 구성 및 업무분장(안)
		③ 시도공무원 워크숍 추진계획 등
		④ 제2기 위원회 활동방향 추진현황
	3월 22일	① 국건위 업무계획 및 중장기 주택정책 방향
		② 건축제도 개선 방안 및 국건위 자문단 구성협의 등
		③ 기타 행사계획 등
	4월 18일	① VIP 업무보고자료 토론
		② 정책자료집 발간 계획
	5월 10일	① 한옥의 국가 브랜드화
		② 녹색건축대전 추진계획
	6월 14일	① 부산시 부산건축기본계획
		② 해외도시개발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
		③ 국내 건축설계산업 육성 추진방안
		④ 녹색건축대전 추진방안
		⑤ 국토부 건축국 설치
		⑥ 건축교육제도 개선 설문내용
	7월 19일	①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선정계획(안)
		②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재발의 추진
		③ 신진 건축사 발굴·육성 방안 추진현황
		④ 건축설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산파일 제공추진
	8일 16일	① 제13회 도코모모 국제회의 유치현황 보고
		② 2017년 UIA 서울세계대회 준비상황
		③ 국건위 정책자료집 발간 추진현황
		④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추진현황
		⑤ 2012년 하반기 연구용역 추진현황
		⑥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공개심사 안내
	9월 13일	≪ 분과위원회 보고사항 ≫
		① 정책조정분과위원회 소관
		②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소관
		③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 소관

연도	개최일	안건
		≪ 기획단 보고사항 ≫
		① 제18회 건축의 날 행사 준비상황
		②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입법 추진상황
		③ 국건위 정책자료집 발간 추진현황
		④ 전국순회 건축·도시 정책포럼 개최
		⑤ 2012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워크숍 개최
		⑥ 국건위 자문단 워크숍 개최
	11월 8일	≪ 분과위원회 보고사항 ≫
		① 국가건축정책의 나아갈 방향 보고(정책조정분과위)
		②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추진현황 보고(정책조정분과위)
		③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추진현황(건축문화진흥분과위)
		≪ 기획단 보고사항 ≫
		① 2012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워크숍 계획
		② 자문위원 제안사항 처리계획
		③ 2012년 연구용역 추진현황
		④ 전국순회 건축·도시 정책포럼 개최

3) 분과회의

제2기 국건위 분과위원회 회의는 2011년 5월 23일 정책조정분과회의를 시작으로 모두 24회를 가졌으며 회의일정과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표 2-13 제2기 국건위 분과회의 개최 현황

분과위	회의일시	주요 안건
	2011년 5월 23일	건축서비스산업 연구용역 관련 법안 추진계획 협의
	2011년 6월 15일	건축문화진흥 관련 법안 검토
	2011년 6월 28일	건축문화진흥 관련 법안 검토
	2011년 8월 5일	재해재난에 대비한 임시주거시설 지원방안 연구용역 및 건축 문화 진흥 관련법안 검토
정책 조정 분과위	2011년 11월 30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검토
	2012년 2월 8일	정책조정분과 위원 및 분장과제 조정
	2012년 3월 5일	분장과제 추진현황 및 건축 공무원 워크숍 보고
	2012년 4월 6일	건축 관련 전문단체 간담회(2월 15일 (수)) 건의사항 논의
	2012년 5월 11일	FTA가 건축·도시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2012년 6월 8일	정책조정분과위 소관과제 추진현황 보고 및 논의
	2012년 8월 17일	「건축서비스진흥법」 입법 추진방안 토의
	2012년 12월 6일	「건축서비스진흥법」 입법 추진 상황 및 자문단 정책제안 사항 토의

분과위	회의일시	주요 안건
	2011년 6월 23일	도심 저층 주거지 마을환경 개선 과업 추진 방향 검토
	2011년 8월 9일	서민 저층 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 정책방안 연구 착수보고 등
국토 환경 디자인 분과위	2012년 2월 8일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 과제 담당위원 배정 및 분과정기회의 일정 관련 논의
	2012년 2월 15일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 과제 담당위원 배정 및 분과위 운영 방향 논의
	2012년 6월 7일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정비방안 연구용역 시행보고 및 공공 공간 활성화방안 법제도 개선사항 검토
	2012년 8월 9일	2013년도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방안 보고
건축 문화 진흥 분과위	2012년 2월 17일	과제별 담당위원 배정, 분과위 운영방향 및 과제별 현안 논의
	2012년 3월 21일	패시브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개발 연구용역 추진 현황 검토, 과제별 업무 추진현황 등 논의
	2012년 5월 16일	동탄신도시 대체농지활용 한옥마을 시범사업 추진 관련 의견 조정, 녹색건축대전 추진방안 논의
	2012년 7월 19일	건축교육 선진화 방안 설문조사 추진계획, 패시브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 개발, 연구용역 결과 공개세미나 개최 계획 등 논의
	2012년 8월 16일	신규 용역과제 추진계획, 녹색건축대전 추진현황 등 논의
	2012년 9월 13일	녹색건축대전 추진현황, 건축교육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 개최 결과 등 논의

3. 위원회 주최 행사

1) 워크숍

"앞으로 필요한 것은 친서민 정책이므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건축복지 정책 선점이 필요"

제해성 위원
(제2기 국건위 제1차 워크숍에서)

제2기 국건위 제1차 워크숍은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인천 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위원 16명, 기획단 20명, 관련부처 인사 9명 등 총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워크숍에서 건축기본법과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상호 실장이 발표하고, 해외도시 개발의 국가전략 구상에 대해서는 국건위 이동환 협력관이 발표했다. 또한 제2기 위원회 업무계획(대통령 보고안건)을 국건위 부단장이 보고하고, 분과위별 안건 발굴 및 운영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한편 친서민·체감형 과제 발굴을 위한 토의에서 제해성 위원은 "앞으로 필요한 것은 친서민 정책이므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건축복지정책 선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배시화·김현선 위원은 "해피차일드나 글로벌 국토 등 정책의 브랜드 및 정체성



그림 2-13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워크숍(2011년 5월 2일~3일)

을 나타낼 수 있는 감성적인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진숙 위원은 "공가·폐가 정비를 위한 범부처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미래 대비 과제 발굴을 위한 토의에서 이동환 국건위 협력관은 "우수한 도시개발 경험을 살려 국내에 머물러 있는 건축·건설 분야의 시장 확대를 국가·민간이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백운수 위원은 "재해·재난을 대비한 긴급주택뿐만 아니라 도시의 방재역량을 키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선미 위원은 "미래 주거수요 대비를 위해 민간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실적 한계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의 대표가로(상징거리) 조성, 스타 건축가 양성, 건축·도시 분야 전문가의 역할과 의무, 공공건축사 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제2차 워크숍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민간위원 13명, 관련부처 5명, 기획단 22명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40 세대공감 건축도시 정책 발굴 시급"

이정형 위원
(제2기 국건위 제2차 워크숍에서)

"한류문화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한국 전통정원 조성 방안 마련 필요"

김선미 위원
(제2기 국건위 제2차 워크숍에서)

워크숍에서 '랜드마크와 국가이미지에 대한 소고'에 대해 백명진 국건위 위원이 특강을 하였으며, 2012년 업무계획에 대해 국건위 부단장이, 포럼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 국건위 전략기획과장이 보고했다. 이후 업무계획과 관련한 위원제안, 분임토의 및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김창수 위원은 '건축물 성능기반 설계제도 구축, 건축법 체계정비를 위한 실행연구, 건축사 대가기준 개선, Korea Building Code 구축' 등에 대해, 이정형 위원은 '2040 세대공감 건축도시정책 발굴'에 대해, 김선미 위원은 '한류문화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한국 전통정원 조성 방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정책조정분임에서는 '해외도시 개발, 건축정보 호환을 위한 통합 표준체계, 건축사 책임보험제도 활성화, 용산국제업무지구 건축설계 관련 국토부 조치사항' 및 '초고층 건축기술 육성 및 인증 필요, 대학건축교육의 선진화 추진 필요, 기타 위원 제안사항(건축물 성능기반 설계제도 구축 등) 검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의가 이어졌다.

건축문화분임에서는 '국내 건축설계산업 육성, 건축물 패시브 디자인 활성화, 녹색건축 실현을 위한 건축 구조·설비·조경 기준 개선, UIA 준비' 및 '방음벽 없는 도시 만들기, 20~30대를 배려한 국가정책 마련, 새로운 주거모델 개발, 도시 랜드마크 활성화, 공공디자인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국토환경분임에서는 '건축발주제도 개선, 서민 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 추진방안, 주거의 질 평가지표 선정 및 운영 방안', '한류문화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한국전통 정원 조성, 지적과 건축설계도의 정합성 확보방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건축법제 개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종합토의 시간에는 위원회 역할과 관련하여 최막중 위원은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위원회 존재감과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토부 정태화 과장은 "논의는 많으나 체계적 구성과 전체적인 그림이 부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 발굴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김민수 위원은 "위원회 역할·위상과 현실적 역량을 분명히 인식하여 단기적 어젠다보다는 장기적 정책 위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창수 위원은 "2012년은 특히 국건위 존재이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국민에게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위원회 존재감과 위상 강화가 필요"

최막중 위원
(제2기 국건위 제2차 워크숍에서)

"위원회 역할·위상과 현실적 역량을 분명히 인식하여 단기적 어젠다보다는 장기적 정책 위주로 추진 해야"

김민수 위원
(제2기 국건위 제2차 워크숍에서)

"2012년은 특히 국건위 존재이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 추진이 절실"

김창수 위원
(제2기 국건위 제2차 워크숍에서)

다가가는 정책추진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2012년 3월 8일부터 9일까지 천안 휴러클리조트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12명 및 기획단 직원 20명, 지자체 건축 및 도시행정담당 공무원 89명, 중앙부처 5명(국토해양부 4명, 교육과학기술부 1명) 등 총 126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건축정책 방향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 간 건축정책 소통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 건축 및 도시행정 공무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날 워크숍에서는 위원회 활동성과 및 2012년도 업무 방향 소개에 이어서 '건축제도 개선사항'(국토부 건축기획과장), '풍수지리와 현대건축'(박시익 박사),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국건위 김현선위원) 등 특강이 있었으며, 대전광역시의 스토링 골목길 재생사업을 주제로 한 도시가꾸기 시범사례 발표 외에 9개 자치단체별로 추진한 특수시책 발표와 자치단체 간 분임토의도 가졌다.

한편 제2기 국건위 자문위원 위촉 후 처음으로 2012년 10월 12일에는 10:30부터 15:50까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EL(엘)타워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날 워크숍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12명, 자문위원단 34명, 국가건축정책 기획단 직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병석 전략기획과장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2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각 분과위원회별(정책조정분과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로 발표가 있었다. 김창수 정책조정분과위원장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에 대하여 법안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건축설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적전산파일 제공방안', '건축제도 관련 활동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강준모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장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신진건축사 육성·발굴 방안', '도심저층주거지 근린재생정책'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제해성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장은 '건축물 패시브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 2012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녹색건축·도시브랜드화', '건축교육 선진화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번 자문단 워크숍은 자문위원에게 주제 제한 없이 정책제안을 내도록 한 결과 19개 정책제안을 접수하여 워크숍에서 정책제안자의 발표와 발표된 내용에 대하여 3개 분과위원회별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토론결과를 발표했다.

국건위 제3차 워크숍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부산시 센텀 호텔에서 민간위원 10명, 관련부처 및 연구기관 6명, 기획단 21명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워크숍에서 '국가 건축·도시정책 방향'에 대해 건축도시공간정책연구소 유광흠 박사의 특강과 '녹색건축 발전방안'에 대해 이정면 위원의 특강이 있었으며, '새 정부의 건축·도시정책 방향'과 '녹색건축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심층 논의했다.

'새 정부의 건축·도시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정책조정분임(김창수 분임장)에서는 '우리 동네 가꾸기' 정책을 제시하고, 세부 실천과제로는 ① 주민이 주도하는 동네 가꾸기 지원(도시재생, 지역건축자산 보호, 리모델링), ② 보육공간 확충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공간(보육, 걷고 싶은 거리 등)', ③ 안심 건축·안심 도시(범죄, 재해, 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응 강화) 추진을 제안하였으며, 국토환경분임(오경은 위원)에서는 ① 공공건축·시설물의 활용 제고(시설·기능복합화, 지역주민 수요대응, 랜드마크 화), ② 건축 서비스디자인 향상(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건축환경 조성), ③ 지역특화거리·상징거리 조성 및 활성화(시범사례 선정을 통한 지역확산, 지역 정체성을 고려한 디자인 도입, 도시재생과 연계한 가로활성화), ④ 공·폐가, 방치건축물 관리 및 활용(전국 현황조사·관리, 수요자와 연계 시스템 구축, 사전관리시스템 마련)을 제안하였고, 건축문화진흥분임(제해성 분임장)에서는 ① 건축자산 정보 구축과 활용(한옥 등 건축자산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등 기반구축과 지원체계 마련), ② 지역 유휴자산을 활용한 복지·문화 공간 구축(국·공유지, 철도부지, 지역별 유휴 시설물 활용), ③ 공간조달청 설립(부처별로 분리되어 있는 각종 건축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화)을 제안했다.

2) 업·단체 간담회

(1) 위원회 간담회

2011년 4월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 및 민간위원, 단장 및 부단장 외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간담회를 가졌다. 4월 14일 제2기 국건위 위원으로 선임된 후 첫 상견례를 겸한 이 자리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방안, 분과위원회 구성(안), 국건위 제4차 보고회의 개최계획(안), 업무보고 자료 검토, 토론주제 및 토론자 선정, 워크숍 개



그림 2-14 제1·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조찬간담회(2011년 9월 21일)

최계획(안) 등을 안건으로 삼았다.

2011년 9월 21일에는 메리어트호텔에서 제1기 위원회와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제1기 위원회에서 정명원 위원장·손세관·김인철·최명철·양윤재·채선엽·최두남 위원이 참석하였고, 제2기 위원회에서 이상정 위원장·김창수·제해성·백명진·배시화·김민수·오경은·강준모·김현선·백운수·이정면·구영민·최막중·이진숙·김선미·이정형·이제선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2기 위원회 업무 추진방향 설정 및 건축·도시정책 발전방안(국토환경 품격 향상을 위한 제도상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2) 건축 5단체 조찬 간담회

건축업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국가건축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 5단체와 매월 셋째 수요일 정례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1년 5월 18일에 서울시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열린 건축 4단체 간 제1차 조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2012년 11월 현재까지 모두 11회를 개최했다.

표 2-14 제2기 국건위 건축 5단체 조찬 간담회 개최 현황

개최일시	주최	주요 논의 내용
2011년 5월 18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업계 발전 방향, 건축행정 제도개선 의견 수렴
2011년 6월 15일	대한건축사협회	국건위 업무계획 설명
2011년 8월 10일	대한건축학회	건축서비스진흥법(안) 설명 및 의견 수렴
2011년 9월 21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기준개선 협의 결과 설명
2011년 11월 16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UIA 서울총회 지원, 건축의 날 훈격 격상 등 논의
2012년 1월 18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건위 2012년 업무계획 설명 및 개최계획
2012년 3월 14일	한국건축가협회	UIA 준비위원회 구성 및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시행 체계 확보 등 논의
2012년 5월 9일	대한건축사협회	대형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등 논의
2012년 7월 18일	대한건축학회	2012년 제3차 전국순회 건축·도시 정책포럼 등 논의
2012년 9월 19일	새건축사협의회	2012년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행사 등 논의
2012년 11월 14일	한국건축가협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협조

(3) 건축 관련 단체·전문가·언론 간담회

2011년 10월 13일 반포동 팔래스호텔 3층 체리 B룸에서 위원장, 부단장, 협력관, 전략기획과장, 건축진흥과장과 대한건설협회 회장 및 부회장, 한국주택협회 회장 및 부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해외건설협회 이사가 모여 주택·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건축업계 발전방안 의견 수렴, UIA 서울 총회 지원 추진경과, 건축의 날 훈격 격상 및 건축한마당 개최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2012년 2월 15일 서울시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위원장·김창수 위원·부단장 등 국건위 관계자와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이문곤 회장, (사)한국설비기술협회 이민우 회장, (사)한국소방기술사회 강병호 회장, (사)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 이정욱 회장, (사)한국조경사회 이민우 회장, (사)한국전력기술인협회 최광주 회장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국건위 업무계획 설명 및 건축 관련 전문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위한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 분야 설계용역 대가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사)건축구조기술사회는 '건축·건설 관련 기술인을 관리할 수 있는 주관부처 필요', '건축물의 구조설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사업을 구조기술사가 설계·수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그리고 (사)소방기술사회는 '건축설비 설치시 소화·배연설비는 소방기술사의 협력하에 설치하도록 법 개정' 요청을, (사)정보통신기술인협회에서는 '유비쿼터스 추진이 둔화되었는데 범정부적으로 더

욱 매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12년 4월 18일 서울 삼성동 소재 오크우드호텔 5층 오크룸에서 위원장·부단장 등 국건위 관계자와 대한건설협회 회장·부회장,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해외건설협회 회장,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하여 주택건설분야 국건위 제안사항과 단체 건의사항 등에 대해 토의하는 주택건설 관련단체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건위는 '지하주차장 자연채광 설치 유도',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 '건축물 패시브 디자인', '전통한옥, 전통정원 보급 확대', '획일적 디자인 탈피, 다양한 평면구성'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대한건설협회는 '주택거래 활성화제도 개선',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개선', '규정에 따른 적정공사비 반영'을, 한국주택협회는 '주택거래 활성화방안 조속 시행', '정부의 그린홈·친환경 녹색정책 기반 구축 지원'을,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제도 개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를, 해외건설협회는 '국내 도시개발 경험을 활용한 해외진출 확대'를, 주택산업연구원은 'DTI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건설산업연구원은 '주택공급규칙 개선', '기업(법인)의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건의했다.

한편 2012년 5월 24일 서울 삼청동 소재 갤러리 현에서 위원장·분과위원장·부단장 등 국건위 관계자와 청와대 출입 지방지 기자단 12명이 모인 가운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소개와 주요 추진정책 및 전국순회 건축도시포럼 등 지역 관련 주요 활동 등 국건위 활동 상황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그림 2-15 2012년 시·도 건축 및 도시 행정공무원 워크숍(2012년 3월 8일~9일)



그림 2-16 2012년 시·도 건축 및 도시 행정공무원 워크숍(2012년 3월 8일~9일)

또한 2012년 7월 17일 서울시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위원장, 김창수·제해성·배시화 위원, 부단장과 신진 건축전문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부성 교수, 아리건축 김태우 대표, 파크이즈건축 박인수 대표, 명지대학교 박인석 교수, 도모건축 박상진 대표, 아이파크건축 김정임 소장이 모여 건축과 건축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건축계의 현안 문제와 발전방안 토론을 위한 포럼 개최 여부 및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 2012년 8월 22일 서울시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위원장, 김창수 위원, 부단장과 원로건축가인 국민대학교 정재철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주남철 명예교수, ㈜종합건축사사무소 윤석우 대표이사, ㈜일건건축 황일인 대표이사, ㈜종합건축사탑 최영집 대표이사, ㈜서림에이엔씨 김인숙 회장, 역삼디자인연구소 김화련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계 발전방안과 건축 분야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3) 현안협의회

합동 연석회의 및 분과회의에 앞서 국건위 9층 회의실에서 위원장이

표 2-15 현안협의회 개최 현황

개최일시	주요 참석자	주요 협의 내용
2011년 4월 16일	위원장, 분과위원장, 김선미, 배시화,	업무보고 주제토론 방향 및 내용,
	최막중, 이진숙, 김민수, 김현숙,	토론순서, 워크숍 개최계획
	이정형 위원, 외부토론자(6명)	
2011년 5월 11일	위원장, 분과위원장, 배시화 위원	VIP 업무보고자료 검토, 분과위별
		안건 분장
2011년 6월 15일	위원장, 분과위원장	분과위별 안건 분장, 위원회 홍보
		브로슈어 시안 검토
2011년 7월 13일	위원장, 김창수, 배시화 위원,	지자체 낙찰자 결정 기준 개선계획
	건축가협회 조익수 이사,	8월 VIP 보고대회 보고 안건
	행안부 이형석 서기관,	호남권 건축정책포럼 추진계획
	기효종 주무관	
2011년 7월 15일	위원장, 김창수, 제해성, 김선미 위원	8월 VIP 보고대회 보고 안건 검토
2011년 8월 8일	위원장, 김창수, 제해성, 배시화,	8월 VIP 보고대회 보고 안건 검토
	김선미 위원	
2011년 9월 1일	위원장, 김창수, 강준모, 이정면,	VIP 보고대회 보고 안건 중간 점검
	배시화 위원	
2012년 1월 18일	위원장, 김창수, 제해성, 강준모 ,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응 건설
	배시화 위원	기술관리법 개정사항 추진 협조

주재하고 3개 분과위원장 및 배시화 여성대표 위원이 참여하여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는 현안협의회를 모두 8회 가졌다.

4) 세미나 및 주요 국정과제 추진현장 방문

(1) 해외도시개발 세미나

2012년 2월 29일에는 15:30부터 18:00까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제회의실에서 위원장, 국토해양부 제1차관, 국건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지적공사, 해외개발 관련 민간건설사·엔지니어링 업체 등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연구'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 천안 메이어즈 포럼(Mayor's Forum)

2012년 5월 4일 충청남도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국무총리, 위원장, 국회의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학교수 등 건축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건위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천안시가 주관하는 2012년 녹색건설을 위한 메이어즈 포럼(Mayor's Forum) 행사를 개최했다.

(3) 주요 국정과제 추진현장 방문

2011년 9월 22일에는 국건위 위원 5명과 기획단 11명, 아우리 연구원 2명 등 모두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여주읍 단현리 강천보와 경기도 여주읍 대신면 양촌리 이포보 등 4대강 보 2개소를 방문하여 홍수 및 가뭄 대비 준설·다기능보 설치 및 연안정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견학했다.

2012년 5월 10일에는 합동 연석회의 후 위원장, 위원 등 14명과 기획단 직원 20명 등 모두 34명이 참여하여 아라뱃길 현장 체험을 실시했다. 이밖에 2012년 5월 31일 제2차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호남권) 후에 위원장, 위원 등 10명과 직원 18명 등 모두 28명이 참여하여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의 전시관 등을 탐방했다.



그림 2-17 2012 여수엑스포 전경, 엑스포조직위원회 제공



그림 3-1 서천 봄의마을, 사진 윤준환

03

선진 건축문화의 창출 및 기반조성

제1절 국가 및 지역의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제2절 국가 상징거리 및 지역 대표거리 조성
제3절 신한옥의 보급 활성화
제4절 한국 전통정원의 조성 및 보급
제5절 건축설계산업 육성 및 발주제도 개선
제6절 신진건축사 발굴·육성
제7절 건축교육제도 개선
제8절 건축사 손해배상책임보험 활성화
제9절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제1절
국가 및 지역의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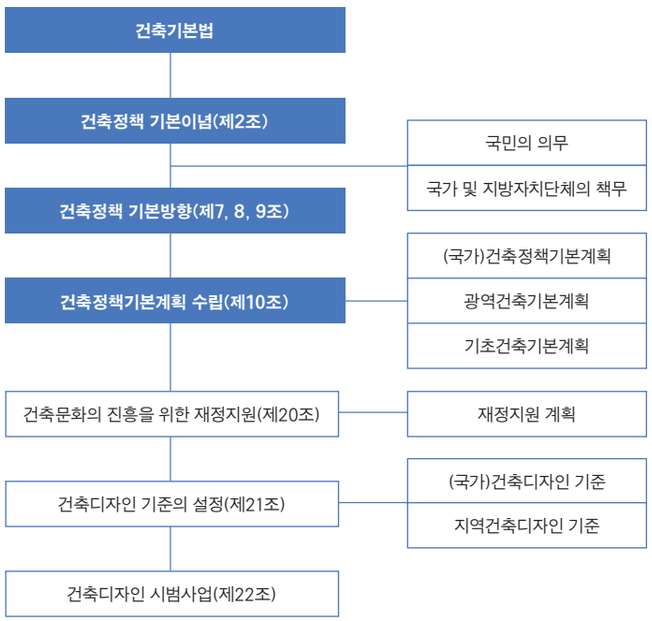
1. 추진 배경

1) 건축기본법과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기본 이념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건축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된 건축기본법이 2008년 8월에 발효되었다. 전체 5장 24조로 구성된 건축기본법은 건축정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건축 관련 최상위 법령으로서의 그 위상을 지니고 있다.

건축기본법에서는 국가 전체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하여 공

표 3-1 건축기본법의 구성체계



공성 확보를 전제로 건축기본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의 기본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광역시·도에서는 국가 건축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지역의 건축적 특성, 사회·경제·문화적 실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난 2010년 5월에 수립된 국가 차원의

표 3-2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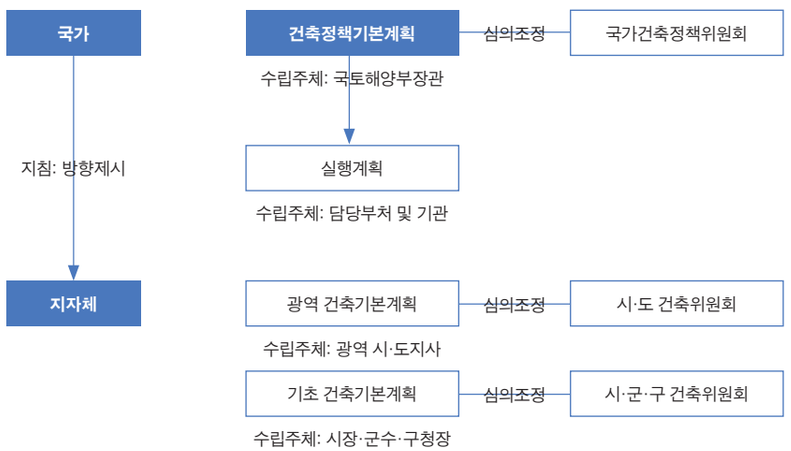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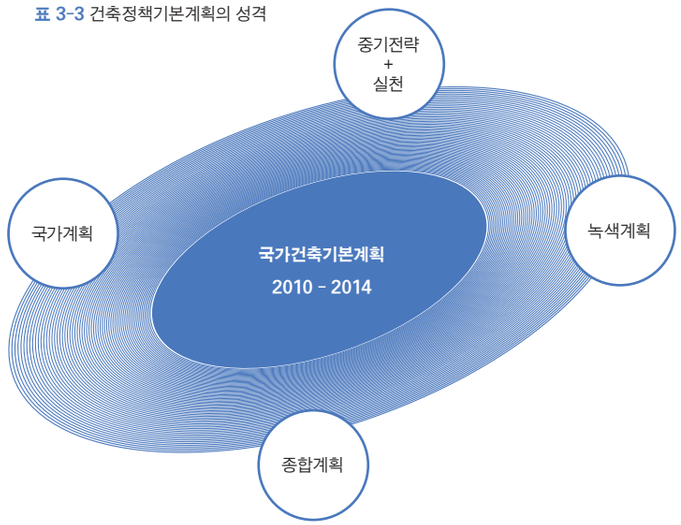


표 3-3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격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국가 차원의 5개년 단위 발전전략으로 국토디자인 향상, 건축·도시 관련 산업 육성, 건축문화 진흥, 녹색성장 구현 등 다양한 건축·도시 분야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기 전략계획이자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이다.

계획 범위는 공간적으로 건축물과 그 주변의 공간 구조, 공공 공간 및 경관까지 포함하는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하며, 계획 내용은 건축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15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표 3-4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적 범위

건축기본법 제11조	건축기본법시행령 제3조
• 건축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	•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	•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 건축문화 진흥 관련 주민지원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	
• 건축 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방안	
•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	
•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 시범사업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

국건위는 합동 연석회의와 관련 분과위원회인 정책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전 과정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년)'을 확정해 2010년 5월 3일 열린 제3차 대통령 보고회를 통해 이를 보고했다.

표 3-5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

일자	활동 내용
2009년 2월 12일	건축기본계획 초안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의 구성방식', '용어',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개진
2009년 4월 15일	건축정책기본계획 총론을 검토하여 '용어 정의', '내용 체계화', '추진 주체의 명확화', '단계적 추진방안 마련', '위원회 추진 제도개선 사항 반영' 등의 의견 제안
2009년 4월 28일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각론을 검토하여 '정책목표, 추진방향, 실천과제 등과의 연관성', '단기·중기·장기 추진과제 선정', '시범사업 선정의 당위성' 등에 대한 의견 제시
2009년 5월 8일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해 총괄 검토하여 '기본계획 구성체계 확정', '3대 정책 목표, 8대 추진방향 및 35개 실천과제 도출', '우선 추진 과제 잠정안 검토' 등 확정
2009년 5월 26일	국토해양부의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의견 제시
2009년 8월 25일	'대통령 보고회'에 안건으로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하기로 결정
2009년 10월 13일	국토연구원과 협력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관련학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
2009년 10월 28일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정안 검토·논의
2009년 11월 3일	건축정책기본계획(안)의 세부내용 검토한 후 수정사항 지적
2010년 1월 8일	기본계획 내용 보완
2010년 1월 13일	용어 정리 등 세부적인 내용 논의
2010년 4월 13일	보고안건, 보고회 준비일정, 보고회 행사계획, 토론진행 방향 등 토의
2010년 5월 3일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보고 및 고시
2012년 10월	지역건축기본계획으로 경기, 서울, 부산 건축기본계획 수립 완료, 제1차 건축 기본계획 성과 국회보고 준비 중

3. 해외 건축정책 현황

1990년대부터, 유럽 각국은 국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1991년 최초로 건축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단계별 전략은 건축 관련 인프라 조성(1차), 건축 관련 영역의 확장(2차), 시범프로젝트 선정(3차), 문화정책과의 통합(4차) 등이다.

프랑스 1997년 이후 '건축교육개혁', '건축센터설립', '건축직능개혁'을 추진하고, '건축·도시계획·환경위원회(CAUE)'를 통해 민관합동으로 건축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영국 2012년 런던올림픽을 준비하며 건축위원회(CABE)를 중심으로 공공건축의 역할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건축정책과 디자인 기준을 담은 디자인정책을 발표, 법령(Planning Act 2006)을 입안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핀란드 시민의 도시환경에 대한 기본권을 천명하고, 선도모델로서의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2 유럽의 주요 건축정책 추진 현황

4. 건축기본계획 주요 내용

앞 장 국건위의 비전과 목표에서 언급했듯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아름다운 국토와 쾌적한 삶터의 구현을 위해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 분야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3대 목표로 하고, 6개 추진전략과 18개 중점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략별 추진방향

1) 국토환경디자인 향상

공공 부문 디자인업무 개선을 통한 통합디자인 실현, 발주방식의 다양화, 관련 법령관 효율적 연계·통합 등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 도시 내 국민체감형 시설의 디자인 개선과 통합된 도시 이미지 형성, 자연과 조화되는 농어촌경관 형성과 동서남해안의 해안경관 창출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국토의 품격 향상한다.
- 친환경 철도의 건설과 고속도로 디자인 정비사업, 항만시설의 디자인 개선, 명품교량 건설 및 관광자원화 등 주요 SOC 시설별 디자인 향상 전략을 마련한다.
- 공공부문 디자인 업무 개선을 통한 통합디자인 실현, 발주방식의 다양화, 관련 법령과의 효율적 연계·통합 등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 강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지원 종합대책 마련 등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통한 도심재창조를 추진한다.

2) 건축·도시 환경 개선

-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 특화와 환경 개선, 공공임대주택의 생활환경 개선 등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디자인개선을 통해 민간부문을 선도한다.
- 공공청사, 교육·문화·체육 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합리적 설계 기준 마련, 학교시설의 디자인 강화, 특별건축구역의 활성화 등 공공건축의 디자인 쇄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 강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지원 종합대책 마련 등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통한 도심재창조를 추진한다.

3) 녹색 건축·도시 구현

- 자원순환형 도시 기반의 구축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조성을 통한 탄소저감형 도시환경 형성을 유도한다.
-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확대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추진한다.
- 그린홈 공급 확대 및 기술개발을 통한 성능 제고, 주택부문의 에너지소비량 공개 등 친환경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활성화한다.
- 에너지절약형 저탄소 녹색학교의 보급과 탄소제로 건축 시범사업 등 녹색건축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건축사 등 전문가의 역량 강화와 건축관련 국가 R&D의 확대, 신진 우수 설계자 육성 등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4)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 건축사 등 전문가의 역량강화와 건축 관련 국가R&D의 확대, 신진 우수설계자 육성 등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 내진기준과 방재기준의 강화 등 건축(조경) 관련 기준을 성능중심으로 전환하고 건축정보모델링(BIM)의 활성화 등 미래 기술환경 변화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초고층 건축물 등 첨단 설계기술의 개발과 IT기술과의 융·복합화 등 녹색건축 관련 기술 고도화를 통해 건축·도시 관련 산업을 창의성과 기술력을 겸비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5)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 기존 도심의 한옥지구 보전·재생과 농어촌 한옥마을 조성, 한옥의 산업화와 현대화 기술개발, 한옥의 보급·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등 건축문화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문화공간 조성과 지역의 유휴 건축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모델 마련 등 지역의 다양한 건축자산을 건축문화 창조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광화문~한강 구간 국가상징거리 조성과 지역의 대표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과 관광자원화 등 지역 발전을 촉진한다.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문화공간 조성과 지역의 유휴 건축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모델 마련 등 지역의 다양한 건축자산을 건축문화 창조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6)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 각종 건축 관련 행사의 내실화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도입, 학생 및 일반인 대상 건축문화 교육 확대, 우수한 건축물과 도시에 대한 홍보 강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를 실현한다.
- 국내의 우수 전문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건축가(조경가) 국제브랜드화 추진과 해외공관을 활용한 한스타일 건축문화 홍보 등 건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건축문화 기록물의 축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적 토대를 마련한다.

국내의 우수 전문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건축가(조경가) 국제브랜드화 추진과 해외공관을 활용한 한스타일 건축문화 홍보 등 건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5. 지역건축기본계획 주요 내용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광역시·도의 경우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서울, 부산이 2012년 12월 현재, 수립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광역시·도에서도 계속 수립하고 있는 중이며 그 현황은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6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현황

수립 여부	지자체
수립 완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수립 중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준비 중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그림 3-3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하도록 했다. 수립이 완료된 3개 지자체의 주요 비전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3대 목표+6대 전략+15개 실천과제

- 비전: 지속가능한 글로벌 커뮤니티, 서울
- 목표: 활기찬 문화도시 서울, 지속가능한 푸른도시 서울, 균형 있는 입체도시 서울
- 특징: 공공건축 품격 향상 및 민간 참여, 서울의 역사성 중시, 입체복합 건축공간 활성화, 초고층 건축물 입지 기준 제시, 연구과제·국가연계사업·시범사업·제도 개선으로 각 실천과제를 구분

2) 부산광역시: 3대 목표+9대 전략+22개 정책과제

- 비전: 시민의 건축, 품격 있는 부산
- 목표: 생활경관도시(산과 바다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부산 건축 실현), 녹색 정주도시(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축 기반 구축), 건축문화도시(창의적 건축문화 육성과 건축서비스의 선진화)
- 특징: 부산의 지역 특성과 문제를 고려하여 9대 전략을 설정하고 각 정책방향을 제시. 실천단계에서 제도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 예산과 관련된 실행과제로 각각 구분

3) 경기도: 3대 목표+6대 전략+13개 실천과제

- 비전: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경기
- 목표: 매력적인 생활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녹색공간 구현, 지역성을 살린 문화공간 창조
- 특징: 경기도의 특성인 대규모 계획도시, 자연발생적 도시, 비도시 지역이 혼재한 상황을 고려한 기본계획 마련, 경기도 건축디자인 기준 수립, 각 체계별 실행 시기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주요 추진과제를 핵심전략사업으로 도출

6. 성과 및 의의

국가에서 최초로 건축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12월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가 수립을 완료하였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 2012년 12월에는 국가건축정책 추진 성과에 대하여 처음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국회보고를 하게 됨으로써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년 5월 수립)의 이행 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기본계획 수정·보완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국가에서 최초로 건축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2012년 12월에는 국가건축정책 추진 성과에 대하여 처음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국회 보고를 하게 됨으로써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년 5월 수립)의 이행 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시 기본계획 수정·보완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표 3-7 건축기본법 내 건축정책 국회보고 추진 근거

건축기본법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2. 미래사회의 건축환경 변화 전망 및 대책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환경, 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의 풍토성 및 전통성 계승에 관한 시책
5. 건축제도·기준 등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건축기술·건축설계의 발전,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

제2절
국가 상징거리 및 지역 대표거리 조성

국가 상징거리

1. 추진 배경

'국가상징거리 조성'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8월 4일 건국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급했다. 경복궁과 광화문 앞에서 숭례문까지 이어지는 거리 일대를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하여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상징거리는 전통과 미래, 지식과 정보가 공존하는 글로벌 코리아의 상징거리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또한 같은해 8·15 경축사에서 재천명한 '국가상징거리 조성 구상'을 토대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화문에서 한강에 이르는 7km 구간을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자부심을 표출하는 국가상징 중심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천명했다.



그림 3-4
북한산과 관악산에 이르는
녹지축과 수경축

1) 추진의 필요성

국가상징거리 조성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국가적 중심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대 궁궐 등 전통적 도시조직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세계적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수도 서울'의 정체성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기적의 역사를 성취해 온 국민적 자부심을 표출할 수 있는 국가 중심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2) 성숙한 세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녹색·문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저탄소·녹색 도시 구현을 위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문화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이다.

(3) 대한민국 수도의 도시구조 강화를 위한 수도 중심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통한 수경축, 북한산에서 관악산, 종묘에서 남산에 이르는 녹지축과 더불어 수도 중심축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구조의 품격을 높이려는 것이다.

2) 해외 사례

프랑스 파리의 '그랑 프로제(Grand Project)' 그랑 프로제는 프랑스 대혁명 200주년을 기념한 국가 주도 프로젝트로 문화도시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부심을 세계적으로 고양하기 위해 계획됐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궁전에서 샹제리제 거리를 거쳐 개선문에 이르는 역사의 축을 라데팡스까지 연장하고, 아홉 개의 기념비적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 몰(National Mall)'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과 링컨 메모리얼을 녹지로 연결하고, 다양한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정치·역사·문화 중심지로서의 미국을 상징한다.

독일 베를린의 '연방정부청사지구' 독일은 1990년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기점으로 대규모 수도 재정비사업을 추진해 녹색도시 및 유럽의 중심국가의 이미지를 정립하고 있다. 특히 베를린의 슈프레보겐을 청사구역으로 설정하고 공공시설물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의무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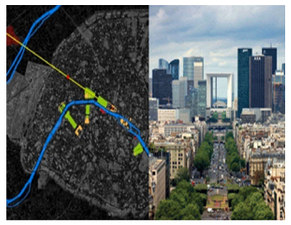


그림 3-5 파리의 그랑 프로제


그림 3-6 워싱턴의 내셔널 몰


그림 3-7 베를린의 연방정부청사지구

2. 추진 경과

국가상징거리 조성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 태스크포스팀(TF)이 2008년 12월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양윤재 위원을 비롯하여 안건혁·이진숙·류춘수·김광현 위원 등이 포함된 위원



그림 3-8 광화문 광장, 사진 박완순

회 TF는 대통령 보고자료 마련을 목표로 국토해양부의 사전기획 연구를 관리하고, 관계부처인 국토부·서울시·문화부·코레일 등과의 회의를 주관했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는 국토해양부의 사전기획 연구가 수행됐다. 이는 기본구상 마련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한 것으로 도시설계학회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2009년 3월 30일 위원회 1차 대통령 보고회에서 사전기획 연구가 양윤재 위원의 발표로 보고됐다.

대통령 보고 이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종합계획수립용역을 도시설계학회에 맡겨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의 일정으로 추진됐다.

2009년 8월에는 국가상징거리 명칭 공모를 시행해 총 3,683건 응모작 중 최우수작으로 '한가온거리'를 선정했고, 우수작 3편과 장려작 6편을 함께 골랐다. 2009년 9월 15일에는 위원회·국토부·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도시설계학회가 주관하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상징거리 심포지엄'이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그랑 프로제는 프랑스 대혁명 200주년을 기념한 국가주도 프로젝트로 문화도시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부심을 세계적으로 고양하기 위해 계획됐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궁전에서 샹제리제 거리를 거쳐 개선문에 이르는 역사의 축을 라데팡스까지 연장하고, 아홉 개의 기념비적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1990년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기점으로 대규모 수도 재정비사업을 추진해 녹색도시 및 유럽의 중심국가의 이미지를 정립하고 있다.

종합계획수립 후 1단계 사업 중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된 태평로 보행로 확장공사 등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시행되었다.

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

국건위는 자문회의 및 기획단 종합회의를 통해 '국가상징거리' 프로젝트를 구체화했다. 2009년 2월 9일 열린 국건위 국가상징거리 관련 회의에서는 국가상징거리 기본 구상에 대해 논의했다. 2009년 2월 16일 열린 관련 회의 때는 국가상징거리 기본 구상의 문제점을 발표하고, 이를 토의했다. 2009년 2월 23일에는 국가상징거리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사업 진행방향을 검토했다. 2009년 3월 9일 회의에서는 계획 이슈 사업 및 문화재 관련 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제1차 대통령 보고회가 끝난 2009년 4월 16일에는 종합계획수립 등 후속 조치에 대해 협의했고, 2009년 7월 17일과 18일 양일 간 종합계획수립 연구진과 워크숍을 통해 내용에 대한 토의를 벌였다.

2009년 8월 17일 회의를 통해 종합계획용역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2009년 9월 15일에는 국가상징거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09년 10월 12일 회의를 통해 국가상징거리 교통표지판 개선방안과 세종로공원 조성계획, 정부종합청사 리모델링 방안을 검토했고, 2009년 10월 20일에는 광화문권역 교통 및 조경계획, 철도 지하화 방안 등 국가상징거리 종합계획용역을 검토했다. 2009년 11월 24일 회의 때에는 사업일정 및 사업범위 등을 검토했다. 2009년 12월 11일 국가상징거리 2차 워크숍을 개최해 상징거리 조성의 타당성과 주변지역 관리 범위 등을 논의했다.

2010년 11월 29일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 구체화된 조성계획안을 보고 받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 이후도 계속 효과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 추진전략, 주체, 예산 등에 대해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벌였다.

1) 조성 기본 방향

4. 주요 내용

국가상징거리 조성의 기본 방향

- **도심부 역사성 구현 및 인간 중심 환경 조성**
- **품격 높은 가로환경의 구현**
- **문화적 활력공간 확충**
- **국가 수도의 경제적 동력공간 창출**
- **그랜드 링크(Grand Link)의 조성**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된 국가상징거리 조성의 기본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다.

(1) 도심부 역사성 구현 및 인간 중심 환경 조성
서울 도심부의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공공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며, 광장 조성 등을 통한 보행 중심의 도심환경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2) 품격 높은 가로환경의 구현
가로수·공공시설물 등 가로경관 요소에 대한 통합 디자인을 통해 상징적이고, 품격 높은 가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3) 문화적 활력공간 확충
세계적 수준의 건축·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존 역사문화자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4) 국가 수도의 경제적 동력공간 창출

국가 수도인 서울을 국제업무지구·용산공원·한강까지 아우르는 신동력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이다.

(5) 그랜드 링크(Grand Link)의 조성

서울역에서 한강까지 연결하는 보행녹지축인 그랜드 링크(Grand Link) 조성을 통해, 보행환경은 물론 주변 낙후지역의 정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그림 3-9 국가상징거리 조성 방향 개념도

2) 권역별 조성 방향

(1) 광화문권역(서울)

광화문권역은 국가 역사·문화의 중추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 구체적인 조성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광화문광장의 역사성 구현 및 국민 중심공간 조성

먼저 율곡로의 우회를 통해 광화문광장을 경복궁과 직접 연결하여 사람 중심의 역사적 광장으로 확대·조성한다. 이와 함께 중요한 건물 앞에 놓이는 넓은 대로로 국가의 중요 행사에 사용했던 '경복궁 월대'와 '동십자각'을 복원하고, 해태상을 월대 전면인 원래 위치로 이전하는 것 등을 추진한다. 또한 세종로 정부청사 건물의 저층부를 아트리움·문화공간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광장의 개방성을 확보한다.

② 국가적 문화·예술 공간 조성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국립대한민국관' 건립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국립대한민국관의 경우, 국가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현재 미 대사관 부지를 포함하여 신축하는 방안과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다.

③ 가로공간 및 광장 활성화 유도

건축물 내 복합문화 기능의 도입을 유도하고, 가로대응형 저층부 계획 및 저층부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간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저층부를 공공에서 임대하는 방안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또한 가로변 보도를 확충하고, 가로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디자인한다.



그림 3-10 광화문광장 활성화 유도 디자인



그림 3-11 광화문광장



그림 3-12 광화문광장

(2) 시청권역(서울)

시청권역은 도시·문화의 중심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그 구체적인 조성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도시·문화 클러스터의 형성
서울시의회 건물 등을 문화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변 문화공간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성공회성당·서울시의회·덕수궁을 아우르는 문화마당을 조성하고 서울시 신청사 내에서 덕수궁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청계광장에서 시청광장까지 가로·건물 통합디자인을 통해 가로공원을 조성한다.

② 근대 한국의 중심공간으로서 덕수궁 일대의 위상 제고
덕수궁·시청광장·환구단을 아우르는 통합적 공간을 형성한다.

(3) 서울역권역(서울)



그림 3-13 덕수궁 전면광장 디자인

서울역권역은 국가 수도의 관문·교류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그 구체적인 조성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도심 진입 관문의 이미지 강화

서울역 부근은 차량 중심의 도로를 보행 중심 광장으로 전환하고, 강한 방향성의 식재를 통해 도심 진입부의 상징성을 강화한다. 또한 주변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공간환경의 개선과 활성화를 유도한다.

② 도심과 한강을 연결한 녹지축의 중심광장 조성

도심으로부터 국제업무지구와 한강을 연결하는 중심공간으로서의 서울역광장의 위상을 높인다. 더불어 서울역광장 정비, 공원 및 문화공간 조성, 국제회의장 건설 등을 통해 이 부근을 국가 중심 교류공간으로 정비한다. 현재 '서울역 북부 국제회의단지 조성사업'과 '구 서울역사 문화공간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③ 국가 수도의 관문경관 개선

국제회의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 이전, 고가도로 철거 등을 통해 국가 수도의 진입 경관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 환승센터 조성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역 고가철거·도로개선사업을 재검토하며 식재를 통한 주변 건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완화한다.



그림 3-14 서울역권 광장 조성

(4) 용산권역(서울)

용산권역은 미래 신성장 동력공간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그 구체적인 조성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거점 문화시설 조성 및 미래 활력공간 네트워크화

한강로를 중심으로 용산공원·국제업무지구·노들섬 등에 다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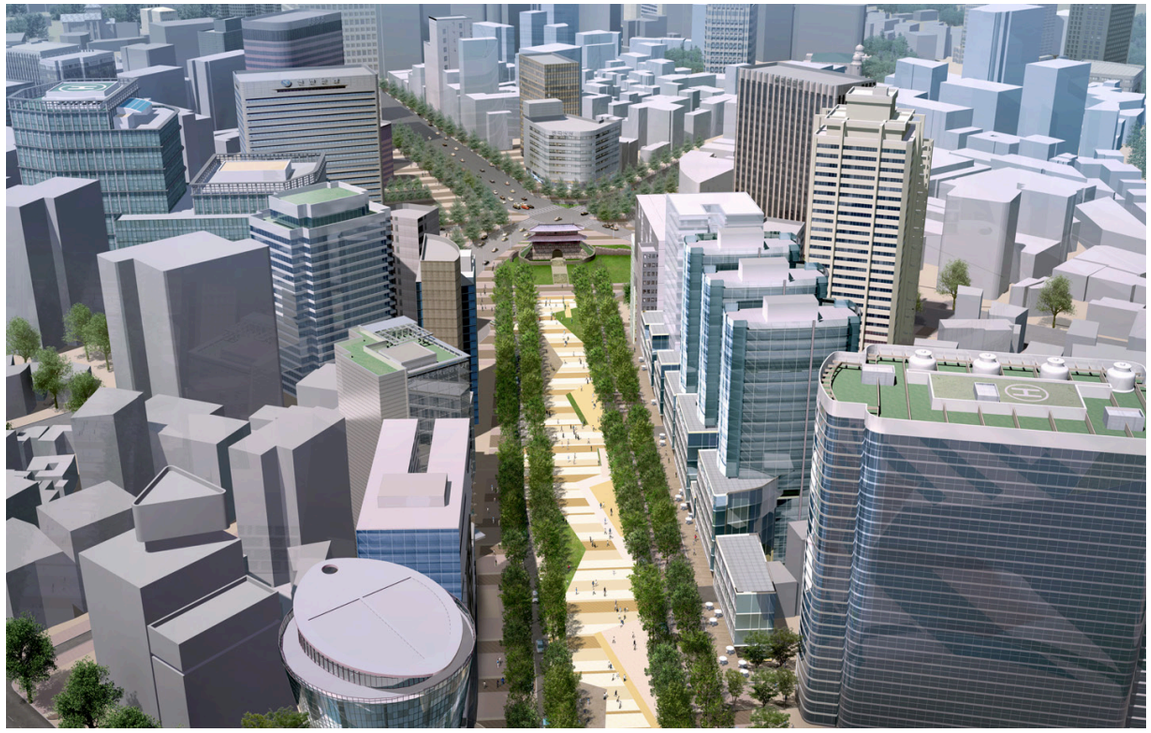


그림 3-15 용산역권 광장 디자인



그림 3-16 용산역권 광장 디자인

거점문화 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네트워크화한다. 특히 국립민속박물관과 같은 전문적이고 특화된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등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공간을 구축한다.

② 보행녹지축 조성 및 주변 지역 정비 유도

도심과 한강을 연결하는 보행녹지축인 그랜드 링크(Grand Link)를 조성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녹지축을 중심으로 용산공원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변 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여 이 부근을 국가의 신성장공간으로 재창조한다.



그림 3-17 그랜드 링크 조성 디자인

3) 1단계 중 우선 사업시행 주요 내용

광화문~한강(7㎞) 구간 중 광화문~숭례문(2㎞) 구간을 1단계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아래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림 3-18 태평로 보행로 확장 디자인

① 태평로 보행로 확장

차로를 10차선에서 8차선으로 축소하여 보행공간을 확대했다.

② 세종로공원 정비

세종로공원 지상부를 리모델링하여 광화문광장과 연계되는 휴게·편의 공간으로 제공했다. 지하 2층까지는 썬큰(Sunken) 공원으로 재조성하여 공공성과 개방성을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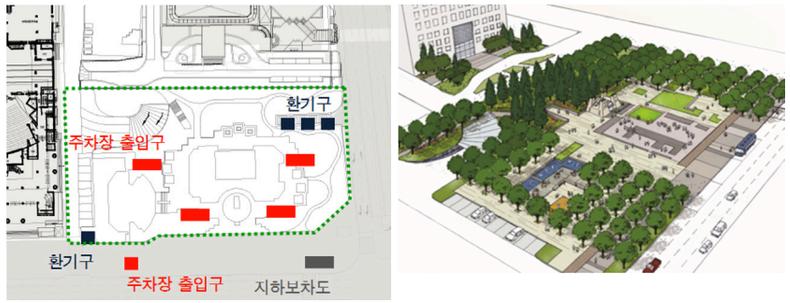


그림 3-19 세종로 공원 정비 디자인

③ 덕수궁 역사거리 조성

덕수궁길에 역사와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특화 거리를 영국대사관과 협의하여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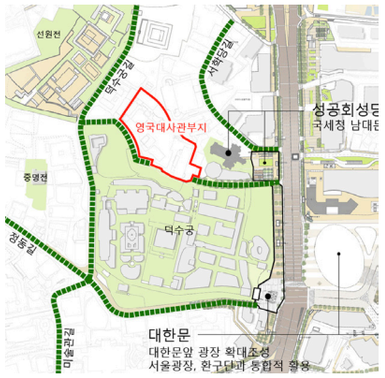


그림 3-20 덕수궁 역사거리 디자인

④ 경관조명 특화 등 주변관리

국가상징거리에 부합하는 가로 이미지 구현을 위한 건축물 관리 및 야간조명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야간조명은 통일된 컨셉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태평로 주변 대형 건축물에는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첨단정보시스템(IT, Digital Media)을 통해 상



그림 3-21 서울광장, 사진 윤준환

징거리와 사람이 역사 콘텐츠를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관리했다.

4) 1단계 구간 사업시행 위치도



그림 3-22 사업시행 위치도



그림 3-22 덕수궁 둘레길 복원



그림 3-23 성공회앞 문화마당



그림 3-24 태평로 보행로 확장





그림 3-25 경관조명 특화사업





그림 3-26 세종로공원 재정비

5. 의의 및 기대 효과

최근에는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도시 중심의 성장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전 세계 도시들의 치열한 문화 경쟁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문화의 중심축이 서구 중심에서 아시아로 옮겨지면서, 아시아 각국 도시들의 문화 경쟁은 이미 뜨겁다.

국가상징거리 중에서 서울 4개 권역의 테마는 '역사공간으로서 광화문권역', '문화공간으로서 시청권역', '삶의 공간으로서 서울역권역', '미래 신성장 동력의 공간으로서 용산권역'이다. 이는 이 네 개 권역의 거리조성을 통해 전통문화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공간을 창출하려는 의도다.

최근에는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도시 중심의 성장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전 세계 도시들의 치열한 문화 경쟁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문화의 중심축이 서구 중심에서 아시아로 옮겨지면서, 아시아 각국 도시들의 문화 경쟁은 이미 뜨겁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최첨단 건물의 위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일본 외곽의 해안도시 쯤으로 여겨졌던 요코하마(橫濱)는 지난 30여 년 동안 문화도시 발전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현재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문화 관련 경제효과를 올리는 동시에 일본은 물론 해외 예술가들이 살면서 일하고 싶은 도시로 거듭

나고 있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을 통해 드러난 한국인의 열정과 우수한 소프트파워 기술은 서울을 21세기 세계 문화 중심지로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서울만의 개성 있는 문화 발전전략을 세워 '국가상징거리' 계획을 수행한다면 서울은 세계도시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8 국가대표거리 조성계획

국가의 정체성을 세계로 표출	국민의 자부심에 부응하는 높은 품격	녹색 도시환경을 선도적으로 구현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활력을 창출
			

세계 일류국민으로서 자긍심 고양

세계 속의 일류국가 이미지 강화

▼

자랑스럽고 멋있는 국가 대표거리 만들기

지역 대표거리

1. 추진 배경

지역대표거리 사업은 제1기 위원회가 국격향상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가상징거리 사업을 지방으로 확대한 것으로, 21세기 도시경쟁 시대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 도시에도 역사와 문화를 담은 지역대표거리를 조성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지역대표거리 사업은 제1기 위원회가 국격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가상징거리 사업을 지방으로 확대한 것으로, 21세기 도시경쟁 시대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 도시에도 역사와 문화를 담은 지역대표거리를 조성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은 1980년대 옛 건축물을 활용한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 사업을 도시 전역(50개주, 9만 4000개 사업)에 실시하여 41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지역대표거리 조성사업은 지방도시의 정체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2. 추진 경과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가로를 조성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자원화 추진을 목표로 했다. 주요 내용은 ① 지역별 고유한 역사, 지역맥락과 건축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공간적 중심성을 회복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며, ② 개성 있는 공간 창출을 위해 디자인 특화전략, 경관전략을 가지고 특정지역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으로 부산시는 대청로 마스터플랜 수립비 2억 원을 국토부로부터 지원받아 2011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 6월 부산시 재정 투자 및 융자 심사를 마치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3. 주요 내용: 부산 대청로권역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시 중구 보수동 1가에 위치한 대청로권역은 대한민국 임시수도의 기간축으로서의 상징성 회복과 친서민 골목경제 재생의 시범지역

표 3-9 기본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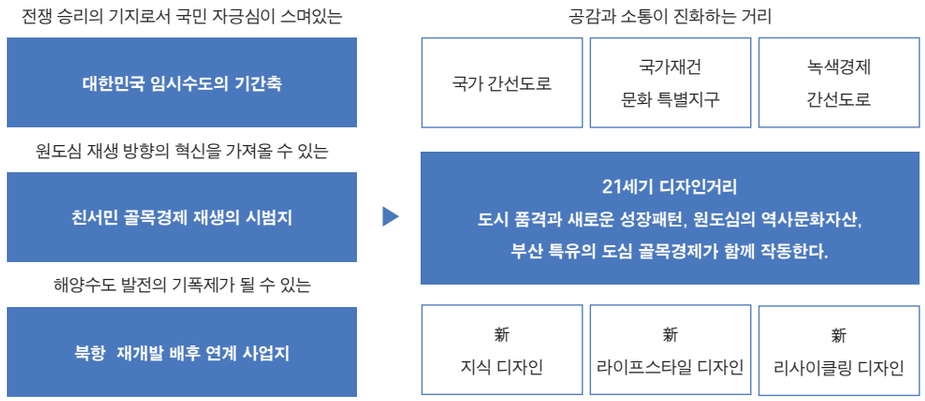




그림 3-28 대상지역: 대청로(도로 및 인도) 및 대교로(북항 측) 일부

그리고 북항재개발 배후의 연계 사업지 역할이라는 세 가지 기본 목표 아래 추진되었다. 지방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역사와 문화를 담은 지역 대표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청로 원도심 대표거리 사업과 연계하여 대청로를 중심으로 주변에 흩어진 부산근대역사관, 동광동 인쇄골목 일대, 보수동 책방골목을 비롯해서 인근의 가톨릭센터와 벽화가 있는 골목길 및 계단길, 주변의 일식가옥 등을 포함한 선형의 근대문화특화구역을 조성한다. 책방골목 등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로를 개선하면서도, 아직 남아 있는 근대건축의 원형을 복원하고 근대적 정취를 불어넣음으로써 근대문화 관광이 가능한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구간은 부산우체국에서 임시수도 기념거리에 이르는 대청로 길이 1480m 폭 25m 구간이며, 사업기간은 2011-2015년,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290억 원(국비 145억 원, 시비 145억 원)이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구체적인 조성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측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대청로의 활성화의 핵심은 방문객의 양적 증가다. 이는 ① 재래 골목경제의 활성화와 대청로변 근린 기능 특화를 통한 기존 가치의 재발견과 활성화, ② 산복도로의 접근성 강화 등의 장기 차원의 대중교통 개선을 통한 접근성의 향상, ③ 문화예술에 기반한 지역문화 활동의 유입 및 네트워킹 등을 통한 대청로의 체질 개선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2) 하드웨어 측면

표 3-10 지역체계별 구상

구분		구분의 근거	구상	이미지
지구	근대 핵심 지구	• 부산근대역사관, 용두산공원, 일본인거리, 한국은행(이전), 부산유치원(터) 등 근대자원 집결 • 광복로와 직접 연계	• 근대역사의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한 시범지구로 육성 • 레트로(Retro)풍의 가로 분위기 연출	
	근대 지원 지구	• 부평시장, 국제시장, 보수동 책방골목 등 근대적 분위기의 상업활동이 주를 이룸 • 근대핵심지구와의 공간적 이격 등	• 보수동책방골목의 특별관리 (활성화 지원) • 자치조직(TMO)을 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유도	
점	공공 행정 거점	• 임시정부청사(옛 경남도청/현 동아대학교 박물관), 임시수도기념관 등이 있어 대청로의 상징기능 수행 • 부산대병원 등이 있음	• 대청로의 시점(始點)으 로서의 상징성 부여 • 보수천의 이미지복원 등을 통한 접근성 증대	
	관문 해양 거점	• 연안부두(옛 수미르공원 포함)를 중심으로 제1·2부두와 대청로의 직접 연결지점 • 북항재개발부지와의 다양한 연계	• 옛 수미르공원 부지와 연안 부지의 통합 운용 • 수변광장 조성 및 페리터미널의 특화를 통한 해양거점화	
회랑	근대 역사 회랑	• 옛 영선고갯길을 중심으로 각종 근대자원(인쇄 골목, 40계단 등)이 있음 • 일본인거리와 직접 연결	• 가로를 따라 분포하는 각종 근대 자원의 재활용(매입/리모델링)을 통한 지역재생 도모	
	생활 역사 회랑	• 복개 전 보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생활환경의 잔존 • 한전사옥/창고, 동아일보임시사옥 등 활용가능한 근대 건축물 다수	• 공공행정거점과의 통합적 관리 • 장기적 차원에서의 보수천 생태복원 지향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가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① 약 300m 구간을 대상으로 한 환경정비, 파사드정비, 특화장소 확보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분위기 전환을 이끌어내고, ② 피난을 테마로 한 연안부두 일대의 수복과 장기 차원의 보수천 생태복원 등 특정 장소의 복원·수복을 통해 대청로 이미지를 재확립하고, ③ 근대건축물이나 공가 등 소외된 건축물의 특화와 자발적 주민 참여에 의한 환경정비 유도 등을 통해 거점 단위의 기능체를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등 세 가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하드웨어 측면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젊음의 거리 조성: 웰빙몸짱거리, 징검다리거리, 연인들의거리
② 휴식편의시설: 몽마르트 언덕, 인공폭포 광장
③ 상징시설: 패션거리 상징물, 인쇄골목 홍보판, 스타등용문
④ 도시기반시설 통합디자인 정비: 보도, 측구, 가로등주, 가로수보호판 등
⑤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별도 사업 추진): 책방골목 문화거리, 초량왜관복원, 연향대청복원, 전통문화체험관, 영화체험박물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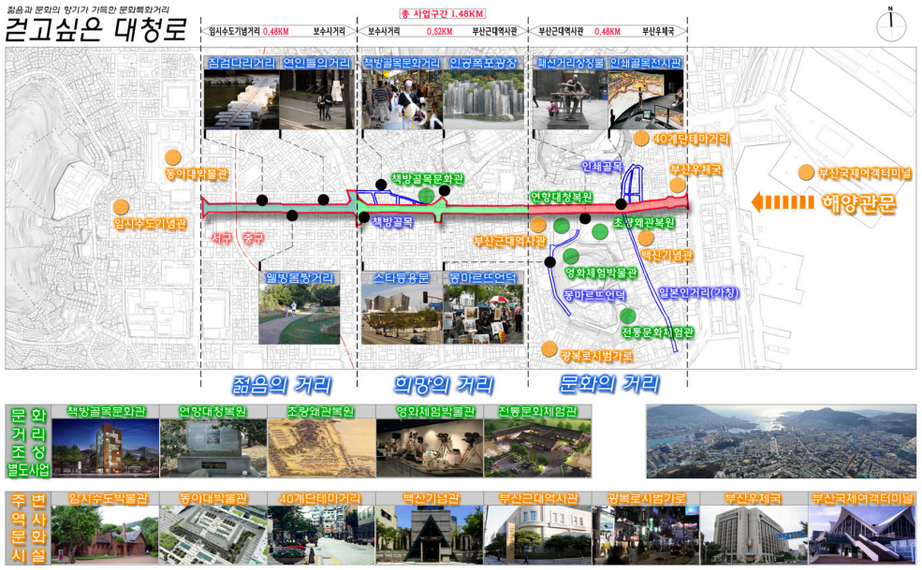


그림 3-27 주요 사업구상도

4. 성과 및 의의

지역대표거리 조성을 통해 건축물과 도시환경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디자인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또한 지역의 도심 활성화사업, 가로환경 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참여 방안을 확보하여 상권회복, 관광객 유치 등 실효성을 높이고 다른 산업분야와 동반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청로 지역대표거리는 부산의 근대역사 건조물이 산재해 있고 젊은 층이 많이 찾는 대청로를 젊음과 역사문화가 숨 쉬는 도시상징 대표거리로 조성하여 낙후된 원도심 재활성화 및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부산의 도시공간을 창조하고 지역대표거리에 있는 상가들의 집객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도시공간의 재생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3절
신한옥의 보급 활성화

1. 추진 배경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 유형이었던 한옥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아파트 위주의 대량공급정책으로 급속하게 사라졌다. 하지만 최근 설비 현대화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품격 있는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친환경 웰빙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녹색건축으로서 한옥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복(衣)·한식(食)과 함께 우리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한옥을 우수한 도시·문화 자산으로 잘 활용한다면 국가 품격을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대안적 주거 유형으로 한옥을 활성화한다면 목재가공산업 등 관련된 녹색산업 분야가 크게 육성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옥에 대한 부처와 지자체별로 산재해 있는 정책을 하나로 모아 국가 차원의 종합적 추진전략을 마련해 시너지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토경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된 범부처 차원의 한옥 관련 종합추진계획으로 '국격 향상을 위한 新한옥플랜'을 전개하자는 뜻이 모아졌다. 특히 농촌지역에 저렴한 한옥을 적극 보급해 우리 고유의 정서가 사라진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상태가 좋은 전통한옥의 소실을 막고, 관광·문화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보전·활용하며, 생활불편·고비용 등 한옥의 한계를 현대적으로 극복한 신한옥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3-28 정선 삼승정



그림 3-29 정선 삼승조망



그림 3-30 신한옥 플랜 보고회의

2. 추진 경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신한옥 플랜'의 수립을 위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의 연구 자료와 관계부처의 정책 자료 등을 활용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후, 자문회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부는 2009년 7월 24일 한옥 건축 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어 위원회에서는 2009년 8월 6일 한옥의 보전 및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한옥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논의와 협의를 진행했다. 2009년 8월 19일 기획단은 한옥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의 필요성, 한옥 기술개발사업 개요 및 추진과제 등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2009년 9월 30일 신한옥 심포지엄을 열어 '한옥건축 기술기준' 등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참가자와 논의했다.

2009년 11월 19일에는 한옥 관련 농림식품부(이하 농림부)·외교부·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화부) 등 관계기관 담당관과 한옥 육성방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회의 및 토의를 진행했다. 또한 2009년 11월 10일, 13일, 2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한옥 육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10년 1월 13일에는 자문회의를 개최해 '한옥의 보전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검토하고, 한옥의 범주구분 및 지원책 등 보고서 내용의 보완 사항을 토의했다. 이후 부처협의를 거쳐 보고할 안을 완성했다. 2010년 5월 3일 열린 제3차 대통령 보고회에서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토경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된 범부처 차원의 한옥 관련 종합추진계획으로 '국격 향상을 위한 新한옥플랜'이 보고됐다.

이와 병행하여 국토부에서는 2009년 3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입안하여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라고 한옥의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한옥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고, 한옥건축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2010년 2월 18일 「건축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여 전통 주거문화인 한옥을 보존·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3. 주요 내용

신한옥 플랜 전략

- 한옥의 보급 확산 사업
- 설계 성능 시공 기술 연구개발
- 한옥 관련 산업기반 구축
- 설계·시공 전문 인력 양성
- 한옥의 멸실 방지
- 한옥의 보전·지원
- 한옥의 관광 자원화
- 공공시설의 한옥 도입

1) 신한옥 플랜의 추진 현황

신한옥 플랜의 비전은 '2020년, 한옥 르네상스 시대 실현'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를 '한옥을 대중화하고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여 국가 품격을 높이고 녹색성장을 선도한다'로 정했다. 또한 '한옥의 보급·확산', '기술개발 및 산업화', '한옥의 보전·관리', '한옥의 적극적 활용' 등 네 가지를 주요 전략으로 정했다.

첫 번째 한옥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농어촌지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한옥을 신축할 때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농어촌 한옥 표준설계도서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단독주택지구 일부를 한옥마을 전용택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입지유형별로 한옥마을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먼저 한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춥고 불편하고 가격이 비싼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한옥의 주거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한옥에 적합한 설계,

성능, 시공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기술 개발이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는 현재보다 건축비를 최대 40%까지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한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목재의 표준화 및 생산과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설계와 시공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전문업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제공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들어맞는 신한옥 설계기술 개발, 주거 성능 개선, 공기 단축과 시공성 향상을 위한 신공법 개발 등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36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 한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옥등록제를 시행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재개발을 지양하며, 양호한 한옥을 공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한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체험 행사를 확대 지원하고, 신축하거나 매입한 한옥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한옥마을을 관광 명소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도서관과 유치원,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한옥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 한옥 르네상스 시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펼쳐지는 위와 같은 신한옥 플랜의 네 가지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옥의 보급 확산사업

한옥신축 우선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2010년 12월 개정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12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11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운용계획 및 시행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중 한옥건축 물량을 파악했다.

또 농식품부에서 농어촌 뉴타운에 시범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 중이다. 2009년 12월에 전남 화순 농어촌뉴타운 200세대 중 50세대의 한옥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했고 2011년 12월에 마무리되는 사업기간에 따라 2013년 12월 입주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농식품부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한옥 표준설계도서 보급'도 정상추진 중이다. 2011년 12월 국토부에서 연구 중인



그림 3-31 성씨 고가, 사진 윤준환

'한옥마을 계획기준'에 포함하고 농식품부도 2014년도 이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성능 시공기술 연구개발(연구 개발) 결과를 토대로 한옥 표준 설계 도서를 개발해 승인받아 보급하려고 한다. 예상 소요 시간은 2년이다.

반면 2010년 12월 개정된 한옥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지방세 감면 조례」 지정은 지연됐다. 현재 서울시, 수원시, 전주시의 한옥 관련 조례에서 세금감면 규정이 있고 자치단체 세금감면 조례를 개정해 실제로 세금감면(재산세)이 이루어지는 지자체는 서울시 종로구의 감면제(2009년 6월)가 유일하다.

(2) 설계·성능·시공 기술 연구개발

국토부에서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국비 약 270억 원과 민간자본 90억 원을 합한 360억 원을 투입해 한옥 건축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09년부터 시작한 한옥연구 개발사업은 2011년 7월에 2차년도 연구개발을 완료했다. 앞으로 2014년까지 한옥 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옥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실물모형 테스트는 1단계로 일반형 한옥(2012년)과 2단계로 고급형 한옥(2014년)을 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3) 한옥 관련 산업 기반 구축

국토부는 2012년까지 '한옥 목재의 부재 표준화'를 추진했고 산림청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연구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9년부터 한옥연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목재공학회에 개발 용역을 주어 2012년 말 한옥표준모델 개발을 완료했다. 또한 중부, 남부, 서부 등 지방산림청 담당 구역에 한옥표준모델 3동을 건축했다. 앞으로 한옥표준모델 개발에 따른 한옥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옥용 부자재 공급을 위한 저장센터(1만 6,319㎡) 건립과 한옥용 부자재의 지정매각을 확대하고 중부 목재유통 센터의 프리컷 장비 1식을 보강했다. 프리컷 가공기술 확대로 한옥 및 목조주택을 건축할 때 부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될 전망이다.

또한 2011년 5월 국가한옥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한옥 관련 활동들을 지원·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한옥 포털 사이트 구축 등 정부의 한옥 관련 기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1년 5월 국가한옥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한옥 관련 활동들을 지원·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한옥 포털 사이트 구축 등 정부의 한옥 관련 기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4) 설계·시공 전문인력 양성

한옥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건축사와 시공기능인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2011년 6월 국토부와 교과부가 공동으로 완료했다. 현재 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한옥 전문인력 교육은 명지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 3억 원을 지원해 실시 중이고 교육과정 신설은 추후 수요 등을 고려해 교과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

한옥건축산업 육성을 위해 2012년도 한옥 전문 인력 양성사업 교육기관으로 총 6개 기관, 3개 과정을 선정하고, 한옥설계 등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 중이다. 교육과정별 선정기관으로는 한옥설계 전문과정 4곳(명지대학교, 전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대한건축사협회), 한옥시공관리자과정 1곳(건설기술교육원), 대학생 여름 한옥캠프 1곳(강원대학교)이 각각 선정되었다. 교육프로그램은 과정별 교육 대상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되며, 한옥 전문가 특강, 현장실습 및 답사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내용과 함께 집 고쳐주기 등 지역봉사 활동 프로그램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사업은 최근 전통건축문화 가치에 관한 관심 증가로 한옥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2개 기관)이다. 이로써 한옥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한옥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제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인의 생활 유형을 고려한 품질 높은 한옥을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옥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는 한편, 전국적으로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기회 확대에도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한옥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는 한편, 전국적으로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기회 확대에도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5) 한옥의 멸실 방지

국토부에서 2011년 12월 시작한 '한옥 밀집지역 등의 양호한 단독주택지 보존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은 현재 추진 중이다. 2011년 12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개정할 때 위 내용에 대해 협의했고 현재 도정법은 개정 추진 중이다. 그 이전인 2010년 국토부는 9월에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할 때 양호한 한옥 재활용을 유

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도시·주거 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해 정비구역 내 가치가 높은 한옥은 보존하고 활용하며, 인근 지역은 정비사업 등과 조화되게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국토부에서 2010년 12월 개정안을 낸 건축법령은 지연되고 있다. 이 법령은 '등록한옥 철거허가제' 도입을 위해 개정안을 낸 것이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으며 장기 검토 중이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체부동 일대에 대해 한옥 전형 재개발 계획을 시범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했던 사업도 보류됐다.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때에는 먼저 한옥 전형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와 사업성의 문제, 주민반발의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6) 한옥의 보전·지원

서울시와 전라남도, 문화부, 농림부 등은 한옥 활용 프로그램을 도입해 한옥마을을 공방, 전통문화 전시시설, 한옥 체험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 한옥을 서당체험, 예절교육 등에 활용하는 사업은 농식품부가 지역별로 추진 중이고 문화부는 5억 원을 들여 2010년 전국 39개 전통한옥 체험 행사의 운영을 지원했다. 2011년에는 4억 원을 지원해 전국 34개 전통한옥 체험 행사의 운영지원을 완료했다. 문화부는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서 '한옥체험업종'으로 지정받은 한옥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는 전통한옥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7) 한옥의 관광 자원화

한옥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문화부에서는 '전통한옥 체험·숙박 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해 2010년 현재 44개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내용으로는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한옥마을 관광 명소화 지원사업 등이 있고 현재 정상 추진 중이다.

실제로 2010년에는 전국 44개 전통한옥의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15억 원)을 완료했고 2011년에는 전국 35개 전통한옥의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14억 원)을 완료했다. 2012년부터는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 예산을 관광진흥법에서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받은 한옥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또

한 한옥마을 관광 명소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51억 원을 지원해 2010년, 2012년에는 전국 9개소의 한옥을 건립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했다.

주일 후쿠오카 총영사관 관저, 주중 대사관 접견실 등을 한옥 또는 한옥 스타일로 조성 또는 조성 중이다. 앞으로 외교공관, 대사관저, 해외무역관 등을 HAN House 조성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8) 공공시설의 한옥 도입

국토부에서는 2010년 6월 지자체 한옥사업을 공모로 지원받아 2개소에 5억 원을 지원했다. 2011년에는 3개소에 5억 원을 지원 완료했다. 외교부에서 지속해서 추진중인 '한(韓)하우스(HAN House)' 조성은 정상 추진 중이다. 주일 후쿠오카 총영사관 관저, 주중 대사관 접견실 등을 한옥 또는 한옥 스타일로 조성 또는 조성 중이다. 앞으로 외교공관, 대사관저, 해외무역관 등을 한(韓)하우스 조성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2) 한옥 정책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한옥센터 설립

국가한옥센터는 한국의 문화적 자산인 한옥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고, 녹색 주거환경인 한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여, 미래 가치를 지닌 한옥의 세계화를 위해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한옥센터는 한옥정책의 개발과 산업의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해 2011년 5월 12일에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아우리(auri)에 설립되었다. 한국의 문화적 자산인 한옥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고, 녹색 주거환경인 한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여, 미래 가치를 지닌 한옥의 세계화를 위해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옥 관련 활동들을 지원·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한 연구진을 필두로 건축·도시 분야의 연구와 연계하여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옥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할 계획이다.

국가한옥센터는 첫 번째, 한옥정책 개발지원으로 한옥의 가치 발굴 및 기준 제시, 한옥의 보전 및 활용 정책, 신한옥 육성 정책 등을 개발하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 고유의 도시 문화와 경관을 창출하고, 한옥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면서 한옥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한옥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한옥산업 실태조사 및 분석, 한옥 기술 고도화 지원 및 활용방안 모색, 정부와 지자체 시범사업을



그림 3-32 김해 향교, 사진 윤준환

지원하려고 한다. 한옥의 계승과 진화를 위해 한옥건축 산업화와 한옥 활성화를 선도한다. 이를 위해 한옥 관련 사업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한옥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하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한옥마을, 한옥박람회, 한옥형 공공건축 기획, 정부와 지자체의 시범사업 등 한옥 관련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한옥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한옥 정보 아카이브 운영, 한옥문화 콘텐츠 개발, 국내외 홍보를 기획한다. 한옥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옥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한옥 관련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한옥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교육 및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내외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이는 일반 국민이 한옥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전문가 및 한옥 수요자에게는 고급 정보를 제공해 한옥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3) 한옥마을 시범조성 사업 추진

한옥의 적극적 보급과 일반인이 한옥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그간 한옥 건축기술 연구개발성과를 적용해 동탄 신도시의 대체농지(81만 2,000㎡ 중 15만 9,000㎡)에 한옥마을 시범단지(300가구) 조성을 추진한다.

국건위에서는 우수한 우리 전통 건축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동탄 신도시에 300세대 규모의 전통한옥 마을과 한옥 컨벤션센터 및 한옥 호텔과 전통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012년 4월 25일 국건위 민간위원, 관계부처 장관과 연구기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대통령 보고회에서 '위원회 핵심성과 및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한옥의 적극적 보급과 일반인이 한옥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그간 한옥 건축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적용해 위원회 제안과 관계기관인 농식품부, 국토부와의 사전협의에 따라 동탄 신도시의 대체농지(81만 2,000㎡ 중 15만 9,000㎡)에 한옥마을 시범단지(300가구) 조성을 추진한다.

주거 성능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한옥모델 개발과 확산으로 산업 기반 구축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옥마을에 한옥호텔, 컨벤션센터 등을 계획하고 국제회의 및 관광객을 유치하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옥마을을 활용한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어 프로그램 시행 등 관광 인프라 또한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10년 8월 국토부에서 한옥마을 단지로 택지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이 완료됐다.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6조 3항에 따르면 단독주택(한옥포함)과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한옥을 블록 단위로 개발해야 한다. 또한 2011년 12월 국토부에서 마련한 한옥마을 계획 기준은 정상 추진되었으며, 한옥 연구개발에서 개발하는 모델(도시형, 농어촌 형 등)을 반영하여 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4) 한옥의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

(1) 한옥과 함께하는 건축창의 체험 행사

어린이에게 건축 체험을 통한 창의력 계발과 우리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건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다. 2012년 5월 4일부터, 1박 2일 동안 강화도 성산청소년수련원에서 그림 공모전 우수작에 선정된 초등학생 4-6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대학생(건축학) 봉사자 20명이 행사를 도왔으며, 명사특강, 건축창의 체험, 현장 고수와 대화, 한옥 및 역사현장 탐방, 레크리에이션 등이 함께 열렸다.

(2) 제1회 한옥 사진 공모전 후원

한옥 사진 공모전은 한옥의 아름다움과 가치 재조명으로 우수성을 알리는 등 국민적 관심과 참여 기회를 높여 한옥 인식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행사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옥문화원이 주관하여 '내가 살고 싶은 집, 한옥'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공모했다. 심사는



그림 3-33 건축창의 체험행사(한옥모형 조립 체험)

주명덕(사진작가, 위원장), 이기웅(파주출판재단 이사장), 김현선(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장순용(삼아성 건축대표)이 맡았다.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총 5,389개 작품이 제출되었고 1차 예비심사와 2차 본심사(2배수)를 거쳐 2012년 4월 18일 최종 50개 작품을 선정했다. 전시는 5월 24일 시상식을 시작으로 6월 3일까지 서울시립 경희궁 미술관에서 열렸다.

(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국토부는 건도연과 함께 2011년 11월에 '新한옥 비전:진화하는 한옥'이라는 주제로 '2011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은 최근 친환경, 녹색, 웰빙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에 우리 전통문화자산인 한옥의 저변 확대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기획되었다.

2011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은 응모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한옥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거주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는 크게 계획 분야와 준공 분야로 나누어 시행되었으며, 계획 분야는 주거·비주거·공공공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준공 분야는 3년 이내에 준공된 한옥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2012년부터는 한옥의 보다 폭 넓은 저변확대 및 활성화, 효율적인 공모를 시행하기 위해 한옥사진전과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통합하고, 공모분야를 건축계획, 건물 준공, 사진 등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다양화하여 시행했다.

2012년부터는 보다 폭넓은 저변 확대 및 활성화, 효율적인 공모를 시행하기 위해 한옥사진전과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통합하고, 공모 분야를 건축계획, 건물 준공, 사진 등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다양화하여 시행했다.



그림 3-34
2012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홍보 포스터



그림 3-35 한옥사진전, 대상, '아침녘 한옥마을', 허정욱



그림 3-36 한옥사진전, 국가건축정책 위원장 특별상, '초가의 새지붕', 전승원

(4) 대학생 여름 한옥설계 캠프 후원

'대학생 여름 한옥설계 캠프'는 한옥에 대한 수요에 따라 양질의 한옥보급과 산업화, 새로운 수요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해 한옥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토부와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그리고 ㈜한옥과문화 부설 지용한옥학교에서 시행하는 행사다. 2012년 7월 9-21일까지 12박 13일 동안 강원대학교에서 열렸으며, 국토부가 주최하고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와 ㈜한옥과 문화 부설 지용한옥학교가 주관했으며, 홍천군청, 국가한옥센터, 한국건축역사학회, 대한건축학회 강원지회가 후원했다. 여기서는 한옥에 관심 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25명을 대상으로 한옥설계 스튜디오와 이론교육 및 현장 학습을 진행했다. 또한 후원 명칭을 사용하고 특별상인 위원장상을 수여해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한옥에 관한 관심을 고취하고 한옥 설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4. 성과 및 기대 효과

국가 차원의 신한옥 플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과거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의 모습이 바뀌었던 것처럼 농어촌 경관에서부터 우리 국토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신한옥 플랜'을 보고한 지 약 3년도 되지 않아 적지 않은 성과가 나왔다. 앞으로의 과제를 통해서도 이와 관련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나온 '신한옥 플랜' 성과는 주로 제도개선 내용이 많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신한옥 플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과거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의 모습이 바뀌었던 것처럼 농어촌경관에서부터 우리 국토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다. 또한 아파트 일색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 유형이 공존하는 바람직한 주거문화를 구현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그림 3-37 2012년 대학생 여름 한옥설계 캠프

제4절
한국 전통정원의 조성 및 보급

1. 추진 배경

최근 한국 스타일의 전통 건축문화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고유한 전통정원의 보급 확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전통정원의 해외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국에 수많은 일본 전통정원이 조성되어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우리의 전통정원을 조성 때 적용할 기준이 없어서 전통정원의 보급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왜곡된 전통정원이 조성될 우려도 있다. 또한 전통정원을 담당할 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전통정원의 보급 확산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 스타일의 전통 건축문화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세계의 관심이 몰릴 때 한국의 전통정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통정원의 조성과 보급을 추진하는 목적은 국내·외에 조성된 한국 전통정원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전통문화, 정원양식을 대표할 전통정원 예시안 및 조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내·외에 전통정원의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 또한 세계의 관심이 몰릴 때 한국의 전통정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 추진 경과

한국 전통정원의 조성 및 보급에 관한 연구는 2011년 12월 15일 개최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워크숍에서 김선미 위원이 제안하여, 2012년 1월 분과위원회 및 합동 연석회의 등을 거쳐 2012년 국건위 추진과제로 채택되었다.

국건위에서는 연구용역 시행계획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



그림 3-38 전통정원 예시(경복궁 향원지)



그림 3-39 전통정원 예시(담양 소쇄원)

하여 2012년 5월 1일 국건위에 소속된 조경전문가 외에 외부 관련 전문가 3인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에 설치된 전통정원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므로 관련 사례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는 등 다수 의견을 수렴, 연구용역 과업내용을 보완했다.

2012년 5월 9일에는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 6월 27일에는 한국의 전통조경문화의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사)한국전통조경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 12월 23일까지 6개월 동안 정책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용역이 발주된 이후 개최된 연구용역의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에서는 국건위원, 국건위 자문단, 국토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연구진과 연구내용, 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여 연구가 보다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림 3-40 봉화 도암정



그림 3-41 충주 함원정

3. 주요 내용

국건위는 국내·외에 조성된 한국 전통정원에 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전통문화, 정원양식을 대표할 한국 전통정원 예시안 및 조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내·외에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1) 사례 조사

최근 국내, 일본, 중국 등에 조성된 전통정원의 내용, 추진방법, 사업비, 주민반응 등을 조사하여 한국 전통정원의 조성 방향과 해외 조성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참고했다.

2) 개념 정립

한국 전통정원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설정하고 궁궐, 별서, 주택정원 등 정원의 성격별로 공간구성 내용을 구분했다. 이와 함께 한국, 일본, 중국 전통정원을 비교, 분석한 후 한국 전통정원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제시했다.

3) 가이드라인 설정

한국의 전통문화, 정원양식을 대표할 전통정원 예시안을 제시하고, 입지 여건에 따른 정원조성 가이드라인에 토지이용, 공간구성, 동선구성, 시설배치, 식재계획 등을 포함시켰다. 계획수립,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의 주의사항을 정리했고, 전통정원에서 일어나는 문화행위를 조사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그림 3-42 한국 전통정원(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에 건립 중인 서울공원)



그림 3-43 한국 전통정원 조감도(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에 건립 중인 서울공원)

4) 보급 활성화 방안

먼저 국내 주요 개발사업 추진 시에 전통정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한국 전통정원의 해외보급 활성화를 위해 외교부 및 해외협력기구 등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 주요국 대사관에 한국 전통정원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해외에 조성되어 있는 한국 전통정원의 유지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바람직한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더불어 전통정원 보급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전통정원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자체 등의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전통정원 보급 촉진을 위한 법령, 관련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4. 앞으로의 계획

위와 같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 차원의 전통정원 조성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었으며 전통정원의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국건위에서는 연구결과에 따라 전통정원의 보급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1) 전통정원 담당부처의 선정

관련기관과 회의를 개최하여 전통정원 업무를 담당할 부처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한다.

(2) 연구결과의 적극적인 홍보

관련부처,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전통정원 조성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배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3) 보급 촉진 방안의 마련 및 시행

담당부처를 중심으로 관련부처, 기관 등과 협의하여 전통정원의 보급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그림 3-44 하동 최참판 별당지



그림 3-45 홍성 조응식 가옥



그림 3-46 강릉 허난설헌 가옥



그림 3-48 경주 법주 종택



그림 3-47 조응식 가옥



그림 3-49 나주 박경중 고택

제5절
건축설계산업 육성 및 발주제도 개선

1. 추진 배경

국내 건축서비스 시장은 관련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정책적 지원 미흡으로 국제경쟁력이 낮다. 세계 곳곳에 많은 초고층 건축물을 삼성물산과 쌍용건설 등 국내 건설사가 시공하고 있으나 설계 분야에서는 국내 건축가의 참여가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기획설계(Concept Design)는 외국 건축가들이 독식하고 실시설계는 국내 건축가가 시행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건축설계산업 매출액은 OECD 조사대상 27개국 중 21번째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또 대형 설계업체의 설계수주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소규모 업체는 대형업체의 하도급 업체(실시도면 납품 등)로 전락하고 있다. 설계업체 수의 증가와 건축경기의 침체로 건축설계업체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건축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업무대가의 비현실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여 건축설계산업을 균형 있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디자인 비용 지급 등 대가 현실화를 통한 사기 진작과 건축설계는 건축가의 창작물이며 디자인적 가치가 중요한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산업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건설기술 관련법과 건축설계관련법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도시·건축·토목·조경 등의 분야가 융합하여 해외 신도시 수출 등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디자인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관련부처·기관 등과 연계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행 중인 관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3-50 온라인 건축행정시스템



그림 3-51 버즈 알 아랍 두바이



그림 3-52 자문회의(2012년 1월 27일)



그림 3-53 건축설계 관련 제1차 정책토론회(2012년 4월 20일)

2. 추진 경과

국건위는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건축설계산업 육성 방향을 설정한 후, 자문회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육성방안을 확정하여 제도 개선 등을 시행할 예정으로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건위에서는 2010년 12월 23일부터 2011년 8월 19일까지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기획설계를 외국업체가 독식한 일 등을 계기로 이를 개선하고자 2011년 11월 28일, 12월 7일, 2012년 1월 27일, 국건위 위원, 관련부처 공무원, 전문가 등과 함께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거쳐 육성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육성방안 초안에 대해서는 국건위 담당위원, 자문위원에게 조언을 받아 의견을 반영했다.

2012년 4월 20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공동으로 건축설계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2년 6월 14일 국건위 합동 연석회의에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을 보고하였으며, 2012년 9월 21일 자문회의를 거쳐 확정된 육성방안을 2012년 10월 11일 국토해양부에 시행하도록 통보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 및 건축 기획업무 개선에 대한 자체 연구도 진행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진행 중인 연구 결과를 반영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림 3-54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대상, 이태호·손종호·이필석(한양대학교)

3. 주요 내용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건축설계산업을 육성하여 국제적인 디자인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추진 목적으로 한다. '건축설계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건축설계업체 균형 발전 도모', '건축사 지위 향상 등을 통한 사기 진작'을 3개의 실천과제로 정하였고 총 12개의 세부 실천방안을 도출했다.

1) 건축설계산업 국제경쟁력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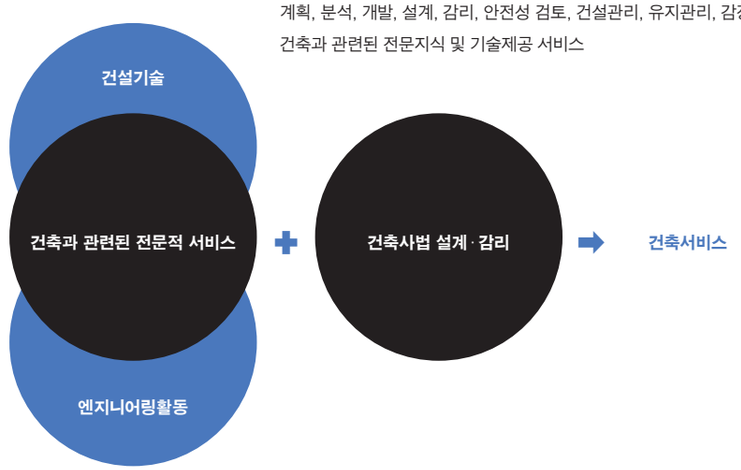
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시행으로 발전 기반 구축

국민소득 3만다달러 시대에는 산업구조가 선진형으로 전환(hardware → software)되어야 하므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하다. 건축서비스산업(software)은 건설업, 제조업 등 2차 산업(hardware)에 비하여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며, 「산업발전법」에서도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속 발전시켜야 할 지

식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타 산업 분야는 진흥법에 근거하여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그동안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설산업, 엔지니어링산업에도 속하지 않아 정책적인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시장이 낙후되는 등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공 분야의 경우 해외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부가가치가 높은 기획·설계 분야는 국내시장에서조차 해외업체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축서비스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진흥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법 제정)이 시급하다.

표 3-11 건축서비스의 정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 건축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기술제공 서비스



위원회는 앞서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의 결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을 도출했다. 2011년 5월에는 정책조정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건축 관련 주요 단체와 공동으로 별도의 입법추진단을 구성(대표단장 김창수 분과위원장)하고, 실무 TF팀을 두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에 포함될 사항을 발굴·제안하는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입법추진단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 현재까지 매주 화요일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연 1회 건축 관련 단체 등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를 통해 그간의 협의결과 및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안은 2011년 10월 제18대 국회에서 신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나, 국회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제19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제18대 발의법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안)을 보완하여 2012년 9월 강석호 의원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11월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심사를 거쳐 같은 달 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법안은 총 7장 3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건축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기본계획에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등이 포함된다.

둘째,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업현황 실태조사 실시, 수주·입찰정보·인력현황 등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설계정보 및 도서양식·자재 등에 대한 표준화 연구추진 및 보급시책 마련, 지식재산권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발주자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건축서비스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고용·창업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진흥시설의 지정 및 자금·설비 지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고 품격 높은 건축자산 확산을 위한 설계공모 우선적용 및 기타 사업자 선정 기준·절차 규정,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자문 및 지원을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운영,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건축과정에 설계자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타 건축 분야의 정책연구·개발과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진흥원 설립, 지방자치단체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 국내에도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박물관, 호주 오페라 하우스 등과 같이 우수한 건축물이 조성되어 국민 생활공간의 질이 향상되고 관광객 유치 등 도시 경쟁력과 국격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수 해외사업자 지원, 해외진출



그림 3-55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지원기관 설립 등 해외진출 기반 확충을 통해 해외시장 매출증가와 함께 고용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②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축사 능력 향상 방안 마련

건축사는 건설산업환경과 기술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축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업종 간, 업체 간 협업을 통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3-56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③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해외 진출 활성화 추진

초고층 빌딩,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기술과 설계기법 개발 등으로 환경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 축적된 기술력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초고층 빌딩 등 미래 시장 지배력 강화가 예상되는 유망 분야 위주로 R&D 사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술과 패시브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미래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IT 기반 행정과 세계적 시공 능력을 토대로 핵심·원천기술을 자립적으로 개발하여 건축설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 프로젝트 추진 능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건축설계기업을 육성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중·소 설계업체는 분야별로 전문화·특화 등을 통하여 국내시장에서 내실을 기하여 국내 건축설계산업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시 설치될 건축진흥원 내 해외수주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가간 유대관계를 장기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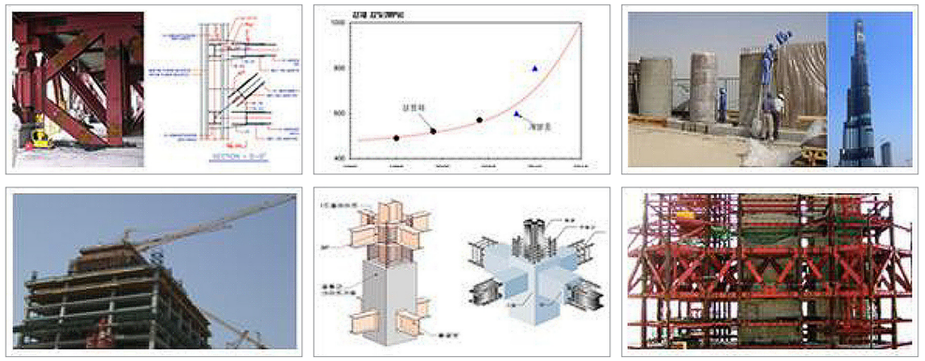


그림 3-57 저탄소 고성능 재료기술 개발 개요도

④ 건축교육제도 등 개선으로 우수인력 수급

건축교육제도와 건축사자격 연계의 적정성, 대학건축교육에 대한 현황 진단 등을 통한 건축학과 경쟁력 강화 등으로 건축학 5년제 학생들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대학교육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건축교육의 선진화로 우수인력을 육성하고 국내외 장기 건축 전망을 바탕으로 건축인력 수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 건축설계업체 균형 발전 도모

①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

건축설계산업은 부가가치율이 높고 고급인력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국가 차원의 경제효과를 위해서도 육성정책의 필요성이 높다. 하지만 그동안 건축설계산업은 건설산업의 하위 영역으로 여겨지면서 독립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낙후된 산업체계가 지속되어 왔다. 또한 대형 설계사무소 또한 국내의 초고층 프로젝트의 설계에서 해외 유명업체가 디자인을 수행하고 법규 검토나 허가, 기본설계 등 현지업체 수준의 업무만 참여하는 등 전체적으로 건축설계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공공사업 설계자 선정방식 운영과 현황을 파악하고 발주방식별 법령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공공사업 설계자 선정체계의 시사점을 살펴보며 설계자 선정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추진방안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자체과제로 추진하는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와 통합하여 추진했다.

또한 발주 관련 세부평가 기준 등 업무지침 및 평가매뉴얼 마련은 별도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이정형 위원의 자문결과를 반영해 과업 범위를 건축설계뿐만 아니라 건축·도시 분야 계획 및 설계용역으로 확대했다.

② 건축설계의 설계변경

현재 '설계변경'이란 용어는 공공건축물에서 공사비의 증감을 위한 부수 업무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설계변경은 설계단계에서 책임의 유무와 결정의 중요성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행위다. 무엇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며, 무엇이 결정되었었기에 변경되는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즉 설계변경은 변경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전제가 무엇이었냐는 것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설계변경은 설계단계에서 책임의 유무와 결정의 중요성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행위다. 무엇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며, 무엇이 결정되었기에 변경되는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즉 설계변경은 변경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전제가 무엇이었냐는 것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설계변경이 설계단계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설계에서는 정해지는 것이 없다', '언제나 변경될 수 있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건축의 설계과정을 짓밟고 있으며, 합리적인 진행을 저해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다. 심의와 허가는 필요 이상의 도면을 작성하게 하고, 변경 시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 불합리와 비경제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기획과정의 문제를 설계과정에 끌고 오게 될 경우, 설계의 불합리성은 극에 달한다.

설계변경은 변경 시점 이전에 결정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총칭한다. 여기서 결정된 내용은 발주자와 설계자가 합의한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일이 문서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설계단계(계획, 중간, 실시)에서 단계별 합의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변경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선 대관업무도 설계단계와 정합돼야 하는데, 대관업무는 모두 계획단계 선에서 끝나야 이후 공정을 순탄히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때때로 현상설계의 당선 안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시작부터 명백한 설계변경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현상설계 때에 결정했던 지침서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예산에서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설계변경이 된다. 최초에 정해진 내용이 바뀌는 것은 모두 설계변경에 해당한다. 설계는 결국 작업시간에 따른 시수를 기준으로 비용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시공은 설계에 그 잘못을 돌리며,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만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다. 설계는 당연히 기획과 결정된 사항에 대해 부족한 부분의 보수를 받아야만 한다. 특히 설계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밝히는 작용을 함으로 그에 대한 응분의 보수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③ 실적제한 완화 등으로 중소업체 업무범위 확대

건축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고 신진건축사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의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발주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전문직으로서의 건축사들이 더욱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건축사법인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발주제도의 문제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제안공모방식과 신진 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건축사 법인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행 발주제도의 문제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제안공모방식과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추진현황 파악, 시범사업 추진과정 모니터링, 시범사업 개선방안과 장기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또한 건축사법인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을 참고하여 개별 건축사가 법인화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향상하고, 자기 책임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유사 전문직 법인사례 현황 및 특성 조사를 해야 한다.

3) 건축사 지위향상 등을 통한 사기진작

① 건축기획 업무시행 등으로 디자인 비용 지급

건축설계는 단순한 도면 작성 작업이 아닌 건축가의 창작물이며 디자인적 가치가 중요한 지식서비스산업이다. 건축설계 기획업무를 적극 시행하여 디자인 작업에 대한 적정대가(Design Fee)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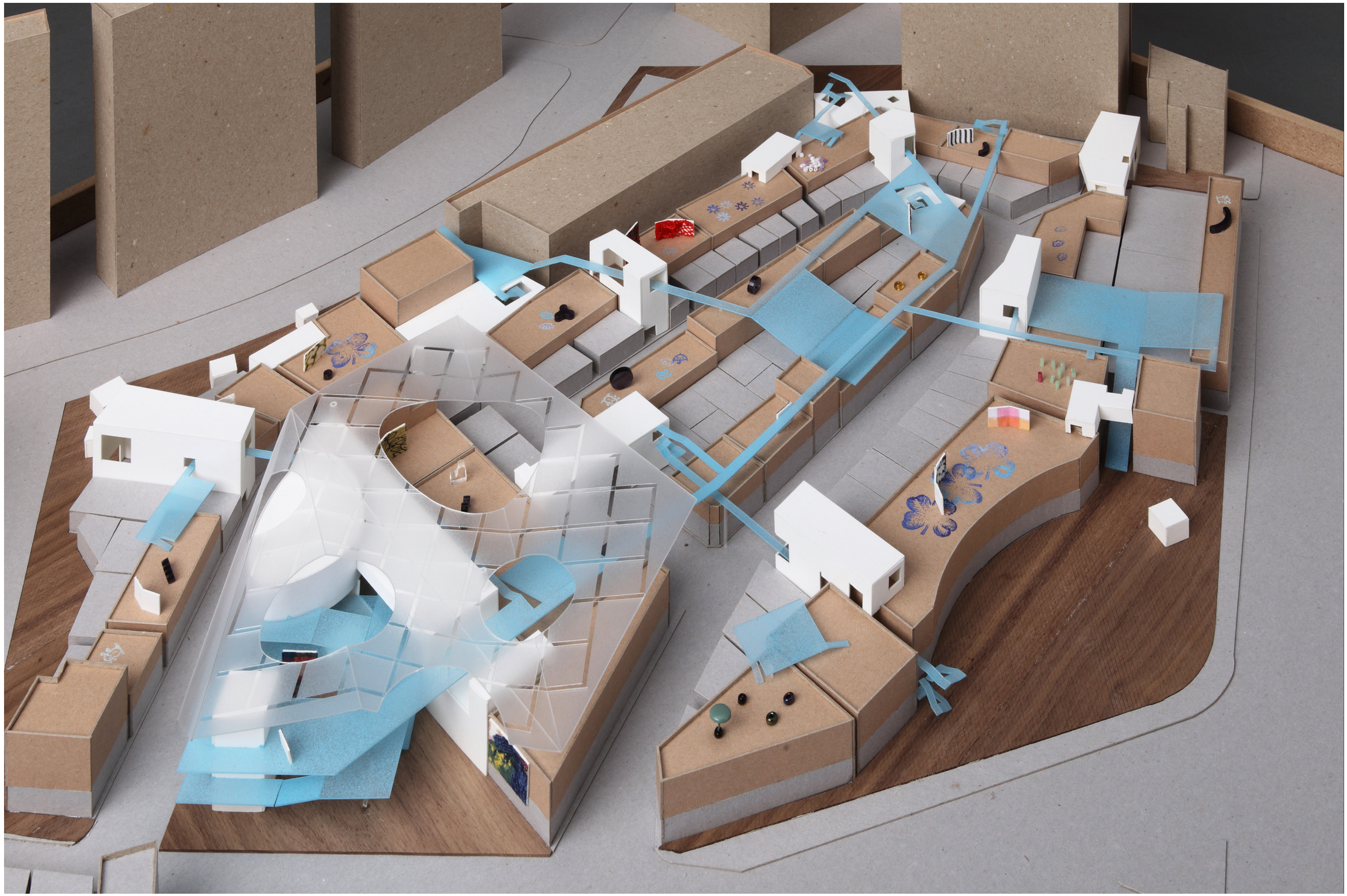


그림 3-58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이진경·기세호(서울대학교)

지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디자인 능력 강화 및 적정 공사비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에 의한 기획업무를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현실에 부응하는 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건축사의 용역비 산정 기준이 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은 불합리한 설계대가 요율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여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설계공모 당선을 사유로 설계권만 부여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나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작에도 적정한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개선해야 한다. 건축설계와 관련된 기획업무 및 설계공모 운영비 예산 항목을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에 적합한 설계대가가 지급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건축설계와 관련된 기획업무 및 설계공모 운영비 예산 항목을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근거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에 적합한 설계 대가가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 건축사의 건설기술자 자격 인정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기술자 분류(배치) 시 건축사를 기술사와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아 자격 미비로 각종 용역에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특히, 100억 이상의 건축공사 현장기술자 배치 기준에 의해 건축사의 참여 자격이 제한되어 선진 건축기술의 습득·환류가 어렵고, 이에 따른 설계경쟁력 저하로 초고층 건축물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선진국 종속화가 심화되고 있다. 도시계획·토목·조경 등과 융합된 새로운 가치창조 및 현장기술과의 환류를 통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건축·설계인에 대한 기술자 지위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발주기관 용역발주 시 건축설계 분야 참여 확대

지구단위계획 용역 등 건축 관련 용역을 토목설계와 통합 발주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관행을 바로잡아 건축사 참여 조항을 확대하도록 발주기관이 준수해야 할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모습을 지닌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의 조성·정비·관리 용역발주 시 건축사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⑤ 건축도시박물관 건립 등으로 건축의 가치인식 전환

건축·도시 자료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건축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축도시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박물관단지 조성 기본계획에 반영(2011년 12월)하여 설계·시공(2013~2016년) 후 박물관 개관(2017년 예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국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출판·전시·축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건축물 및 건축문화의 자산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전환하는 방안을 시행하여 건축설계산업이 디자인 가치가 중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인식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4) 건축설계 효율성 제고(지적전산파일 제공사례를 중심으로)

① 추진 배경

건축설계는 1990년대까지 제도판과 연필, 트레이싱지 등을 사용하여 주로 수작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점차 CAD를 활용한 전산 작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했던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고 불필요하게 반복됐던 작업들도 대폭 줄어들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흐름이 건축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으로까지 연결되어 단순한 설계제도의 정확성 수준에서 건축 전반의 공정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건축설계작업이 전산으로 바뀐 상황에서도 설계에 기본이 되는 지적도가 이미지 기반으로 발급되고 있어, 이를 다시 전산파일(CAD)로 변환하는 작업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토지경계선 및 면적 편차가 발생하는 등 설계오류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토부, 지적공사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종이 지적도를 건축사에게 전산파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건축설계작업이 전산으로 바뀐 상황에서도 설계에 기본이 되는 지적도가 이미지 기반으로 발급되고 있어, 이를 다시 전산파일(CAD)로 변환하는 작업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토지경계선 및 면적 편차가 발생하는 등 설계오류를 초래하고 있다.

② 추진 경과

법정축척에 의해 종이기반 형태로 발급되던 지적도를 건축사가 설계에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12년 2월 13일 세움터 구축 현황 및 건축정보화 현안사항에 대한 발표회와 2012년 5월 24일 관계부서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

의에는 국건위 및 관련기관(국토부 녹색건축과·지적기획과, 대한지적공사, 건축사협회 등)이 참석하여 관련 시스템 정보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토론하였다.

회의결과 관계부서와 전문가 모두 건축설계 시 지적전산파일 제공에 대해 동의하였고, 현재 세움터에는 GIS정보가 없기 때문에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이 선결 과제이며, 설계 오류방지와 정확성 확보를 위해 지적정보 이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대한 추진방안으로 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사업(4차)과 2012년도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건축사에게 지적전산파일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시스템 기능을 개발하여 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사업(4차) 시범기관에 적용하기로 했다.

2012년 6월 18일 정책조정분과위원회 회의와 2012년 7월 19일 제7차 합동 연석회의에서 본 과제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참석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요 의견으로 정보제공 자료의 수수료 유·무상 검토와 일간지, 건축사협회지 등에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 과제 추진을 위한 행정사항으로 지적전산자료 이·활용에 따른 관계부서 검토 및 승인이 2012년 9월에 완료되었고,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과 시범 서비스(서울시 양천구)는 2012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종이도면을 기반으로 건축인허가를 시작하면 언제, 어느 곳에, 어떤 모양의 건축물이 생성되고 말소되는지 다양한 공간정보 융합서비스가 어려우며 건축인허가를 통한 건축물 정보의 실시간 반영도 어렵다.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인허가 서비스 구현을 위해, 그 첫 단계로 건축사에게 지적전산파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③ 주요 추진 내용

현행 건축설계 시 기준이 되고 있는 지적도가 종이 기반의 도면으로 발급(방문 및 인터넷 열람)되고 있어, 이를 다시 디지털파일(CAD)로 변환하는 작업 과정에서 토지경계선 및 면적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설계오류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의 핵심 정보이면서도, 그동안 공간정보체계와는 별도로 서식 중심으로 구축 운영됐으며,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 요소와 서비스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종이도면을 기반으로 건축인허가를 시작하면 언제, 어느 곳에, 어떤 모양의 건축물이 생성되고 말소되는지 다양한 공간정보 융합서비스가 어려우며 건축인허가를 통한 건축물 정보의 실시간 반영도 어렵다.

표 3-12 현행 건축인허가 설계 절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건위에서는 국토부 관계부서와 함께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인허가 서비스 구현을 위해, 그 첫 단계로 건축사에게 지적전산파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건축사가 지적전산파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움터에 접속하고, 건축사 자격 및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건축예정 필지를 선택하면, 지적전산파일을 전자설계도면(DXF)형태로 받게 된다. 다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전산파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건축인허가 시 지적전산파일의 유통 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④ 추진계획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 4차 구축사업' 과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상호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전산파일 제공으로 생기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건축사인증 및 이력관리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고, 위변조에 대한 검증기능, 공간정보와 캐드파일의 양방향 변환 기능 등을 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사업(4차)에 반영하여 2012년 11월부터 우선 서울시 양천구를 대상으로 시범서

표 3-13 지적전산파일 건축사 제공 절차



현행	지적도 발급 신청(방문, 인터넷) ➡ 종이기반 지적도 발급 ➡ 지적도 스캔(디지타이징) ➡ CAD파일 변환 ➡ 건축설계 적용
개선	지적전산파일 신청(세움터) ➡ 지적전산파일 제공(건축사) ➡ 건축설계 제공

비스를 실시하였고,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⑤ 성과 및 의의

그동안 세움터는 공간(위치) 기반이 아니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이번에 추진하는 지적전산파일 제공을 계기로 공간정보 기반의 세움터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끼워지게 된다. 서식 중심의 인허가 신청을 공간정보 기반으로 재구성하여 무엇보다 불필요한 작업과정(스캔, 디지타이징)이 개선될 것이며, 토지와 건축물 등이 융합된 정보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적법성 검토시스템의 구축으로 기획단계에서 민원인(건축주)은 건축가능 규모 및 용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담당 공무원은 더 신속한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융합행정의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건물공간정보는 공공부문에서 환경, 위생 등 각종 인허가 업무의 적정성 판단에 활용되며, 민간 부문에서는 부동산 관련 공간정보 구축에 따른 비용절감과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기대 효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건축설계산업을 육성해 건축설계산업 선진국의 길을 열고, 국내 건축설계 산업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되게 하여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건축설계산업을 육성해 국제적인 디자인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세계에서 인정하는 건축설계산업 선진국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기반산업인 건축설계산업의 개념 및 범위를 정립하여 건축설계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건축사 능력 향상 및 해외진출로 국제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둘째, 신진건축사 육성과 발주제도 개선, 중소업체 업무범위 확대로 설계업체 규모별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건축설계업체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셋째, 적정한 설계대가가 지급되도록 하고 건축사 참여 영역을 확대하며 국민의 건축에 대한 가치인식이 전환되어 건축사의 사기 진작이 기대된다.

이러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이 마련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고부가가치의 국내 건축설계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되고 국제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3-59 인천송도센트럴공원, 자료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6절
신진건축사 발굴·육성

1. 추진 배경

1) 젊은 건축사 육성의 필요성

최근 민간 부문에서 초고층·대형 건축물 설계자를 선정할 때 국내 건축사보다 유명한 해외 건축사를 선호함에 따라 국내 건축시장이 해외업체에 의해 잠식되고 있다. 국내 건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공건축 설계발주를 통해 젊고 역량 있는 건축사를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수립한 건축정책기본계획에는 신진설계자 대상의 설계공모를 통하여 우수 인력을 육성토록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주거유형 개발, 친환경 녹색주거 설계 등과 같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참가 자격을 신진디자이너만으로 제한하여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 규모의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신진설계자에게 설계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지명공모 방식 활용과 수상자 연계지원을 통한 건축·도시·조경 등 관련 분야의 신진설계자 대상 설계공모를 확대 추진했다. 이는 신진건축사 육성정책에 부합하는 경쟁적 설계 방식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여 성과를 평가한 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진건축사의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 규모, 실적 부족 등으로 공공건축시장에의 진입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설계공모의 경우에도 공모 준비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신진건축사가 쉽게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신진건축사 발굴·육성 방안은 젊은 건축사에게 공공건축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를 발굴·육성하고 건축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그림 3-60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공개심사

2) 외국의 신진건축사 육성정책

선진국의 경우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공모, 시상 등을 통해 신진건축사에게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유럽: Europan 2년마다 유럽의 40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유럽의 실제 대지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를 배출하고 있다. 정책적 필요성, 당면한 도시건축 이슈 등을 고려하여 매회 다른 주제를 선정하여 도시·건축 분야의 담론을 형성하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당선안에 대해 국제전시, 포럼, 출판 등을 실시하고, 당선자와 대상지역 대표(지자체, 개발자)간 워크숍 등을 통해 당선안의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젊은 건축가 앨범 35세 이하의 새로운 건축·조경 설계자를 발굴하여, 앨범 출판·전시 등의 홍보 및 설계경기 초청 등을 통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Under 35 공모전 35세 미만의 신인 건축사를 발굴·포상하여 설계시장 진입을 장려하고 있다.

미국: New Practice, ENYA 매년 6-7개 소형회사들을 선정하여 뉴욕AIA 건물 1층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1-2인) 설계사무소를 위해 2년마다 개발 가능성이 있는 특정 대지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2. 추진 경과

국건위에서는 건축정책기본계획에 수록된 과제인 신진건축사 발굴 육성방안을 마련하도록 2011년 10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2012년 4월 5일 국건위에서는 국토부 등 관련부처에서 마련한 신진건축사 발굴·육성 방안을 보고 받고 토의를 실시한 후 본 육성방안을 확정했다.

위 육성방안에 따라 LH에서 추진 중인 설계공모 시범사업의 공모안에 대하여 2012년 4월 9일 위원회 자문을 실시하고,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모임을 감안하여 공모기간을 다소 연장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일부 공공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연령 등으로 응모 자격을 제한하여 설계공모를 추진함으로써, 그간 기성 건축사 위주로 조성되어 온 공공건축 시장의 신진건축사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신진건축사에 대한 공정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국건위에서는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과 함께 설계공모 제도개선 및 설계공모 행사 정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3. 주요 내용

1)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

일부 공공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연령 등으로 응모 자격을 제한하여 설계공모를 추진함으로써, 그간 기성 건축사 위주로 조성되어 온 공공건축시장의 신진건축사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신진건축사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① 시범사업 대상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2012년도에 발주하는 건축설계용역을 대상으로 발주기관별로 여건에 따라 적용 대상 및 공모 방식을 선정하도록 했다. 공공건축물 중 소규모 아파트, 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등 신진건축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용이한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 2012년 4월부터 발주기관별로 추진되는 10개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3-14 2012년 4월부터 발주기관별로 추진되는 10개 시범사업

발주기관(총 6개)		시범사업(총 10개)	대상 건축물
공사	LH공사	4개	공동주택 2, 도서관 2
	SH공사	2개	유스하우징, 공공원룸텔
	경기도시공사	1개	보금자리지구 홍보관
	도로공사	1개	고속도로 영업소
	수자원공사	1개	정수장 관리동
지자체	포항시	1개	노인복지회관

② 응모 자격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은 만 45세 이하로 하되, 발주기관 및 대상사업 별로 연령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 연한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다. 기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

③ 공모 방법

보다 많은 신진건축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단계 공모로 시행하도록 했다. 1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설계서가 아닌 제안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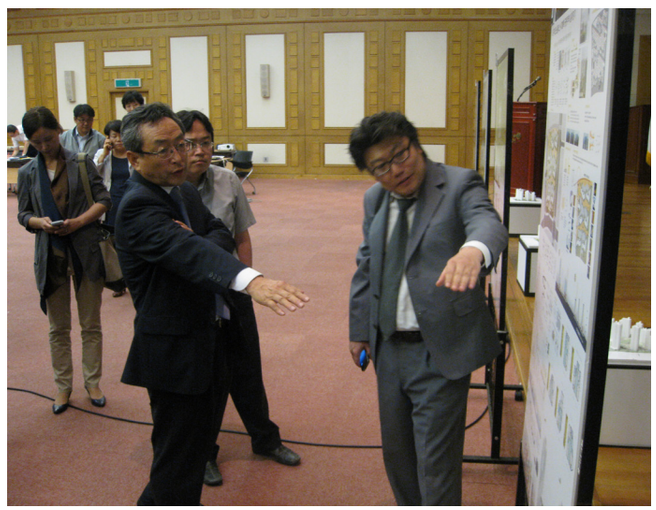


그림 3-61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공개심사

제출하여 참여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3-5명을 선정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거쳐 당선자를 선정하되, 2단계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설계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일정이 촉박하거나, 사업규모가 작아 2단계 공모가 곤란한 경우에는 1단계 공모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위원별 의견은 심사위원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④ 당선자 및 당선작 홍보 지원

제1회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행사와 연계하여 당선작 전시회를 개최하여 설계공모에 당선된 신진건축사를 홍보했다.

표 3-15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개요(2012년 10월 말 현재)

기관별	공모 방법	적용 사업					비고
		위치	용도	연면적 m^2	공사비 백만원	설계비 백만원	
LH공사 (4)	2단계 공모	인천 청라	공공도서관	2,000	4,600	264	2012년 5월 31일 공모 공고
							2012년 9월 13일 당선작 선정
		인천 영종	공공도서관	3,500	5,800	450	2012년 5월 31일 공모 공고
							2012년 9월 13일 당선작 선정
		대구 달성구	공동주택	52,000	67,300	1,450	2012년 7월 13일 공모 공고
							2012년 9월 12일 당선작 선정
		평택 고덕지구	공동주택	40,000	62,609	1,299	2012년 9월 7일 공모 공고
							2012년 10월 11일 당선작 선정
SH공사(2)	POOL 구성 협상에 의한 계약	노원구 공릉동	대학생기숙사	421	490	42	2012년 8월 9일 공모 공고
		강남구 역삼동	공공원룸텔	657	1,280	62	2012년 9월 3일 당선작 선정
		구로구 천왕동	공공원룸텔	1,112	2,018	80	* 기숙사와 원룸을 1건으로 공모함
		서대문구 연희동	유스하우징	1,963	3,704	158	
경기도시공사 (1)	미정	남양주 지금 보금자리지구	홍보관	미정	미정	미정	
수자원 공사 (1)	1단계 공모	경북 경산시 관리동 등	자인정수장	2,172	1,500	100	2012년 5월 3일 공모 공고
							2012년 8월 6일 당선작 선정
도로공사 (1)	1단계 공모	고속국도40호 충주제천선	동충주영업소	536	1,943	108	2012년 4월 12일 공모 공고
							2012년 6월 22일 당선작 선정
포항시(1)	1단계 공모	포항시 남구 해도동	노인복지회관	1,653	3,150	150	

2) 설계공모 제도개선 및 활성화

신진건축사의 공공건축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설계공모를 활성화하고 참여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① 공공건축물 및 SOC시설에 대한 설계공모 활성화

공공청사, 문화시설, 특별건축구역 등 창의적인 디자인과 경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사업별 특성, 유형, 규모, 발주단계 등에 따라 다양한 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려고 한다.

② 참여자 및 발주자 부담완화 방안 마련

설계공모 추진 시 과도한 디자인으로 인한 설계비 증가, 응모 준비 비용 및 시간 과다 소요, 공모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③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에 대한 시상 확대

지명공모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시행되는 건축문화대상에 신진건축사 부문을 신설하도록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를 정례화하여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도시·건축·조경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행사 정례화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를 정례화하여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도시·건축·조경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① 공모행사 추진 방향

매년 정기적으로 도시·건축·조경 분야의 신진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행사를 개최한다. 우리 도시·건축이 당면한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공유함으로써 신진 인력들이 자신의 능력과 아이디어를 건축시장 및 발주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② 공모행사 운영방법

매년 분야별로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홍보 등을 지원하게 된다. 대상사업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구상 또는 추진하는 실제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제시토록 한다. 응모 자격은 만 45세 이하로 관련 분야 국내·외 자격을 소지하여 용역계약 체결이 가능한 자로 제한한다. 행사운영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행사주제 선정, 공모절차 지원 또는 대행, 당선작 전시회 개최, 당선자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당

선작은 전시회·포럼 개최, 작품집 발간 등을 통해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계약체결을 지원하도록 한다.

③ 공모행사 확대 추진

2017년 서울에서 개최될 UIA 총회를 기점으로 일본, 중국 등과 함께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를 추진하도록 한다.

매년 분야 별로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홍보 등을 지원하게 된다.
당선작은 전시회·포럼 개최, 작품집 발간 등을 통해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계약체결을 지원하도록 한다.

4. 성과

발주기관별로 추진되는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은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의 당선작이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젊은 건축사들이 공공사업의 설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설계공모 당선작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3-16 2012년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당선작 내역

기관별	사업명	선정일	설계업체 명	건축사 명	연령
한국도로공사	동충주영업소 신축공사	6월 22일	탑플랜건축	박성철	41세
한국수자원공사	자인정수장 리모델링공사	8월 6일	가우스건축	김창호	44세
SH공사	공릉동 기숙사·역삼동 원룸주택 신축공사	9월 3일	유오에스건축	정기정	43세
LH공사	대구 테크노폴리스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	9월 12일	야가투건축·공명건축	양성중·김진숙	44세, 44세
LH공사	인천청라 제1공공도서관 신축공사	9월 13일	디자인그룹오즈건축	최재원	35세
LH공사	인천영종 제2공공도서관 신축공사	9월 13일	건축사사무소이담	최종문	43세
LH공사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	10월 11일	정현종합건축	서영인	38세



그림 3-62 동충주영업소: 탑플랜건축 박성철, 41세



그림 3-63 자인정수장: 가우스건축 김창호, 44세

또한 국토해양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설계공모 제도개선과 신진건축사 설계공모를 정례화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 및 세부 시행지침(안) 등을 마련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설계공모 시범사업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였으며 외국에서 추진되는 설계공모 행사를 조사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행(안)을 제시했다.

5. 앞으로의 계획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는 설계공모 제도개선 및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행사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건위에서는 이러한 제도개선 및 공모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창의적인 젊은 건축사들을 많이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1) 설계공모 제도개선(안) 자문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하는 설계공모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국건위의 자문을 실시하여 보다 충실한 제도개선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행사 정례화 방안 지원

국건위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될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행사계획의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설계공모 행사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림 3-64 영종 공공도서관 건축사사무소이담 최종문, 43세



그림 3-65 청라 공공도서관 디자인그룹오즈건축 최재원, 35세

제7절
건축교육제도 개선

1. 추진 배경

국내에 5년제 건축전문 학위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1996년 UIA 바르셀로나 총회에서 건축실무의 전문성에 대한 국제 장려기준인 UIA협정안이 마련됐고, 한국은 2002년 학제를 개편하기 시작했다. 2012년 7월 현재 72개 학교가 건축전문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또한 건축전문교육의 교육 품질을 관리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건축학 인증제도는 2006년부터 시작돼 현재 33개 학교가 인증을 획득했다. 그간 10년을 넘긴 현재의 건축전문교육이 바른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WTO체제(다자간)에서 FTA체제(양자간)로의 변화 등 시장개방 및 상호교류에 대비하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대응에 대한 요청에 따라 건축교육도 변화를 맞았다.

WTO체제(다자간)에서 FTA체제(양자간)로의 변화 등 시장개방 및 상호교류에 대비하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대응에 대한 요청에 따라 건축교육도 변화를 맞았다. 그러나 국내 건축교육제도가 과다한 건축사 교육 또는 엔지니어 교육으로 이분법적으로 재편되어 현재 국내 건축교육 및 산업체계에 다소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했다.

건축교육의 패러다임을 시대적 소명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비전, 목표, 실행전략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품격 있는 건축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 배출 및 관련 지식체계를 수립하고, ② 건축교육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③ 지속가능한 사회이념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추진 경과

국건위에서는 2011년 '건축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대한건축학회에서 주관(연구책임: 이명식 동국대학교 교수)했다. 건축학회는 건축교육에 대한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최종 요구 사항 및 안건을 제시하면, 그 성과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국건위에서 수행하려고 한다.

2012년 2월 1일과 14일에는 건축사법 개정 및 시행과 관련한 제반 법제도 개정사항을 검토하여 국토부에 회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2012년 6월 15일 건축교육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마련을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 8월 30일에는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12 건축도시정책토론회의 3차 토론회를 가졌다.

'우리의 건축전문교육,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다. 이날 건축 관련 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국건위가 발주한 건축교육 관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년제 졸업생에 대한 다양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3. 주요 내용

1) 연구 주요 내용

현재는 경직된 5년제 건축학 프로그램으로 인해 건축학과 건축공학이 분리되고 건축공학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기초교육, 전문대학 및 실업고교, 건축대학원으로 이어지는 건축교육 체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인도하는 수요자 중심의 건축교육 제도의 미래 비전이 필요하다.

한국 건축교육의 이념 및 장기적 방향과 UIA 협정안 적용 방법에 대한 현실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건축교육 선진화방안'에서 진행하였던 연구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교육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① 국민의 건전한 삶 영위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개선, ② 수요자의 입장에서 건축교육의 다양성 확보, ③ 국제기준과 한국적 건축교육의 현실의 절충 및 양립 수용 등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는 경직된 5년제 건축학 프로그램으로 인해 건축학과 건축공학이 분리되고 건축공학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기초교육, 전문대학 및 실업고교, 건축대학원으로 이어지는 건축교육 체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축교육을 다양화·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건축교육학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건축전문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건축교육협의체를 정립하며, 건설산업 인력수급 방식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인도하는 수요자 중

심의 건축교육제도의 미래 비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계획과 제도화 선행
- 대학 건축교육의 다양화, 전문화, 활성화
- 건축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유지 및 국제경쟁력 강화
- 수요자 중심의 균형 잡힌 건축교육 시행
- 건축문화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건축기초교육 시행
- 사회교육적 측면에서의 일반인 대상 건축문화교육 시행

2) 건축사법 개정(안) 검토

2012년 2월 1일과 14일, 국건위 위원, 국토해양부, 한국건축학인증원, 대한건축학회가 참석하여 두 차례 검토 회의를 가졌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현행 건축교육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건축사법 개정에 대한 검토 의견이었다. 개정 건축사법은 2011년 5월 고시되었고, 이에 따른 실행이 1년 동안 유예되었던 상황에서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되는 건축교육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단기적으로 건축사법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건축사법 개정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교육과 관련한 개선요구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다시 갖기로 했다.

① 현행 5년제 건축학 교육에 대한 문제점 인식

학생들의 자유로운 교육선택권을 제한하게 되는 현행 5년제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4년제 프로그램과 5년제 프로그램의 상호 전과가 제한돼 있고 5년제 입학 이후 선택적으로 4년 만의 조기졸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제 시행과 관련하여 학계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 5년제 학제가 자격 제한의 요소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국내건축사와 국제건축사로 구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학제 개편 등에 대한 논의는 교과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② 건축사법령 개정에 대한 검토 의견

5년제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은 한국 건축교육의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다만 모든 대학이 국제 수준의 건축사 양성을 목표로 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5년제로의 전환은 10여 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교육과학기술부 인증 및 건축사법 개정 등을 통한 전면적 실행 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시행을 통한 검증 절차를 거친 이후에 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계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정리된 입장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년제에서는 역차별이 없도록 하고, 4년제에서는 유예기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국건위는 건축교육 정책 방향을 검토하여 시급한 수정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건축사법령 개정을 검토할 것이다.

5년제는 역차별이 없도록 하고, 4년제는 유예기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분과위 논의 결과를 보면 실무 수련 자격과 관련한 학위과정 이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당초 취지는 학위과정 취득 전에 실무 수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대학원에서는 실무 수련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학업을 중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되는 건축사법시행령 제6조의 3에서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제출 서류에 '학력증명서(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건축전문교육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학위 취득 이후에 실무 수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대학원에) 준하는 교육과정' 위임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했다. 법에서 정한 5년제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개정안과 같이 인증기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건축사법 개정시 논의되었던 쟁점 사항으로서 '준하는 교육과정'이란 국내 교육과정과 동등한 과정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교육과정 등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에 대한 각국의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으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이 되기 위한 국건위 안을 제시했다. 제2차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건축사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건위 수정안을 제시했다. 2012년 6월 15일에는 국건위 위원, 국건위 자문위원단이 참석하여 건축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한 설문조사 진행계획 및 설문문항에 대해서 국건위 자문위원단 회의를 가졌다.

③ '우리의 건축전문교육, 이대로 좋은가' 건축도시정책토론회 개최

2012년 8월 30일 국건위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주최로 논현동 건



그림 3-66 배시화 위원 주제발표



그림 3-67 토론회

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건축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건위 위원장 및 위원, 서치호 대한건축학회장,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장, 건축 관련 학과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통해 건축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문제제기 및 다양한 출구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건축계에 제시하였고, 건축교육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등이 제시한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설계사무소를 대표해 이정면(범건축 대표, 국건위 위원)은 "전문 학위제도의 도입으로 신입사원들의 업무 능력이 좋아졌다"고 평했다. 그는 "학제가 5년제든 학사+건축전문대학원(4+2)이든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인증제도는 필수적이나, 비인증 과정도 만들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축공학의 분리로 공학에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설계에 초점을 맞춘 공학교육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정형(중앙대학교 교수, 국건위 위원)은 인증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건축사 취득을 전제로 5년간 꽉 짜인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인증받는데 이는 너무 엄격하다"며 "미래의 건축사 10-20%를 위해 나머지 80-90% 학생들이 수업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현실과 사회의 수요공급에 맞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인 인증 요건만 만족하면 학생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고, 학교 특성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필(서울대학교 교수)은 "학제의 다양화가 오늘의 대결론"이라며 "학생 개인이 전문 학위제도를 포기하고 4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병행 트랙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제도적인 기반이 이제 정비를 마치고 시행되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이다. 하지만 그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개선, 요구 사항 등이 존재했다. 따라서 국건위에서는 어떠한 요구 사항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재필(서울대학교 교수)은 "학제의 다양화가 오늘의 대결론"이라며 "학생 개인이 전문 학위제도를 포기하고 4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병행 트랙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 말했다. 제도적인 기반이 이제 정비를 마치고 시행되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이다. 하지만 그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개선, 요구 사항 등이 존재했다. 따라서 국건위에서는 어떠한 요구 사항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인증(현재 프로그램 인증체계로 학교 단위로 심사를 받는다)에 대해서는 "해외의 경우 개인인증은 준비·관리해야 하는 서류와 포트폴리오가 엄청나다"며 "따라서 국내 사정상 프로그램 단위의 인증제도가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축설계산업 활성화를 통한 건축시장 다양화 방안을, 교과부는 전문학사로서의 자격확보, 건축전문과정 활성화 방안, 대학선진화와 관련한 건축학 인증비용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건축학회는 건축교육제도 개선 관련 학교 프로그램 개선(교과과정의 다양화, 공학 분야와의 연계방안 노력 등)을, 한국건축학인증원은 전문대학 교과과정 인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4. 성과 및 의의

건축교육제도에 대한 논의는 10여년 전부터 진행되었던 사항이다. 2012년 5월 건축사법 시행을 통하여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및 건축사등록원이 각각 학생교육과 건축사 자격 취득 후의 교육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기 시작했다. 제도적인 기반이 이제 정비를 마치고 시행되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이다. 하지만 그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개선, 요구 사항 등이 존재했다. 따라서 국건위에서는 어떠한 요구 사항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토론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내용은 국토부와 교과부와 협력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3-68 건축도시정책토론회 브로슈어



그림 3-69 여수엑스포 주제관, 사진 남궁선

제8절
건축사 손해배상책임보험 활성화

1. 추진 배경

건축사는 과학적·기술적 원리와 판단력을 종합적으로 동원해 각종 건축물을 설계·감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므로 다른 직종에 비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등에는 일정용역(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 등)에 대해 설계·감리용역 수행조건으로 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규정상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에 착수하는 목적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건축사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EU, 미국 등과의 FTA에 따른 건축사 시장개방에 대비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건축사의 손해배상능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배상책임보험제도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추진 방향

이번 연구는 보험 가입금액이 설계품질, 설계용역, 해외시장 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보험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설계·감리·시공자 책임 기준 등 보험제도와 관련된 규정·제도를 담은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설계·감리 보험제도 활성화를 도모한다. 민간 건축물은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등을 개선하여 설계용역비에 보험료를 반영하고, 건축물의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적 수준의 보험제도를 국내에도 운영하여 한미·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그림 3-70 건축사 손해배상 책임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2012년 7월 3일)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따르면 국내 설계사무소의 해외시장 진출 시 보험제도 가입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외 건축사 설계하자에 따른 국내 건축주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다.

그리고 보험 활성화에 따르는 기대 효과로 설계품질 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 설계·감리 영역 확장으로 일자리 창출 등이 예상된다. 이런 방향을 바탕으로 국내 건축사제도 및 건축설계업의 현황과 구조를 분석하고 건축사 시장개방의 영향 및 선진국의 건축사보험제도를 조사했다.

한·EU FTA, 한·미 FTA 등으로 국내 건설시장이 개방되어 선진국의 대형 설계법인의 진출이 예상되므로 한·미 FTA 협상 중 건설 및 보험 분야의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외국 설계법인의 경우 자본력, 인지도 외에도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을 갖춘 상태에서 운영되므로 경쟁력이 높은 상태이다. 이를 통해 국내 건축사보험에 주는 시사점을 발굴했다.

2011년 9월 15일 정책자문협의회 회의(6차)에서 '설계·감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이정면 위원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한 결과 정책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관련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11년 10월 28일 국건위 회의실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해성 위원, 이정면 위원, 대한건축사협회 안택영 이사 외 1명, 한국건설감리협회 송상묵 경영기획실장 외 1명,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기획조정본부장 황인택, 한국건축가협회 법제제도위원회부위원장 황근욱,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박순천 이사, 국가건축기획단 한창섭 부단장, 이동환 협력관 외 1명 등 총 12명이 참석해 논의를 했다.

그 결과 현행 문제점으로는 보험가입금액이 총공사비의 3%(설계·감리비) 정도로 건축사법에서 보험가입금액을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고, 설계 잘못으로 발생된 추가공사비 전액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빈번한 대형사고, 법률환경 및 소비자 권리의식 변화와 직원의 안정적 직무 환경 조성, 신뢰제고를 위해서는 전액 배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3. 주요 내용

1) 국내 건축사 제도 및 건축설계업의 현황에 대한 구조 분석

건축사 시장개방의 영향 및 선진국의 건축사보험제도를 조사하여 건축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제도의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건축사법은 발주자의 재산손해만을 보험담보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어 유사법률인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담보범위보다 작아 문제가 있다. 개선(안)은 의무가입 보험담보를 '건축주의 재산손해'에서 단기적으로는 '건축주 및 제3자의 재산손해', 장기적으로는 '건축주 및 제3자의 손해'로 확대토록 제안했다.

현행 건축사손해배상보험(공제)은 용역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고 있어 실제 사고발생 시 효용성이 작으므로 보험가입 금액을 단기적으로는 용역목적물 전체가액의 20% 이상, 장기적으로는 용역목적물 전체가액의 50% 이상으로 상향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가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책임의 제한(Limit of Liability)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설계, 감리업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험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현행 건축사법시행령은 '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있어 건설공사 완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보험담보가 아닌 자력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현행 건축사손해배상보험(공제)은 용역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고 있어 실제 사고발생 시 효용성이 작으므로 보험가입 금액을 단기적으로는 용역목적물 전체가액의 20% 이상, 장기적으로는 용역목적물 전체가액의 50% 이상으로 상향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축사손해배상보험(공제)의 보험기간을 단기적으로는 완공일 이후 1년, 장기적으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설계용역의 경우 건축사손해배상보험(공제)의 보험기간과 이행(하자)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일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손해배상보험(공제)의 보험기간을 단기적으로는 완공일 이후 1년, 장기적으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말한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건축사법시행령의 개정 및 업무요령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건축사의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에 적용되는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재설계비용의 담보

현행 건축사손해배상보험(공제) 약관은 담보범위를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로 하여 용역목적물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설계과실로 인해 소요되는 재설계비용이 담보되는지가 불명확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설계비용을 담보하는 형태로 약관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재설계가 발주청이나 시공업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설계업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설계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담보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3) 부실벌점제도의 제도보완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운영되는 설계·감리공제(보험)의 경우 연간 보험금 청구건수가 2-3건에 불과할 정도로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부실벌점제도이다. 설계감리 관련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금청구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벌점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무조건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사고 유형과 피해의 경중을 판단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과실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없애거나 낮추어 보험금 청구를 원활하게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4)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한 보험료부담주체 명확화

표준계약서는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에 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책임이행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지 않으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의무보험인 건축사보험에 가입할 때에 용역비용에 건축사배상 보험료를 포함토록 하여 계약관계상 약자인 건축사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기 위해 설계감리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보험인 건축사보험의 가입 시 용역비용에 건축사배상 보험료를 포함토록 하여 계약관계상 약자인 건축사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기 위해 설계감리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건축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명도가 높은 국내 보험회사 (재보험 회사 포함)가 단독 또는 연대하여 현지 보험사의 계약을 재보험으로 인수(프론팅 방식 포함)하거나 요율산출을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

5) 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

현행 건축분쟁을 조정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설립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운영상의 기반이 취약하고 실적 또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기능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조정의 실효성 확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과 같이 조정 결과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기판력 및 집행력 부여가 필요하다.
② 위원회 인지도, 접근성 제고: 조정위원회의 대외적인 인식 강화 및 수용성 확보,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독립적인 웹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③ 독립기구 구성 및 전문인력 확보: 당사자들의 인식이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 구성 시에 법률전문가의 의무적인 참가를 규정하고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④ 건축분쟁 처리를 위한 객관성 강화: 건축분쟁의 처리 및 보상기준 수립과 다른 위원회와의 중복 분야에 대한 정리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상설 기구화: 예산 혹은 조직 부족으로 인한 위원회 설치,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무국을 상설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⑥ 건축분쟁의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6) 국내 건축사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강구

해외진출 국내 건축사의 경우 지명도나 신용등급의 문제로 보험증권을 구입하기 어렵거나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담보범위가 작으면서 보험료가 높은 조건 등)으로 보험증권을 구입할 우려가 있다. 국내 건축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명도가 높은 국내 보험회사(재보험 회사 포함)가 단독 또는 연대하여 현지 보험사의 계약을 재보험으로 인수(프론팅 방식 포함)하거나 요율산출을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

4. 건축사보험제도 개선의 기대효과

건축사보험제도의 개선은 소규모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건축설계업에 재무관리 개선, 대외신뢰도 고양이라는 효과가 기대된다.

1) 재무관리 개선

현재 일부 대형 건축사사무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가 사무소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재정 상태이다. 10인 미만 소기업 비율이 87%이며 1인당 급여는 2,870만 원(2009년 기준)에 불과하며 평균설계비가 2009년 기준 m^2당 2만 6,964원에 불과, 1,500위 이하의 8,000여 개의 사무소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사의 설계대가는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의 50% 미만으로 추정되며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건축사의 수주금액은 더욱 열악하다. 사무소당 건축허가 실적(2005-2010 기준)이 외형상 10건 이상은 20% 수준으로 나머지 80%는 간신히 유지하거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현재 건축사손해배상보험(공제)의 가입 시 민간공사의 경우 보험료의 부담주체가 불명확하여 건축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를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발주자의 부담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건축사손해배상보험(공제)은 보험 가입금액이 용역금액(설계·감리 대가)으로 실제 건축물의 붕괴 등 대형사고 시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축사의 재정으로 부담하여야 하나 개정(안)은 보험 가입금액을 건축물의 완성가액 대비 20% 이상으로 하여 대부분의 손해를 보험사가 부담하므로 건축사의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한편 보험가입 기간의 확대, 보험담보 범위의 확

대, 벌점제도의 개선 역시 건축사의 손해배상책임을 크게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대외신뢰도 고양

영세한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입찰시 의뢰인의 신뢰도가 낮아 애로를 겪고 있으나 개선된 보험제도를 통해 재무상태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건축분쟁조정기구의 실효성 확보는 설계·감리와 분쟁을 완화시켜 건축사의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기타 효과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해 국내 건축사의 해외시장 진출 시 보험측면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국내건축사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것이다. 또한 건축사보험의 활성화는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등 공사관련 보험의 규모신장으로 언더라이팅(underwritting, 보험인수업무), 손해사정(claim adjust) 등에 건축설계, 감리의 전문가인 건축사나 건축학 전공자의 보험산업 진출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건축사보험제도의 개선은 소규모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건축설계업에 재무관리 개선, 대외신뢰도 고양이라는 효과가 기대된다.

5. 추진 계획

건축사손해배상 책임보험 관련,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손해배상보험약관,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표준계약서,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로 법 개정 추진이 요구되며 특히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법 시행령 등에 본 연구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제9절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그림 3-71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방안 연구 워크숍

1. 추진 배경

모든 공간계획의 시작은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 등 국토공간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장부로 토지이용 현황을 나타내는 현행 지목제도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국토공간의 실제 이용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28종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게 변경되지 않아 현장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지만, 준공검사 이후 주차장이나 영업장으로 용도를 변경

모든 공간계획의 시작은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 등 국토공간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장부로 토지이용 현황을 나타내는 현행 지목제도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국토공간의 실제 이용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28종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게 변경되지 않아 현장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지만, 준공검사 이후 주차장이나 영업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적 용도로 활용하거나,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개공지가 시민들을 위한 공공공간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시민들이 공개공지의 위치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개공지 등 공적공간의 임의사용 방지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건축선 후퇴, 공개공지 등이 명확히 표시된 위치정보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세움터는 텍스트 정보 위주로 구성되어 GIS기반의 공간정보의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축물 현황, 국·공유지 점유, 묘지 실태, 공유수면 점용·사용 등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서는 실제 이용 실태의 조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건위에서는 국토공간 이용 현황의 조사체계 정립과 정보구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연구를 추진했다.

2. 추진 경과

국건위에서는 과제시행 계획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추진방향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대한지적공사,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자문회의를 2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공간의 실제 이용 현황조사 및 정보구축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회의 결과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 연구제목은 '국토공간 이용 현황조사 및 정보구축 방안 연구'이며, 2012년 3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에서 수행했다.

또한 연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진행에 따른 각종 보고회 개최와 학계, 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3. 주요 내용

1) 현황조사

① 국토공간 이용에 대한 현황조사

우리나라는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으나 도시화 및 산업화가 급격히 이루



그림 3-72 국유지 관리 사례



그림 3-73 도로후퇴선의 활용 유형

어지면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화 진전에 따른 지대의 상승으로 토지이용이 입체화되고 집약화되면서 3차원 공간의 활용과 수직적 경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가조사 등 여러 가지 토지 관련 조사에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을 동시에 조사하고 토지의 이용 부분에 있어서도 토지이용 상황을 구분·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공시지가 산정 및 기타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② 국토공간의 목적 외 이용 사례

국토공간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범지역을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지역에서 시·군·구의 1개소 이상으로 선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열린 공간(공개공지, 건축선 후퇴), 국공유지 재산관리 현황, 그린벨트 등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했다.

③ 조사 업무 및 조직의 문제점

- 인력의 부족

  국토공간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적 신분을 가진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광범위한 영역을 적은 인원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조사의 효율성과 관리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 업무 프로세스의 일관성 및 통일성 결여

  국공유지 점유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여 이에 따른 행정 조치 및 기타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나 점유 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조사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국공유지의 특성을 볼 때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 부분을 기대하기 어렵다.

- 시스템의 부재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국공유지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수가 전

국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미미하다. 통일된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이 없는 현실이다.

- 토지평가
  토지를 평가할 때 주변 현황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토지 감정가가 과다하게 평가될 수 있어 여기서 발생하는 부당이득이 있을 수 있다.

- 제도적인 문제
  토지이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청에 의해 기록하고 있어 실제로 토지이동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조사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표 3-17 국토이용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순번	명칭	구축기관	담당부서	관리시스템 명칭	갱신주기
1	법정동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수시
2	행정동	행정안전부	새주소정책과	주소정보시스템 (KAIS)	수시
3	통계구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팀	센서스공간통계DB	1년
4	철도경계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5	철도중심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6	도로경계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7	도로중심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8	해안선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2년
9	해저지형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2년
10	해양경계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1년
11	유역경계	국토해양부	한강홍수 통제소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WAMIS)	필요시
12	하천경계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13	하천중심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14	호수 등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15	지적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수시
16	도로명 주소	행정안전부	새주소정책과	주소정보시스템 (KAIS)	수시
17	DEM (수치표고모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	국토공간영상정보 시스템	2년
18	지명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국가지명관리시스템	수시
19	측량 기준점	국토지리정보원	측지과	GPS기준점 서비스	성과 변동시 수시갱신 국가기준점발급시스템
20	건물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21	정사영상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	국토공간영상정보시스템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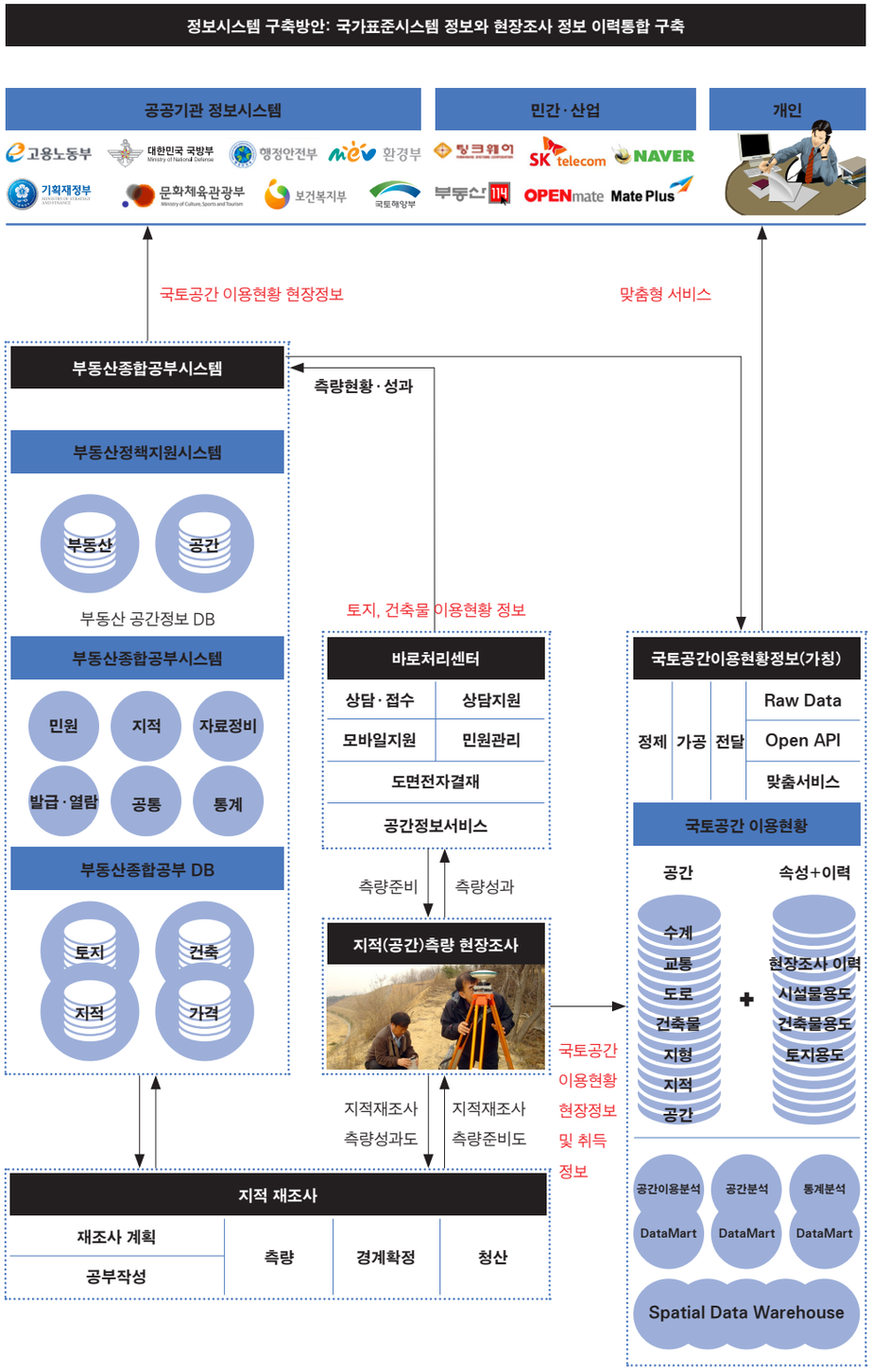
2) 조사 방법

① 국토이용정보시스템 분석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는 기본 공간정보 총 21종 중 12종(57%)이 2년 이상의 갱신주기를 가지고 있어 정보의 최신성과 상호 시간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지난 10년간 국가공간정보유통체계가 구축되어 왔으나, 국가공간정보유통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공간정보의 92%가 5년 이상, 58%가 10년 이상 경과된 데이터로 사용자가 최신의 정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건축행정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인허가 업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정보구축 및 서비스
개별부처의 정보화를 위한 공간정보 및 시스템의 구축으로 공간정보 DB, 시스템, 서비스의 중복(공간데이터 및 속성데이터 차원)이 발생되고, 자료의 활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간정보 및 행정 속성정보가 기본공간정보 DB구축 사업, 3차원 공간정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새주소 기반 표준 전자지도 DB 구축 등 여러 정보시스템에 중복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정보형태로 구축되고 있다. 따라서 국토공간 이용 현황 정보를 구축할 경우 이러한 분산정보의 표준연계체계를 반드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최신성 있는 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해야 한다.

③ 공유수면 점용·사용 시스템
공유수면은 바다·바닷가와 하천·호수·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이다. 공유수면 관련 업무는 새올시스템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다. 새올시스템 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정보는 공간좌표로 관리되고 있으나 지도에 표시되지 않고 자료가 텍스트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텍스트 형태로 표현된 위치도 도분초 단위로 저장되고 있어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 구축된 공유수면은 좌표가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표 3-18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국가표준시스템 정보와 현장조사 정보 이력통합 구축



④ 지하상가 관리

지하상가는 지하도에 설치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상점으로 남대문, 서울역, 광화문 등 지하도에서 발전된 유형이 있는가 하면 지하철 건설에 의한 유형도 있다. 현행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공간시설에 대한 규정은 지상층의 건축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건축물의 지하층에만 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며, 지하공간에 있는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대한지적공사는 2009년부터 3년간 입체지적 기반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하쇼핑센터에 대해 지하공간대장을 작성하고 3D 지적 시범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는 국제적인 표준 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3) 법제도 개선방안

① 현 법제도 분석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 이용하거나 국가적인 국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국토의 변화를 파악하며 정보를 갱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토이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관련 법률은 국토기본법을 포함하여 39개의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을 포함하면 60여 개의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 국토의 이용, 관리 및 계획을 위한 법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국토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기초 및 현황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조사의 내용이 형식적이며 단절적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 수립 시 체계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토이용 현황 구축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야별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자료의 중복 가능성

현재의 조사 항목들은 각각의 법률하에서 목적에 적합한 필요 항목들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 조사 항목에 있어서 같은

분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정보 구축 시 자료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 일관성 및 신뢰도 저하

  조사 주기와 조사 방법에서 일관성 및 신뢰도가 떨어진다. 조사 방법은 크게 기존에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한 보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자료는 갱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시의성이 떨어지며 자료 간 최종 구축 시점이 상이하므로 조사항목에 대한 일관성 및 신뢰도가 떨어지는 한계를 지닌다. 대상토지의 현황과 면적 등은 지적공부에 의해 결정되지만 조사 관리는 지형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치, 이용 현황 등 그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 현장조사의 경우 특정 목적에 의하여 일회성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데이터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며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적인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초조사의 경우 구체적인 조사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하도로, 지하상가, 지하연결통로, 해양지적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또는 관련기관에서 따로 관리함에 따라 통합적인 국토공간에 대한 각종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 지하공간 관련 법률의 복잡·다기화·불비

  지하공간과 관련된 소유권, 이용, 개발, 보상 등은 각각의 개별법 및 지자체의 조례·규칙의 적용을 받거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단편적으로 필요한 내용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법률불비의 상태로 개발, 이용, 관리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지하공간은 기반시설로 정의되고 있으며, 설치 기준은 지하공공 보도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만 따르고 있으며, 현행법상 국가 차원의 국토계획을 고려한 법적 기반은 없는 상태이다.

지하공간과 관련된 소유권, 이용, 개발, 보상 등은 각각의 개별법 및 지자체의 조례·규칙의 적용을 받거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 자료관리 및 활용 공유체계 미흡

  구축된 정보의 관리 및 이용과 활용을 위한 공유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여러 기관에서 생산해낸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활용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 간의 연계와 활용이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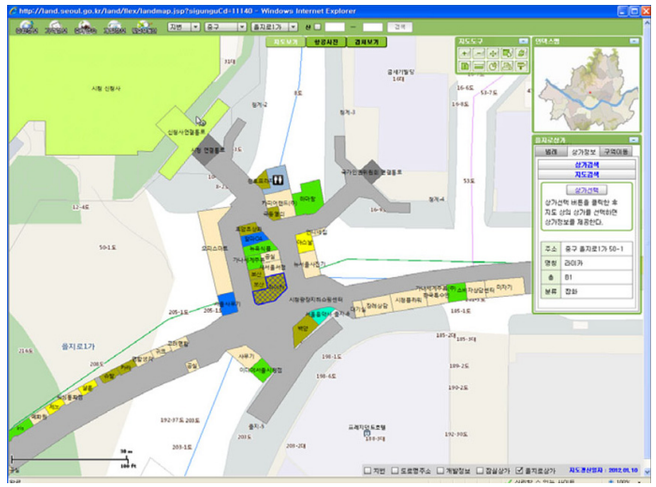


그림 3-74 시청광장 지하쇼핑센터(발췌: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포털)

능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 간 조사 항목에 대한 일관적인 체계 정비가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법령의 개정까지도 고려하여 중복성 및 일회성을 회피하고 지속적인 자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개선방안

국토공간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위해서는 통합적 관리와 종합적 계획이 가능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토공간정보에 대한 전담조사 및 관리기관의 신설 또는 지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과 연계하여 편익 증대를 꾀하고 지상의 토지이용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계획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공간 관련 법률이 복잡하다는 데 대해서는 개별 법령을 개정(해양공부의 실질적 도입을 위한 해번, 해목, 지하의 경우는 지하지번, 지하지목 등의 신설)하거나 가칭 「국토공간이용 현황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국토공간의 효과적인 관리와 등록을 위해서는 중국의 해양지적제도를 벤치마킹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해야 한다.

● 개별법률 개정(단기적 방안)

- 대심도 관련 법률 개정
  현재 지하 구분지상권의 경우 민법상 인정되나 등기법상 관련 법률규정이 없다. 이에 등기법상 지하 구분지상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 '지하공간 시설물' 용어 정의
  현 법률상 지하공간 시설물이 기반시설로만 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시설물의 특징에 따라 지상의 지목과 같이 종류별 정의가 필요하다(해양지적의 경우도 해양지목, 지번 신설).
- 공부형태 및 수집할 대상, 정보항목 필요

● 법제정(중장기적 방안)

가칭, 「국토공간이용 현황조사에 관한 법률」에 담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공간이용 현황조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② 국토공간이용 현황조사 및 관리기관의 지정 ③ 국토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갱신에 대한 사항 ④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에 대한 사항 ⑤ 정보표준화에 대한 사항 ⑥ 정보유통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 ⑦ 재정지원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⑧ 국토공간이용 현황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국토공간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위해서는 통합적 관리와 종합적 계획이 가능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 국토공간 관련 법률이 복잡하다는 데 대해서는 개별법령을 개정(해양공부의 실질적 도입을 위한 해번, 해목, 지하의 경우는 지하지번, 지하지목 등의 신설)하거나 가칭, 「국토공간이용 현황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

4) 정보 활용방안

① 사용자에 따른 활용 및 서비스 방법

국가, 지자체, 민간기업, 국민 등 사용자에 따라 이용 현황정보의 활용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국가는 국토공간계획에 최신정보로서 이용할 수 있고 재난재해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점유 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어 공개공지 및 국공유지 관리에 이용할 수 있으며, 피해지역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난재해 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다. 민간기업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에 최신의 국토공간정보를 적용함으로써 정보서비스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은 공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국토공간 활용에 따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② 활용 분야

국가, 지자체, 민간기업, 국민 등 사용자에 따라 이용 현황정보의 활용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국가는 국토공간계획에 최신정보로서 이용할 수 있고 재난재해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점유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어 공개공지 및 국공유지 관리에 이용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에 최신의 국토공간정보를 적용함으로써 정보서비스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의 핵심 자료원으로 활용

국토해양부는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를 개발하여 지자체 및 관련 공사 등에 보급했다. 1994년부터 국토해양부가 구축해 온 각종 G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앙 및 지자체 등의 국토공간계획, 정책수립, 시행, 평가와 관련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토지관리, 건축행정, 토지이용규제 등의 국토정보를 GIS와 결합해 개발·보전지 분석, 3차원 경관분석, 도시재정비 구역탐색 등의 국토공간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는 지자체가 보유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자료가 대부분이며, 환경부, 통계청, 국토지리정보원과 교통연구원 등에서도 자료를 취득하고 있다. 모형에 꼭 필요한 자료라 하더라도 보안 등의 이유로 취득하지 못한 자료는 추정시나리오를 통해 대체하여 구성하고 DB는 지자체의 공간정보 인프라 데이터 및 외부기관 데이터를 주기적 온라인,오프라인 연계,추출을 통하여 통합 DB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성과 최신성을 가진 국토공간 이용 현황 정보가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

● 재난재해 예방 및 피해 보상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보상금 산정에 현지 확인이 매우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다.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보상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객관적이고 정확한 금액산정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해 전과 후의 비교자료가 있다면 이를 비교하여 이런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비교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피해의 사전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공개공지 및 국공유지 관리

현재 국·공유지의 47%에 해당하는 도로·하천은 지목이 토지이용 현황과 불일치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거나 관리청이 확인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국·공유지의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공유지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국

토공간 현황조사 결과를 참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시성 있는 공간정보로 활용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3차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행정정보일원화시스템 등과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기존 공간정보시스템에 최신의 현황정보 제공하여 현시성이 있는 살아있는 정보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4. 추진 방안

전국적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기 및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했다. 단기적으로는 국토공간 이용 현황조사를 위한 기반 마련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정보서비스 사업화 준비가 필요며, 로드맵 중 연구가 필요한 사업은 별도로 연구수행계획을 구체화하여 국가 R&D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 추진사업으로는 국토공간 이용 현황조사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조사 관련 법령정비 등의 연구과제 추진과, 데이터 취득·가공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 국토공간 이용 현황정보 취득전략 수립 및 시범사업 등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 운영체계의 구축과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이용 현황정보 수집 및 관리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중장기 추진사업으로는 조사대상을 지하공간 및 공유수면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산·학·연 간의 공간정보 공동협의체 구성, 장비 및 S/W 개발, 매뉴얼 작성 등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5. 성과 및 의의

국토공간 이용 현황정보는 최신 정보로써 국가의 국토공간계획에 이용될 수 있으며, 지적정보와 국토이용 현황정보, 건축물정보 등의 통합 활용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자체의 경우 토지에 대한 점유 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어 공개공지 및 국공유지 관리에 이용할 수 있으며, 피해지역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난재해 예방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기업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에 최신의 국토공간정보를 적용함으로써 정보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일반국민은 공적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이용 현황정보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토공간 이용 현황 정보는 최신 정보로써 국가의 국토공간계획에 이용될 수 있으며, 지적정보와 국토이용 현황 정보, 건축물 정보 등의 통합 활용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후속 연구와 국가 R&D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연구보고서는 국토공간 이용 현황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및 관련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 중앙부처·지자체, 학·협회 등에 배포했다.



그림 3-75 최종보고회



그림 4-1 2012 제1회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최우수상, 대구 율하2 세계육상선수촌 아파트 1,2단지, 자료제공 토문

04

국격 향상을 위한 디자인 및 친환경 정책

제1절 국토환경 디자인정책
제2절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
제3절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추진
제4절 4대강 수변공간 재생디자인
제5절 녹색건축 활성화 및 지원
제6절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및 효율적 관리
제7절 공공공간 가치 창출 및 이용 활성화
제8절 녹색도시 해외 수출 지원체계 구축

제1절
국토환경 디자인정책

보다 좋은 디자인의 건축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디자인관리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디자인 강국 실현을 위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의 기본 원칙은 물론이고, 국민생활과 밀착된 일터, 삶터, 놀이터를 이루는 국토환경 전반의 가치 향상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디자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1. 추진 배경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경제 사회적 발전에 따라 좋은 건축, 좋은 공간환경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디자인 경쟁력이 글로벌 시대의 도시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디자인 우위의 도시를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디자인 전담조직을 만들어 다양한 디자인정책을 추진하거나 자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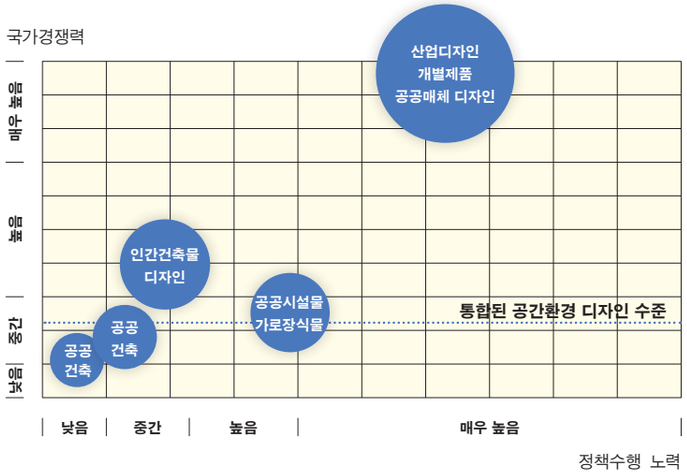
그러나 총체적인 디자인정책의 부재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개별 디자인 요소에 대한 행위기준 규정 수준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디자인 과정을 살펴보면 '잦은 예산·설계 변경으로 역량 있는 전문가의 초기 참여 배제', '건축·토목·도시·기계·전기 등 각 분야별·업종별 통합된 디자인 관리 부재', '디자인 가치보다는 가격이나 실적 중심의 계획자 선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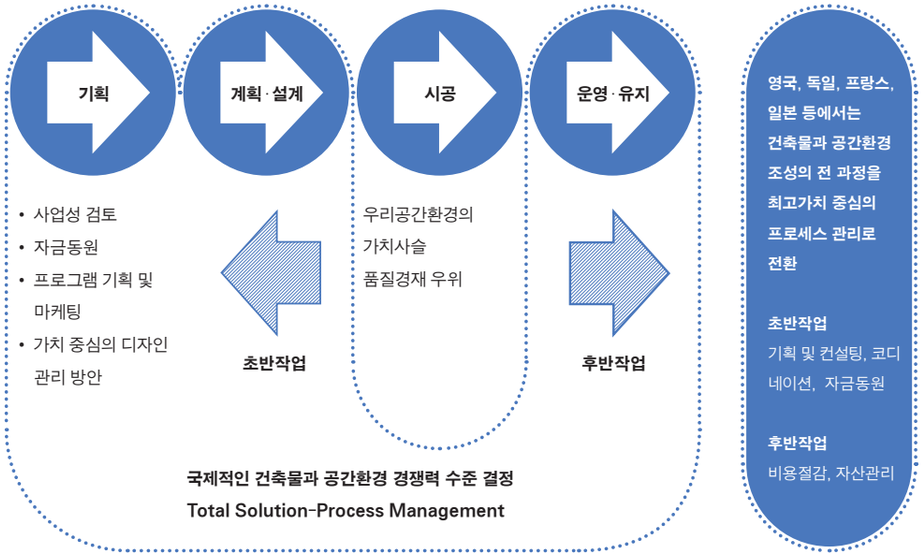
따라서 보다 좋은 디자인의 건축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디자인관리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디자인 강국 실현을 위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의 기본 원칙은 물론이고, 국민생활과 밀착된 일터, 삶터, 놀이터를 이루는 국토환경 전반의 가치 향상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디자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국토환경 디자인정책 수립을 위한 원칙과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 과정에 참여하는 각 주체가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림 4-2 전곡선사박물관

표 4-1 국토환경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





2. 추진 경과

2007년 12월 국토해양부는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수행하여 2008년 12월에 초안을 마련했다. 용역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2008년 10월 16일 NGO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날 회의에는 각종 시민단체(주거환경연합, 주거복지연대, 환경실천연합회 등) 대표 26명이 참석해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2008년 10월 21일 한국관광공사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마련된 건축디자인기준(안)에 대해 12월 마지막 주간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했다.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은 2008년 12월 31일 최종적으로 건축디자인기준(안)을 결정하고, 2009년 1월 9일 국건위에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국건위에서는 '건축 디자인 기준 수립방향 및 사전검토'를 위해 국토환경디자인분과 회의를 2009년 5월 15일과 2009년 7월 3일 두 차례 개최하고 논의 결과와 보완 요청 사항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이후 국토부의 심의 요청에 따라 국건위는 2009년 12월 8일 본회의를 통해 국토부가 확정한 건축디자인 기준안을 심의했고, 국토부가 최종 결과물인 '공공 부문 건축디자인 업무 기준'을 2009년 12월 28일 고시했다.

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

국건위는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회의와 합동 연석회의 등을 통해 국토부가 준비한 '건축디자인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는 2009년 5월 15일 제1차 '건축디자인 기준 사전검토회의'를 열어 보완 사항을 논의하고, 2009년 5월 20일 국토부에 '명칭과 용어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것'과 '디자인 리뷰, 디자인 감리, 전담조직 구성, 각종 영향평가 제도 통합 등에 대해 관계 법령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을 검토할 것' 등의 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2009년 5월 26일 열린 합동 연석회의에서는 '건축디자인 기준의 수립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검토한 후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내용 보완을 요청했다.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는 국토부가 제출한 보완 안을 가지고 2009년 7월 3일 제2차 건축디자인 기준 사전 검토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된 내용을 분과위원장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건위는 2009년 12월 8일 본회의를 통해 '건축디자인 기준'을 심의했다.

이와같이 마련된 '건축디자인기준'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참고로 2009년부터 2011



그림 4-3 영주시 조제보건진료소, 자료제공 인터커트

년까지 총 18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45억 원이 지원되었다.

2012년에는 통합된 도시 이미지 형성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공간관리 방향과 공간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경관개선 효과가 크고 일상생활 속 향유 가능한 국민체감형 시설의 디자인 개선을 위해 마스터플랜이 이미 수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예산 고려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중점 사업을 선정하여 설계비를 지원했다. 또한 시공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2010년 4월, 영주·부산 MOU 체결) 중에서 선도모델 조기 구축을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하여 시공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했다. 이런 방향에 따라 2012년에는 국토부 내의 검토위원회를 통해 8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건위의 심의를 통해 최종 4개의 신규 사업을 선정했다. 통합된 도시이미지 형성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비 총 5억원(1억 5,000만 원×2개소, 1억 원×2개소)

을 지원했다. 앞으로 민간전문가를 위촉, 지원하고 지자체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각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4. 주요 내용

1) 건축디자인 기준의 개요

건축디자인 기준은 건축행위에 관한 규제나 디자인 자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환경 조성의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일종의 '디자인 수행 업무지침'이라 할 수 있다. 즉 기획, 계획·설계, 시공, 관리 이용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각 단계별로 디자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으

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국가 건축디자인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건위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한편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건축위원회나 「건축기본법」 제23조에 의한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국가건축디자인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역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2) 건축디자인 기준의 주요 내용

국건위가 심의하고 국토부가 고시한 건축디자인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디자인 기준은 국토환경 조성의 전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일종의 '디자인 수행 업무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즉 기획, 계획·설계, 시공, 관리 이용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각 단계별로 디자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림 4-4 제주아트빌라수, 자료제공 이로재

① 국건위의 국토환경디자인분화위원회 검토를 거쳐 건축디자인 기준의 명칭을 '공공부문 디자인 업무 기준'으로 한다.

② 본 기준은 디자인 자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제2조).

③ 본 기준은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공공기관 관련 사업 및 민간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제5조).

④ 본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 내 기준, 시설별 디자인 기준, 또는 사업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제6조).

⑤ 본 기준은 5가지 주안점, 디자인 단계별 기준 및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구성된다(제7조).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설계자가 설계한대로 시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디자인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제19조).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한다(제23조 및 제24조).

⑧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품격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디자인검토를 시행하도록 한다(제25조).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본 기준에 따른 세부이행사항을 항목별로 체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디자인평가지표를 도입한다(제26조).

⑩ 디자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디자인 전담조직 구성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 채용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한다(제27조).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의 추진 및 디자인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한다(제28조).

5. 앞으로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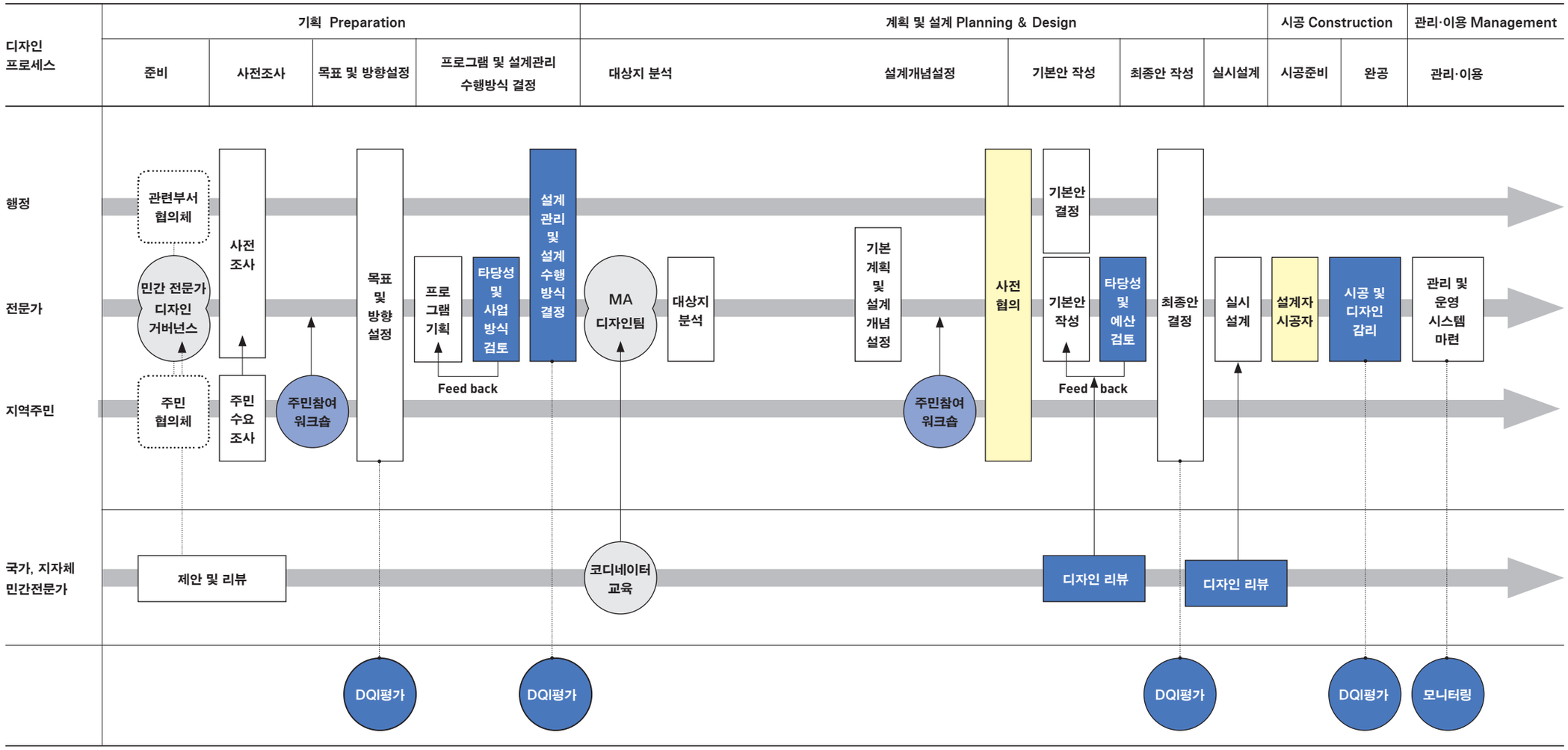
건축디자인 기준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협력형 설계관리 시스템의 구축
기획 초기 단계부터 다분야 전문가(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조경, 컨설팅, 환경 등)의 협력설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사용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디자인 협력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② 디자인 사전리뷰 제도 및 사전협의 시스템 도입
심의 단계 이전에 '좋은 디자인'을 위한 실질적인 디자인 리뷰를 수행하고, 사전협의제도 도입으로 각 단계별 분야 간, 담당부서 간 협의를 통해 최적의 디자인 해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③ 건축디자인 기준의 웹기반 구축
장기적으로는 건축디자인 기준의 웹기반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디자인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표 4-2 국토환경 디자인정책 프로세스



④ 디자인 매뉴얼 시리즈의 작성 및 지속적인 제공
디자인방법론과 디테일한 디자인 성능 등을 수록한 디자인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⑤ 협력적 설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을 위한 디자인 기준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6. 의의와 역할

건축디자인 기준은 '국가가 정하는 최초의 건축에 관한 디자인 기준'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건축디자인 기준은 우선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적용되며, 앞으로 지자체의 디자인기준 설정 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축디자인 기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국토환경 디자인정책에 원칙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건축행위에 관한 규제나 디자인 자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환경 조성과정에서 단계별로 지켜야 할 '디자인 수행 업무지침'의 역할을 하게 된다.

표 4-3 국가의 건축디자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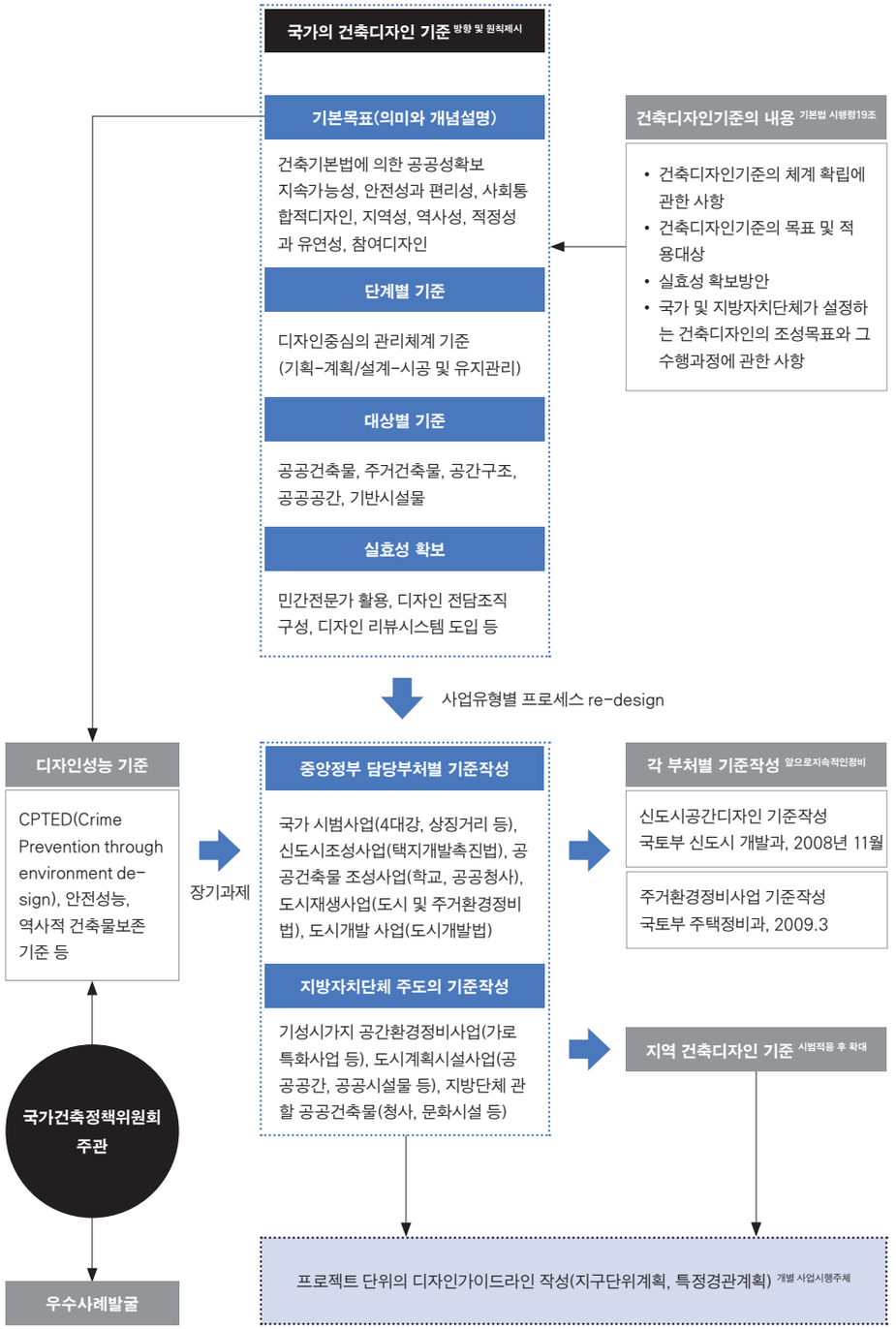




그림 4-5 부산시 진구 양정동 전경, 사진 윤준환

제2절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

1. 추진 배경

현재 건축물과 도시의 디자인 등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품격 있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려는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위한 기준과 추진체계 정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경관 관련 법제도나 계획이 중복·상충되고, 계획과 개별사업 간 정합성이 없어 사업 추진 시 혼란이 가중돼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각종 경관 관련 사업을 연계 없이 산발적으로 추진하여 지역특색을 살린 장소 중심의 통합적 경관관리가 어렵고, 그 실효성 역시 부족한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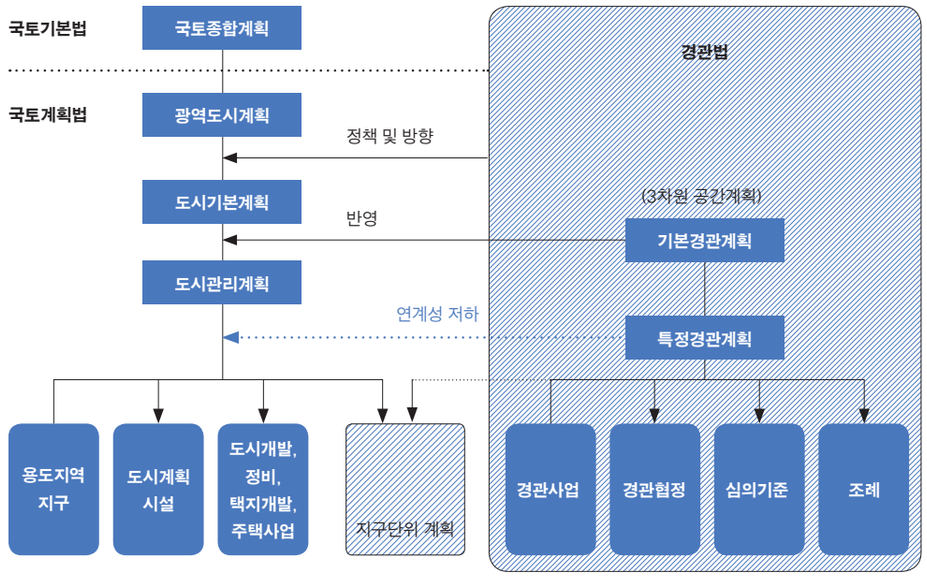
도시경관의 품격 향상을 위해서는 경관 관련 법제도 사이에 위계를 정립하고, 각종 사업의 통합적 경관관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방안은 경관 관련 법·제도 정비 등 도시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도시경관의 품격 향상으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림 4-6 혼잡한 스카이라인과 도시경관

표 4-4 국토계획법과 경관법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방안은 경관 관련 법·제도 정비 등 도시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도시경관의 품격 향상으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한편 국토경관의 품격 제고를 위해 「경관법」이 제정(2007년)되었으나, 적극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관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시설·개발사업·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경관심의 도입 등을 담은 「경관법」 개정을 추진(2011년 11월 국회 제출)하였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따라서 법 개정을 재추진 중에 있다.

2. 추진 경과

국건위는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9월 도시경관 관련 전문가인 이정형 중앙대학교 교수 등 12명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8차례 자문단 회의를 시행해

기본 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도출, 과업지시서(안) 등을 마련했다.

2009년 9월 3일 열린 제1차 자문단 회의에서는 국건위의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이진숙·최두남 위원을 비롯하여 자문단과 위원회 기획단이 참여해 '도시경관 향상방안' 과제 도출을 위한 자문단 운영방향 및 토론과제를 논의했다. 논의한 사항은 '부처별 영역 문제점', '「경관법」의 문제점', '바람직한 도시모델 재설계 및 실행기준 마련', '운영자(행정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및 방안', '간판 현황 및 문제점' 등이었다.

주로 논의한 사항은 '부처별 영역 문제점', '경관법의 문제점', '바람직한 도시모델 재설계 및 실행기준 마련', '운영자(행정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및 방안', '간판 현황 및 문제점' 등이었다.

2009년 9월 17일 열린 제2차 자문단 회의에서는 '도시경관 향상방안' 의제 도출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09년 10월 8일 개최된 제3차 자문단 회의와 동년 10월 22일 열린 제4차 자문단 회의에서는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에 대한 세부과제 담당을 선정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2009년 11월 5일 열린 제5차 자문단 회의에서는 세부과제 중에서 '경관 관련 계획 간 위상 정립 및 통합 실행방안 제시'와 '중앙부처별 경관 시범사업의 통합 지원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2009년 11월 19일 열린 제6차 자문단회의에서는 '한국 국토경관의 바람직한 미래상 설정', '기획단계의 디자인업무 강화 및 민간전문가 활용방안', '옥외광고물의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 등 세부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를 논의했다.

2009년 12월 3일 열린 제7차 자문단 회의에서는 세부과제인 '도시경관의 미래상 실현을 위한 첨단 도시개발 사례'와 '국토경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인력체계 구축'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2009년 12월 17일 열린 제8차 자문단 회의에서는 세부과제인 '국토경관에 관련되는 다양한 법제도의 통합적 방안'과 '자발적인 지역사회운동 측면의 활성화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집중 토론했다.

국건위는 자문단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3월 과업지시서(안)를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전달했고, 국토해양부는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했다. 이와 함께 2010년 9월 8일 관련회의를 소집해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방안' 연구내용을 중간점검하고 연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11년 2월, 국토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3월 경관심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 연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4월부터 5월까지 이 내용을 두고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5월에는 규제심사를, 6월부터 10월까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받고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어 2012년 법 개정을 재추진했다.

2012년 7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진행했고 8월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3. 주요 내용

1)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방안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방안은 국토경관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목표에 따른 전략으로 '경관관리 대상의 확대', '경관관리 방안', '경관관리의 실효성 확보' 등을 설정했다.

표 4-5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방안

① 경관관리 대상의 확대

특별·광역시 내 구·군 및 경제자유구역청까지 경관관리 대상 지역으로 포함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의 도시개발·정비,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특정지역의 개발, 주택건설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의 경관을 관리한다.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중점 관리 대상 SOC시설을 정하여 디자인 품질관리를 추

진한다. 그리고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 기존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부처별 각종 사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경관관리 방안

우선 법령별로 정합성이 떨어지는 각종 경관 관련 계획들의 위계를 정리해 경관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사업별 경관관리를 위해 사전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심의 추진, 경관상세계획의 수립 지침 적용 등을 추진한다.

또한 주요 SOC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해 심의 추진 및 디자인 기준과 디자인품질지표(DQI)를 준비한다. 개별 건축물의 경관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더불어 각종 경관 관련 사업들이 지자체의 기본경관계획과 맞아떨어지도록 관리하고, 부처별 사업의 중복 해소를 위해 관련사업의 연계·통합 방안도 마련한다.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 방안 목표에 따른 전략 중 '경관관리 방안' 부문에서 경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경관협의(일본), Design Review (미국·영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중이다.

③ 경관관리의 실효성 확보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경관심의를 내실화하고, 우수경관 인증제도를 도입하거나 경관사업·협정에 대한 예산 보조 및 전문가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2) 「경관법」 개정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방안 목표에 따른 전략 중 '경관관리 방안' 부문에서 「경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경관협의(일본), Design Review(미국·영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 중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경관심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2012년 10월 18일).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 철도, 하천 등 주요 SOC(사회기반시설)의 경우 기본설계단계에서 경관심의를 실시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지구 지정 또는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경관심의를 실시한다.

① 국가 차원의 유도·지원 역할 강화

국건위는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안을 신설해 국토경관의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토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경관사업 추진' 항목은 경관사업 추진 및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외에 중앙정부를 추가하여 전선지중화 등 주요 경관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②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내실화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안을 통해 기존에는 지자체가 임의로 경관계획을 수립했으나, 인구 30만 명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경제자유구역청 등도 경관계획 수립권자에 포함한다.

'시·군 경관계획 수립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군 경관계획 수립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시·군 경관위원회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직접 확정하도록 변경한다. 다만, 인접지역간 연계성이 강한 광역시의 구와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상위 지자체인 광역시 및 해당 도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③ 경관심의 도입을 통한 경관관리 강화

도로, 철도, 하천 등 주요 SOC(사회기반시설)의 경우 기본설계 단계에서 경관심의를 실시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지구 지정 또는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경관심의를 실시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스카이라인·조망점 등에 대해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심의를 받도록 한다. 공공건축물,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해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경관심의를 실시한다.

경관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등과 공동심의', '환경영향평가시 경관심의 결과 반영', '객관적 심의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수경관 창출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개발사업 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건축물 디자인을 제약하는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국가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등을 위해 지자체 외에 국토부에도 경관위원회를 설치한다. 필요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서 경관위원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인력양성, 우수경관 발굴,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 경관관리 우수 지자체 우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3) 국토 품격 향상과 국토 이용 제도 개선

국토 경관 향상을 위해서는 경관을 가꾸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토 이용의 밑바탕이 되는 국토이용 체계도 동시에 개선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G20 개최 이후 향상된 국격에 부합하는 국토 품격의 향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토 이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① 도시 주변 난개발 방지

지구단위계획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난개발의 주요 원인인 개별 개발행위는 강화된 기준으로 제한한다. 지구단위계획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경우 생산·보전관리지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고속국도·철도 500m 이내 등)을 완화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 기간을 현행 400일에서 210일로 대폭 단축한다.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해 계획적 개발을 도모한다.

구역 지정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제외 시설물을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한다. 비도시

표 4-6 난개발 방지방안 주요 내용

난개발 방지방안 추진 완료

- 난개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국토계획법시행령이 시행(2011.3.9)되어 도시근교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에 기여할 전망
-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되, 대규모 시설 입지시 지방도시계획위 심의 의무화
- 개별건축 등 개발행위허가시 경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주변환경과의 조화 검토
- 개발행위 허가의 중요기준인 기반시설(도로 등) 요건 명확화 등 필요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성격 비법정계획의 권장사항으로 운영(지자체 허가시 가이드라인 역할)
절차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고시, 필요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일정 절차를 거쳐 수립
포함 내용 기반시설(도로·공원), 위치별 권장 용도, 경관(층수·지붕·색채 등)



계획적 개발 전 | 계획적 개발 후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비도시지역 계획적 개발(예시)



그림 4-7 부산 초량 산복도로에서, 사진 김철현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 부족 지역 내 개발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현재 경남 김해 지역에 3곳만 지정·운영하고 있다.

② 토지이용의 유연성 강화

경직적이고 복잡한 용도지역·지구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농지와 산지이용을 조화롭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관점에서 개선한다.

● 용도지역 변경의 유연화 촉진

시가지(주거·상업·공업 지역) 내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토지소유자와 행정청 간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용도변경을 허용해 용도지역 변경의 유연화를 촉진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계획 내용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주거·상업·공업 지역 등)을 허용하고 도시환경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 제한(5년) 요건을 완화하고, 경미한 변경 사항을 확대한다.

경직적이고 복잡한 용도지역·지구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농지와 산지이용을 조화롭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관점에서 개선한다. 또한 기존 도시재정비와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사업방식의 다양화,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해 도심재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실효성이 떨어지는 용도지구제도 폐지 검토

유사지구의 중복 지정, 경직적 운영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총 10종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용도지구제도 폐지를 검토한다.

●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한 지역·지구 간소화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불편사항에 대한 '토지이용만족도 조사'를 정기적(1~2년 단위)으로 시행한다. 설문결과 분석을 통해 불편이 큰 지역·지구를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의 합리적 조정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의 지정 요건에 부적합한 지역에 대한 주기적 평가가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주변여건 변화, 공간적 입지성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를 조정·보완하는 평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③ 도심재생 활성화

기존 도시재정비와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사업방식의 다양화,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해 도심재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도시 재정비 법제의 통일적 개편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뉴타운법)」을 중심으로 도시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나 법률 간 내용 중복, 동일 사항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 등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하며 일부 형평성 논란도 있고, 용적률 인센티브,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특례, 도시정비기금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활용 등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도정법 및 도촉법을 통합하여 단일 법제로 개편하고 용적률·건폐율,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인센티브에 관한 원칙을 일원화하여 사업 간 형평성 확보 및 국민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 도심재생과 도시계획 간 연계성 강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단위별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해야 도심재생과 도시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정비사업과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과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도시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를 위해 도심 정비계획을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체계와 정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시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 도시 재정비 사업방식의 다양화

현행 도시 재정비사업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역 커뮤니티 약화, 사회·문화적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도시 적용에 한계가 있다. 철거·신축과 보존을 병행하는 주거환경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지 특성에 따라 재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재정비 사업방식을 다양화한다. 이는 단독 등 저층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이다.

● 도시 재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 확대

세입자 등의 주거이전에 대한 갈등,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원간 분쟁 등으로 재정비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문제가 종종 있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확대하여 공공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를 주택 철거에 따른 주민이주 지원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노후 산업단지 등 재생사업 추진

오래된 산업단지는 전통 제조업 위주 운영, 기반시설 부족, 도심 내 입지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도시발전에도 방해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공업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확충, 업종 전환 등을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개량해야 한다.

철거·신축과 보존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재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여 도시 재정비 사업 방식을 다양화한다.

고유한 경관 및 품격 있는 국토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 창출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우수한 전통·건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

비도시지역은 계획적 개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성장관리방안 도입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국토관리를 통해 토지별 특성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다.

3) 도심재생 활성화

전면 철거의 도시 재정비사업 방식에서 탈피하고 중·저층, 단독주택 건설 등을 통해 다양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정주 여건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조합비리 등 사회문제 예방,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도심의 사회·경제 기반을 회복할 수 있다.

4. 기대 효과

도시환경의 통합적 개선으로 국토 품격 향상을 통한 국격 제고와 도시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1) 국토경관 향상

고유한 경관 및 품격 있는 국토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 창출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또한 우수한 전통·건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2) 도시 주변 난개발 방지 및 탄력적 토지이용체계 구축

개발가능지역은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쉽게 개발을 허용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철저하게 보전해야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토지이용을 할 수 있다. 또 도시지역은 용도지역 변경 유연화를 통해 토지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합개발 등 압축적 공간 활용을,



그림 4-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빌라드 와이

제3절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추진

1. 추진 배경 및 목적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토환경디자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정부 차원의 디자인정책 구상 및 추진이 본격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토환경 관련 사업 역시 확산·추진되고 있다.

「건축기본법」 제2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해,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장은 공공 이익의 증진과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건위의 심의를 거쳐 공공사업, 건축디자인 개선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건축디자인을 개선하는 개발·정비 사업,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등이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건축정책이 공간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하나의 실천전략이다. 이를 수행하고 국가 정책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범사업과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연계하여 계획·추진한다. 이로써 사업의 당위성 및 차별성과 함께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실천력까지 확보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국토환경디자인 가치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토경관 및 도시디자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국토환경디자인 향상의 선도적 모델로서 시범사업을 통해 디자인 기획 능력을 향상하고, 많은 지자체의 참여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2. 추진 경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2009년부터 실시됐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5월 25일부터 2009년 6월 25일까지 총 30일간 공모를 진행했다. 20개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총 30개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2009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사전검토하고, 2009년 7월 13일 서면평가를 실시했다. 2009년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현지평가와 디자인정책 평가를 시행했고, 2009년 7월 27일 종합토론 및 조정평가가 이루어졌다. 이후 총 11곳의 시범사업 선정지역을 확정해 2009년 8월 25일 국건위에 지정심의를 요청했다. 국건위가 2009년 9월 4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계획(안)을 심의하고, 이를 서면 의결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년 9월 7일 시범사업을 지정했다.

2010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2010년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연간 시범사업 공모를 시행했다. 그 결과 총 1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28개 사업을 신청했다. 국토해양부는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09년 3월 17일 서면 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에서 신청한 28개 사업 중 1차 12개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 2010년 3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3개의 평가팀을 구성하고, 현장평가를 시행해 최종 6개 사업을 선정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시범사업 지정계획(안)에 대해 국건위는 2010년 4월 8일부터 13일까지 서면으로 안을 심의·가결했다.

2011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2011년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시범사업 공모를 시행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37개 사업을 신청했다. 국토해양부는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11년 4월 27일 서면 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에서 신청한 37개 사업 중 1차 4개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 2011년 5월 2일부터 3일까지는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팀을 구성하고, 현장평가를 시행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시범사업 지정계획(안) 2개 사업에 대해 국건위는 2011년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서면으로 안을 심의·가결했다.

2012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2012년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범사업 공모를 시행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37개 사업을 신청했다. 국토해양부는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년 3월 22일 서면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에서 신청

한 37개 사업 중 1차 8개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 2012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는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팀을 구성하고, 현장평가를 시행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시범사업 지정계획(안)에 대해 국건위는 2012년 4월 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4개 사업을 선정하여 심의·가결했다.

또한, (농어촌 및 중소도시 주거지 경관개선 분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7개 지자체에서 신청하여 2012년 7월 3일 서면평가를 실시해 3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2012년 7월 8일 사업추진방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 등에 관한 현장평가를 시행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시범사업 지정계획(안) 2개 사업에 대해 국권위는 2012년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서면으로 안을 심의·가결했다.

표 4-7 시범사업 추진 절차

1차년도 — **계획 단계**

❶ 시범사업 지정 (국토부)
❷ 디자인총괄계획가 지정, 추진협의회 구성(국토부, 지방자치단체)
❸ 기획안 작성(디자인총괄계획가, 추진협의회)
❹ 1차 디자인검토 실시(디자인검토위원, 모니터링팀)
❺ 마스터플랜 수립방식 및 발주방식 결정(디자인총괄계획가, 추진협의회)
❻ 마스터플랜 수립(디자인총괄계획가, 용역수행주체, 추진협의회)
❼ 2·3차 디자인검토 실시(디자인검토위원, 모니터링팀)
❽ 마스터플랜 확정 및 최종 보고서 제출(디자인총괄계획가, 용역수행주체, 추진협의회)
❾ 평가 및 계속지원 여부결정(국토부, 평가위원회)

2차년도 이후 — **설계비 지원사업 설계 단계**

❿ 발주방식 및 설계 과업내용 수립(디자인총괄계획가, 추진협의회)
⓫ 1차 디자인 검토실시(디자인검토위원, 모니터링팀)
⓬ 설계 발주방식 및 과업내용 결정(디자인총괄계획가, 용역수행주체, 추진협의회)
⓭ 2·3차 디자인 검토 실시(디자인검토위원, 모니터링팀)
⓮ 기본설계 확정(디자인총괄계획가, 용역수행주체, 추진협의회)
⓯ 4차 디자인 검토 실시(디자인검토위원, 모니터링팀)
⓰ 실시설계 확정(디자인총괄계획가, 용역수행주체)
⓱ 설계 매뉴얼 제출(디자인총괄계획가, 용역수행주체, 추진협의회)
⓲ 평가 및 계속지원 여부결정(국토부, 평가위원회)

시공 단계

⓳ 설계 사후관리(디자인총괄계획가, 용역수행주체)
⓴ 설계변경에 따른 디자인 검토 실시(국토부, 평가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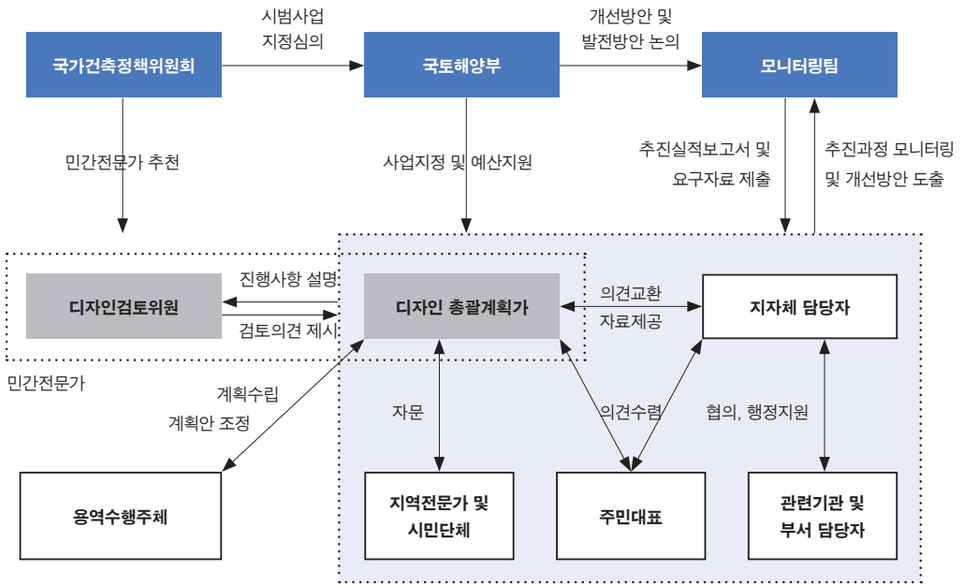
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

국건위에서는 5번의 전체 위원회의(본회의)를 통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계획(안)을 심의했다. 이와 함께 합동 연석회의를 통해 시범사업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토의를 진행하고, 최종안을 심의했다. 합동 연석회의에서 논의하거나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8월 25일 열린 합동 연석회의에서는 국토부의 '2009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정계획(안)'을 보고받고 국건위 위상에 맞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고, 공모기간 연장, 심사 기준의 명확화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2010년 3월 30일 열린 회의에서는 국토부의 '2010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안)'에 대해 시범사업 선정 결과에는 이견이 없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총괄계획자(MP) 등 민간전문가의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시범사업 평가 기준 등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표 4-8 건축디자인 시범사업(국토부) 관련주체 및 추진체계



2011년 5월 31일 열린 회의에서는 국토부의 '2011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안)'에 대해 시범사업 선정 결과에는 이견이 없고, 국건위에서 사후승인 역할만 하지 않도록 국토부 사전 선정 심사과정에 위원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12년 7월 19일 열린 회의에서는 국토부의 '(농어촌 및 중소도시 주거지 경관개선 분야) 2012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안)'에 대해 시범사업 선정 결과에는 이견이 없고, 사업 실행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 위주의 마스터플랜도 필요하므로 타 부처의 비슷한 사례 등을 연구·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4. 주요 내용

1) 2009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① 시범사업의 공모

시범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며, 국토환경디자인 향상의 선도적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우수한 지자체 선정을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많은 지자체의 참여와 경쟁을 유도했다.

국토환경디자인 향상의 선도적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우수한 지자체 선정을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많은 지자체의 참여와 경쟁을 유도했다.

사업추진 주체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각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지역발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시범사업의 응모계획을 수립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한 '자체평가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사업을 국토해양부에 응모했다.

2009년에는 계획수립비용 지원사업으로 '공공건축', '주거건축', '공공공간', '기반시설', '수변공간 및 기타' 등을 그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시범사업 공모접수 결과, 총 1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28개 사업을 신청했다.

② 시범사업 평가와 선정

공정한 평가·선정과정 진행을 위해 건축·도시·조경디자인 분야의 전문가·시민단체·국토해양부 담당자·모니터링 연구진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과정 전반에 걸친 총괄관리를 수행하도록 지원했다. 선정위원회는 국건위의 추천으로 구성됐고, 국토해양부 담당자(담당부서 과장)와 연구진(모니터링 연구책임자)은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여 평가 전반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역할을 수행했다.

시범사업 평가는 응모 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사업대상지의 현지실사를 바탕으로 서면평가(40%), 현지평가(30%), 디자인정책평가(30%)로 이뤄졌다. 시범사업의 선정은 사전검토,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 종합토론 및 조정평가, 국건위의 지정심의, 시범사업 대상지 지정 순으로 진행됐다.

③ 2009년 시범사업 선정 결과

2009년도 사업은 총 11개를 선정하였으나 광주시의 사업철회로 최종 10개의 사업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했다.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지자체와 사업 내용은 목포시의 '목포 근대역사문화타운 내 신파의길 시범가로 조성사업', 부산시의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영주시의 '새롭게 열리는 역사의 통로', 춘천시의 '경춘선 철도교량 하부 녹색공간 조성', 대구 남구의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미군부대가로 환경정비사업', 대전 중구의 '대전 문화흐름 〈중교통〉 조성 사업', 아산시의 '도시 속에 초록 빛 씨앗을 뿌리다', 안산시의 '공공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의 상록수', 영암군의 '전통 주거문



그림 4-9 춘천시의 경춘선 철도교량 하부 녹색공간 조성

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한옥상징 타워 & 박물관 건립', 충주시의 '도심 속 녹색생활공간 조성 사업'이다.

지정된 사업에는 마스터플랜·기본계획·설계 등 계획수립 비용으로 총 15억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건위가 구축한 민간전문가 풀(Pool) 중에서 시범사업을 위한 전문가를 추천받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이 지원됐다.

2) 2010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① 시범사업의 공모

품격 높은 국토환경을 조성하고 국토환경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국정과제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 2010년에도 이어졌다. 기초·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응모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사업은 '녹색건축', '수변공간', '기반시설 및 기타'였다. 시범사업 공모접수 결과, 13개 시도가 총 28개 사업을 신청했다.

품격 높은 국토환경을 조성하고 국토환경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국정과제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 2010년에도 이어졌다.

② 시범사업 평가와 선정

2010년 시범사업은 서면평가(70%), 현지평가(30%)와 종합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조경·도시 분야 전문가 7인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서면·현장 평가를 수행했다. 서면평가는 사업목표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추진체계, 기대효과를 평가(70점)했고, 총 28개 사업 중 창의적인 디자인 개선 및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실사 평가 대상지인 12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3개의 평가팀을 구성해 현장평가를 시행했다. 지자체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 대상지 방문 및 현장실사를 통해 현장을 확인(30점)했다. 종합평가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가점사항을 합산하고 선정위원회의 종합토론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순위를 결정했다. 지자체 내 건축·도시 디자인 전담부서의 존재와 수변도시 비전 공모 당선작 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했다.

③ 2010년 시범사업 선정 결과

2010년도 시범사업으로 총 6개 사업이 선정됐다. 2010년 예산 규모 20억 원을 고려해 디자인 파급효과가 큰 사업 6개 사업을 지원했다.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시기를 고려하여 2010년도 시범사업은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선정된 지자체와 사업은 김해시의 '호계천 주변 창의적인 네트워크 사업기반', 보령시의 '대천 해수욕장 워터프론트 디자인 리노베이션', 철원군의 '자연과 소통하는 청정 철새마을 문화기반시설', 포항시의 '해양강국 국립등대박물관 재디자인 사업', 부산시 중구청의 '영주동 오름길 문화 만들기', 청주시의 '빛이 흐르는 아름다운 경관조성'이다. 지정된 시범사업의 평가순위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1.5~2억 원씩 차등 지원했고, 총괄계획자 등 민간전문가도 지원했다.



그림 4-10 김해시의 '호계천 주변 창의적인 네트워크 사업기반'

3) 2011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① 시범사업의 공모

지역의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의 환경개선 및 시설 간 연계를 통해 도시환경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공공건축·공공공간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으로 시범사업을 공모접수 했다. 그 결과, 총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신청했다.

② 시범사업 평가와 선정

2011년 시범사업은 서면평가(70%), 현지평가(30%)와 종합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조경·도시 분야 전문가 5인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서면·현장 평가를 수행했다. 서면평가는 사업목표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추진체계, 기대효과를 평가(70점)했고, 총 37개 사업 중 창의적인 디자인 개선 및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실사 평가 대상지인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팀을 구성해 현장평가를 시행했다. 지자체 사업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방문 및 현장실사를 통해 현장을 확인(30점)했다. 종합평가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가점사항을 합산하여 선정위원회의 종합토론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순위를 결정했다. 건축·도시디자인 전담부서의 존재와 수변도시비전공모 당선작 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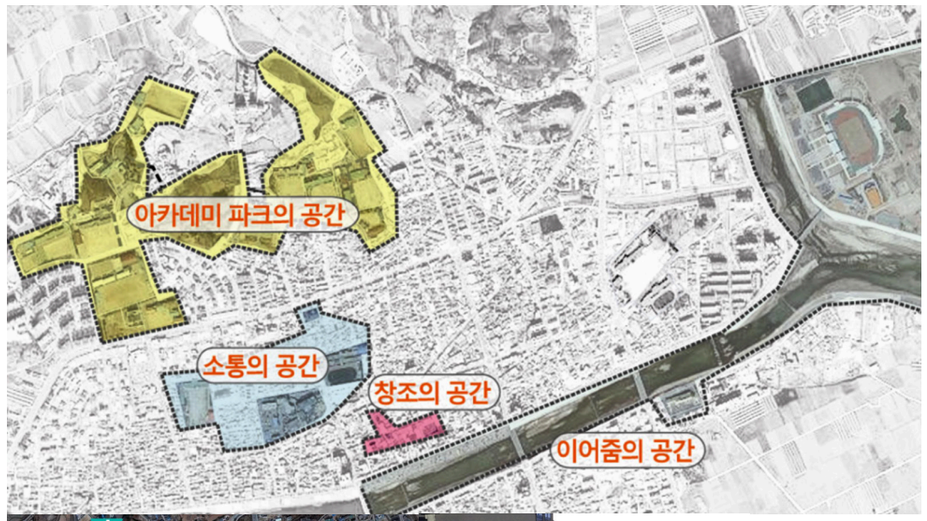




그림 4-11 거창군의 '거창읍 창조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③ 2011년 시범사업 선정 결과

2011년도 시범사업으로 총 2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시기를 고려하여 2011년도 시범사업은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선정된 지자체와 사업은 거창군의 '거창읍 창조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홍성군의 '역사도시 홍성 도심 활성화 계획'이다. 지정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1억 5000만 원씩 지원했고, 총괄계획가 등 민간전문가도 지원했다.

4) 2012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2012년도에는 마스터플랜 수립분야와 농어촌 및 중소도시 주거지 경관개선 분야로 구분하여 시행했다.

① 시범사업의 공모

2012년도에는 마스터플랜 수립 분야와 농어촌 및 중소도시 주거지 경관개선 분야로 구분하여 시행했다.

'마스터플랜 수립 분야' 시범사업은 통합된 공간 이미지 형성과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공간관리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축물, 공공공간디자인 및 경관 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시범사업 공모 접수 결과,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다.

'중소도시 주거지 경관개선 분야' 시범사업은 인구 50만 명 미만의 농어촌 및 중소도시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노후주택이 밀집된 주거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서 제출을 요청하여 총 7개 지자체에서 신청했다.

② 시범사업 평가와 선정

2012년 '마스터플랜 수립 분야' 시범사업은 서면평가(70%), 현지평가(30%)와 종합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조경·도시 분야 전문가 5인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서면·현장 평가를 수행했다. 서면평가는 사업목표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추진체계, 기대효과를 평가(70점)했고, 총 37개 사업 중 창의적인 디자인 개선 및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실사 평가 대상지인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지자체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방문 및 현장실사를 통해 현장을 확인(30점)했다. 종합









그림 4-12 광양시의 광양읍 공공공간·공공건축물 통합 마스터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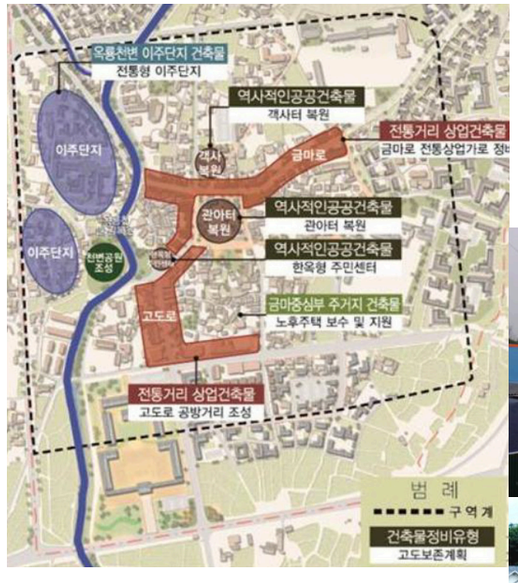






그림 4-13 익산시의 고도지구인 금마시가지의 노후불량주택개량을 통한 역사경관마을 조성

평가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가점사항을 합산하여 검토위원회를 통해 8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건위에서 심의를 통해 4개의 신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또한 '중소도시 주거지 경관개선 분야' 시범사업 평가 방법은 동일하며 3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건위에서 심의를 통해 2개의 신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③ 2012년 시범사업 선정 결과

2012년도 '마스터플랜 수립 분야' 시범사업으로 총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시기를 고려하여 2012년도 시범사업은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선정된 지자체와 사업은 광양시의 '광양읍 공공공간·공공건축물 통합 마스터플랜', 울진군의 '울진 보부상 옛터의 재조명', 부산시의 '동래구청 이전적지 활용을 통한 동래재창조', 충주시의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도심 재탄생 마스터플랜 수립'이다. 지정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순위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사업별로 1-1.5억 원씩 차등 지원했고, 민간전문 총괄계획자도 지원했다.

'중소도시 주거지 경관개선 분야' 시범사업는 총 2개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와 사업은 익산시의 '고도지구인 금마시가지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한 역사경관마을 조성', 안성시의 '고도(古都) 죽산의 역사문화 정체성과 조화되는 주거지 경관 형성'이다. 지정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1.5억원씩 지원하고, 계획의 일관성 유지와 디자인품질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지원했다.

5) 추진 성과

본 시범사업을 통해 단순히 마스터플랜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 기획 능력 및 건축디자인 향상이라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소기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짧은 사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완성도 있고 향상된 결과물을 도출했다. 대부분의 사업이 최초 선정된 취지와 부합하는 결과물을 제시했으나, 추진 과정 중에 일부 혼란이 있었던 지자체는 디자인검토 과정과 사업관계자간 협의 노력을 거치면서 사업 방향을 조정했다.

본 시범사업을 통해 단순히 마스터플랜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 기획 능력 및 건축디자인 향상이라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소기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시범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의 관련 사업 및 계획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고 통합적인 계획수립과 실현수단의 다양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디자인관리 방안으로써 민간전문가의 지속적 활용, 사업 담당 공무원의 연속성 확보, 디자인 전담조직의 운영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지자체도 많았다. 또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디자인 기준 수립, 경관 협정 및 경관사업 추진,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5. 앞으로의 과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건축정책기본계획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연계해야 한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제1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을 건축조성 측면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 사업은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통한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수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실천과제의 세부추진전략에서 가로환경, 고가구조물, 도시공원, 철도역사 활용, 시설물 디자인 개선 등과 함께 지자체 디자인기획과정 강화, 전문가 참여활성화 방안, 총괄계획기능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어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대상 및 추진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하지만 보다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건축정책기본계획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연계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비전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목표인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에 부합해야 하며, 시범사업의 목표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실천과제에서 제시한 세부 추진방안을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이런 목표에 따라 시범사업은 지역고유의 장소디자인을 실현하도록 하고, 공공건축물·공공공간·주거지·기반시설·수변공간 등 지역의 특징적인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주요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사업 추진 시에는 1차 지원사업에서 지역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통합디자인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유도해야 한다.



그림 4-14 다음스페이스원, 2012 한국 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민간부문 대상작, 사진 김용관



그림 4-15 한강 전경, 사진 남궁선

제4절
4대강 수변공간 재생디자인

1. 추진 배경

1) 수변 친수공간 조성의 필요성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4대강 살리기는 강의 가치 상승을 유도하여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홍수 피해 감소, 하천경관 개선, 수변공간의 여가 공간화를 통해 품격 있고 매력적인 국토를 완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강 주변의 친수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토 공간구조의 재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현 친수지역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친수지역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경관적 잠재력이 풍부하나, 홍수 피해에 대한 우려와 하천 수질보전 등의 이유로 그 동안 개발이 억제돼 토지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 교외 지역의 친수지역을 중심으로 공장·음식점·숙박업소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수변경관 공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도시지역 내 이미 개발된 친수지역에는 단조롭고 폐쇄적인 경관이 형성된 상황이다.



그림 4-16 강 주변지역의 공장난개발 사례



그림 4-17 아파트로 둘러싸인 단조로운 수변경관

3) 해외 사례

① 광역적 문화·관광 거점 조성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의 컬럼비아 강변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리조트(Riverside Resort)는 강변골프장과 온천을 활용하여 관광거점으로 정비한 곳이다. 또한 미국 신시내티 시에서는 오하이오 강의 둔치 및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체육·문화시설·선착장·레스토랑·산책로·생태숲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친수공원을 조성한 바 있다. 이처럼 여러 나라들이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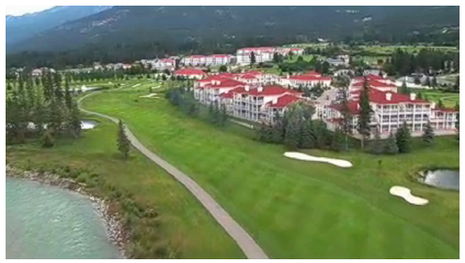


그림 4-18 캐나다 컬럼비아강 리버사이드 리조트



그림 4-19 미국 신시내티 오하이오강 친수공원

② 리버프론트(Riverfront) 개발

일본 동경시는 아라강(荒川)의 친수지역에 공기업인 'UR 도시기구(구 주택도시정비공단)' 주도로 계획인구 1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신시가지를 환경친화적 복합주거단지로 조성·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영국 런던 시는 템즈 강변에 세계적 금융·업무·상업 중심지인 커네리 워프(Canary Wharf)를 개발해 업무 중심의 신시가지로 조성했다.



그림 4-20 일본 동경 아라강 주거중심 수변개발(新田지구)



그림 4-21 영국 런던 템즈강 업무중심 수변개발(카나리 워프)

③ 도시재생 추진

일본 기타큐슈 시는 도심을 흐르는 무라사키 강의 하천 정비 및 수질 개선과 병행하여 하천 주변지역을 재개발하고, 문화유적을 복원했다. 또한 독일 라인 강변의 두이스부르크는 하천 주변 공업지역을 업무·상업 복합지구로 전환하여 도시의 활력을 되찾았다.



그림 4-22 일본 기타큐슈 무라사키강 주상복합지구



그림 4-23 독일 두이스부르크 라인강 업무·상업지구

④ 강을 따라 광역적인 지역발전 추진

프랑스 센 강 센 메트로폴 계획은 "21세기 경제는 강을 따라 흐른다"는 프랑스 저명 건축가 그랑박의 아이디어에 따라 파리-루앙-르아브르까지 이어지는 200km의 센 강을 중심으로 업무·물류·산업·주거·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광역적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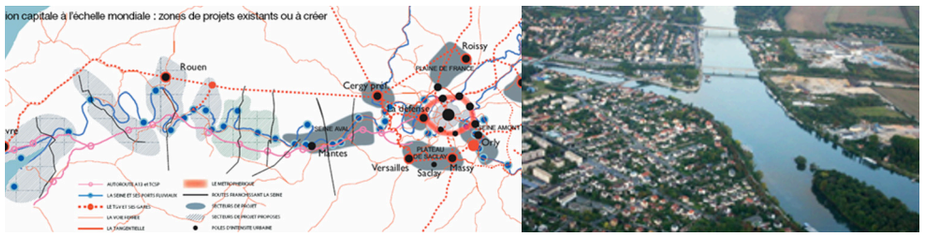


그림 4-24 강을 따라 광역적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센 메트로폴 계획(Antoine Grumbach & Associés. 2009. Seine Métropole. Archibooks)

2. 주요 내용

1) 목표와 전략

수변 친수공간 조성방안은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친수지역 활용과 국토 재창조'를 비전으로 하고 자연친화적이며 활력 있고 매력적인 친수지역의 조성을 목으로 삼았다. 그에 따른 전략으로 통합, 활력, 조화, 품격을 기치로 한 '보전과 개발의 조화(조화)', '강 중심의 통합적 지역발전(통합)',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친수지역 개발(활력)', '친수지역의 품격 제고를 위한 녹색디자인(품격)'을 설정했다.

2) 전략별 실천방안

①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친환경적 친수지역 관리

대상지의 보전·개발 여부를 확정하여 보전할 곳은 확실하게 보전하고, 개발할 곳은 공공에 의해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GIS분석 등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개발가능지를 추출하고, 개발대상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해야 한다.

● 친수지역 내 개발가능지

친수지역 내 개발가능지는 경사도·표고 등 물리적인 개발불능지, 수변구역 등 개발억제지, 기개발지를 제척하여 추출한다. 추출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가능지를 대상으로 개발잠재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발대상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의한 개발대상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에 의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발대상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변구역 등 일부 개발억제지에 대한 규제완화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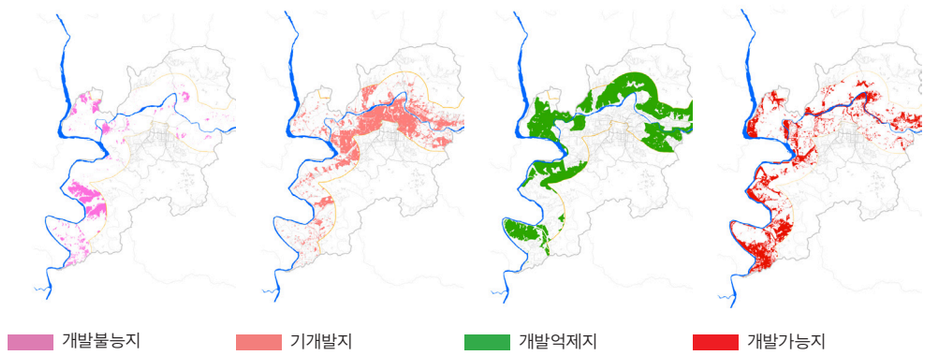


그림 4-25 개발가능지 분석(예시)

● 개발대상 이외의 친수지역

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외의 친수지역 개발가능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도시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대상지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 개발허가 제한 등의 난개발대책 수립도 필요하다. 또한 이미 개발된 곳에 대해서는 재개발, 토지이용 전환, 경관관리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재생을 추진한다.

② 강 중심의 통합적 지역발전 추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광역적 공유자원인 강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전망이다. 따라서 강 가치 증진의 효과를 직접 받는 강 주변지역을 강 영향권으로 정의하고, 국토 발전의 '뉴 프론티어'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역 공유자원인 강을 따라 신지역공동 발전축을 형성하여 지역 간 통합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강 중심의 신지역공동발전축의 구축

먼저 강 영향권 내에서 주변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거점의 조성을 추진하고, 공유자원인 강을 따라 거점들이 상호 연계되는 신지역공동 발전축을 구축한다.

● 강 중심 발전축 형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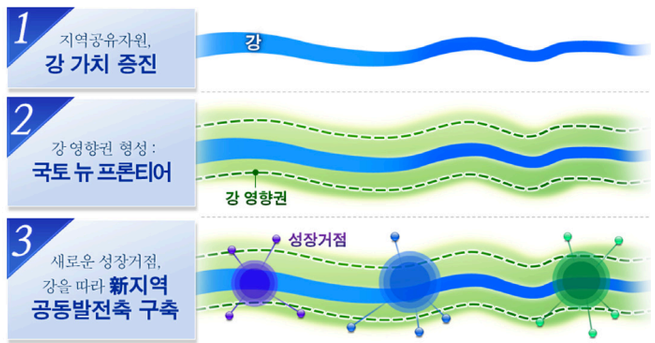


그림 4-26 강 중심의 新지역공동 발전축 형성 과정

선도프로젝트는 녹색 주거지, 복합업무지구, 복합관광·여가단지 등으로 구성한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강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강을 따라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적절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광역경제권 전략과 연계하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강 어메니티를 활용하는 지역문화 진흥, 지역균형발전 등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③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친수지역 개발

이는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도시재생형, 복합단지형, 관광·여가형의 유형별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도시지역은 도시재생형으로, 도시 근교지역은 복합단지형으로, 농산촌 지역은 관광·여가형으로 개발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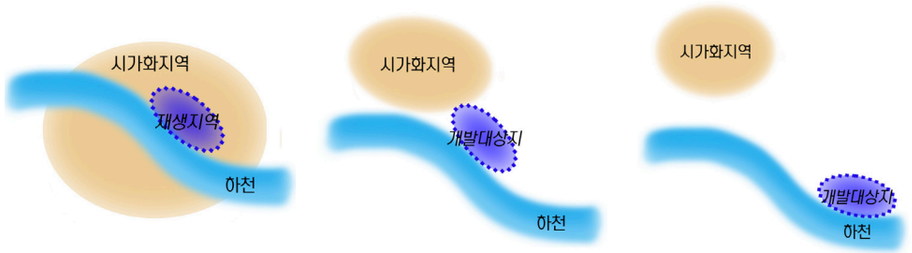


그림 4-27 지역별 친수지역 개발유형

이 전략을 실천하는 방안은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 도시재생형 친수지역 정비

이는 강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유도한다. 강에 면한 노후시가지 중 재개발 이후 새로운 도시축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업무·상업·문화·주거 기능을 포괄하는 복합용도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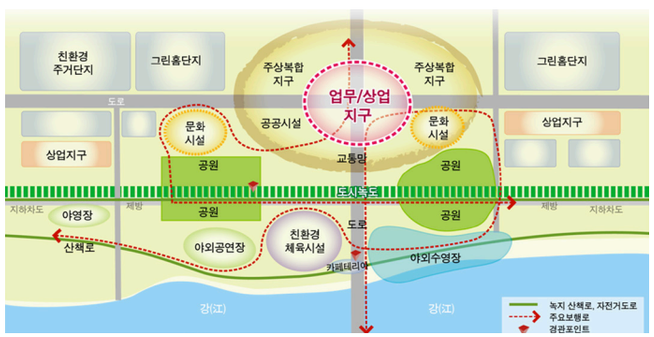


그림 4-28 도시재생형 친수지역 정비 개념도

을 도모해 하천축이 도시의 새로운 발전축이 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원활한 재개발 추진을 위해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친수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민간시설이 따라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복합단지형 친수지역 개발

이는 수변 전원도시 개발로 국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지는 시가지에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에 산림, 농경지 등의 농촌 경관자원이 풍부해 수변 전원도시로서의 매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한다. 그리고 수변공간에 주로 단지 내 주민 및 종사자를 위한 친환경 체육시설, 산책로 등을 배치한다. 또한 리버프론트(River front)의 특성을 살려 쾌적한 업무 및 주거 환경을 위한 정비를 추진한다.



그림 4-29 복합단지형 친수지역 개발 개념도

● 관광·여가형 친수지역 개발



그림 4-30 관광·여가형 친수지역 개발 개념도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산촌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하천경관이 뛰어나고 주변에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농·산촌 지역의 강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레저시설, 친환경 체육시설, 캠핑장 등의 여가공간을 배치한다. 여가·관광 거점으로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주변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하는 유람선 관광상품 개발, 나루터 복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

④ 친수지역의 품격 제고를 위한 녹색디자인

친수지역의 품격 제고를 위한 녹색디자인

- **수변의 특성을 살린 개방적이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의 조성**
- **에너지 절약형 단지설계**
- **녹지 네트워크 구축**
- **환경친화적 친수지역 조성을 위한 교통기반 마련**

● 수변의 특성을 살린 개방적이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의 조성

먼저 가로망 정비를 통해 배후 시가지에서 수변경관으로의 시각적 열린 공간(View corridor)을 확보하고, 수변경관 공유를 위해 수변인접 건물을 저층화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사선제한을 통한 건축물 높이 조정, 랜드마크 입지를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수변 인접지역에는 용적률 규제를 통한 저층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 절약형 단지설계

태양광·풍력·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그린홈(Green Home)단지를 개발하고, 제방 및 수변공간을 활용한 태양광·풍력에너지단지를 조성해 친수지역의 소요에너지를 자체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 녹지 네트워크 구축

건물 옥상 및 벽면 녹화 등으로 건물을 직사광선에서 보호하고, 도시열섬(Heat Island)현상을 억제한다. 더불어 옛 물길 및 습지 등을 복원하여 물과 녹지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환경친화적 친수지역 조성을 위한 교통기반 마련

이를 위해서는 수변에 통과 교통 위주의 간선도로 신설을 지양하고, 기존도로는 차도 다이어트, 보행녹도, 차량 일방통행, 에코페스 존 등 녹색교통으로 전환한다. 또한 여가·관광형 친수지역의 경우, 트램·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신교통수단을 도입해 활용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3. 앞으로의 과제

친환경·발전형 수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제다. 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친환경·발전형 수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친수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친수지역의 체계적·계획적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 지침 개정, 친수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관련법 제정 추진, 개방적·매력적 친수 지역 조성을 위한 '친수지역 경관관리 기준' 마련 등의 제도 정비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제다.

● 친수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우선 국토재창조의 관점에서 '국토종합계획'에 친수지역 활용방향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친수지역의 활용방향, 강 연계 신지역공동발전을 위한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현재 기존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을 개정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을 수립했다.

● 친수지역의 체계적·계획적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 지침 개정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침의 개정을 통해 '친수지역 토지이용의 기본원칙을 보전에서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 전환', '하천축의 발전잠재력 진단 및 하천축을 활용한 도시 공간구조 개편방향 제시', '하천환경 특성(「하천법」에 의한 보전·복원·친수지구 등)과 연계한 친수지역의 토지이용 방향 제시', '친수지역 개발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발방향과 기준 제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친수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 방안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친수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관련법 제정 추진

관련법은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친수지역 내 개발대상지역의 지정 절차 및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허용하여 체계적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개발대상지역 인근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 개방적·매력적 친수지역 조성을 위한 '친수지역 경관관리 기준' 마련

하천 주변의 통경축(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설정을 위한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조정 기준은 물론 수변공간 인접 건축물의 높이·형태 및 색채 관리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4. 성과 및 의의

전국토의 70%를 차지하는 4대강 유역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감으로써 지역발전 효과, 그리고 강을 중심으로 문화재 관광자원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토를 재창조할 수 있다.

현재 맑고 깨끗한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물길을 조성하고, 둑을 쌓아 물 그릇을 만들어 많은 물을 확보한다면 물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중소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기존 농업용저수지의 둑을 높임으로써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 강바닥을 파내서 오염물질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천 오염원 관리와 하천 바닥의 침전물을 제거해 종합적인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습지공원, 생태공원, 하천 저류지 등 다양한 생태하천 구역을 조성하여 생물종의 다양성을 지켜줄 것이다.

호수 주변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등으로 주민들에게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수상레저가 활성화될 것이다. 자전거길 설치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전국토의 70%를 차지하는 4대강 유역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감으로써 지역발전 효과가 있다. 그리고 강을 중심으로 문화재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국토를 재창조할 수 있다.

4대강 살리기로 축적되는 경험과 기술을 세계에 전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물관련 국제기구 유치로 물 관리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림 4-31 4대강 문화관 'The Arch', 자료제공 4대강 문화관

제5절
녹색건축 활성화 및 지원

1. 추진 배경

우리나라의 2006년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억 7500만 톤으로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교토의정서 기준연도(1990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113% 증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에너지수입액은 2008년 1,415억 달러, 약 200조 원(2009년 환산 1,150억 달러, 135조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수입액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국가 총예산의 약 2/3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은 국가경제를 활성화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에너지 안전 보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건축물은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저탄소 건축물이란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건축설계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부하를 담당하게 하고, 고효율 설비시스템을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

국건위는 저탄소 건축물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한 해 동안 7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2010년 5월 28일 회의에서는 에너지 공동주택모델, 기존 건축물 에너지 절감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0년 6월 3일에는 녹색건축 보급사례, 녹색금융, 녹색협의회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2010년 6월 10일에는 기존건물 리모델링 촉진, 보급형 저에너지 공동주택 모델 개발, 녹색금융 및 녹색 주거문화 보급 등이 주요 검토 안건이었다. 2010년 6월 23일에는 '공동주택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고, 6월 29일에는 '일반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2010년 7월 1일 '신축 건축물 에너지 절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7월 15일에는 국토부의 건축과·주택정비과·주택건설공급과와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2010년 말 기존 건축물(주거, 비주거)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 VIP보고를 준비하였으나 보고하지 못했다. 하지만 준비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2011년 6월 8일 국건위와 녹색성장위원회, 국토부가 '녹색건축물 추진성과 및 활성화 방안'으로 함께 보고했으며, '녹색건축 강국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을 국건위 김창수 위원이 제언했다. 또한 그에 따른 녹색건축물 관련 후속보고로 8월에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및 도시 조성방안'을 '주택종합계획'과 함께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이 역시 연말로 연기되면서, 그 내용을 2012년 VIP업무 보고시에 '패시브디자인 건축물과 도시건설을 위한 기준마련'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림 4-32 소소헌,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자료제공 가와

3. 주요 내용

1) 저탄소 녹색건축

저탄소 녹색건축이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와 효율적인 설비시스템 및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이 적용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를 법제화한 것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다.

이 법안은 신축건물을 설계할 때 온실가스의 방출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절약 설계를 의무화하고 방출 저감목표를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최종목표년도인 2020년에는 모든 신축건물의 탄소배출량을 영(Zero)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년 탄소배출량 기준을 정해 이를 준수해야 한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제정(2012년 2월 22일)으로 건물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달성되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 이미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저탄소녹색건축의 설계기법 및 기술개발을 통해 건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어 건축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더불어 이를 통한 건축 및 관련 녹색산업의 시장 확대와 고부가가치화는 신고용 창출 효과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그림 4-33 2012 제1회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최우수상, 노원 에코센타, 자료제공 제드엠제이

녹색 건축·도시 분야의 시장 확대와 세계화에 대비해 인증제도의 체계적 정비 및 브랜드화를 추진 중이다.

2) 녹색 건축·도시 인증제의 체계적 정비 및 국가 브랜드 제정

녹색 건축·도시 분야의 시장 확대와 세계화에 대비해 인증제도의 체계적 정비 및 브랜드화를 추진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체계적 정비, 녹색건축지원체계 구축, 종합적 추진체계 등을 마련하고, 브랜드화(THE GREEN, Thinking Human & Environment Green;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 용역을 추진했다.

①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체계적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

● 친환경·에너지 인증제도 활성화

녹색건축물 인증을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660만 동에 이르는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인증·에너지효율 등급인증의 적용 대상을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에너지효율 등급인증을 2013년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녹색건축물 인증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인증제도의 기반을 구축한다. 2012년 이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진단 및 개선 사항 검토, 에너지효율 등급 평가 업무를 수행할 건축물 에너지평가사(Energy Assessor)제도 등 전문가 양성을 통한 녹색건축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시설안전관리공단 내에 녹색건축센터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친환경·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원한다.

● 건축물 에너지정보 공유

건축물 에너지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지관리 단계(70~80%)에서 에너지소비 정보 제공을 통해 거주자의 에너지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하여 부동산 거래 시 첨부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도를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그리고 2011년 3월부터 진행된 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존 건축물의 성능 평가 기준과 대상 범위, 거래시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반영한다. 2014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기존 건축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정보를 지원하고, 건

축물 에너지 종합정보를 공유하여 에너지소비 증명제,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녹색건축정책을 지원한다.

●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체계적 정비 및 브랜드화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를 녹색건축물 부문과 에너지 부문의 2개 제도로 통합해 운영한다. 또한 주택성능등급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를 녹색건축물 인증의 큰 틀로 통합한다. 동일 용도(공동주택)에 대하여 이원화된 현행 인증 기준을 일원화하여 같은 항목에 대한 평가는 한 번만 받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각 제도에서 운영하는 각각의 평가 수단을 검토하여 통합에너지성능 평가 수단으로 단일화 추진이 필요하다. 개별 건축물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친환경 및 탄소저감 효과를 평가·관리할 수 있는 녹색도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등급별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한다.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 시 녹색도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011년 이후 유사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새로 도입하는 녹색도시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제도를 녹색건축물 부문과 에너지 부문의 2개 제도로 통합해 운영한다. 개별 건축물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친환경 및 탄소 저감 효과를 평가·관리할 수 있는 녹색도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등급별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2011년 이후 유사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새로 도입하는 녹색도시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 녹색건축 지원체계 구축

녹색건축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 회수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나,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다. 따라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녹색금융 지원, 녹색건축센터 설립 등 국가 차원의 녹색건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의 '(가칭)녹색건축기금'을 조성하여 저리융자 등 녹색금융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건축 분야 녹색인증제도와 기금 운용을 연계할 수 있는 전담기구인 녹색건축센터를 설립한다.

● 종합적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선진국에서는 녹색건축제도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녹색건축물과 관련 다양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건축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다양한 법에 산재되어 있는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규정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축뿐 아니라 그린 리모델링 등 기존 건축물의 녹색화에 대한 규정을 정비한다.

● 녹색도시수출 지원 확대

풍부한 신도시 개발 능력과 해외건설 경험에 녹색기술을 접목한 도시수출 활성화로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해외 녹색도시수출 지원 확대를 위해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간 상생과 협력의 기조를 구축하고, 시장 확대방안으로는 해외 신도시 개발의 시범사업 지원 등을 통해 녹색건축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이미지를 제고한다.

3) 녹색건축 기술·사례의 공유의 장: 녹색건축한마당

국건위는 녹색성장위원회, 국토해양부와 함께 2011년 6월 24일, 제1회 녹색건축한마당을 개최했다. 이어 2012년 제2회 녹색건축한마당은 녹색건축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모두를 위한 녹색건축, 함께 누려요"라는 홍보문안을 내걸고 6월 25일 개최했다.

행사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공공·민간·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건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오프닝 메인 세션과 공공정책 세션 그리고 비즈니스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오프닝 메인 세션 행사로는 개회식과 함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 3개 기관에 대한 녹색건축센터 지정서를 수여하고, 영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녹색건축 주요 정책,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국토·도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기술·시장 등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공공정책 세션에서는 최근에 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 시행방안과 녹색건축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 등의 공공정책이 발표되었다.

비즈니스 세션에서는 공공·민간 부문의 녹색건축 기술과 보급 사례 등 16개 부문에 대한 발표가 이어져 많은 호응이 있었다.

이와 함께 행사장 로비와 복도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저에너지 설계·저비용 시공·토착화 실용기술·녹색건축 체험 사례에 대한 20여 개의 전시 부스를 마련하여 우수기술, 성공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토록 했다.

4) 공공기관 녹색 건축 선도방안

2011년 9월 6일,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하여 공공기관 녹색건축 선도방안을 보고했다. 사업 추진은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국가비전으로 선언했다. 2009년 11월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00년도 BAU(온실가스배출전망치, business as usual)' 대비 30%로 정해진 상황에서, 2011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중심비전"임을 언급하며 흔들림 없는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건축물 부문을 보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4.5%를 차지하여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중요하다.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건물 부문은 26.9%로 수송(34.3%)에 이어 두 번째 높은 목표치로 확정되었다.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은 전체 건축시장 규모의 약 8%를 차지하고, 전국적으로 14만여 동에 이르고 있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 2008년 전체 건축시장 약 181조 원, 공공부문 건설투자비용 약 13조 6,000억, 전체 건축물 약 660만 동(건설통계) 규모로 파악된다. 하지만 에너지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청사에 대한 언론, 감사원의 비판(성남시청, 용산구청, 용인시청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의 노후한 공공청사의 에너지사용량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등 공공의 민간 선도 역할이 미흡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축 청사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기존 청사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추진 중이나 국민의 체감을 높이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① 혁신도시 이전청사 녹색건축 신축 추진

현재, 신축대상 120개 기관 중 106개 기관은 에너지효율 1등급 및 신재생에너지 10% 이상 사용 의무 등을 감안하여 설계 중에 있다. 〈159개(당초) → 147개(통·폐합 후) → 120개(27개 임차기관 제외) → 106개(14개 설계 미착수 기관 제외)〉 호화청사 방지 등 적정 규모 건축을 위해 청사면적, 건축비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전청사를 녹색건축물의 선도적 모델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지역대표 녹색건축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녹색건축 선도방안으로 첫째, 신축청사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일반기관의 경우, 현행 공공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보다 15% 이상 감축을 추진(300 → 250kWh/㎡·년 이하 수준)한다.

녹색건축 선도방안으로 첫째, 신축청사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일반기관의 경우, 현행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보다 15% 이상 감축을 추진(300 → 250*kWh*/*m*²·년 이하 수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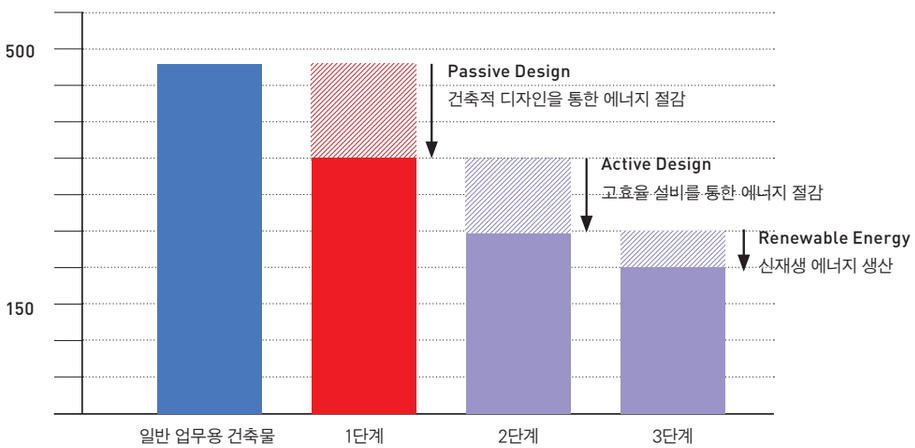


그림 4-34 제2회 녹색건축한마당

'에너지 절약 설계자문단'을 활용하고 녹색건설 기술요소를 강화·반영하되, 이에 따른 착공시기 순연, 비용증가 등은 최소화한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창호 개선, 고효율 설비,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보다 50% 이상 감축(300 → 150*kWh*/*m*²·년)한다. 2012년 상반기에 혁신도시별 1개소씩의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선정기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증가액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 추진하였고, 에너지성능 기준 50% 강화 시 건축비는 추가로 20% 상승될 것으로 추산된다.

녹색도시화를 위하여(녹색도시 계획으로, 바람길 등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268*km* 자전거길 건설,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등 자연환

표 4-9 에너지절약형 건축을 위한 단계별 전략(예시)



경과 조화롭게 개발하고 시범마을 조성을 통하여 에너지절약형 주택 건축 시 융자 지원 등을 통해 녹색건축물 시범마을 조성을 추진한다.

② 기존 청사의 녹색리모델링 추진

2010년 4월부터 에너지 낭비형 지자체 청사에 대해 시설개선 추진을 위하여 창호면적 축소, 노후 설비 개선과 공사 중인 청사의 설계변경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효율등급 향상을 유도한다. 기존에 에너지를 과소비하던 21개 청사를 녹색리모델링하여 에너지효율의 등급을 향상시켰고 공사 중인 7개 청사의 설계를 변경하여 서울시청, 충남도청 등 6개 청사가 1등급을 확보하고, 신안군청 등은 4등급을 확보했다.

2011년 7월 정해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의무화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ESCO(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에



그림 4-35 2012 제1회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대상,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사진 박영채

2010년 4월부터 에너지 낭비형 지자체 청사에 대해 시설개선 추진을 위하여 창호면적 축소, 노후 설비 개선과 공사 중인 청사의 설계변경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효율등급 향상을 유도한다.

너지관리공단에 등록한 기업, Energy Saving Company)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지자체 청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중앙부처 소속기관 청사는 대책이 미흡한 상황으로 상징성이 높은 중앙부처 소속기관 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을 확대하여 녹색 리모델링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5) 건축물 패시브디자인 활성화

① 추진 배경

유럽의 경우에는 40년전 석유파동 당시 패시브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많은 정책들 속에서 패시브디자인을 반드시 수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 설계 시 에너지절약계획이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정책 이후 제로에너지 준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5년 사이 고효율 자재,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설계사무소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만족하는 디자인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에서 건축물 패시브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건위에서는 연구용역 발주를 통하여 건축물의 설계시점부터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패시브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를 개발했다. 토문엔지니어링, ㈜다스솔루션즈가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② 가이드라인

한국형 패시브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은 설계자를 위한 디자인 방법론을 담고 있어야 하며, 다양한 차원의 요소를 연계하여 다뤄야 하고 요소별 최소기준과 디자인 적용을 위한 해설서 및 레퍼런스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기후환경과 접목하여 태양에너지, 자연환기, 자연채광을 적극 활용하며 패시브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국내 제도 및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즉 한국형 패시브디자인은 한국의 자연 및 건축 환경의 특수성, 전통공간의 특성을 활용하여 에너지부하 발생을 최소화하는 디자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사용방법 및 지역별 기후데이터, 설계전략을 비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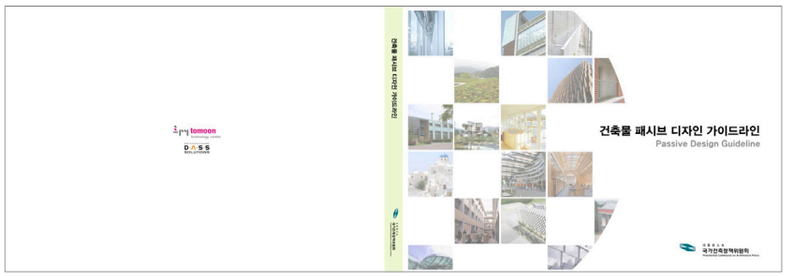


그림 4-36 패시브디자인가이드라인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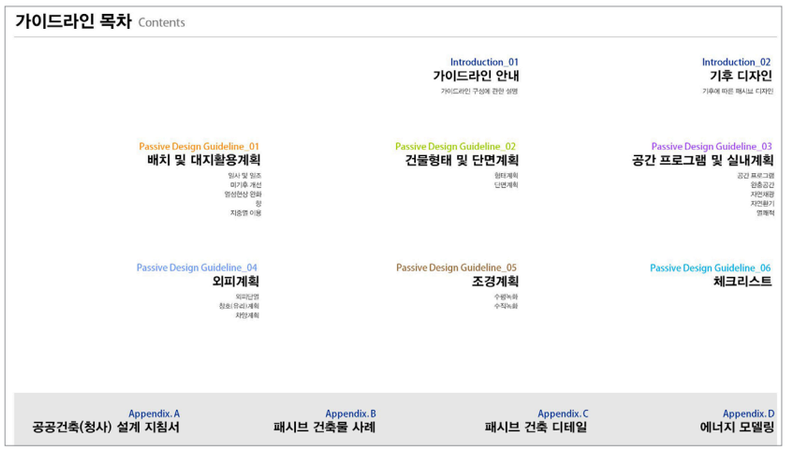


그림 4-37 패시브디자인가이드라인 목차(200쪽 분량)

하여 계획분야, 계획요소에 다른 패시브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고 부록에는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설계지침 및 사례, 디테일, 에너지 시뮬레이션 등을 담았다.

2012년 6월 '냉·난방 부하저감을 위한 패시브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및 공공건축 적용(안)'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건축물 자체의 설계기법을 통하여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기술적용을 유도하고 냉방부하 기준(OTTV, Overall Thermal Transfer Value, 총열취득계수)에 따라 건물의 향, 자재열성능, 창(개폐) 면적, 음영효과 등을 고려한다. 또한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검토·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패시브디자인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각종 에너지 관련 디자인 요소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가능한 시뮬레이션 툴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기대효과

건축물 부문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건축 설계자에게는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한국형 패시브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고 평가체계는 설계자가 패시브디자인에 대한 초기정보를 접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론과 사례, 디테일, 성능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4. 성과 및 의의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적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녹색성장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이 고민해 나가야 할 과제로서 건축 도시 분야의 종합적인 대책들이 논의되었다.

녹색건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부문에서 선도하여 나가기 위해서 공공건축에 대한 녹색건축정책과 더불어 녹색건축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할 녹색건축과를 국토해양부에 신설함과 동시에 「녹색건축조성지원법」 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림 4-38 LIG손해보험 인재나눔 사천연수원, 친환경 최우수등급 인증, 사진 박영채

제6절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및 효율적 관리

1. 추진 배경

2009년 기준 전국에 약 14만 3천여 동의 공공건축이 조성돼 있고, 공공부문 건축공사 건설비용 기성액은 약 13조 6,000억 원으로 주거를 제외한 전체 건축사업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이후 민간 분야의 건축허가 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공 분야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

하지만 우리의 공공건축은 대형·호화 청사 건설, 주변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획일적 디자인의 건물 건설, 효율적인 관리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산재해 있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및 관련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국·공유 자산의 경제적 활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주요요소인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에 도래했다.

2. 추진 경과

1) 추진 사항

표 4-10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추진사항

일자	주요 추진사항
2009년 9월–10월 8일	공공건축 자문단 구성·운영
2010년 4월–10월 9일	연구 수행
2010년 10월	공공건축 품격 향상 관련 보고서 초안 마련
2010년 11월–12월	공공건축 품격 향상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2010년 12월 20일	관계부처 협의 완료
2011년 9월	공공건축물 총괄관리 전담기구 설치 추진
	(인력증원 관련 행안부 협의, 녹색건축 국무회의 보고시 국건위 내 설치방안 보고)
2012년 1월	인력증원 행안부 협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추진 이후에 논의토록 함
2012년 9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에 공공건축 지원 관련 내용 포함하여 추진
2012년 10월	영주시 디자인관리단 전시 "영주, 도전하다" 행사 후원을 통한 공공건축 관리의 모범 사례 홍보
	지방중소도시에 공공건축통합마스터플랜 및 전담조직, 디자인관리체계 구축 사례
	지자체 홍보효과 기대

2) 공공건축물 총괄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추진

국건위는 혁신도시 이전청사 조성업무 지원을 위해 위원회 내에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을 보고한 바 있다. 공공건축 지원센터 설치를 위해「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며 주요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건축의 발주지원
②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지원
③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
④ 공공건축의 에너지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⑤ 공공건축의 유지·관리 지원
⑥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⑦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⑧ 그 밖에 공공건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건위 내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증원 요청

신도시 이전청사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지원센터 시범 운영을 위한 파견인력을 증원해 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앞으로 이를 국건위 내 임시조직으로 운영하고, 법령 제정 후에는 상시 지원조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① 임시조직의 역할은 설계자문위원회(공공기관이전추진단)와 공동으로 설계자문 및 녹색기술 등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적정 사업비를 검토하는 것이다. ② 조직 구성은 전문인력 및 각 부처별 관련 파견 공무원 센터장 1명, 전문가 1명, 파견 4명(기재부, 행안부, 예관공, 조달청) 등 총 5~6명이다. ③ 협의 결과, 법령에 근거한 인력증원이 적

절하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한 관련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3. 주요 내용

1) 공공건축 품격 향상의 필요성

① 공공건축 행정담당 조직의 전문성과 기획력 미흡

일부 공공건축사업은 전담조직 부재와 전담인력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행정처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중앙부처 직접 추진사업의 53%(7,045억 원, 2007년 기준)가 공사사업의 수행 조직이 없는 채로 집행되어왔다. 도시·건축 관련 전담부서가 있는 중앙부처는 12개(2007년 조사)에 불과하다.

기획단계에서의 미흡한 검토는 예산 낭비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이어져 설계과정의 효율성과 질을 저하시킨다. 공공건축물 기획 시 규모, 용도, 활용방안보다 사업성 평가 등 예산확보를 위한 행위에 치중하는 것도 과다한 설계와 잦은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고 있다.

표 4-11 공공건축 행정담당 조직 현황(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위원회, 건축도시·환경 공공사업 정책실태조사 연구, p39)

단위: 개, 만 원

구분	과단위 이상 조직 보유기관	계단위 조직 보유기관	시행조직 미보유기관	건교부 행복청	계
기관수	6	6	33	2	47
사업예산	470,471	53,372	704,552	100,345	1,328,740
예산비율	35%	4%	53%	8%	100%
참고	국회, 대법원,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정통부	헌재 기상청, 복지부, 방위청, 문화재청, 식약청	전체의 53%, 7,46억 원	-	-

② 부처·부서별로 분산된 비효율적인 공공건축사업 추진

분산된 조성체계로 인해 공공건축물의 종합적인 자료구축이 미흡하여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어렵고 사업수행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는 각 시설에 대한 중복성, 사업타당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배정을 어렵게 만들어 중복·과잉 공급을 초래하고 있다. 공공청사는 정부청사관리소(행안부)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도시환경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력이 높은 문화·체육·교육 시설 등은 수급·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기획 및 관리, 운영과정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참여와 지원조직 구축이 필요하다. 부처별로 분산되어 기획·관리되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처별로 흩어진 기능을 통합·관리하는 범정부 차원의 공공건축 총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림 4-39 수지문화복지타운, 사진 정광식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건축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획 및 관리, 운영 과정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고 지원조직 구축이 필요하다.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서비스는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선택적 대상에 국한되어 있고, 입찰안내서 작성, 발주, 업체선정 등 행정절차에 대한 일괄 대행 서비스로서 디자인 전문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부처별로 분산되어 기획·관리되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처별로 흩어진 기능을 통합·관리하는 범정부 차원의 공공건축 총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해외 사례

디자인 경쟁력이 강한 미국·일본·프랑스·영국 등의 건축위원회는 건축·도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디자인전문 패널을 구성하여 공공프로젝트의 기획·설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격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① 미국 연방정부 조달청(PBS) 소속 공공건축서비스

GSA는 미 연방정부의 자산을 관리하는 곳으로 공공건축서비스를 통해 미 연방정부 소유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PBS는 GSA에 직속되어 있으나 PBS가 담당하는 업무 특유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물품 조달 역할을 맡는 중앙정부부서의 기본 행정업무와



그림 4-40 인제군 여초서예관

분리되어 있다. 이곳에서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공공건축물 조성에 대한 업무의 대행을 통해 디자인 행정지원 업무수행
- 공공건축물 조성에 대한 전 과정과 유지관리, 임대에 관한 업무 일괄 수행
- 계획, 디자인, 건설 등에 대한 기준 제시

② 일본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

일본 관청영선부는 국토교통성 산하 부서로 정부부처 소유의 공공건축물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관공청 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본청 222명, 10개 지부를 운영하여 총 1,125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 중 946명의 기술직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2007년 기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조성 프로세스는 「공공공사의 품질 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영선계획서(부처가 매년 제출하는 공공건축물 조성에 대한 수급계획서)를 통해 공공건축물 관리
- 영선계획서에 대한 의견 제시
- 사용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 발주 업무수행
- 공공건축물에 대한 각종 기준 제시
- 기술지도, 지침 하달 및 각 기관의 책임자 교육
- 지자체에 대한 영선 지도·감독수행
- 발주자가 공공건축물의 입찰, 계약수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행정적으로 지원

③ 프랑스 공공건축위원회 MIQCP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기반시설, 공공공간의 질적 향상 촉진을 위해 문화부와 건설부가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행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지역 정부의 공공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법률가, 건축가,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이 조언 및 지원
- 건축개선정책의 입안 및 집행, 건축 관련 입법안 기안 참여·권고
- 건축문화에 관한 홍보전략 수립 및 촉진

- 건축 설계경기에서, 건축가 선발 과정에서 조언 및 심사단 참여
- 공공건축의 미, 기능, 기술 및 경영적 영역 포괄 관리
- 발주청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공건축 관련 교육 실시

④ 영국 건축위원회 CABE

외부 전문기관 행정협력 형태의 하나로,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하는 독립된 기관이다. 민간전문가는 건축가, 엔지니어, 도시계획가, 환경전문가, 학자, 개발업자 등으로 구성되며, CABE의 130여 명의 직원은 'the CABE family'라는 디자인 및 관련 분야의 전문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그들의 행정지원을 협조 받는다. 문화부, 행안부로부터 일부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영국 내 건축과 도시환경 조성 전 과정에 대한 전문가 자문 서비스 수행
-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 및 전문 디자인기술 지원
- 설계경기 심사단에 참여, 적합한 건축물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
- 디자인 관련 교육여건 개선
- 건축·도시 관련 기술개발 장려 및 연구개발, 캠페인 등

⑤ 핀란드 공공건축 총괄대행 공기업 스네이트 프로퍼티(Senate Properties)

행정조직의 한 부분이 아닌 재정부 소속의 정부 소유 공기업 형태를 갖추고 있어 다른 조달업무의 기관과는 독립적으로 공공건축물 조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재정과 운영 방향은 매년 핀란드 의회와 핀란드 재정부에서 결정하며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계획 과정 컨설팅 수행
-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단계 대행
- 정부 요구에 대응하고 부동산 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임대, 개발사업 수행
- 발주부서 업무 지원

3) 공공건축 품격 향상 방안

① 목표와 전략(표 4-12 참고)

표 4-12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의 목표와 전략

비전	● 도시품격 향상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증진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목표	● 고품격 저에너지형 공공건축 확대
전략	● 공공건축이 선도 → 민간부문의 품격 향상 유도 ● 건축 프로세스상의 문제를 집중 개선 ● 공급자 위주의 조성체계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시설 유형 및 규모를 고려한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
추진과제	● 내실 있는 기획으로 사업 효율성 제고 ● 창의성·기술력 중심의 설계자 선정방식 확립 ● 디자인 품질 향상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로 공공의 선도역할 강화

내실 있는 기획으로 사업 효율성 제고, 창의성·기술력 중심의 설계자 선정 방식 확립, 디자인품질 향상 및 관리시스템 구축, 에너지효율 관리로 공공의 선도 역할 강화

②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 내실 있는 기획으로 사업 효율성 제고

  초기 기획단계의 전문가 지원, 타당성조사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수립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한다.
- 창의성·기술력 중심의 설계자 선정방식 확립

  토목기술 용역과 구분되는 건축설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의 창의성과 기술력 평가를 위주로 발주방식을 개편한다. 따라서 현행 턴키제도, PQ제도 및 낙찰자결정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설계공모 방식을 도입·활성화한다.
- 디자인품질 향상 및 관리시스템 구축

  기획 및 설계의도가 건축물 완공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심의제도를 내실화하고, 사후설계관리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 또한 공공건축 초기 기획단계에서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방향을 설정하고, 설계에서 시공 전 단계까지 디자인

품질을 지속적으로 자가 진단하여 관리하는 시스템(DQI)을 개발·운영한다.

- 에너지효율 관리로 공공의 선도 역할 강화
  우선 공공건축물의 온실가스 중기 절감목표를 제시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대상 확대 등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을 강화하고,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 기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4) 공공건축 총괄관리체계 구축방안

① 공공건축 지원센터(가칭)의 기능 및 역할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의 기본구상, 발주방식, 에너지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간 중복 및 연계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입지, 규모, 유지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DB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총괄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도시·조경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중앙부처의 공공건축 기획·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건축유형,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고 자문의견서는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시 활용하도록 한다. 입지·규모, 발주 방식, 에너지절감 계획 방향 등에 대한 자문과 사업간 중복 및 연계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관련부처 또는 지자체 요청을 받을 경우에 기본계획 수립, 발주방식 선정, 입찰안내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에너지절감형 건축설계 기법, 그린 리모델링, 리트로핏 등 에너지 및 친환경 건축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고, 공공건축 DB구축을 통해 예산의 근거와 규모를 결정한다. 그리고 기획 과정의 합리적 방향을 유도하며, 에너지 성능, 안전성, 이용자 만족도 등 종합적인 DB를 구축하여 유사 규모·용도의 건축물 계획 시에 활용하도록 한다.

그 밖에 공공건축 관련 지침, 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하고, 공공건축의 유형 및 조성과정에 따라 세분화된 디자인품질 지표 및 웹기반의 평가시스템(DQI)을 개발·운영한다. 그리고 발주자를 위한 공공건축물 프로세스별 업무 매뉴얼을 보급하며 발주청·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공공건축 지원센터 (가칭)'를 구성하여 혁신 도시 신축 예정인 공공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기획·설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경부, 조달청, 정부청사관리소의 전문 인력으로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2단계에서는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운영성과를 점검·보완 후 범정부 차원의 공공건축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축방안
'공공건축 지원센터(가칭)'를 구성하여 혁신도시 신축 예정인 공공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기획·설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경부, 조달청, 정부청사관리소의 전문인력으로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행정인력은 각 부처 공공건축 담당자의 파견인력으로, 공공청사·문화체육시설·교육시설 등 건축 유형에 따라 해당 분야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자문단을 구성한다. 국건위는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자문단 구성을 위한 전문가를 추천한다.

2단계에서는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운영성과를 점검·보완 후 범정부 차원의 공공건축 총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표 4-13 총괄관리체계

공공건축 조성절차	국토부(건기법)		
발주·계약 대행	조달청(맞춤형 서비스)	통합	총괄관리체계 구축 (공공건축 기획·관리단)
공공청사 수급관리	행안부 청사관리소		

③ 기대 효과
부처별 칸막이식 행정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건축 관련사업의 중복 투자, 사전기획력 부족, 관련자료 DB 부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에 공공건축 지원 관련 사항
2012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통하여 공공건축 품격 향상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검토된다. 공공기관이 일정규모 및 용도의 공공건축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규모,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과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건축 지원센터에 사전 검토를 요청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련 공공기관을 공공건축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012년 9월에 국회발의가 되어서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다.

4. 성과 및 의의

공공건축은 국가 및 공공이 발주하는 건축물로서 민간부문으로 정착하기 이전에 공공이 선도적으로 개선방안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주요한 건축물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단순한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양질의 공공건축을 만들어오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노력했고 관련 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한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건축의 개선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공공건축관리단(가칭)'을 설치하여 중앙부처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총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관리단은 공공건축의 입지·규모, 발주방식, 에너지 효율성 등에 관한 자문과 타당성조사 의뢰·검토, 사업 간 중복 및 연계 필요성 검토,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토목 위주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개선방안을 담는 일본과 같이 「공공건축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림 4-41 서천 봄의 마을 여성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센터, 종합교육센터, 사진 윤준환

제7절
공공공간 가치 창출 및 이용 활성화

1. 추진 배경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커뮤니티 재생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면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물리적 거점으로서 공공공간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공공공간은 일상적 생활공간이자 사회, 문화, 경제적 자산으로서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획일적인 공급과 조성으로 일상생활과 밀착하지 못하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 내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공간 이용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공간 중 도시민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도시공원과 민간 소유이나 공공성이 높은 공개공지, 그리고 자투리 공간으로서 공적 활용 잠재력이 높은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공공공간 중 도시민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도시공원과 민간 소유이나 공공성이 높은 공개공지, 그리고 자투리 공간으로서 공적 활용 잠재력이 높은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대상으로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국건위에서는 2011년 6월 대통령 간담회에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건축정책 과제의 하나로 '공원·광장 등 공공공간의 확충 및 이용활성화'에 대한 과제추진을 보고했으며, 국건위 국토환경분과위원회를 거쳐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추진했다.

2. 추진 경과

1) 국건위 국토환경분과위원회 개최

위원회에서는 연구용역 시행계획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18일 위원회에 소속된 국토환경분과 위원과 외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공간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검토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과업내용 중 공공공간 현황조사는 유형별 대표도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이용자 평가를 위한 인터뷰 등 필요
- 연구용역명은 '도시 내 공공공간의 활용 실태조사 및 효율적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로 선정
- 신규 공간 조성보다는 기존의 저이용되고 있는 공간의 활용방안에 초점을 맞춤

2) 연구 개요

연구는 '도시 내 공공공간의 활용 실태조사 및 효율적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라는 제목으로 2011년 7월 26일부터 2012년 3월 21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주요 일정으로 공공공간 관련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진행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여러 분야의 자문과 연구의 내실을 기하고자 보고회 등을 개최했다.

3. 주요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도시공원의 경우 지역 간, 도시 간 편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급경사 등 물리적 접근성이 불량한 곳도 있어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공원은 관리상태가 미흡하고 이용자가 적어 자연감시 기능도 약화되어 우범화 문제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 공원이 조성되고 난 이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도 다수 있어 시설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와 이용률이 떨어지는 문제도 안고 있다. 공공공간의 범죄안전성에 대한 평가결과 불량청소년, 노숙자 문제, 야간조명 미흡 등으로 불안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나 노령자가 많은 지역에 어린이 공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조성되어 이용률이 적은 경우도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고가도로 하부공간 면적이 약 117㎢, 이고 안양시는 약 32k㎢ 등으로 활용 가능한 하부공간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주차장, 자재적재, 운동 공간, 무허가 시설 무단 점용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



그림 4-42 한성백제박물관, 사진제공 금성

다. 또한, 불법 컨테이너 박스, 장기 주차차량, 자재 등이 쌓여 있으나 정기적인 점검이나 안전관리에 취약하고 화재에 대해서도 무방비 상태여서 화기사용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개공지의 경우 준공 이후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공개공지를 사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이용률이 떨어지는 공간에 배치하여 접근성과 개방성이 열악한 경우가 많았다. 형식적인 계획과 조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휴식시설 제공과 보행환경 개선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공간의 운영 및 관리체계의 경우, 조성 및 관리주체와 참여주체도 달라 개별 공간 및 시설들에 대한 통합계획이 어려워서 이용의 연속성과 공간의 질적 향상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도시 내 공공공간과 활용 가능한 자투리 땅 등에 대한 DB 구축이 미비하고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업 간 연계추진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공공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2) 제도개선(안)

① 통합적 계획을 위한 관련 지침 및 시스템 개선

공공공간 및 시설에 대한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설치 및 관리주체들이 달라 디자인과 기능적 연결이 차단되고 있다. 이에 '공공공간 통합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시행 및 관리주체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계성 차단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 도시 기본계획 수립 기준 등의 개정을 통해 공공공간과 주변 도시 기반시설들이 연계 계획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도시 내 공공공간과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용도지구' 신설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도시 내 공공공간에 대한 시설물 위치, 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계획, 설계, 점검 및 유지 보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도출했다.

신도시 계획기준, 도시 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의 개정을 통해 공공공간과 주변 도시기반시설들이 연계 계획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도시 내 공공공간과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용도지구'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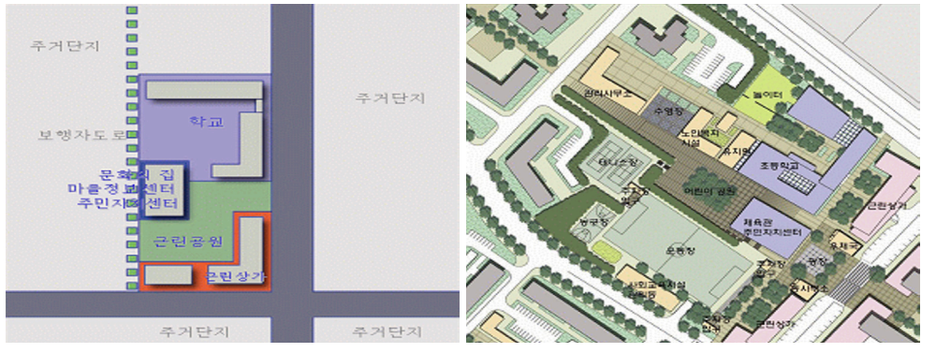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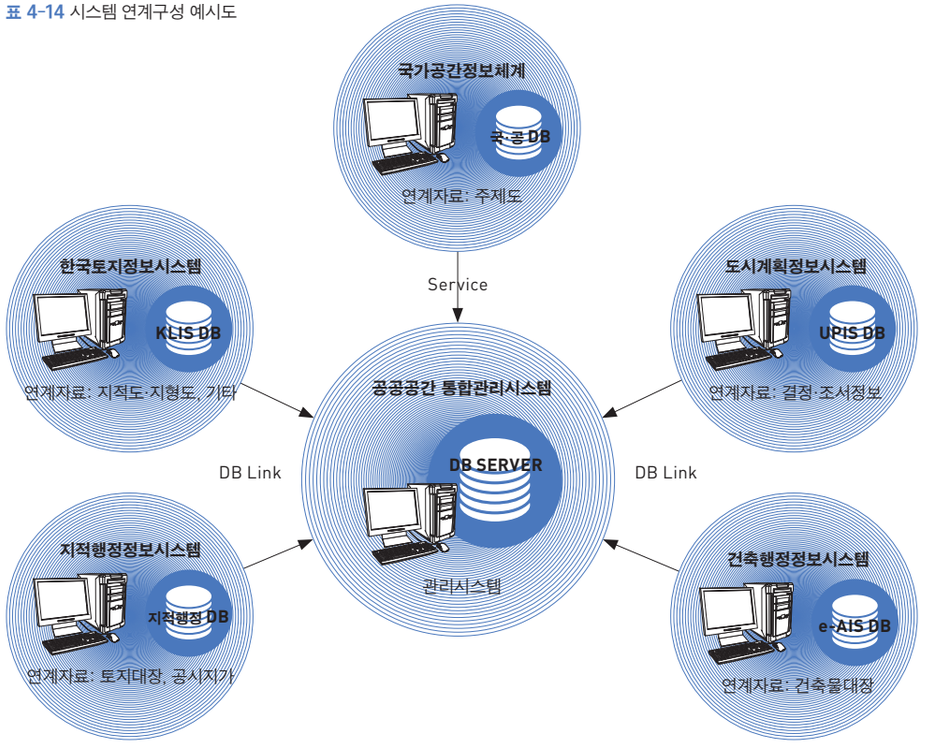


그림 4-43 학교 부지를 활용한 복합화 예시

표 4-14 시스템 연계구성 예시도



② 도시공원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조성된 지가 오래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주변 여건의 변화로 공원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원조성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고 도시공원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며, 소공원·어린이공원에 철봉·평행봉



그림 4-44 서울시청 새청사, 사진 윤준환

등 체력단련시설, 역사공원에 역사 관련 시설, 대학소유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에 대학기숙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시공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 공원조성계획에 범죄예방계획 포함
  공원조성계획의 수립 기준에 범죄예방계획을 추가하여 도시공원 계획 단계에서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도시공원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한다.

-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조성·관리 기준 마련
  도시공원의 계획·조성·관리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일반원칙인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성 증대, 유지관리 등을 적용하는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공원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 소공원·어린이공원에 체력단련시설 설치
  저출산·고령화로 생활권 주거인구의 연령대가 상향되고 소공원·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감소하는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철봉·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을 소공원·어린이공원에 설치하여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역사공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역사 관련 시설 설치
  주제공원인 역사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역사공원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지방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역사 관련 시설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여 역사공원의 주제에 맞는 공원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 대학기숙사 설치
  1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대학 소유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 대학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에 대학기숙사를 추가하여 교육 여건 개선 및 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③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활용 확대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다양한 유형의 공공장소로 활용하여 도시 내 공공공간 확충방안을 마련하고자 입체적 도로구역 설정 기준 개선과 도로구역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 개선안을 제안했다. 또한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제약하고 있는 화재 및 안전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화재 대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④ 공개공지의 공공성 및 개방성 확충
시민들이 공개공지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했다. 공개공지가 보행흐름의 연속성과 보행 편의성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의 형태와 기능에 관련된 기능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건축법'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및 보도·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공공청사 등 공공편의시설을 복합화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도우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녹색·방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세부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자 했다. 공개공지에 대한 심의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형식적인 조성에서 벗어나 보행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법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도 도출했다.

3) 제도개선 방향

표 4-15 공공공간 이용활성화

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관련 법제
도시공원	접근성 제약 및 불균형 분포	→	도시공원 리모델링 기준 마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성 문제	→	공원 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시설노후화 및 이용성 저하	→	민간투자 확대 방안 마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수익사업 활성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	도시 공원 유형 및 도입시설 조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로하부 공간	활용성 미흡	→	하부공간의 적극적 활용 도모	도로법
	안전 문제	→	화재대비 규정 마련	도로법
공개공지	타용도 전환 및 인지 미흡	→	공개공지 조성 기준 개선	건축법 등
		↘	인센티브 차등 적용	건축법
	기능적 연계성 미흡	→	심의기준 강화	건축법
기타사항	통합계획 및 관리부재	→	도시계획 수립지침 및 기준개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복합시설 용도지구 신설	신설 필요
	전담지원조직 및 재원한계	→	공공공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신설 필요

4) 공공공간 이용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

풍(豊)·낙(樂)·안(安) 도시 공간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공공공간의 활용성 증대 및 이용활성화 방안을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전략은 ① 통합적 계획을 위한 관련지침 및 시스템 개선, ② 도시공원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③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공적 활용 확대, ④ 공개공지의 공공성 및 개방성 확충, ⑤ 합리적 조정, 지원체계 마련으로 설정했다.

표 4-16 공공공간 이용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

비전	豊·樂·安 생활공간 창출	
목표	공공공간의 활용성 증대 및 효율적 조성	
추진전략 실천과제	❶ 통합적 계획을 위한 관련 지침 및 시스템 개선	통합계획 수립기준 마련 공공공간의 입체화 및 복합화 확대 공공공간 통합관리 기반 구축
	❷ 도시공원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도시공원 리모델링 및 안전관리 기준 강화 도시공간 유형 및 도입시설 조정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공원기능 개선
	❸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공적 활용 확대	고가도로 하부 저이용 공간의 적극적 활용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안전관리 기반 마련
	❹ 공개공지의 공공성 및 개방성 확충	공개공지의 공적 이용 확대 인센티브 차등적용 방안 마련
	❺ 합리적 조정, 지원체계 마련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체계 마련 전문성 강화 및 집행력 제고

4. 성과 및 기대 효과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사안별 시급성, 파급효과 및 기반 구축 준비 기간 등을 종합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첫째,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중앙·지방 정부 및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기존법 개정, 신설 등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그동안 양적·획일적 공공공간의 공급방식에서 질적 공급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및 기준 개선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노후화된 공공공간의 정비와 미이용 공간 활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의 절약, 도시 미관과 안전성 증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림 4-45 서울시청 새청사 서울 도서관, 사진 윤준환

제8절
녹색도시 해외 수출 지원체계 구축

1.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해외 자본 유치, 제조·물류·도시 인프라 공급,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G20 주요 국가로 성장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 등의 저개발 국가들은 한국형 모델을 적극 차용한 산업화를 추진하여 최근 구매력과 인구가 증가하여 주거단지 및 신도시 건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간의 풍부한 신도시개발 및 해외건설 경험에도 불구하고, 도시수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제도적 지원·협력이 미흡하여 최근 급증한 해외도시개발 수요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계에서 공적 관리 조직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의 풍부한 신도시개발 및 해외건설 경험에도 불구하고, 도시수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제도적 지원·협력이 미흡하여 최근 급증한 해외도시개발 수요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계에서 공적 관리 조직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다기관 간의 협업시스템 및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금융부문 지원 및 관련제도 개선 등을 통한 도시수출 활성화의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했다.

본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과제 차별성 검토를 통해 기존에 진행한 해외도시수출 관련 연구의 한계점을 알아보고 앞으로 진행할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기존 연구는 해외 도시개발의 전반적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진출가능 모델 구상 및 지원근거 마련 등의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에 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진행된 녹색도시 해외수출 지원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서는 총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금융 분야 등 세부 부문별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도시수출의 유효 개발 전략 수립 및 실천방안 제시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2. 추진 경과

국건위는 해외도시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2월 25일 국토해양부, LH공사, 국토연구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시작했다. 동년에는 6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입법 발의 중인 해외신도시 건설사업 특별법안을 검토하고 국토해양관 파견 현황 및 역할, 해외수주 현황, 국·내외 도시수출 사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앞으로의 진행 방향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또한 2010년부터는 5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도시개발 사례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해외도시개발과 관련된 주된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2010년 10월에는 국토부 및 유관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건설협회 등)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도시개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천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어진 2010년 12월 21일 회의에서는 ODA의 실적 현황과 운영 방향, ODA와 해외도시개발의 연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2011년 3월 10일, 3월 22일, 4월 5일 3차례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사례의 추진 현황, 추진 과정, 장애 요인, 정부지원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하여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이후 2011년 6월 8일 대통령 보고회에서 김창수 분과위원장의 '해외도시개발 지원체계 구축방안' 제안이 이루어졌다. 이후 2010년부터 논의되어 온 관련 회의의 내용과 주요 부처 자문단 회의 및 기획단 의견수렴을 거쳐 2011년 9월부터 5개월간 연구에 착수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연구내용 중 주요 결과로 제시된 정책제안들과 안건들은 2012년 2월 용역보고서 출간과 함께 관련 전문가와 국토해양부의 주요 관련자가 모두 참석하는 세미나에서 활용되었다.

3.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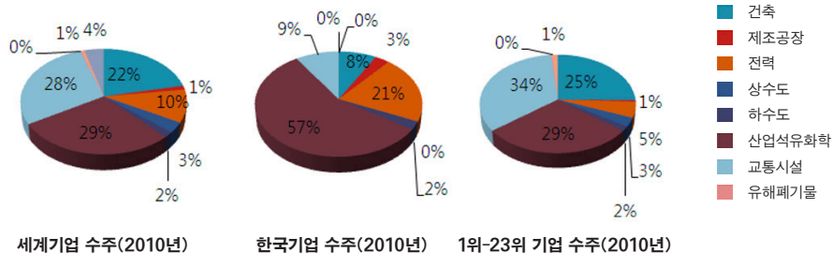
1) 한국 건설시장의 현황 및 여건 분석

우리 기업들은 국내 건설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해외 플랜트시장에 집중했다.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5년 108억 6,000만 USD에서 2011년 591억 3,000만 USD로 늘었다. 이중 플랜트 건설 비중은 2010

년에는 80%, 2011년에는 73%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건설투자의 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악영향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 실제로 2007년 이후 국내 건설 일자리는 20만 개 감소하고 해외 건설일자리는 8만 개만 증가했다. 그럼에도 해외도시개발 사업은 한국 건설시장 축소로 인한 내수시장 타격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신상품이며, 건설업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 전 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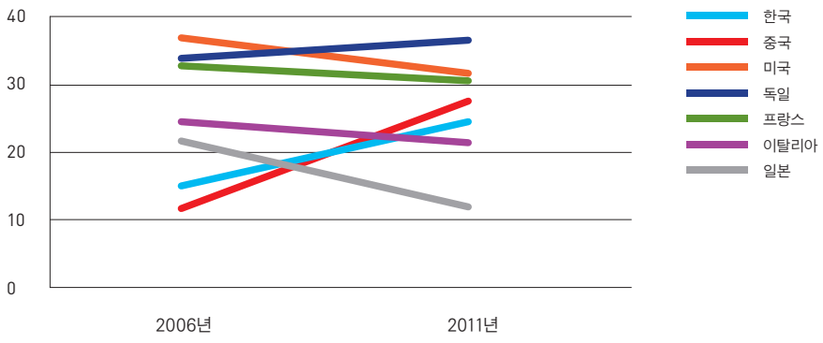
표 4-17 한국 건설시장의 현황 및 여건 분석



세계기업 수주(2010년) 한국기업 수주(2010년) 1위-23위 기업 수주(2010년)

-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는 산업/석유화학 플랜트 집중(플랜트 비중은 2010년 80.0%, 2011년 73%)
- 세계 상위 건설기업들의 수주는 건축과 교통시설, 산업/석유화학 플랜트가 골고루 분포

표 4-18 플랜트 종합 경쟁력 지수 변화



- 중국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수출 신상품 필요
- 한국플랜트협회 기준 플랜트 종합경쟁력지수는 2006년 한국 14.7, 중국 12.7이었으나 2011년 한국 24.8, 중국 27.1로 역전
-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 미국, 프랑스의 공세도 만만치 않아 플랜트 일변도의 포트폴리오는 한계가 있음
- 플랜트 산업을 보완할 해외도시개발 산업 진출 필요
- 우리 조선업은 벌크선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었으나 중국의 벌크선 시장 진출로 가격경쟁력을 상실, 고부가가치 특수선박으로 공종을 변경한 사례가 있음

2) 해외도시개발 모형의 탐색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난항을 겪고 있는 해외도시개발 사업 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3단계 접근법을 활용했다.

표 4-19 해외도시개발 사업 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3단계 접근법

1단계	개발사, 건설사, 지원기관 등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 해외 도시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
2단계	도출된 문제점을 대상으로 해결방안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는 해외 우수 사례 발굴
3단계	해외사례를 한국상황에 맞춰 적용하기 위해 해외도시개발과 관련된 기존의 우리나라 정부조직 분석

1단계의 전문가 인터뷰에는 알제리 부이난 신도시 개발을 시도했던 정성코퍼레이션 대표, 가나 주택 20만 호 사업을 주도한 STX 건설사 업무 담당자, 베트남의 나베신도시 개발을 진두지휘한 GS건설 담당자 등 개발, 건설사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전문가 인터뷰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터뷰의 결과로 해외도시개발 사업의 난항 이유가 첫째, 장기적인 정보 지원 부족, 둘째, 유효수요의 부족, 셋째, 금융제도의 미비, 넷째 레퍼런스 모델(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진 우리의 경험과 자산 등) 활용의 부족으로 정리된 바 있다.

2단계의 해외 사례 발굴에서는 미국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미국의 정부기관)가 수행중인 이라크 재건사업과 함께 일본의 인도 DMIC사업(철도와 산업신도시개발을 지원하는 종합개발사업), 중국의 주출거(走出去) 전략과 DR 콩고 패키지딜 구리광산 개발 등이 소개되었다.

3단계의 해외개발 지원조직 및 정책 현황 분석을 위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의 총 6개 관련부처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기존 조직은 각 부

처의 영역에 한정되어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마련되기 힘들며 이는 부처 이기주의 논의 이전에 업무 영역을 분리하는 정부조직이 가지는 한계로부터 기인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3) 해외도시개발 협력체계 제도개선 방안

① 총괄기구

국내외 해외사업지원협회와 종합원조기관들의 특징과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해 총괄기구 운영의 방향성을 도출한다. 총괄기구는 정보구축 및 관리, 연구, 자문, 금융지원, 인력조달,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업무 범위로는 해외개발사업 추진 4단계 세부지원 요소를 도출해야 한다.

총괄기구는 국내외 해외사업지원협회와 종합원조기관들의 특징과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해 총괄기구 운영의 방향성을 도출한다. 정보구축 및 관리, 연구, 자문, 금융지원, 인력조달,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② 해외개발 금융지원

해외개발 모태펀드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을 돕는 모델을 제시한다. 모태펀드는 해외개발을 위한 패키지딜 형태의 국부펀드로 운용되며, 해외 사업기관의 직접적인 사업 활동 자본으로서 국내 건설사의 투자를 지원하는 보증 및 보험, 정부자산을 가지고 해외도시개발에서 직접 출자해 투자를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 효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 모태펀드는 분산투자가 가능하여 리스크를 분산
- 중복투자 방지 및 민간투자 활성화
-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및 관리비용 절감
- 펀드운용의 전문성 및 펀드운용 성과 제고

③「해외개발 지원법」 제정

기존의「해외건설 촉진법」 등에서 다루지 못한 총괄조직에 대한 조항, 해외개발대사, 해외개발 종합계획 등에 대한 입법을 제안한다.

④ 정부부처별 입장수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4) 지원 총괄기구 조직방안 및 포럼 구성

기존 국내 관련기관과 해외 관련기관을 종합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며 총괄기구의 업무영역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된다. 해외개발사업 단계별 세부지원 요소인 사업발굴 및 수주준비 단계, 허가취득 및 계약 단계, 사업추진 단계, 자금회수 단계로 구분하여 요소를 도출한다. 총괄기구의 업무는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기존제도의 취약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조직과 업무분장을 제시하는 업무가 진행될 것이다.

5) 금융지원 강화 및 네트워크 구성 방안

기존 지원제도인 대외원조자금들의 종류와 사용 현황 등을 분석하여 개발도상국 개발 시 발생하는 민간 자금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수행체계는 자금의 운용 방법에서부터 실시 및 소관 기관까지 복잡한 체계로 분할되어 있다. 이것은 업무 간 실질적인 협력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무상 원조 중 기술협력은 관련 정부부처, 무상자금협력 부분은 외교통상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담당하며, 유상원조는 EDCF 차관 형태로 이루어지며 기재부 산하의 수출입은행 소관 등으로 나뉜다.

정부가 운용 중인 각종 펀드(글로벌 인프라, 해외자원 개발, 중소기업 모태, 신성장 동력)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 외 해외개발 패키지딜 펀드(자원 확보), 투자위험 보증사업 및 성공불 융자, BOT 지원 금융 등을 분석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신도시 개척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6) 해외도시개발 지원법안

「해외건설 촉진법」과「해외자원개발 사업법」,「해외농업개발 협력법」 등을 분석하여 이 중 본 연구결과의 4개 제안을 포함하는 법률을 구성하여 제안(법률 1안)한다. 통합적 해외개발 개념이 제외된 해외도시개발 총괄기구를 추진할 경우(법률 2안), 해외개발사업을 담당하는 해외개발부의 신설을 포함하는 법률 3안까지 다층적인 법률 개선안을 제시한다.

7) 해외도시개발 세미나

해외도시개발 세미나는 2012년 2월 29일 수요일에 15시 30분부터 18시까지 LH사옥(오리) 국제회의실에서 국건위 주최로 열렸다. 국토해양부 한만희 제1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국건위 위원, LH 및 대한지적공사의 주요 관계자와 해외개발 관련 민간 건설사·엔지니어링업체 관련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과 의견을 교류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돕는 총괄조직과 금융 지원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 발표(정창무 교수)에 대해 대부분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애로사항을 설명하는 등 호의적인 분위기로 진행됐다. 발표 내용 중 '대통령 직속 해외개발위원회'가 제시된 바, 현재의 공기업 위주의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다. 해외도시개발은 단순한 해외건설도급이 아닌 미래 성장 동력인만큼 부처 간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합쳐 큰 규모의 기관과 통합법으로 장기적인 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 자체를 파는 새로운 시장을 구상하고 Reference Model을 확립했다.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해외개발 지원을 위한 총괄지원기구를 설립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에 단일화된 창구를 마련하고자 제안했다.

4. 기대 효과 및 활용방안

기존 해외도시건설 관련 연구의 전반적 동향분석과 개념적인 제도개선 방안에서 탈피하여 구체적 진출가능 모델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기업,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적인 지원 근거 마련과 실천방안(총괄부서 조직 및 금융지원안)을 제시했다. 해외도시수출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과 해외진출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패키지형 해외도시개발 모형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정부정책 현황 및 5대 주요 분야 경제협력 모델 등을 분석하여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 자체를 파는 새로운 시장을 구상하고 참고 모델(Reference Model)을 확립했다.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해외개발 지원을 위한 총괄지원기구를 설립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에 단일화된 창구를 마련하고자 제안했다. 그 결과 리스크 분산책이 부족하여 사용이 활발하지 않은 공적자금 등의 원활하고 활발한 투자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46 2012 해외도시개발 세미나

연구결과 발표를 겸하는 2012년 2월 해외도시개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부기관의 부처별 담당자, 관련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대상 홍보활동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연구결과 보고서를 유관 중앙부처, 국책연구소 및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실 등에 배포하며 앞으로 유사 과제 추진을 기대해 본다.



그림 4-47 서울 도서관, 사진 윤준환



그림 5-1 부산건축문화제, 사진 윤준환

05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도시 정책

제1절 전국 순회포럼 등 지역 주민·일선행정과 공감대 형성
제2절 건축·도시 주요 담론 고찰: 건축·도시 정책토론회
제3절 건축문화 행사 내실화
제4절 해피하우스: 단독주택지 관리 서비스사업 활성화
제5절 도심 저층주거지 근린재생
제6절 해피차일드: 보육시설 개선 및 확충
제7절 보금자리주택 품격 향상
제8절 건축행정제도 개선
제9절 2017 UIA총회 서울 유치 지원
제10절 2014 도코모모 국제회의 서울 유치 지원

제1절
전국 순회포럼 등 지역 주민·일선행정과 공감대 형성

1. 추진 배경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건축정책의 방향설정 및 국민, 지역과의 소통을 통하여 현장감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건축가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의견청취 및 타계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연 6회 총 12회의 전국 순회포럼과 2012년 3월에는 시·도 건축·도시 행정공무원워크숍, 4월에는 '녹색 건축·도시건설을 위한 메이어스(Mayor's Forum)포럼'을 개최했다. 지역 및 중앙의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 및 건축·도시 관련 공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정책방향과 도시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도시의 성공적 추진 사례 및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나누었다.

2. 주요 내용

1) 전국순회 건축·도시 정책 포럼

① 2011년 추진 방향 및 내용

국건위가 주최하고 광역지자체가 주관하는 전국 순회포럼을 6월부터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수도권의 5개 광역경제권과 강원·제주권 등 총 6개 권역별로 개최했다.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는 국건위 위원들과 해당지역 전문가가 공동 참여했고, 주제 발표에는 위원 1명, 지역전문가 2명 등 총 3명이 참여했다. 토론자는 국건위 분과위원장 1명을 좌장으로 하고, 위원 2명, 지역전문가 4명 등 총 7명이었다. 주제 발표는 대부분 지역 현안과 관련된 국가건축정책의 방향제시(국건위 위원)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정책 과제에 집중했다.



그림 5-2
2011년 제1차 전국순회 건축정책 포럼 포스터



그림 5-3 2011년 전국순회 건축·도시 정책포럼 (3차, 동남권)

● 제1차 충청권

일시	2011년 6월 30일 14:00~18:10
장소	대전시청 3층 대강당
주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참석	산·학계 전문가, 공무원, 건축사 등 약 360여 명
주제 1	도시 및 농어촌 경관 만들기(이진숙 국건위 위원)
주제 2	지역발전과 국가건축정책(송복섭 한밭대학교 교수)
주제 3	도시설계 및 경관과 건축가의 역할(류흥렬 건축사사무소 대표)

• 토론자 및 주요 내용

재해성 국건위 위원이 좌장을 맡은 이 토론회에 이광영 남서울대학교 교수, 김종헌 배재대학교 교수, 이광영 남서울대학교 교수, 김승근 강동대학교 교수, 임양빈 건양대학교 교수, 김선미 국건위 위원, 김성진 충북건축사회 부회장, 이정면 국건위 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건축설계를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바라보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더불어 지역 및 현장 중심의 건축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는 건축행정의 간소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 대표공간을 만들고,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활동 또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림 5-4 2011년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2차, 호남권)

● 제2차 호남권

일시	2011년 8월 30일 14:00-17:40
장소	광주 5·18기념센터 대동홀
주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참석	산·학계 전문가, 공무원, 건축사 등 약 350여 명
주제1	녹색건축의 전통성과 시대성(배시화 국건위 위원)
주제2	지방도시의 주택공급 안정화 방안(남해경 전북대학교 교수)
주제3	행복마을과 한옥의 특성화 및 발전 방안(천득엽 전남대학교 교수)
주제4	나무심는 건축인 친환경만들기(강남구 건축사사무소 대표)

• 토론자 및 주요 내용

김창수 국건위 위원을 좌장으로 김현숙 국건위 위원, 한창섭 국가건축정책기획단 부단장, 이창율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염대봉 조선대학교 교수, 김기수 CNS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지민 목포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회 주요 내용으로는 구도심재생을 통한 주거안정방안과 전주한옥마을의 성공사례, 지역맞춤형 주택정책,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등이 거론되었다. 또한 LH공사가 서민주택이 아닌 중대형 분양아파트 위주로 공급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제3차 동남권

일시	2011년 9월 19일 14:30~18:10
장소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실
주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참석	산·학계 전문가, 공무원, 건축사 등 약 350여 명
주제1	국토공간 품격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정형 국건위 위원)
주제2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우신구 부산대학교 교수)
주제3	울산광역시 도시·건축의 세방화 전략(신재억 울산대학교 교수)
주제4	생태건축문화와 지역경제의 공존(최만진 경상대학교 교수)

• 토론자 및 주요 내용

토론회는 좌장 강준모 국건위 위원과 더불어 김민수 국건위 위원, 백운수 국건위 위원, 우동주 동의대학교 교수, 권상수 울산광역시 건축사회 감사, 이강주 창원대학교 교수, 조용범 창원건축사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그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국토환경이 자연·역사적 특성을 살리는 문화적인 자연경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역건축의 생태문화적 다양성을 도심 내부까지 끌어들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해양수도 부산은 그에 합당한 이미지 구축을 통해 문화를 접목하고 부산다운 경관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위해 부산의 도시정책은 권역별 세부 정책방향과 건축과 교통 등이 결합된 실천적인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여 지역건축문화를 살리자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 제4차 대경권

일시	2011년 10월 7일 14:00~17:50
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
주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참석	산·학계 전문가, 공무원, 건축사 등 220여 명
주제1	녹색건축도시 추진동향 및 전략(오경은 국건위 위원)
주제2	도시발전 원동력의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계획(박용서 경북대학교 교수)
주제3	녹색건축 실현과 재난대비 건축시스템 구축(이두진 건설기술정책연구위원)

• 토론자 및 주요 내용

제해성 국건위 위원이 좌장을 맡고 구영민 국건위 위원, 김선미 국건위 위원, 김종영 계명대학교 교수, 하기주 경일대학교 교수, 최혁준 대구건축사회 부회장, 전상훈 경북건축사회 회장, 이재춘 경상북도 건축지적과장이 함께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이들은 녹색생활 문화환경과 역세권 개발계획의 도시네트워크, 정부 차원의 녹색건축 인증제도 등을 논의했다. 이 중 녹색건축을 위해 미국 '리드(LEED) 제도'와 같이 한국에도 '더 그린(The Green)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더불어 대구의 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후 공원 등 활용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녹색건축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존 도시 중앙로를 연계한 녹색성장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정책보다 도·농복합지역에 적합한 정책수립 및 지원을 요구했으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재난 사전대비와 고령화 및 취약계층 보호에 큰 역할이 기대되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제5차 수도권

일정	2011년 11월 21일 14:00~18:15
장소	수원월드컵경기장 컨벤션웨딩홀
주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참석	국회의원 산·학계 전문가, 공무원, 건축사 등 390여 명
주제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주제2	저층주거지역 재생방안(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과장)
주제3	근대문화유산 보전·활용 방안(황순우 건축사사무소 바인 대표)
주제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정책 방향(김상호 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및 주요 내용

김창수 국건위 위원이 좌장을 맡고 제해성 국건위 위원, 권문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영준 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용하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막중 국건위 위원, 김경배 인하대학교 교수,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교수,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가 토론회에 참여했다. 수원의 근대문화유산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문화유산 재조명, 전문가의 참여와 활용을 통한 저층주거지 재생방안, 노인, 농촌, 실업문제 변화추구를 위한 정책 등에 관해 논의했고, 앞으로의 건축주택정책은 질적·수용자·지역 중심의 참여개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논의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연계수법 및 재원확보 등을 공공부문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 제6차 제주·강원권

장소	2011년 12월 6일 14:00~18:10
장소	제주벤처마루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참석	공무원·건축사 등 200여 명
주제1	중소도시의 도시재생 과제와 추진전략(백운수 국건위 위원)
주제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건축의 발전방향(양수현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장)
주제3	국가건축정책과 강원도의 미래 전략(박경립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 토론자 및 주요 내용

강준모 국건위 위원을 좌장으로 이제선 국건위 위원, 김태일 제주건축가회 부회장, 김효남 관동대학교 교수, 이정형 국건위 위원, 선은수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 허민구 강원도건축사회 회장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택지개발 등의 엔지니어링 설계부문에 건축전문가가 배제되면서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인 건축물이 설계되도록 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평창동계올림픽 종료 이후 시설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현 단계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지방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및 대도시의 개발이익을 농어촌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실행 중에 있으나, 신청 건수가 많아질 경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있다고 지적되었다.

② 2012년 추진방향 및 내용

2011년 전국 순회포럼의 성공적 운영을 2012년에도 이어받아 지역·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도모하는 건축인들의 정책발굴의 장으로 활용했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임을 감안하여 건축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공감형 제도개선 과제의 성과 창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었다.

• 추진 배경

2011년 전국 순회포럼의 성공적 운영을 2012년에도 이어받아 지역·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도모하는 건축인들의 정책발굴의 장으로 활용했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임을 감안하여 건축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공감형 제도개선 과제의 성과창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었다.

• 추진 방향

2011년 6개 권역별 미개최지 중 희망 광역지자체를 우선 선정했다. 개최 시기는 지역 주요 사안의 심층적 검토 등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 격월을 기준으로 국가건축정책의 중요이슈와 지역별 특화 이슈로 구분했다. 국건위에서는 전국 단위의 주요 이슈에 대한 방향설정을, 지역에서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과제 해법을 모색했다. 발표자는 1~2명으로 최소화하되, 국건위 위원 및 지역전문가에 국한하지 않고 그 분야 최고전문가를 섭외했다.

● 제1차 충청권

일시	2012년 4월 19일 14:00~17:50
장소	충북 청주시 고인쇄박물관
주관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참석	산·학계 전문가, 공무원, 건축사 등 290여 명
주제1	어린이집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최경숙 인덕대학교 교수)
주제2	역사문화적 건축자산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박성인 건축사)



그림 5-5 2012년 전국순회 건축·도시 정책포럼(제1차 충청권)

주제1에서는 최경숙 인덕대학교 교수가 '어린이집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이어진 토론에서 제해성 국건위 위원을 좌장으로 배시화 국건위 위원, 최목화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조정신 건양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손승희 대전청사 새롬어린이집 원장, 정진주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한창언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어린이집의 필요성과 건축환경 개선은 시대적·사회적 요구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건축환경에 대한 전문적이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대해 「주택법」 등 관련 법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경로당, 어린이집을 노유 복합시설로 설치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아동의 연령별 발달 수준과 보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 요소에 대해 토의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시설 주변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경제·사회·문화적 약자를 배려해야 함을 함께 이야기했다.

주제2에서는 박성인 건축사가 '역사문화적 건축자산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구영민 국건위 위원, 박천보 한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안창모 경기대학교 건축설계학과 교수,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왕기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박상일 청주문화원 부원장 등이 참여하여 역사문화적 건축자산과 관련한 지형·지리적 이미지를 검토하고 경관계획이라는 입장에서 도시 경관 향상에 기여하는 문화유산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또한 역사문화자산만이 아닌 근대산업유산도 포함해 함께 역사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도시의 정체성을 통한 지역문화 창출과 경제적 가치창출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하는 바였다.

● 제2차 호남권

일시	2012년 5월 30일 14:00-18:20
장소	전주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주관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참석	산·학계 전문가, 공무원, 건축사 등 293명
주제1	설계·시공·자재의 건축정보 호환을 위한 통합 표준체계 구축(이정면 국건위 위원)
주제2	한옥의 발전 방향과 전략(남해경 전북대학교 교수)

주제1에서 이정면 국건위 위원이 '설계·시공·자재의 건축정보 호환을 위한 통합 표준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토론에서는 김창수 국건위 위원을 좌장으로 김홍용 삼우건축사사무소 소장, 조창호 건축사사무소 이상건축 대표, 강석표 우석대학교 교수, 박준영 LH 주택설계연구단장, 정태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장 등이 참여해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는 통합 표준체계 구축, 글로벌화된 통합 건축정보 체계화의 효과, 선진 기술 확보 및 비생산적인 업무 요소 제거, 표준체계 기준의 디자인 획일성 방지 장치 등에 관한 것들이 제안되었다.



그림 5-6 2012년 전국순회 건축·도시 정책포럼(제2차, 호남권)

주제2에서는 남해경 전북대학교 교수가 '한옥의 발전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토론에서는 김창수 국건위 위원이 좌장을 맡고 김현숙 국건위 위원, 박강철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강대호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종헌 배재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봉수 삼진건축사사무소 대표, 최정희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서로 향교, 객사, 관아, 고택, 종택 등 건축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을 논의했으며 한국적 공연장 등 다른 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유형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과거양식의 차용이 아니라 우리시대 한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함께 고민했다. '중소도시 재생'과 '국가 브랜드로서 한옥 육성' 정책을 접목시켜 중소도시 재생의 활력소로 한옥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제3차 동남권

주관	2012년 7월 11일 14:00~18:00
장소	울산광역시청 대강당
주관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참석	산·학계 전문가, 공무원, 건축사 등 600여 명
주제1	제로 디자인, 솔루션 디자인(김현선 국건위 위원)
주제2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슬로우 타운 조성(이재원 울산대학교 교수)

주제1에서는 김현선 국건위 위원이 '제로 디자인, 솔루션 디자인'을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강준모 국건위 위원을 중심으로 김선미 국건위 위원, 안재락 경상대학교 교수, 이광국 동



그림 5-7 2012년 전국순회 건축·도시 정책포럼(제3차, 동남권)



그림 5-8 2012년 전국순회 건축·도시 정책포럼(제3차, 동남권)

명대학교 교수, 장훈익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김형찬 부산광역시 과장이 모여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도시는 자기만의 이야기와 지속가능성(환경과의 소통)을 통하여 생명을 가지고 소득향상, 고용창출을 이루어야 함을 함평 나비축제, 제주 올레길 등의 사례로 살펴보았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디자인 교육이 필요하고 디자인은 최종적으로 주변과의 소통, 조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구마모토시 아트폴리스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제2는 이재원 울산대학교 교수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슬로우 타운 조성'을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토론에서는 강준모 국건위 위원을 좌장으로 백운수 국건위 위원, 김종구 부산대학교 교수, 유용현 울산대학교 교수, 김형보 동의대학교 교수, 김진한 울산시 건축사회, 김도헌 울산광역시 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대학과 연계한 첨단산업 육성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슬로우시티의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슬로우는 모든 도시가 원하는 것이

아니며, 슬로우 시티가 유행처럼 이야기되는 단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다.

● 제4차 강원·제주권

일시	2012년 9월 14일 14:00~18:00
장소	강원도 춘천시 애니메이션박물관
주관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참석	산·학계 전문가, 공무원, 건축사 등 300여 명
주제1	동계올림픽시설 사후 활용방안(이정형 국건위 위원)
주제2	동계올림픽을 활용한 강원도 건축경관 관광자원화 전략(강원발전연구원 추용묵 연구위원)

주제1에서 이정형 국건위 위원은 '동계올림픽시설 사후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이어진 토론에서 제해성 국건위 위원을 좌장으로 백운수 국건위 위원, 박은실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박경립 강원대학교 교수, 김윤일 강원대학교 교수, 양관목 경동대학교 교수, 이종근 도시그룹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 이후 시설들의 활용 유지방안을 논의했으며 장기적 플랜과 투자로 휴양·스포츠·레저 산업과 청정산업(신재생 에너지, 비철금속 생산 등)을 위해 국가와 정부투자기관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조급히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올림픽조직위와 기존의 건설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합리적 대책수립이 필요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주제2에서는 강원발전연구원 추용묵 연구위원의 '동계올림픽을 활용한 강원도 건축경관 관광자원화 전략'을 주제로 강준모 국건위 위원, 최승담 한양대학교 교수, 조경진 서울대학교 교수, 김도경 강원대학교 교수, 조태동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김종오 연희건축사사무소 대표가 모여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들은 설계자들에게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작품을 완성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건축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장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건축물들은 올림픽 종료 후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가졌다. 더불어 강원도의 7개 벨트별 경관형성 상세계획과 네트워크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참석자 모두들 동계올림픽은 강원 지역커뮤니티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제5차 대경권

일시	2012년 10월 31일 14:00~18:00
장소	경상북도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주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참석	산·학계 전문가, 공무원, 건축사 등 300여 명
주제1	도시재생과 퍼블릭디자인(김민수 국건위원)
주제2	김천 혁신도시 경관을 위한 제언(하헌정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마스터플랜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과 공공과 주민이 동반자가 되어 역할 분담을 통하여 공공디자인을 해야 한다.

주제1에서 김민수 국건위원은 '도시재생과 퍼블릭디자인'을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이어진 토론에서 김창수 국건위 위원을 좌장으로 구영민 국가건축정책위원, 주정준 보스턴시 재개발청 어반디자이너, 우신구 부산대학교 교수, 백승만 영남대학교 교수, 박영홍 대구시 도시재생과장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스토리텔링 구축 및 개성 있는 공간 창출과 마스터플랜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과 공공과 주민이 동반자가 되어 역할 분담을 통하여 공공디자인을 하여야 하고, '자생도시재생'은 우수한 공공디자인 뿐만 아니라 실패한 공공디자인의 경험으로부터 풍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공사업은 각 장소의 잠재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판단이 필요하고 자생적 발전을 위한 촉매역할을 하는 것으로 장소의 성격에 따른 차별적 전략수립과 성장 위주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 및 성장관리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원주민 재정착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향 도출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주제2에서, 하헌정 금오공과대학교 교수는 '김천 혁신도시 경관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배시화 국건위 위원이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서 김현선 국건위 위원, 공성훈 계명대학교 교수, 강성건 김천대학교 교수, 강동완 삼우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손진욱 희림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진영의 김종두 대표가 참여했다. 주요 토론 내용은 블록별, 존별 주거유형의 다양화 시도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특정경관계획 등의 상세한 계획을 통한 실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김천과 그 주변의 역사·인문학적인 분석 및 조사를 통한 건축과 도시계획의 연관성을 도출하여 미래의 도시상을 제시한 건축위원회 등 경관관련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조화로운 도시건축경관 심의로 지속적인 경관관리와 도시미관을 관리하는 전문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공간단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블럭·건축 간의 유기적 결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경관협정 시범지역 선정 등을 통한 경관의 자율적인 형성,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주민 주도로 경관을 형성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주차진입을 고려한 단독 및 상업 용지의 폭 확보 등 각 제안별로 자세한 예를 들어가며 건축 및 경관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 제6차 수도권

일시	2012년 11월 22일 14:00~18:00
장소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
주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참석	산·학계 전문가, 공무원, 건축사 등 300여 명
주제1	진화하는 도시(구영민 국건위 위원)
주제2	인천개항장 리모델링 지원을 통한 문화지구 활성화 방안(오장연 굿하우스 대표)

주제1에서 구영민 국건위 위원은 '진화하는 도시'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 강준모 국건위 위원을 좌장으로 김선미 국가건축정책위원, 황순우 건축사사무소바인 대표, 김지엽 아주대학교 교수, 권영상 인천대학교 교수, 이희환 시민과대안연구소 연구실장, 김창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오랜 시간 속에서 형성된 장소적 공간이라는 맥락에서 재창조되고 공공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진화된 공공 파이낸싱 기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체계 개편과 공공의 역할 강화, 개발의 패러다임 속에서 신도심과 원도심과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명품도시보다 새로운 이상도시의 개념 창조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주제2에서는 지역 전문가인 오장연 굿하우스 대표가 '인천개항장 리모델링 지원을 통한 문화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제하였으며 이어진 토론에서 오경은 국건위 위원, 김혜정 아키플랜 건축사사무소 도시연구소 소장, 임성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전진삼 간향미디어랩 대표, 민운기 대안미술활동공간 스페이스빔 대표, 손도문 비타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19세기에 지어진 집에서 21세기 사람이 산다는 개념을 도입하고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개항장 문화지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개항장 문화지구 보존 후 사용방법 등을 제안하고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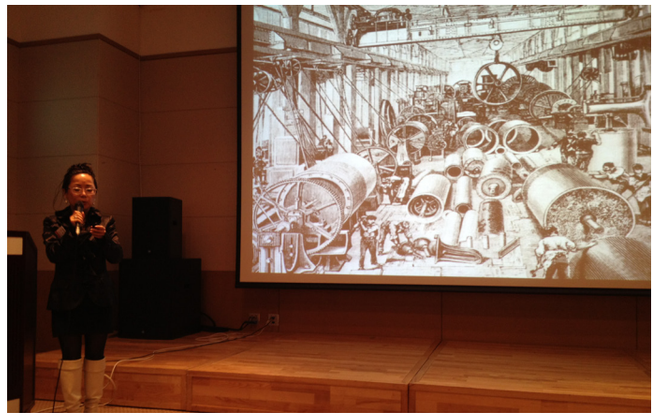


그림 5-9 2012 시·도 건축 및 도시 행정공무원 워크숍

중심의 관리방안과 거주하는 주민들이 계획부터 관리까지 참여하는 지역재생방안을 마련하는 등 문화지구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공동체에 대한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 시·도 건축 및 도시행정공무원 워크숍

① 워크숍 배경 및 내용

2012년 3월 8일부터 9일까지 국가건축정책 방향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 간 건축정책 소통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도 건축 및 도시행정공무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천안 휴러클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국건위 위원 12명 및 기획단 직원 20명, 지자체 건축 및 도시행정담당 공무원 89명, 중앙부처 5명(국토해양부 4명, 교육과학기술부 1명) 등 총 126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국건위 활동성과 및 금년도 업무 방향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 번의 특강이 뒤를 이었다. 첫 번째 특강으로는 국토부 건축기획과장이 '건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시대변화·글로벌 환경에 맞는 건축법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도시의 품격 향상과 녹색 건축·도시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특강은 '풍수지리와 현대건축'에 관한 박시익 박사의 발표로서, 풍수지리의 용도를 개인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으로 나눌






그림 5-10 2012년 시·도 건축 및 도시 행정공무원 워크숍

수 있으며, 도시 및 수도의 입지선정과 더불어 국가 및 공공시설(공원, 납골당 등)에도 적용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세 번째 특강은 국건위 김현선 위원이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이어졌다. 그는 물질시대에서 문화시대로 넘어온 시점에서 지역(도시)이미지는 사람과 환경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산물로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과 상생하는 디자인(유기적 디자인), 문화가 녹아 있는 철학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② 자치단체 특수시책 발표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수시책 발표가 있었다. 서울특별시는 2017 UIA(세계건축대회) 총회 서울유치 경과보고를 하였으며, 부산광역시에서는 건축기본계획수립 및 부산국제건축문화제 활동 내용을, 대구광역시에서는 골목길 환경이 열악한 공간에 대해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스토리가 흐르는 골목길로 재창조하기 위한 폐·공가정비사업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스토링 골목길 재생사업을 주제로 도시가꾸기 시범사례를 소개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대한 기록자료 구축 및 우수한 건축물 보존 등을 위한 아름다운 건축지도 작성을 위한 DB구축에 대해 발표하였다. 강원도에서는 고령화시대 도시은퇴(예정)자의 전원생활 수요증가에 대비한 인구유입정책으로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을 소개하였다. 충청북도에서는 느림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시민의 공공서비스 향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건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고, 전라북도에서는 건축제도 개선팀을 구성,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2012년 전라북도 건축정책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동해안지역 지진 대비 소규모 건축물 S/A 구축사업으로 동해안 원전주변 5개 시·군 소규모 주택 내 대피공간 설치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에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신공법 건축기술이 집약된 복합적 인공구조물인 공동주택을 비전문가인 일반소비자를 대신하여 품질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소개했다.

③ 성과

건축제도 개선사례 공유 등 지역 일선행정에서 꼭 필요한 의견 교환의 장이었으며 지역활성화 측면에서의 공공디자인 개선 등 건축의 역할 강화를 위한 친밀도 높고 심도 있는 워크숍이었다. 또한 풍수지리 등 전통과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 새로운 현대건축에 필요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그림 5-11 2012년 시·도 건축 및 도시 행정공무원 워크숍

3) 녹색 건축·도시 건설을 위한 메이어스 포럼(Mayor's Forum)

① 개최 배경 및 목적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국가 건축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자문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함께 만났다. 국건위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건축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미래 건축환경 변화에 대비하고자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의 일선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도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녹색 건축·도시 정책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하여 포럼을 개최했다.

② 행사개요

행사명	2012년 녹색건축도시 건설을 위한 메이어스 포럼(Mayor's Forum)
일시	2012년 5월 4일 금요일
장소	충청남도 천안시청 봉서홀
참석	약 1,000명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민간위원(8명), 기획부단장 등(25명 내외) •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사무차장 외 업무 담당자(30명 내외)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녹색건축과장(3명 내외) • 지역 참석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충남도 부지사, 국회의원, 지자체 공무 원, 지역 교수·학생 등(약 1,000명)
주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
주관	천안시
후원	국토해양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도시설계학회

③ 주요 내용

포럼의 주제로는 '중앙정부의 녹색도시·건축 정책방향 제시 및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추진 사례 공유'로서 제1주제 발표에 나선 국토해양부 김성호 녹색건축과장은 녹색건축·도시를 통한 녹색선진국가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도시구조를 직주근접형으로 개편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IT와 생태기술 등이 융합된 첨단그린도시를 조성하고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과 인천 송도 등에 U-Eco City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제2발제에서는 이병대 박사(천안시 정책기획단 전문위원)가 '녹색성장 산업도시 천안'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적으로 기후환경의 변화로 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고유가로 인한 자원위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천안시는 저탄소에너지 자립도시, 융복합 첨단산업도시, 주민자력 녹색재생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저감형 대중교통망 구축과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교통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구조를 직주근접형으로 개편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김성호 과장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저감형 대중교통망 구축과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교통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병대 박사
(천안시 정책기획단 전문위원)

이어 '지역 녹색 건축·도시 방향과 협력·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70여 분간 진행된 토론에는 제해성 국건위 위원을 좌장으로, 배시화 국건위 위원, 한상국 천안시 건설도시국장, 이장범 충남도시건축연구원장, 이정형 중앙대학교 교수, 김윤성 부산시 해운대구 도시건설국장, 신정호 대전시 서구청 건설교통국장이 참여했다. 토론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녹색건축에 관한 정부정책은 잘 운영되고 산업분야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으나,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친환경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으나 단순 체크 리스트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녹색·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탄소흥수지대 조성사업, 에너지 중립도시 조성 및 에너지절약형 탄소제로 단지 조성 등 녹색기술·환경 친화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논의했다.

3. 성과

12차례의 전국 순회포럼 및 지자체와의 워크숍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국가건축정책의 방향설정과 일선행정, 지역과의 소통을 이룰 수 있었다. 지역 및 중앙의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 및 건축·도시 관련 공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정책방향과 도시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특히 지방도시의 성공적 추진 사례 및 애로사항 논의 등을 통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건축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현장감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건축가의 열악한 현실을 듣고 타계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현가능한 건축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과 의견수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제2절
건축·도시 주요 담론 고찰: 건축·도시 정책토론회

1. 추진 배경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노후한 도심의 지역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 쾌적하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조성 등을 목표로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을 발표하고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시가 내 미이용지 우선 개발 등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했고, 도심 공단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각 사업들은 나름의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국가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지자체 현안을 위주로 하여 주로 공공디자인에 치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결과물 및 추진과정 등에서 각 사업 간에 별다른 차이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비슷한 성격의 단일사업들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건축·도시 환경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 차원의 예산낭비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 현 시점에서 각 부처 시범사업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건축·도시 환경정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 및 차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어 주요 건축도시과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현 시점에서 각 부처 시범사업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건축·도시 환경 정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 및 차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어 주요 건축도시과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주요 내용 및 방향

각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건축·도시 공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들 간 차별성 확보와 역할분담 및 연계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특성 반영과 지역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2012 건축·도시 정책토론회'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주관하에 국토해양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4차에 걸친 토론회 주제와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차: 건축설계의 위기,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극복하자

① 토론회 개요

일시	2012년 4월 20일
장소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주제발표1	건축설계산업의 위기와 전망
	이정면(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주제발표2	건축서비스산업의 현주소와 진흥법(안) 추진 현황
	유광흠(건축도시공간 연구소 연구위원)
토론자	김창수((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 좌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강부성(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성호(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 과장)
	김지엽(아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강호((주)에시트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한국건축가협회))
	이상훈(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과 과장)
	이종정(에스와이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대한건축사협회))
	정향미(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공간문화과 과장)
	황재성(동아일보 기자)

② 토론회 추진 배경 및 내용

● 추진 배경

이미 일찌감치 산업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세계 각국의 나라들은 공장과 같은 산업유산을 문화공간으로 바꿔나가는 등 자국의 문화와 고유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식서비스산업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 사례가 잘 보여주듯이 건축설계산업은 2차, 3차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고부가가치의 기반산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 위해 이미 개방된 국내 설계시장에도 국제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용산과 영종도, 세종시 등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국내외 설계사무소의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 추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글

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 건축설계산업이 위축되면서 기존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5년제 인증 건축교육을 이수한 젊은 인력들의 일자리 창출 또한 절실하다. 건축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현재 건축설계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② 토론 내용

이종정 대표는 현재 건축설계 업무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축사 수가 많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황은 건축설계산업의 시장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건설경기 또한 주거 패러다임의 변화 및 적정 수요지에 대한 포화 상태로 중소형 건설회사에서는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20년간 설계금액은 1/2로, 업무는 1/3로 떨어진 상황이다. 현재 건축사는 1만 800명, 2010년 건축허가 기준 1인당 13동, 3,700평을 설계했고 설계비는 6~7만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간 377명의 건축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지난 6년간 배출된 건축사가 그전에 30년간 배출한 건축사보다 많다. 건축사 수와 건축시장과의 관계를 따져보아야 하며 미국과 비교해 인구비례 상 건축사 4,000명 정도가 활동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심화된 경쟁 속에서 현재 영세 규모로 활동하고 있는 설계사무소의 경우 「건축사법」이 정한 적정 설계비 요율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설계를 수주하고 있다. 또한 설계사무소 규모의 대형화, 업무량의 양극화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IMF 이후 사회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대단위 아파트 공급 위주로 건축시장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중소 규모의 사무실이 일거리가 없고 사무실 규모를 키우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지적했다. 또 건축계의 '3무'라고 불리는 무한서비스, 무료서비스, 무대책 서비스를 이야기하며 직접설계비 이외에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건축설계 업무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축사 수가 많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전반에 걸친 불황은 현재 건축 설계 산업의 시장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또 건축계의 '3무'라고 불리는 무한서비스, 무료 서비스, 무대책 서비스를 이야기하며 직접 설계비 외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 했다.

이강호 대표는 건축설계시장의 양극화, 과다경쟁으로 인한 부실한 업무수행, 건축사의 질적인 문제, CM이나 감리 등 업역 침범, 건축사 간 갈등 심화 등 건축설계산업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건축계의 통일된 목소리로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등 건축 관련 단체들의 연합과 재능기부 등을 통한 대국민 건축 프로그램 운영·홍보 등 설계산업의 위상 정립을 위한 건축계의 대국민·대정부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존재나 역할에 대해서도 건축사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정부단체처럼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부성 교수는 우리나라 건축·도시 수준은 중진국 정도의 수준으로 소득수준의 향상 및 사회발전과 함께 사용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건축의 모습을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2주택 중과세 등 징벌적 과세 부분이 개선되어야 명품건축, 초고층건축 분야가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설계업무 범위와 대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설계자와 사용자 간 불신이 증대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건축사법」의 요격을 좀 더 엄격히 정의하고 대중들이 이를 믿고 따를 수 있게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지엽 교수는 건축은 기술적, 산업적, 문화적 측면이 총체적으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가 육성·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미약하고 한미 FTA로 인해 건축의 인적자원 측면에서 우리 건축문화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건축의 산업적 측면에서 진흥되어야 하며 건축을 기술, 산업, 문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 기술적 측면에만 치중되었던 문제점을 인지하고, 건축의 산업적 측면 강화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림 5-12 2012 건축·도시 정책토론회(2012년 4월 20일)

2) 제2차: 건축·도시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① 토론회 개요

일시	2012년 6월 21일
장소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주제발표1	국가주도 건축·도시 시범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염철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주제발표2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의 개선방향
	박인석(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토론자	김민수(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좌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김현선(김현선디자인연구소 대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권문성(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근오(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 과장)
	김형찬(부산광역시 도시경관담당관 과장)
	도창환(포항시청 시정건축가)
	장현경(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조경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② 토론회 추진 배경 및 내용

● 추진 배경

현재 관련된 주요 중앙부처와 민간 참여하에 노후 도심의 활성화,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 쾌적하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조성 등 지역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도시와 건축디자인 등에 관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은 사업 간 연계 및 차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업들의 성과와 진단을 공유하고 지방 경제의 자생력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와 건축·도시 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하에 각 부처별 시범사업들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건축·도시환경 정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토론 내용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건축·도시 공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들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고 사업 간 차별성 확보와 역할분담 및 연계 등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며 지역특성 반영과 지역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공공주도의 공간환경 관리가 현실에서 과연 유효한가에 대해, 현재의 공모사업 방식이 진정한 거버넌스(Governance)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현선디자인연구소 대표이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건축가 김현선은 실무자 입장에서 사업 프로세스 상 행정절차의 경직성, 설계와 시공의 단절에 따른 디자인 질 저하 등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MP 경험자인 건축가 권문성, 조경진은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공공 주도의 공간환경 관리가 현실에서 과연 유효한가에 대해, 현재의 공모사업 방식이 진정한 거버넌스(Governance)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 이현상 사무관과 농림부 장현경 사무관은 각자 진행중인 공모사업을 소개하면서 사업 진행 시 관련부처 사업 사이의 차별성 확보와 협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부산시 김형찬 과장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지자체에 미치는 순기능과 함께 지자체 자율성 부족, 예산의 경직성 등 사업을 진행할 때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했다. 포항시의 시정건축가 도창환은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디자인팀(테라노바팀)의 역할과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개선점은 물론이고 최근 5년간 여러 공모사업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리 도시와 건축에 기여한 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

3) 제3차: 우리의 건축전문교육, 이대로 좋은가

① 토론회 개요

일시	2012년 8월 30일
장소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주제발표1	5년제 건축전문교육, 그 성과와 한계
	배시화(가천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주제발표2	국내 건축전문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
	이명식(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토론자	제해성(아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좌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유길준(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강호(㈜에시트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근창(㈜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정면(㈜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이정형(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최재필(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② 토론회 추진 배경 및 내용

● 추진 배경

국내에 5년제 건축전문학위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1996년 UIA 바르셀로나 총회에서 건축실무의 전문성에 대한 국제장려 기준인 UIA 협정 안이 마련됐고, 한국은 2002년 학제를 개편했다. 2012년 7월 현재 72개 학교가 5년제를 운영 중이다. 또한 5년제 커리큘럼의 교육품질을 관리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건축학 인증제도는 2006년부터 시작돼 현재 33개 학교가 실시하고 있다. 교육의 체계화를 갖추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인증평가 항목에만 초점을 둔 경직된 교육시스템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현 시점에서 국내외 경쟁력 향상과 교육과 실무를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0년을 넘긴 건축교육이 현재 바른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5년제 건축전문학위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교육의 체계화를 갖추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인증평가 항목에만 초점을 둔 경직된 교육시스템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현 시점에서 국내외 경쟁력 향상과 교육과 실무를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토론 내용

정책토론회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급변하는 건축·도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설계사무소를 대표해 이정면(범건축 대표) 국건위 위원은 "전문학위제도의 도입으로 신입사원들의 업무능력이 좋아졌다"고 평했다. 그는 "학제가 5년제든 학사+건축전문대학원(4+2)이든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인증제도는 필수적이나, 비인증과정도 만들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축공학의 분리로 공학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설계에 초점을 맞춘 공학교육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정형(중앙대학교 교수) 국건위 위원은 인증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건축사 취득을 전제로 5년간 꽉 짜인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인증받는데 이는 너무 엄격하다"며 "미래의 건축사 10~20%를 위해 나머지 80~90% 학생들이 수업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현실과 사회의 수요공급에 맞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인 인증요건만 만족하면 학생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고, 학교 특성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필 서울대학교 교수는 "학제의 다양화가 오늘의 대결론"이라며 "학생 개인이 전문학위제도를 포기하고 4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병행트랙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인증(현재는 프로그램인증체계로 학교 단위로 심사를 받음)에 대해서는 "해외의 경우 개인인증은 준비하고 관리해야 하는 서류와 포트폴리오가 엄청나다"며 "따라서 국내 사정상 프로그램단위의 인증제도가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토론회는 '학제의 다양화, 건축전문학위제도의 유연화'를 최종적인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산업 전반이 침체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경쟁력을 더해주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자리는 건축교육 정책·제도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고 앞으로 심도 있는 실천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이다.

4) 제4차: 2013, 우리의 건축정책을 말하다

① 토론회 개요

일시	2012년 12월 5일
장소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주제발표1	건축정책의 성과와 과제(조상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주제발표2	건축도시 분야의 국정과제(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토론자	이상정 위원장(좌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해성 소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길병우 과장, 김근오 과장, 정태화 과장(이상 국토부), 백운수 대표(미래E&D), 온영태 교수(경희대학교), 윤혁경 대표(ANU디자인그룹), 이정형 교수(중앙대), 최막중 교수(서울대), 함임선 대표(선진엔지니어링), 김동호 부단장, 박병석 과장, 김용태 과장(이상 국건위), 유광흠 연구위원, 조상규 부연구위원, 이상민 부연구위원, 염철호 부연구위원, 김어진 연구원(이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② 토론회 추진 배경 및 내용

● 추진 배경

「건축기본법」의 취지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대한 통합적 개선 및 공공성 증진과 더불어 건축문화 진흥,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 향상에 있다.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을 살펴보면, 전담부서 및 집행조직 강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급변하는 '인구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정책이 보강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보편적 복지로서의







그림 5-13
제4차 토론회 진행 장면(2012년 12월 5일)

공간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국민이 행복한 건축도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건축정책의 목표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건축을 위한 건축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건축정책' 그리고 이를 위한 위원회의 역할수행과 전문가 집단, 정부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③ 주요 토론 내용

● 주요 발표 내용

• 건축·도시·정책의 방향 제시

먼저 건축정책의 정체성 확보가 필요하다. 즉 건축, 도시 부문에 공공개입의 당위성 모색이 필요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는 곧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또한 주변의 공간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건축정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까지 수립된 건축정책의 실행이 어려운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시급하다. 건축정책 수립 시에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규제 중심의 법제도를 개선하며 당연하게 여겨지는 건축 프로세스의 재디자인이 중요하다.

• 주요 정책방향(안)에 대한 추진과제 제안

● 토론 내용

먼저 이정형(중앙대학교 교수) 국건위 위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복지 차원의 건축·도시·정책 구현이 필요하며 이제까지의 정책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이어 길병우(국토부, 도시재생과) 과장은 '건축도시를 포괄하는 정책 어젠다로 도시와 농촌, 전선지중화정책, 인구사회변화 대응'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정책 반영 사안으로는 건축물의 기능적 측면, 문화·디자인 측면, 경제적 측면의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오(국토부 건축문화경관팀) 팀장은 '일상에서 체감할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건축도시 차원을 넘은 타당성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동호 국건위 부단장은 '건축정책은 주변의

표 5-1 국민이 행복한 건축도시 정책



공간정책과 함께 제시되어야 효과적'이며, 정책실현을 위한 예산과 제도를 뒷받침하여 편리, 안전, 쾌적의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박인석 명지대학교 교수는 실행방안으로 공공부문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혁, 설계경기 심사방식 개혁, 공공기관의 건축설계 발주 관리능력 강화, 도시공간 설계 기능·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주장했다.

3. 성과 및 의의

건축·도시 정책 토론회는 그간 공식적인 담론화의 부재로 개인적 의견 개진에 머물러 왔던 건축·도시 분야의 여러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더 심층적인 상황 및 문제 분석과 대안 제시라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와 국내 건축설계시장 개방으로 인해 위축 받은 건축사들의 입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는 곧 각 지역의 역량강화로 이어져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4차 토론회의 주요 성과는 차기정권의 국정과제와 건축정책의 아젠다로 '국민행복 공간정책'을, 그 중 생활, 복지, 문화 공간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각각 생활공간의 질 향상, 다양한 공간수요 대응, 건축문화 향상으로 이어지는 실천방안과 함께 상생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건축정책을 병행하여 제시함으로써 차기정부의 건축·도시 분야의 국정과제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점에 있다.

제3절
건축문화 행사 내실화

1. 추진 배경

그동안 대부분의 건축문화행사는 건축의 날,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한민국건축대전, 대한민국건축문화제, 한국건축산업대전, 농어촌건축대전 등을 부처, 단체, 지자체별로 개최해왔다. 하지만 행사내용은 시상 및 전시회 등의 단순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대중문화 속의 건축문화 실현을 위해 각종 행사를 연계하고 참여프로그램 도입 강화 등을 통해 행사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부처·단체별로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대한민국 건축문화 한마당(가칭)' 기간에 집중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건축의 대중화를 위해 국민·전문가가 함께하는 건축문화 체험행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부처·단체별로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대한민국 건축문화 한마당(가칭)' 기간에 집중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건축의 대중화를 위해 국민·전문가가 함께하는 건축문화 체험행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2. 주요 내용

건축문화 행사 내실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문화행사 활성화 관련 제1차 간담회 개최
2011년 4월 국건위 회의실에서 건축문화행사 활성화 방안을 안건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국건위, 국토부, 문체부, 건축관련 4단체, 서울시, 경기도가 참석했다. 회의 결과는 첫 번째, 매년 10월을 '건축의 달'로 정해 개별 건축문화행사를 연계하고, 두 번째, FIKA(한국건축단체연합)에서 행사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다른 정부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세 번째,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의 대표적인 건축문화행사를 통합·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건위 기획단은 '올해의 건축상' 제도를 마련하여 매년 건축문화행사 수상작 가운데 국건위 차원에서 최우수 건축물을 선정 시상하고 VIP를 대상으로 하는 투어 등을 기획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상 등에 훈장, 포장 등을 확보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2) 건축문화행사 활성화 관련 실무진 회의 개최
건축문화행사 활성화 관련 간담회 이후 2011년 4월에 국건위 주재로 건축가협회와 건축사협회 실무진들과 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적인 건축문화행사인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한국건축문화대상' 사이에 연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건축문화행사 통합운영은 주최기관 및 행사지역이 다르고 일정확정이 어려운 이유로 통합운영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10월을 건축의 달로 지정하고 10월 4일을 건축의 날로 추진하기로 협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내실 있는 건축문화행사 운영을 위하여 FIKA 차원에서 공동포스터 제작,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홍보강화,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3) 2011년 건축문화 연계행사 추진 무산
건축 관련 단체와 정부부처 등과 함께 2차례의 회의를 통해 건축문화행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10월을 건축의 달로 지정하고 10월 4일을 건축의 날로 추진하는 것이 결정되었으나, 그 외 다른 행사들이 1년 전부터 사전에 장소와 날짜 등이 확정되어 있는 관계로 2011년 건축문화행사를 연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축문화행사 연계 추진을 2012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4) '건축문화행사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 회의 개최
2011년 12월 국건위 기획단 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건축문화행사 내실화 및 활성화'를 주제로 관련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부처·단체별로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건축문화행사를 '건축의 날'인 2012년 10월 8일을 중심으로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대한민국 건축문화 한마당(가칭)' 기간에 집중적으로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2012 건축문화행사는 국토해양부의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한건축학회의 건축의 날, 학생작품전, 디지털 건축대전, 대한건축사협회의 한국건축문화대상,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한국건축산업대전, 전국건축사대회, 한국건축가협회의 대한민국건축문화제, 한국건축가학교, 대한민국건축대전, 새건축사협의회의 한국현대건축 아시아(한·일 교류전), 젊은 건축가 지원사업 등이 해당된다. 또한 한국농어촌건축대전이 '(가칭)대한민국 건축문화 한마당' 기간에 개최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행사 준비를 위해 앞으로 '건축문화 행사 내실화 및 활성화' T/F를 구성·운영하고, 2017 UIA 개최와 연계하여 매년 주요 행사주제 설정 및 다양한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5) '건축문화행사 내실화 및 활성화' 추진단(T/F) 제1차 회의

2012년 1월 국건위 기획단 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서울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에서 참석하여 단체별로 개최되는 건축문화행사를 2012년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개최하기로 원칙 합의(건축5단체장 조찬간담회, 2012년 1월 18일)한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매년 10월 건축문화행사 기간에 집중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한국여성건축가협회의 30주년 기념식·전시회 개최 등 일정 미정인 행사는 '건축의 날(10월 초로 조정)'과 연계하여 행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건축문화행사 내실화 및 활성화' 추진단(T/F) 회의를 정례화하고 차기 회의 시 '건축의 날' 일정 확정 후, 국건위 및 관련부처·단체에 공지(학회)하고 각 단체별 행사일정 및 행사추진계획을 작성하며, 2017년 UIA 개최와 연계하기 위해 건축의 날, 서울시 건축문화제 등에서 개최선포식과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6) '건축문화행사 내실화 및 활성화' 추진단(T/F) 제2차 회의

2012년 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 회의실에서 제2차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2012 '건축의 날' 개최일정을 2012년 10월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이후 2012년 10월 8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변경)으로 확정하고 주요 프로그램으로 기념식 및 표창, 전시회, 강연, 리셉션 등의 추진과 FIKA 정책위원회에서 '건축의 날' 행사 준비·추진 할 것을 FIKA에서 보고했다. 또한 2012년 3월에 UIA 준비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다른 단체에서는 제1차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0일 건축의 날을 중심으로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건축문화행사를 집중해서 개최하고 2013년 이후에는 '세계 건축의 날(10월 첫째주 월요일)'을 '건축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10월에 건축문화행사를 집중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2017년 UIA 개최 연계와 관련해서 행사개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건축문화 아이콘 개발 연구기획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수행한 이후, 건교평 연구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되었다. 기타 사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한국농어촌건축대전'도 건축문화행사 내실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10월 10일 건축의 날을 중심으로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건축문화행사를 집중해서 개최하고 2013년 이후에는 '세계 건축의 날(10월 첫째주 월요일)'을 '건축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10월에 건축문화행사를 집중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7) 2012 건축의 날 추진위원회 전체회의

2012년 3월부터 2012 건축의 날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를대한건축학회 건축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총 6차에 걸쳐 가졌다.

추진위원회는 주최기관인 FIKA와 2012년 건축의 날을 주관하는 대한건축학회를 중심으로 행사를 준비하였으며, 정부에서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문화관광체육부 등이 참여하여 행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검토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2012년 건축의 날 주요 행사계획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을 만들고 '건축의 날 포스터 공모'와 '건축인 걷기한마당', '우수건축물 전시회' 등 행사를 준비하였으며, 프로그램 기획을 명확하게 하고 주어진 예산에서 차별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포스터 공모전에는 52명이 접수한 가운데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건축의 날 포스터를 제작하였으며, 건축인 걷기한마당은 서울시 걷기연맹의 협조하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으로, 처음 청계광장을 출발점으로 하여 청계천을 걷는 행사로 기획하였으나 서울시와 행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남산 국립극장 문화광장을 출발점으로 하는 걷기코스를 선정하게 되었다. 우수건축물 전시회와 관련해서는 8개 지회로부터 접수받은 작품 중 20여 개를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건축의 날 지원과 관련해 국건위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그 밖에 대한건축학회 자원봉사 학생기자단(29명)과 대한건축학회 합창단(58명)이 발족되어 건축의 날 행사에 참여·봉사하고 공연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홍보와 관련해서는 국가건축정

책위원회에서 서울시 각 구청의 협조를 통해 해당 구청에서 전광판 및 광고판을 이용하여 '건축의 날'과 '건축인 걷기한마당'에 대해 홍보하여 건축인과 일반인들이 행사에 대한 취지와 일정 등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8) 정부 포상 훈격 격상 추진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11년 12월 행정안전부의 2012년 훈·포장 수요 파악 시에 '건축의 날'에 훈·포장이 수여될 수 있도록 수요제출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 건축이 문화예술의 한 부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건축문화 창달을 통한 건축의 위상 정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건축의 날'에 정부 차원의 포상을 추진했다. 종전 산업생산 실적 위주의 유공자 포상에서 건축의 문화·기술적 측면의 창의성과 문화가치 중요성에 부응하는 정부포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앞으로도 건축인의 사기와 자긍심을 증진시켜 우수한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건축문화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정부차원의 육성·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건축의 날'의 정부 포상은 국가기여도, 행사 규모, 종사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유사산업 포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창 규모가 빈약해 다른 유사 기념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축 유공자에 대한 포상 훈격을 상향하고자 했다. 이에 현재 대통령 3점, 총리 3점에서 훈장 3점, 포장 4점, 대통령 7점, 총리 8점으로 확대할 것을 추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와 훈장 1점, 대통령 3점, 총리 3점으로 협의되었다.

'건축의 날'의 정부 포상은 국가기여도, 행사규모, 종사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유사산업 포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창규모가 빈약해 다른 유사 기념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축 유공자에 대한 포상 훈격을 상향하고자 했다.

건축 분야에 대한 정부 포상 훈격 격상은 민간 차원에서 관련단체가 합동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범 사례를 보여 주었고, 건축의 날 행사를 건축주간의 핵심적 행사로 추진하여 관련 행사의 실효성을 도모하였다. 무엇보다도 종전 산업생산 실적 위주의 유공자 포상에서 건축의 문화·기술적 가치와 중요성에 부응할 수 있는 유공자 포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2012 건축의 날

지금은 전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국제화 흐름 속에서 건축의 정체성과 독특한 건축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고 미래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제시가 필요할 때다. 이에 창의적인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인의 위상제고에 기여하고자 우리 민족의 자존과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역사적 건축물인 경복궁의 창건일(9월 25일)을 '건축의 날' 기념일로 택하여 제정하게 되었다. '건축의 날' 행사는 건축인 선서를 통하여 건축의 공공성과 문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물론, 전체 건축인 스스로 건축전문가로서의 확고한 윤리의식과 자부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책임감을 일깨우는 선언의 장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산업발전에 공헌한 건축인의 공로와 업적의 치하를 통하여 건축이 지속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우수한 건축문화의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림 5-14 2012년 건축의 날 기념행사

1) 건축인 걷기한마당

FIKA가 건축인들의 화합 및 단결을 도모하고 건축인의 위상제고를 위해 건축의 날 식전 행사로 '건축인 걷기한마당'을 개최하며 건축계를 하나로 묶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본 행사는 2012년 10월 6일 오전 8시부터 남산 국립극장 문화광장에서 개최됐다. 올해 제8회를 맞이하는 2012 건축의 날 식전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건축인 걷기한마당에서는 건축인뿐만 아니라 건축 관련 종사자, 가족,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선착순 2,500명이 접



그림 5-15 2012년 건축인 걷기한마당

수했다. 걷기대회 후에는 축하공연과 함께 기념품증정, 다양한 경품 추첨 행사도 개최됐다. 행사를 주관하는 대한건축학회 측은 "이번 걷기한마당 코스인 6㎞는 만보에 해당하는 거리"라며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루 6~7㎞ 걷기를 권장하는 만큼, 운동이나 대회라기보다는 건축인들이 함께 걸으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FIKA가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가 주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2) 건축의 날

2012년 건축의 날 행사는 10월 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고, 한국건축단체연합이 주최, 대한건축학회가 주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기념식, 시상식, 강연, 작품전시회, 리셉션 등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특히 이번 행사는 건축문화행사로 타행사와 연계하여 정·관계인사, 건축사, 대학교수, 건축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건축산업이 명실상부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앞으로 건축물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거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초점을 두고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로상 시상식에서는 이문보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받아 건축의 날 최초의 통탑산업 훈장을 수상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박승 회장과 권연하 우림에이앤시 대표 등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손인석 GS건설 부사장은 건설사 관계자 중 유일하게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건축의 날의 목적은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및 미래건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건축의 공공성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고, 건축 관련 문화행사를 통합 개최하여 산·학·관 등 모든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책임의식을 고취하는데 있다.

건축의 날의 목적은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및 미래건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건축의 공공성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고, 건축 관련 문화행사를 통합 개최하여 산·학·관 등 모든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데 있다.

3. 기타 추진 행사

2012년은 건축 관련 단체의 기존 행사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신한 주제를 발굴하여 중점기획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다양한 건축문화행사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건축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1) 2012 한국건축산업대전

대한건축사협회의 2012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은 더 나은 건축을 위하여, 그린 네크워크(Green Network)를 주제로 건축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 건축전문가들 간의 건축산업네트워크 구축, 친환경 건축문화산업의 기술력 강화 및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2년에는 한국건축문화대상, GREEN CITY WEEK 등과 연계하여 2012년 10월 23일(화)~10월 26일(금),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수건축물을 발굴하여 시상 및 전시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건축시상 제도로 국토해양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역사의 그릇'인 우수 건축물을 발굴, 이 시대의 표상으로 삼아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인간이 중시된 건축물과 그 주역을 찾아 격려함으로써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나아가 건축저변 확대와 우수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 2012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대한건축학회에서는 2012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2012년 10월 25일

(토)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개최하였으며 9개 발표장에서 총 186편의 논문 발표와 논문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회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규준 개정(안) 공청회', '2012 학생작품전', '2012년 한국연구재단 공학분야 기초연구사업 지원현황 및 평가제도 소개를 위한 간담회', '제3회 정기이사회'와 외부단체 행사 등이 동시에 개최되었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규준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건축학 전문학위 운영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국제적 동향과 국내 사회의 변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개정 예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규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인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를 유도하고자 했다.

2012 학생작품전은 전국대학 건축 관련 대학의 추천을 받은 학부 졸업예정자 및 대학원생의 우수작품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및 대한건축학회장상을 수여했다. 우수작품은 학생작품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각 대학 건축설계교육에 대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했고 패널전시를 통해 홍보되었다. 이번 학생작품전은 총 46편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출품작 중 대상과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대한건축학회 학생작품전 2012 수상작품'으로 출판되고 대한건축학회 학회지 「건축(建築)」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3) 2012 대한민국건축문화제

건축가협회에서는 10월 19일 금요일 대전엑스포 시민광장에서 '2012 대



그림 5-16 2012 건축창의체험행사 모습



그림 5-17 2012 건축창의체험탐방

한민국건축문화제'를 개최했다. 행사기간에는 선정된 공간들의 사진, 영상물, 모형을 전시하여 일반시민에게도 공개하여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갖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제7회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도 함께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자동차와 부동산'들이 점유한 우리들의 잃어버린 공간을 '사람과 문화'가 주인이 되는 공간 문화로 창출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제정하였으며, 주민들이 쾌적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한 단체와 지자체에 본상을 수여했다.

4)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창립 30주년 행사

한국여성건축가협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10월 15일에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 및 초청강연, 작품전시회, 30주년 기념 책자발간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주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의회가 후원했다.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개최하는 공모전으로 미래 여성건축가의 발굴 및 기성 여성건축가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목적으로 '여학생 건축공모전'에 응모한 우수작품들에 대한



그림 5-18 시민건축대학

시상도 함께 있었다.

여성건축가협회는 여성건축가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국제교류를 통한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2년 20여 명의 회원으로 출발했고 2012년 10월 현재 400여 명으로 성장하여 괄목할 만한 여성전문단체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10년에는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주관으로 '2010 세계여성건축가 서울대회(2010 UIFA SEOUL)'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한국여성 건축가들의 국제교류활동 활성화와 능력증진의 장을 마련하여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5) 2012년 제7회 한국농어촌건축대전

7회를 맞은 2012 한국농어촌건축대전은 10월 15일에 과천정부청사에서 '오감(五感)으로 표현하는 감성농어촌'이라는 주제로 '제6회 농어촌경관 사진 공모전 전시'와 함께 개최되었다. '한국농어촌건축대전'은 농어촌지역의 활성화와 정체성 회복을 위한 건축적 대안 마련을 위해 '지역유산을 활용한 마을만들기'라는 주제로 유·무형의 농어촌 지역 유산을 활용한 작품을 공모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건축부문'과 기성건축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준공건축부문', '초대작가부문'을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전문가들이 농어촌 건축문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건축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한국농어촌건축대전'은 농어촌지역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어촌 마을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

4. 기대 효과

2012년 건축문화행사는 최근 전 세계적인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건축문화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우리의 경제 규모와 위상에 걸맞으면서도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적 정체성을 갖는 건축문화에 촛점을 맞추고 공공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우리 경제 규모와 위상에 걸맞는 건축 브랜드의 확립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건축문화계의 결속과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공적을 치하하고 대외적으로는 건축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건축설계 분야가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5-19 쿱힘멜블라우특별전

제4절
해피하우스: 단독주택지 관리 서비스 사업 활성화

1. 추진 배경

우리의 주거문화는 지난 50년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비약적으로 개선되었고, 주거문화 역시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의 주거의 양적 확대와 개발의 효율성 추구로 인해 주거의 절대적 부족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도시환경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아파트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주거문화 깊숙이 자리한 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풍경이다. 게다가 내용적으로도 기존 커뮤니티의 와해, 소득계층 간 위화감 심화 등이 제기되는 등 거주민의 일상생활까지 감싸 안을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

'해피하우스' 정책은 단독·다세대주택 등 기존주택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편리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효율 개선, 관리비용 절감, 생활환경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최근 대도시뿐 아니라 점차 시골까지 확산되고 있는 우리의 아파트 문화에 대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내외부의 비판과 반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회복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만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위원회는 출범 이후 건축정책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를 주거문화 개혁에 두고 '뉴하우징운동(New Housing Movement)' 정책을 추진했다.

뉴하우징운동은 다양한 주거 수요, 커뮤니티 회복, 에너지 저감 등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고, 공간·문화·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민간·주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민참여적인 양방향 운동이다. 뉴하우징운동의 중점추진과제는 '해피하우스', '디자인 보금자리', '뉴타운 2.0' 등이며, 현재 관련 부처와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추진하고 있다.

'해피하우스' 정책은 아파트 위주의 대규모 개발과 정비방식에서 탈피하고, 양호한 단독주택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보존하는 '친서민 생활공감' 정책이다. 현재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거편의성과 주변 인프라와 공공공간의 부족, 보안에 대한 불안감, 개별 유지관리 부담 등으로 선호도가 낮아 그 비중이 급감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경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신축건축물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기존 주택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피하우스' 정책은 단독·다세대주택 등 기존주택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편리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효율 개선, 관리비용 절감, 생활환경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2. 추진 경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 30일 제1차 대통령 보고회에서 '뉴하우징운동'의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해피하우스'를 보고했다. 국토해양부 주관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자체 공모를 통해 2010년 2월부터 지역별로 센터 개소식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주요한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2 해피하우스: 단독주택지 관리 서비스 사업 활성화 주요추진사항

일시	주요 추진사항
2009년 3월 30일	위원회, '뉴하우징 운동' 추진방안 대통령 보고
2009년 5월-9월	관계기관 협의
2009년 10월 30일	국토부, 시범지역 공모·선정
2010년 1월	공공기관의 경영연구원, 해피하우스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완료
2010년 2월 10일	제1차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010년 2월-3월	2010년 시범사업 추진 및 센터 개소 전주 덕진(2010년 2월 2일), 대구 서구(2010년 2월 24일) 서울 마포(2010년 3월 11일) 개소식 개최
2010년 3월 4일	전주시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해피하우스 사업에 지역 대학 등을 참여시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전주시)
2010년 4월 12일	업무처리지침 시달
2010년 7월 9일	서비스 지원범위 및 사업지역 확대
2010년 10월 29일-30일	제2차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010년 12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시범사업 개선 및 제도화 방안 마련
2011년 1월	2011년 시범사업 추진방안 수립 및 협의
2011년 12월	2011년 시범사업 종료
2012년 8월	시범사업 종료에 따라 단독주택지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지원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함 초기에는 주택법에 관련 사항 반영을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건축법에 주택의 유지관리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를 위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국회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2012년 8월 현재)

3. 주요 내용

1) 시범사업 공모 및 추진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9년 9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달 동안 공모를 진행했다.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지평가를 정밀하게 거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대상지 평가기준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특성과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계층 특성, 지자체 장의 의지 등 세부 항목을 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대상지 평가기준은 단독 주택 밀집지역의 특성과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계층 특성, 지자체 장의 의지 등 세부 항목을 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1차 서면 평가는 사업 대상지 내 단독주택 비율, 거주자 유형, 단체장 의지, 광역지자체 지원, 주민 참여도, 기존사업과 연계가능성 및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2차 현지평가는 현지실사를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범사업 후보지의 적합도, 담당직원의 사업이해도 및 적극성, 지역사회 협력체계 등이 중점적인 평가 항목이었다.

공모결과 12개 지자체에서 응모해 1차 서류평가에서는 2배수인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2차 현지평가에서는 심사단의 현장방문과 PT, 질의응답을 통해 대상지의 잠재력과 지자체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종적으로 1차, 2차 평가를 토대로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주시 인후2동, 서울 성산1동, 대구 평리3동 3개 지구를 선정했다. 대상지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그림 5-20 전주 인후2동 해피하우스센터 개소식

인후2동은 1980년대 육지구 개발에 따른 백제로변 공공기관단체 밀집지역이므로 북쪽에는 건지산이 위치하여 주거지역으로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주변으로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등 7개 학교가 위치해 교육환경 중심지이며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일반 단독주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수는 총 3,600여 동으로, 단독주택(72%)과 자가 거주(86%)가 많으며, 기초생활수급자 406세대(823명)가 거주하고 있다. 해피하우스센터는 사업구역 내 주민센터에 설치됐다. 시범사업 대상은 해당 지역 총 5,659세대 중 백제로 부근 880여 세대이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1동



그림 5-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1동 해피하우스센터 개소식

성산1동은 상암 서울월드컵 경기장 인접지역으로 성산로와 지하철 6호선이 지나는 합정로 등 교통 요충지역으로서 안정된 주거중심지역을 형성하여 주민 생활여건 및 수준이 양호하다. 성미산 녹지공간이 형성되어 쾌적하고 자연친화적 환경을 갖춘 서울의 관문지역이다. 총 3,700여 동으로 단독·다가구가 밀집(90%)돼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림 5-22 대구 서구 해피하우스센터 개소식

171세대(272명)가 거주하고 있다. 해피하우스센터는 사업구역 내 위치한 구 마포구청사 5층 빈 공간을 활용해 설치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해당 지역 총 6,375세대 중 서남부지역 1,100여 세대다.

③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이 지역은 서구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동쪽으로 평리1동, 서쪽으로 평리5동과 6동, 남쪽으로 평리 4동, 북쪽으로 비산1동과 인접하고 있으며, 서구청, 서부경찰서, 서부 도서관 등 관공서와 정평리초.중학교, 대평중, 서부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소재 하고 있는 지역이다. 총 290여 동으로 대부분이 단독주택이며(90%), 세입자 비중이 높고(60%), 기초생활수급자 83세대(147명)가 거주하고 있다. 센터는 사업구역 내 사무실을 대여해 설치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해당 지역 총 6,264세대 중 미산공원 일대의 800여 세대이다.

2) 시범사업 사업 내용 및 성과

'해피하우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주택에너지 효율개선과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별로 주거복지와 마을가꾸기 사업을 연계해 운영했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피하우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과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별로 주거 복지와 마을가꾸기 사업을 연계해 운영했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❶ 주택에너지 효율서비스
❷ 주택 유지관리서비스
❸ 주거복지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연계
❹ 해피하우스사업의 총괄 지원
❺ 해피하우스센터

① 주택에너지 효율서비스

단독주택의 낮은 단열수준과 창호 성능을 고려하여 적외선 화상시스템 등을 활용한 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분석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열재 보강, 창호 개선 등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에너지 패트롤제를 운영했다.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으로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 지원사업, 한전의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과 연계했다.

② 주택 유지관리서비스

누수, 누전 등 긴급서비스를 포함하여 간단한 수리 업무, 개보수, 유지관리 서비스 정보제공 등을 지원했다. 방수, 단열 등 큰 비용이 수반되는 개보수 작업은 컨설팅을 통해 지역에 등록된 전문업체를 연결해 주고 지역업체가 주민과 직접 계약을 통한 작업수행을 지원했다.



그림 5-23 해피하우스 개보수 사례: 전주

③ 주거복지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연계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운동을 비롯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폐·공가 철거사업 등을 연계했다.

④ 해피하우스사업의 총괄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전주센터의 경우 희망근로자와 일부 자원봉사자를 서비스 지원인력으로 활용했다. 해피하우스센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서비스 사업자 등록에 관한 심사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해피하우스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했다. 접수된 서비스 내용에 따라 지원방안을 결정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에 파견된 다기능 기술자가 서비스 신청 대상 주택을 방문하여 기술을 제공하고, 주택 유지보수 관련 상담서비스도 병행했다.

⑤ 해피하우스센터

표 5-3 해피하우스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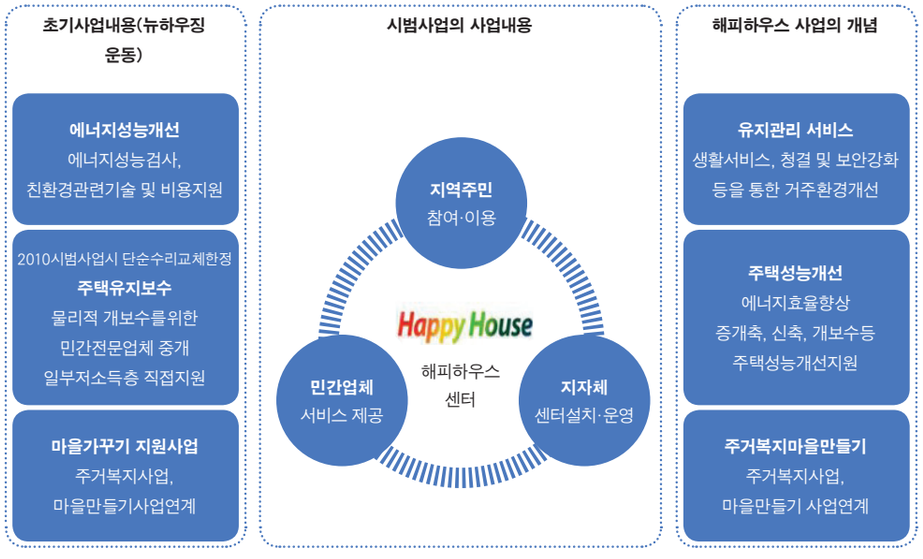


표 5-4 2010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사업추진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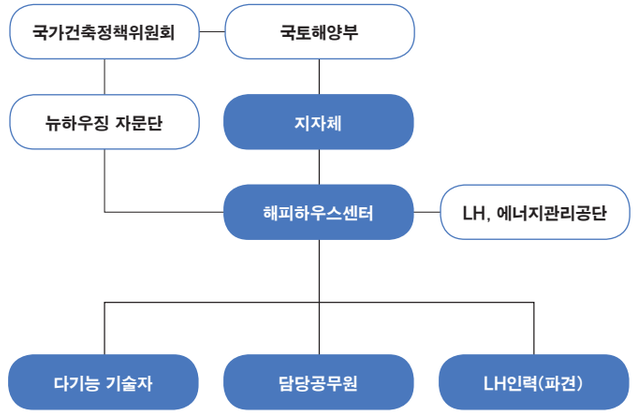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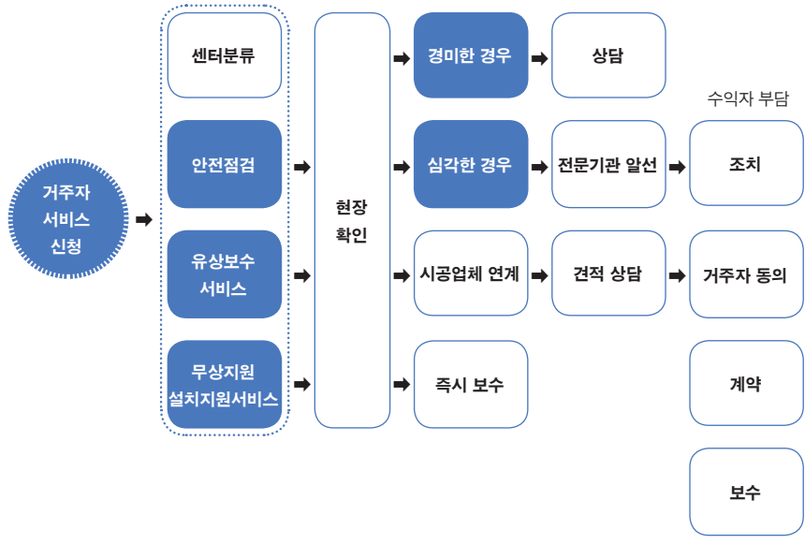


표 5-5 해피하우스 서비스 전달체계



센터 개소 이후 주민 홍보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받아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실적이 미흡했다.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0년 7월부터는 사업대상지역과 무상지원 대상을 일반가구까지 확대 적용했다. 사업대상지역은 해당 동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고 잠재 빈곤층과 비수급 빈곤층으로 구성된 차상위 계층에 재료비 10만 원은 무상으로 지원하였으며, 전주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하여 일반가구까지 무상지원을 확대했다. 무상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지원항목도 추가하여 주택 상태, 지역 여건, 예산 등을 감안하여 해당센터에서 결정하도록 유도했다.

표 5-6 서비스 신청 세대수

구분	서울 성산1동	대구 평리3동	전주 인후2동	계
대상 호수	6,375	6,264	5,659	18,298
신청 세대수	899	829	1,622	3,350

2010년 10월에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서비스 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공동구매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10가지 항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방침을 정해 시범 운용했다. 각 센터별 시범사업의 서비스 추진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행정주도의 사업추진과 간단한 수리지원 서비스에 국한되어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했다. 또한 해피하우스센터의 설립 및 추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 확보·지원 또한 미흡했다.

표 5-7 서비스 항목별 추진실적(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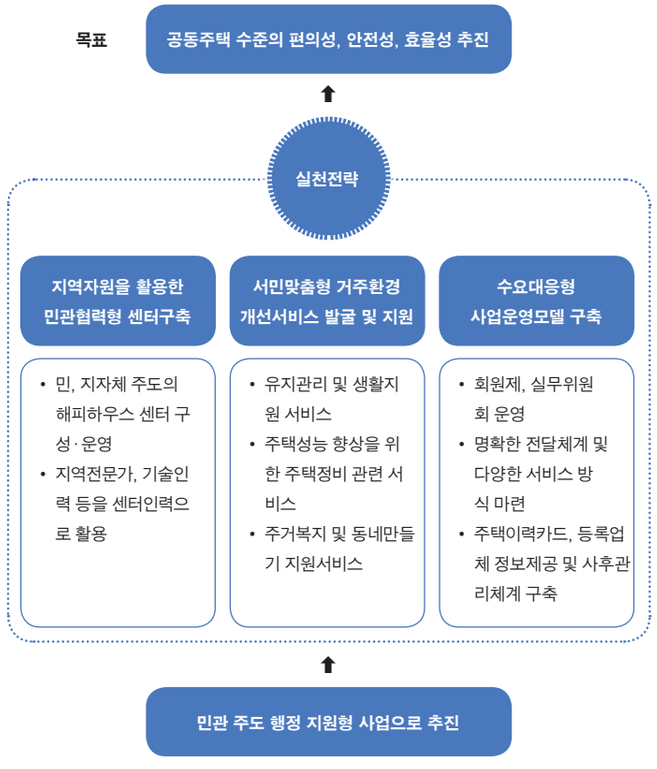
서비스 항목		성산1동	평리3동	인후2동	계
유지보수 서비스	긴급보수(지붕, 옥상 등 누수)	0	48	3	51
	간단한 수리지원(부속품 교체)	430	329	721	1,480
	주택 개·보수 컨설팅(사업자 연계)	23	39	73	135
	주택안전점검	0	19	0	19
	기타 위생설비시설 보수	48	51	129	228
	유지보수 기술 상담	649	619	868	2,136
	소계	1,150	1,105	1,784	4,049
에너지 효율개선 서비스	에너지 성능개선 컨설팅	5	3	5	13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지원(센터)	0	63	315	378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지원(한전)	71	17	80	168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0	0	0	0
	소계	76	83	400	559
주거복지	주거복지상담 및 지자체 연계사업	0	0	598	598
합계		1,226	1,188	2,792	5,206

3) 시범사업 개선 및 제도화 방안

단독주택지의 종합적인 주거지원 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행정주도의 사업추진과 간단한 수리지원 서비스에 국한되어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했다. 또한 해피하우스센터의 설립 및 추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 확보·지원 또한 미흡했다. 이에 따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개선 및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단독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한 거주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서비스를 통한 편리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아파트단지에 비해 낮은 성능 수준인 단독주택에 편리성, 안전성, 효율성 확보를 통해 종합적인 주거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것은 공공주도 사업에서 민간주도 및 행정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이 지역 차원의 자생적 동네 만들기 사업으로 정착·확대되고, 거주자와 지역에 근거를 둔 자생적인 민간조직, 주택관련 서비스 업체가 상호 소통과 협

표 5-8 해피하우스 서비스 전달체계



력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 단독주택 관리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했다. 2012년 12월, 「건축법」 개정을 통하여 단독주택관리기구 설치(법 제35조의 2항)에 관한 내용을 추진 중에 있다.

4. 성과 및 의의

LH는 단독주택에 대한 아파트 수준의 편리한 에너지성능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 서비스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도에 3개 시범사업을 완료했고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호당 평균 2.6건, 시행건수 3,993건(대구〉서울〉전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주택의 관리서비스 질 향상과 에너지 성능향상, 안전한 주거지 조성을 통해 기존 단독주택을 살기 좋고, 살기 편한 거주환경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잠재적 가치인 장소성과 역사성을 유지하면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해피하우스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역량을 결집해 자발적인 주거지 관리가 되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센터를 중심으로 주택의 물리적 성능개선뿐 아니라 에너지 소모에 대한 거주자의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건강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동네 만들기를 실현하는 녹색커뮤니티 운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해피하우스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주거문화를 개선하여 단독 주택지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주거양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독주택지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지원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초기에는 「주택법」에 관련 사항 반영을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건축법」에 주택의 유지관리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를 위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전주의 경우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서 전주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등 시범사업 이후에도 단독주택 관리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제5절
도심 저층주거지 근린재생



그림 5-24 서울시 중계동 백사마을, 사진 정광식

1. 추진 배경

오랫동안 존재해온 도시의 공간조직은 문화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도시 형태이다. 단순히 물리적인 형상으로서의 가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거주민들의 다양한 삶과, 지역의 경제체제가 스며들어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이미지를 공유하여 공통된 기억이 존재하는 장소이다. 이러한 도시조직이 파괴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역사성 및 장소의 상실이자 사회경제적인 메커니즘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며 고향에 대한 기억이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주택정비사업은 전면철거 재개발로 진행되고 새로운 아파트 숲의 조직이식으로 인하여 기성 시가지에서 볼 수 있었던 유기적인 연결체계와 다양한 선택권이 가능하던 주거환경의 다양성이 상실되었다. 또한 주변과의 기능적·형태적 소통을 거부하는 폐쇄적이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대규모 단지 중심의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대규모 전면철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도심 저층주거지는 지역 커뮤니티 해체, 저소득층을 위한 소규모 주택재고 멸실, 자생적 경제활동 와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정비구역의 과다 지정, 사업추진 과정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러한 대규모 정비사업의 추진도 매우 부진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는 저층 노후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파급효과는 미흡한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저층 노후주거지에 대한 기존 대규모 철거 중심 정비사업의 대안검토가 필요하며,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한 저층주거지의 종합적 근린재생 방안 마련으로 사람냄새 나는 정겨운 도시재생 방식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칸막이식 행정·재정 지원 체계에서 탈피하여 재생사업지역에 통합적 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장소단위의 종합적 정책 마련과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생적 재생기반 마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성공적인 재생모델 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야 할 것이다.

2. 추진 경과

1) 연구 수행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국민체감형 건축정책의 주요 활동방향 중 하나로 '도심 저층주거지 마을환경 개선'을 선정하고 있다. 주민 중심의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지원책 마련으로 사람냄새 나는 정겨운 도시재생 추진이라는 목표에 따라 단독·다가구·다세대 밀집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통합적 근린재생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다. 이러한 주거지의 특성상 취약계층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기존 정비사업은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주거복지, 경제활동 지원 등 생활재생을 위한 프로그램과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심 저층주거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물리적, 사회문화적 재

생이 결합된 종합적인 마을환경 재생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 장소 중심의 통합적 근린재생이 될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제목은 '서민 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 정책방안 연구'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2011년 7월 28일부터 2011년 11월 24일까지 약 4개월간 수행했다.

2) 근거법 제정 추진

도심 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 정책의 확산을 위한 근거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현기환 의원 대표발의, 2011년 11월)과 연계하여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였으나 18대 국회 임기종료에 따라 법안이 폐기되었다. 19대 국회에서 다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의 제정목적은 공공역할을 강화하여 전면철거·수익성 위주의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낙후한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재생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지원을 강화하여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는 등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재생을 유도하고자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도시재생 심의조정기구를 설치하여, 국가지원 신청, 도시재생전략계획 심의, 도시재생기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평가 등을 담당하고, 기금 등 공공재원을 마련하여 각종 단위사업의 연계사업 계획·시행, 광역단위 연계사업 추진 및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장소 중심적으로 통합·집행토록 하고 있고 지역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재생사업 기획, 관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제정목적은 ❶ 공공역할을 강화하여 전면철거·수익성 위주의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낙후한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재생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❷ 소프트웨어사업 지원을 강화하여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는 등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재생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그림 5-25 서울시 중계동 백사마을, 사진 장광식

3) 후속 연구 추진

현재 지방 중소도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외곽 신규택지 공급 등으로 인하여 일부 국고지원 등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하고 기성시가지의 정비사업이 대부분 지연·중단되고 있다. 또한, 인구유출, 산업쇠퇴 등 도시성장 변환기에 직면한 지방 중소도시의 노후주거지의 종합적 실태파악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민 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 정책방안 연구'에 이어서 지방 중소도시의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종합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연구를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 중소도시 노후·불량 주거지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여 노후·불량 주거지의 유형 분류와 규모를 산출하고자 한다. 기존 주거지 관련 정비제도와 정부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지방 중소도시 관점에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려고 한다.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중소도시 주거지 정비정책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정책여건 비교를 통한 정책적 참고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중소도시 노후 주거지 정비의 목표 및 범위, 단계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도출 등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 정비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현행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사업 개선을 통한 중소도시 주거지 정비촉진 방안, 지방중소도시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주거지 정비방식 도입, 공공 지원 확대방안 등 중점 추진과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설정 및 추진계획 마련을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 제목은 '지방 중소도시 노후 주거지 정비방안 연구'로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 2012년 5월 31일부터 2012년 12월 26일까지 약 7개월간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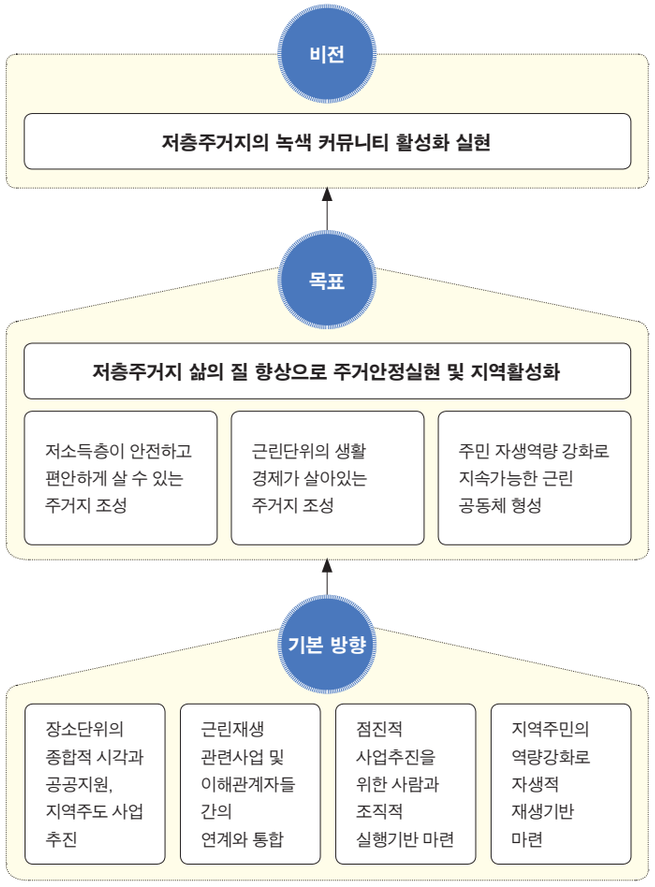
3. 주요 내용

1) 기본 방향

'저층주거지의 근린재생으로 녹색커뮤니티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저소득층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지 조성, 근린단위의 생활경제가 살아 있는 주거지 조성, 주민 자생역량 강화로 지속가능한 근린 공동체 형성을 3가지 목표를 마련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장소단위의 종합적 시각에 의한 '지역주도-공공지원'의 사업추진, 근린재생 관련 사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연계와 통합, 점진적·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인적·조직적 실행기반 마련,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생적 재생기반 마련으로 설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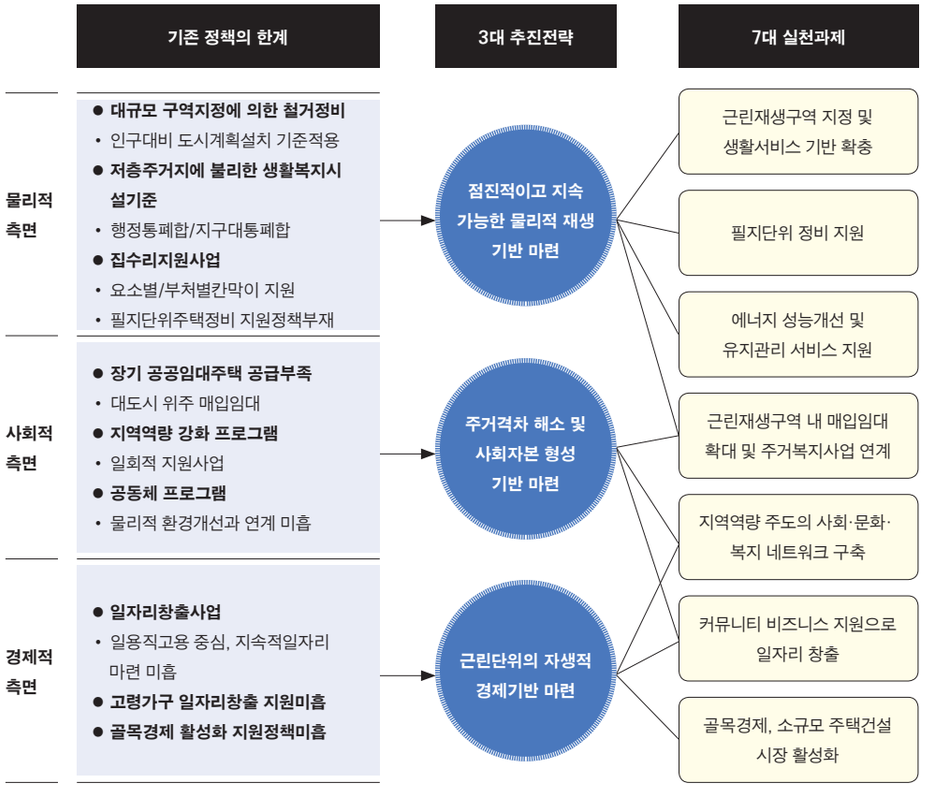
표 5-9 도심 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의 기본 방향



2)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

도심저층주거지 근린재생을 위해서는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여건개선, 보육, 교육, 문화 등 생활서비스 기반 확충,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공사업을 장소단위로 종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5-10 도심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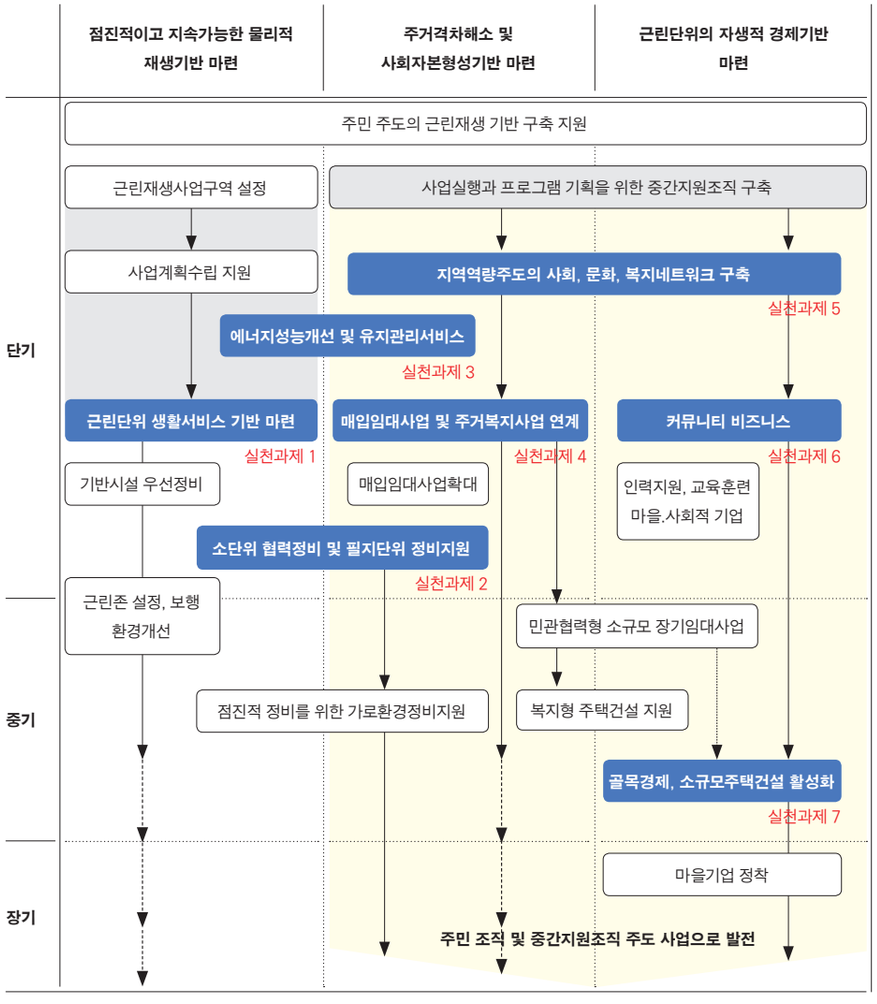
이에 기존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대 추진전략으로 첫째, 점진적이고 지속가능한 물리적 재생기반 마련, 둘째, 주거격차 해소 및 사회자본 형성기반 마련, 셋째, 근린단위의 자생적 경제기반 마련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7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실천과제는 근린재생구역 지정 및 생활서비스 기반 확충, 필지단위 주택정비 및 가로주택정비 지원, 에너지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서비스 지원, 근린재생구역내 매입임대확대 및 주거복지

사업 연계, 지역역량 주도의 사회·문화·복지 네트워크 구축,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골목경제, 소규모 주택건설 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다.

3) 통합적 근린재생 실행방안

도심 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의 실행방안으로 첫째, 실천전략의 선택과 종합에 의한 단계별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저층주거지 재생은 쇠퇴지역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쇠퇴현황과 잠재력 파악을 통해 문제해결에 적합한 다양한 실천전략과 수단을 선

표 5-11 도심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의 단계별 실행방안



택하고 종합하는 장기적인 실행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적 근린재생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도심 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을 위한 기본방향인 3대 추진전략과 7대 실천과제를 바탕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실천수단을 선택, 조합하는 통합적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협의회 구성 등 통합적 근린재생을 위한 의사결정방식이 필요하다. 근린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하고 개방된 의사소통을 통하여 주민이 계획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업계획 수립과 승인절차 이후 지역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사업실행 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인적 지원을 제시했다. 저층주거지의 근린재생 주체는 지역주민이므로 주민의 자발적인 재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주민 중에 리더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을 총괄관리하는 마을리더제도 운영 등을 제안했다.

4) 정책 추진방안

정책추진방안으로 첫째, 통합적 근린재생을 위한 사업계획 인정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먼저, 저층주거지 근린재생의 통합적 사업추진을 위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칭)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촉매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이와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발굴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간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서 근린재생사업계획 수립절차를 제시했다. 근린재생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사업에 직접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지역자생조직, 민간조직 등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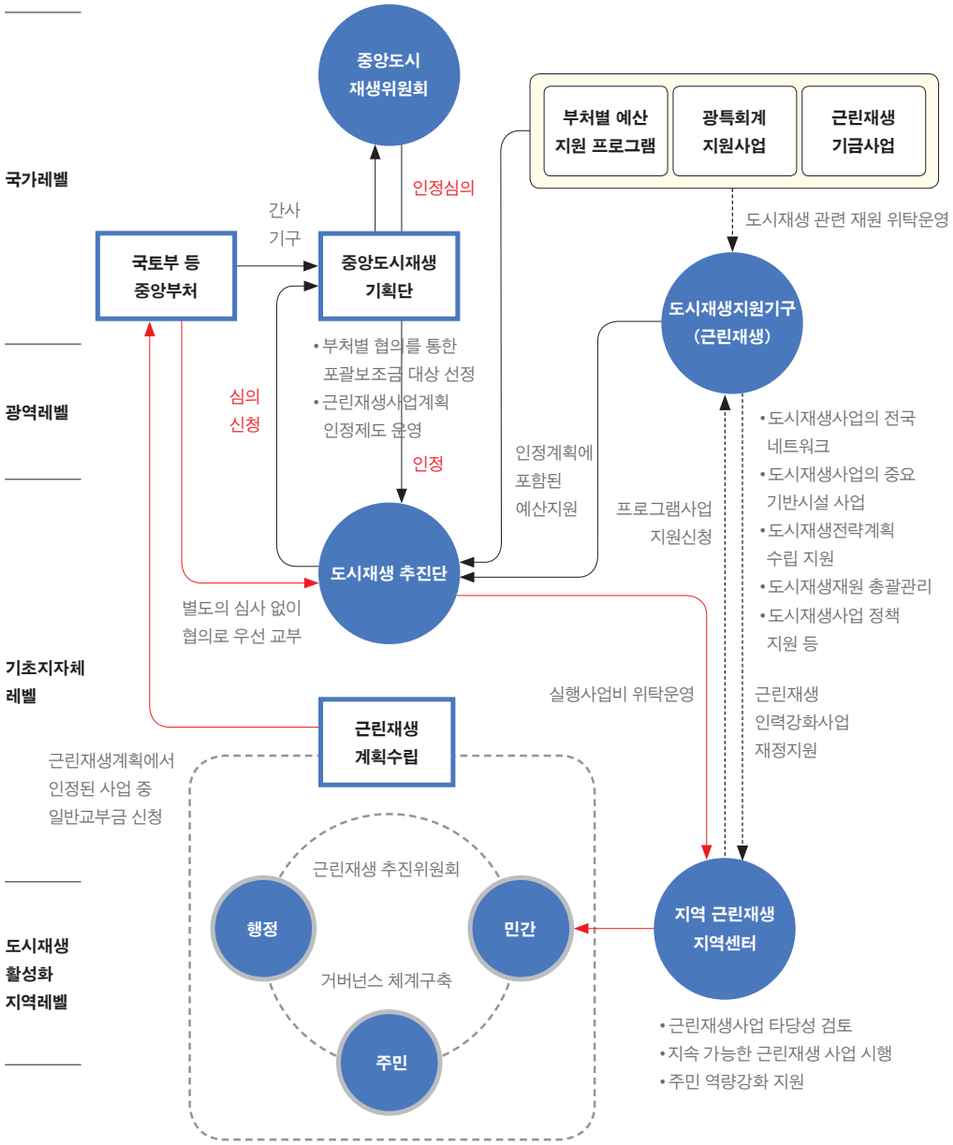
셋째, 근린재생 관련사업의 장소단위의 통합·연계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기존 프로젝트단위의 사업방식과 달리 근린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재생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장소단위에서 통합하고 연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근린재생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실행주체로서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제시했다. 근린재생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다양한 근린재생 프로그램의 실행주체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근린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조직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소단위의 포괄보조금 지원 및 관련 재원통합 운영을 제시했다. 사업계획으로 인정받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대한 중앙도시 재생기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장소단위의 포괄보조금형태로 지원하고, 인정제도에 의해 인정을 받은 각 부처, 공공기관의 재

표 5-12 근린재생계획 인정절차 및 사업추진 개념



원에 대해서도 장소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사업으로 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저층주거지 근린재생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역량 강화와 주택정비 지원을 위한 근린차원의 재원마련도 필요하다.

표 5-13 근린재생사업계획 수립절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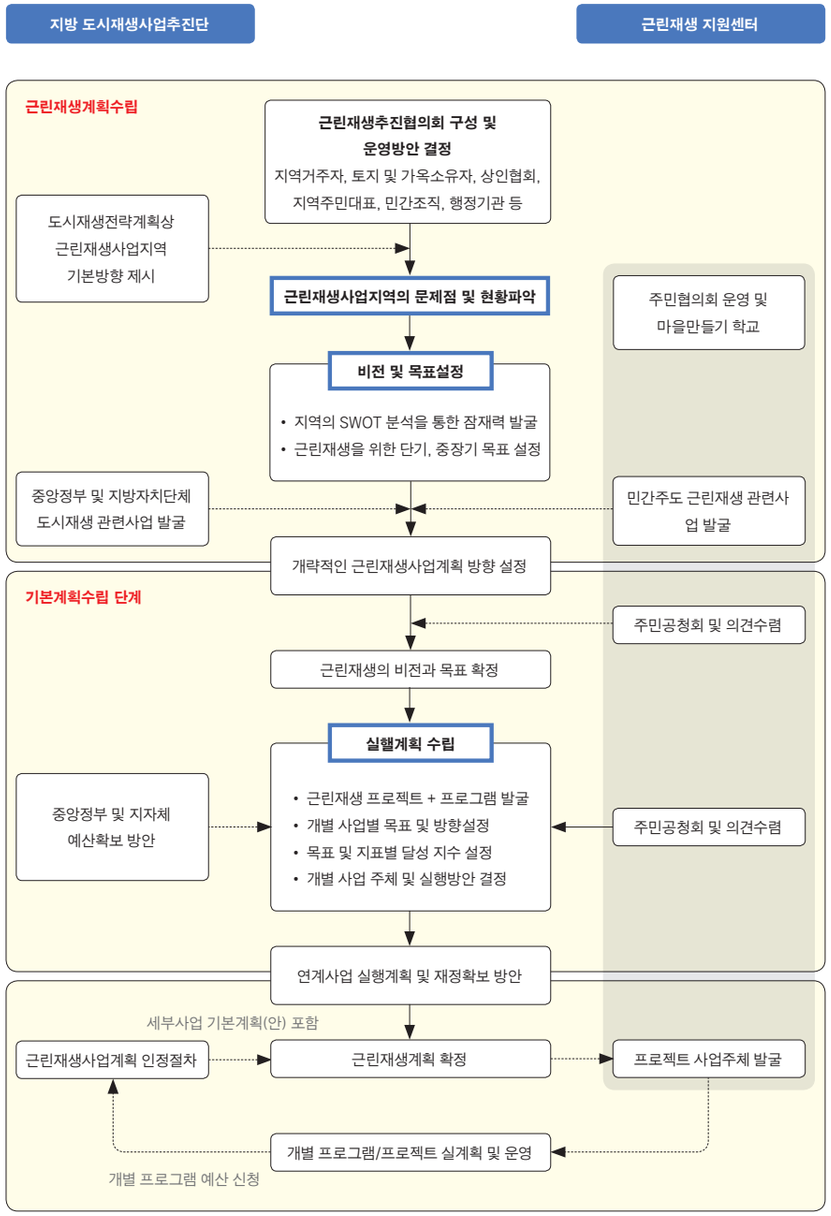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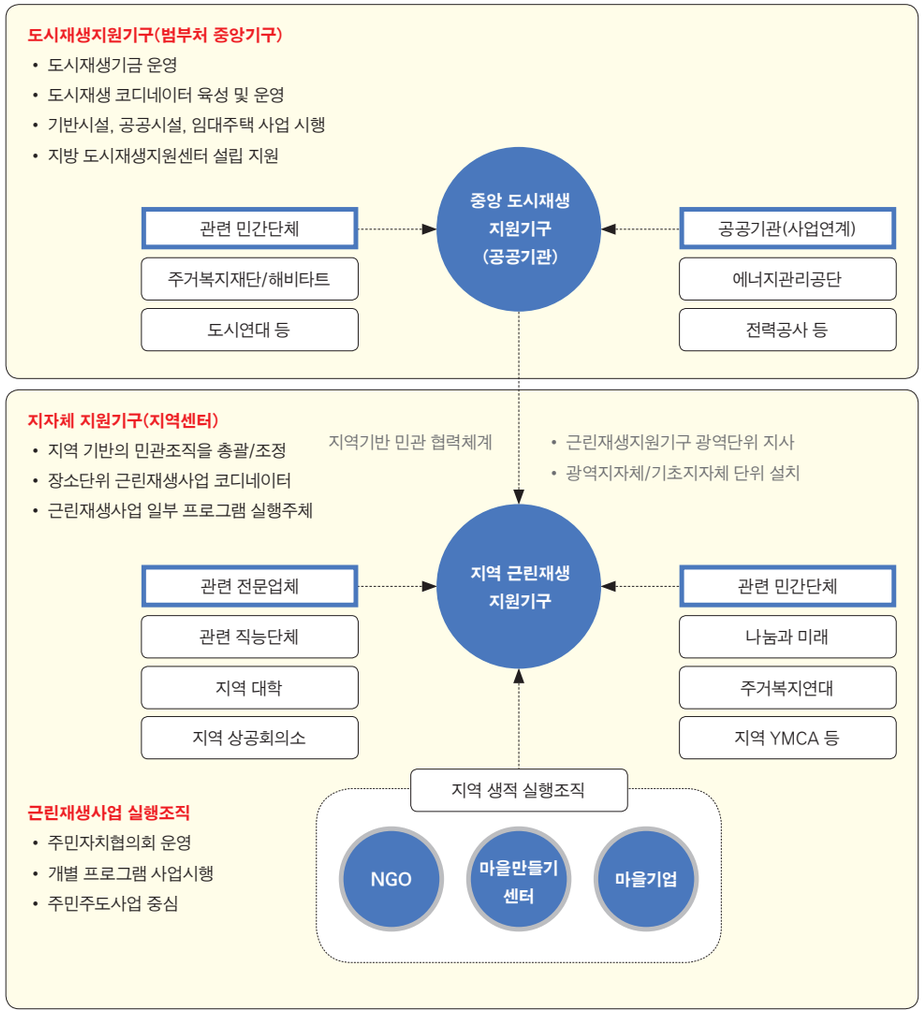


표 5-14 실행주체로서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5) 시범사업 추진방안

경쟁원리에 의한 지원과 소외된 지역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에 의한 시범사업의 대상 및 추진주체, 선정방안 및 평가기준, 추진체계 및 공모계획,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방향은 경쟁원리에 의한 지원과 소외된 지역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확대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저층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쇠퇴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시범사업 추진내용은 추진전략과 세부추진과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사업내용을 결정하며, 1단계는 근린재생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수립비용 및 계획수립 지원을 위한 전문가 운영, 지역역량 강화사업 중심으로, 2단계는 지역의 자생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조직 설치 및 운영지원, 사회문화적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사업, 3단계는 사회문화적 재생프로그램 + 물리적 환경개선프로그램 실행사업 및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코디네이터 지원과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또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운영과정 전체를 조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와 운영조직을 구성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범사업 추진체계를 제시했다.

표 5-15 도심저층주거지 근린재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사업 연계방안

4. 성과 및 의의

최근 기존 대규모 주거지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서울시 휴먼타운' 등 양호한 단독주택지 재생시범사업 추진 및 각 지자체 주도의 가로환경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공공주도의 단기 재정투입과 성과중심의 일회성 사업으로 취약한 도심 저층주거지의 지속적인 주거환경재생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위원회에서 추진한 본 연구의 성과는 기존 도심 저층주거지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근린재생 관련 국내외 지원정책 및 사업추진사례 분석을 통하여 도심저층주거지의 통합적 근린재생을 위한 비전과 기본방향을 비롯하여 세부적인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정책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통합적 근린재생을 위한 사업계획 인정제도 도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서 근린재생사업계획 수립절차, 근린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사업 연계방안, 실행주체로서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장소단위의 포괄보조금 지원 및 관련 재원통합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적인 도심 저층주거지 마을환경 개선을 위하여 물리적 환경정비, 주거복지, 사회경제적지원 등이 결합된 장소단위의 저층주거지 재생사업모델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저층주거지 재생수요를 반영한 관련 제도 개선과 시범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각 지자체가 지역의 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 정책 수립에 참조할 수 있도록 각 광역지자체 및 지방연구기관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배포하였으며, 지자체, 연구기관, 국회 등에서 개최되는 관련 세미나 등을 통하여 연구 성과를 홍보했다.

제6절
해피차일드: 보육시설 개선 및 확충

1. 추진 배경

해피차일드 사업은 행복한 아이들의 삶을 목표로 보육환경 개선, 복지시설 확충 등 새로운 건축 뉴딜정책 추진을 통해 건설·복지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증대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작되었다.

전국 보육시설은 2010년 보육통계 기준으로 볼 때 국공립 5.3%(2,034개소), 민간시설 94.7%(35,987개소)로 모두 38,021개소이며 영유아(만0~5세) 265만명 중 128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시설에 대한 개선 사항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육교사 처우개선(28.7%)과 시설설비개선(27.7%)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의 원인은 부족한 보육시설과 질 낮은 시설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듯이 공간환경의 개선 없이는 보육여건의 개선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또한 2012년 자녀 양육의 애로사항으로 보육비용의 문제가 21.2%, 보육시설의 부재가 20.2%였던 만큼 환경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육시설 증가와 환경개선 요구에 비해 쾌적한 보육환경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 예산(총 보육예산의 0.6%)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아파트와 주택지 내의 보육시설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및 주택 형태로 운영 중인 보육시설의 37.5%를 차지하는 주택지(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보육 실태는 열악한 상황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부족한 보육시설과 질 낮은 시설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듯이 공간환경의 개선 없이는 보육여건의 개선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5)을 통하여 보육시설 개선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2010년 기준으로 총 42개소, 신축 10개소, 장애아전담 1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31개소를 운영 중이다. 또한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



그림 5-26 어린이집 우수사례-대전청사 어린이집 발표(2012년 충청권 포럼)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추진 경과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이후 제해성 국건위 위원은 워크숍, 합동 연석회의 등에서 저출산시대에 대응한 과제로 영유아 보육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대해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에 2011년 5월 18일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 이 자리에는 제해성 위원, 이상인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 조일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 연병섭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보육담당관실 보육지원 팀장, 정상균 경기도 보육정책과 과장, 박성철 한국교육개발원 팀장이 참석했다.

2011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 주무부처와 협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예산확보의 필요성 이외에 주요 안건은 협의가 어려웠다.

2012년 4월 19일에는 충북 청주시 고인쇄박물관에서 열린 제1

차 전국순회 충청권 건축도시정책포럼에서는 '어린이집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최경숙 인덕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제해성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장을 좌장으로 배시화 위원, 최목화 한남대학교 교수, 조정신 건양대학교 교수, 손승희 새롬어린이집 원장과 정진주 청주대학교 교수, 한창언 보건복지부 과장이 의견을 나누었다.

3. 주요 내용

1) 관계부처 협의자료

2011년 7월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를 방문하여 어린이집과 관련한 협의 회의를 가졌으나 기존의 새로마지 플랜 등을 통하여 다수의 사업들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도시·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가능한 정책방향을 골자로 한 보완이 요구되었다.

① 국공유 보육시설의 확충 및 리모델링

단지 내 기존 보육시설, 유휴 공공시설, 주민복지시설 등의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 단지내 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주택법」 시행령(舊공동주택 관리령)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300세대 이상은 의무설치 대상이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승인권자의 인정 시 예외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내 보육시설 설치 규정을 개선하고 저층주거지내 매입임대주택의 보육시설로의 용도전환 지원 및 저층부 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도록 한다.

다세대·연립주택 1층 보육시설 설치 시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한다. 1층 의무설치 기준 및 산단 내 입지기준도 녹지구역 내 도시공원에 설치를 허용하도록 완화하고,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보육시설(보육정원 5~20인) 설치 및 탄력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림 5-27 어린이집 우수사례-대전청사 어린이집



그림 5-28 어린이집 우수사례-푸르니 어린이집

②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노인, 가정주부 등 자원봉사(교육 프로그램 개발)를 활성화하고 주택관리사무소 및 해피하우스 내 사회복지사 운용방안을 검토한다.

③ 보육시설 운영제도 개선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수준의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자율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재정지원 없이 보육비용 수납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시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

보육목적, 안전성 등을 고려한 보육시설 기준을 합리화하고 조리실, 인근놀이터, 옥상놀이터 등 「영유아보육법」 상 시설 기준을 개선한다.

④ 재원 조달방안

국민연금 복지시설 자금을 활용한 국공립 설치비 및 공공형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지원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총 300억, 시설 당 2천만 원 지원(5년 거치, 5년 상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개선 융자금을 지원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한다.



그림 5-29 전국 순회포럼(2012년 4월 19일)

⑤ 대국민 홍보 및 참여 유도

정부주도 시범사업 및 우수 보육시설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일사일촌(一社一村) 개념을 도입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2) 전국 순회포럼 주요 논의 내용

어린이집에 대한 중요성은 2012년도 전국 순회포럼(2012년 4월 19일 청주시 고인쇄박물관)의 첫 번째 주제로 다뤄졌는데 당시 포럼에 참석한 최경숙 인덕대학 교수는 '어린이집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보육 선진화를 위한 건축환경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획단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담는 하드웨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일단 보육료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양적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육 예산 중 어린이집 기능보강 비용을 10% 비율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법적 시설 기준 상향 조정과 보육정책위원회에 보육건축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의 어린이집 계획기준 설정 필요, 규모산정 시 법적 최소면적이 아닌 적정면적 적용, 장기적으로 시설 발주 및 관리를 위한 별도의 청 단위의 신설도 거론했다.

3) 추진 방향

현재 이런 어린이집 수요에 대한 기준은 '인구수 대비 보육정원'으로 단순하게 적용되고 있고 해당 시군구 지자체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아닌 대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 개선

현행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어린이집 설치 최소규모가 영유아 21인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 40명 이상)인 것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법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여건에 따라 시설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최소기준으로만 설치·운영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 설치 규모의 최소 기준만 제시하지 않고, 경로당 같이 세대수 증가에 따른 시설규모 확대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300세대를 넘는 10세대 당 1명씩 누진적으로 시설규모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세대수 규모별로 최소 아동기준을 차별화(황규홍 외 3인, 공동주택 보육시설 제도개선 및 계획모델안 개발, 주택도시연구원, 2006)하고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인 경우는 60인 이상(현행: 500세대 이상인 경우 40명 이상)으로, 1,000세대 이상인 경우는 80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②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어린이집 수요대비 공급적정성 판단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현재 민간어린이집 설치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지자체별 수급계획에 따라 보육수요 및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 수급계획은 보육수요, 보육시설 인가가능 및 제한지역 설정, 어린이집 설치 사전상담제 운영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등은 수요공급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이런 어린이집 수요에 대한 기준은 '인구수 대비 보육정원'으로 단순하게 적용되고 있고 해당 시군구 지자체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아닌 대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지역별 영유아 수, 어린이집 현황, 유휴시설 정보를 활용한 보육수요 산출 및 공급정책에 대한 종합정보를 지자체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고, 지역별 어린이집의 합리적 수요기준을 설정

(추정보육수요 데이터 마련 등)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는 신규공급을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간경쟁체제를 통한 질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③ 유휴교실 및 시설 리모델링 지원방안

현재 초등학교 내 유휴교실 및 주민복지시설 등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어린이집 확보가 이뤄어지고 있다. '새로마지 2010'에서 보육·교육의 통합시설로 사업(희망 아가방사업)이 추진되어 경기도 4개교를 대상으로 시설비 및 운영비가 지원되었다(2007). 시교육청에서는 유휴교실을 해당 시에 무상임대하고 시와 구, 군이 예산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신축 20억, 리모델링 시 3억). 국가차원의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하여 일부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안양시의 경우 2012년 달안초등학교, 안양1동 주민센터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어린이집 2곳을 개소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차 계획에서 유휴교실 및 시설관련 리모델링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유아통합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올해부터는 누리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시작하게 됨에 따라 교과부, 보건복지부 담당부처 확인을 통한 관련사업의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4) 앞으로의 과제

보육건축전문가가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어린이집 설치 시에는 관계 분야 전문가와 설계자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보육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보육에 관한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 인증 사항 등을 심의하는 보육정책위원회에 어린이집 건축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설계자문·심의위원회 구성 시에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 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5년 단위로 전국보육실태조사를 통해 보육정책, 시설운영, 영유아현황, 종사자, 보육서비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참고하고 있다. 시설부문에 대한 물리적 특성,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1차 자료를 확보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시설관련 예산은 어린이집 확충, 종일반, 장애아보육환경개선 등에 집중되어서 보육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극히 부족한 시점(총 보육예산의 0.4%)이지만 시설설비 개선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기존 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미흡한 상황이다. 그동안 시설관련 예산은 어린이집 확충, 종일반, 장애아보육환경 개선 등에 집중되어서 보육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극히 부족한 시점 (총 보육예산의 0.4%) 이지만 시설설비 개선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기획 단계에서는 업무 분리로 인한 총괄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설계 발주는 30억 미만 사업을 가격 입찰로 진행하여 비적격자들이 참여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설계 경기를 장려하면서 동시에 설계지침서를 내실화하고, 조성 과정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도록 했다. 국건위에서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고, 신진건축사 양성방안과 연계하여 소규모 공공건축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도 공공건축의 유형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조성 과정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공공부문의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시상하고 있다. 매년 조성되는 공공도서관의 기획 및 설계 과정에 전문가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보건소 발주에서도 표준설계도, 공공보건 의료기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재는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로 보육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공동주택 보육시설 설치 규정의 합리적 공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4항 공동주택 보육시설 설치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영유아 21명 이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영유아 40명 이상이 기준이다.

제2기 국건위에서는 보육환경 개선, 복지시설 확충 등 새로운 건축뉴딜정책 추진을 통해 출산율 제고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Happy Child(건축운동)'를 제시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보육시설 설치 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4항)의 산정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온 데 따른 것이다.

노인정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1인당 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어린이집은 최소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서 합리적인 설치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기준 상향에 따른 공동주택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관련 부처들의 검토도 병행되어야 한다.

4. 성과 및 의의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많은 복지정책들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건축도시적 관점에서 사회 인프라 시설로서 어린이집을 확대·개선하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는 없었고 보육료 지원 등의 정책만이 주요하게 부각되어 왔다. 이에 국건위에서는 도시개발 및 계획 과정에서 어린이집 공급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어린이집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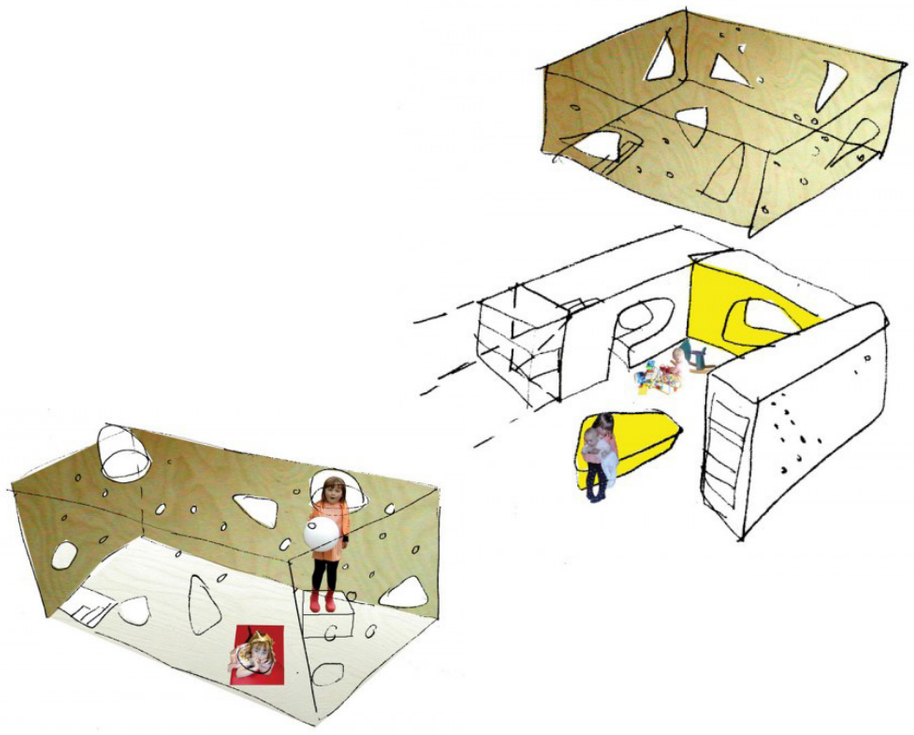






그림 5-30 어린이집 해외 사례(노르웨이, 디자인 70 ° N Architecture)

제7절
보금자리주택 품격 향상

1. 추진 배경

우리의 공공주택은 그동안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했으나 주거문화를 선도해 왔다고 할 수는 없다. 저소득층이 사는 공공주택일수록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곳보다 우수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 주택정책에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철학적 이념이 그 안에 자리 잡지 못했다. 독일·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수준 높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데 매진하였고, 당시 저명한 건축가들을 공공주택 계획에 대거 참여시켜 한 국가의 주거문화를 선도해 나갔다.

저소득층이 사는 공공주택일수록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곳보다 우수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 주택정책에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철학적 이념이 그 안에 자리 잡지 못했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주택이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인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으로서 2018년까지 수도권에 100만호, 지방에 50만호, 총 150만 호를 공급할 계획에 있다. 보금자리주택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공급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주거문화에 주는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건축정책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를 주거문화 개혁에 두고 지속가능한 신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뉴하우징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국가적 변화의 조짐을 우리 주거문화의 혁신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보금자리주택으로 대표되는 공공주택이 단순히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주체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조기에·저렴하게·많이' 공급하는 것과 함께 내용적 측면에서도 이전의 공공주택과는 차별화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시도가 어려운 부분을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제도개선으로 공공부문의 개선성과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위원회는 보금자리주택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이를 추진하게 됐다.

2. 추진 경과

국건위에서는 2009년 3월 30일 제1차 대통령 보고회에서 '뉴하우징 운동'의 핵심실천과제의 하나로 '디자인 보금자리'를 보고했다. 그동안 임대아파트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는 보금자리주택으로 대표되는 공공주택의 디자인 차별화를 통해 서민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건위는 이후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 차별화뿐 아니라 '생활을 디자인하다'라는 목표로 보금자리주택의 내용적 차별화·내실화 방안까지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범사업과 제도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LH공사가 함께 추진한 주요한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 3월 30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분야의 양적성장에서 주거환경의 본질적 가치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신주거문화 정착 추진을 위한 '뉴하우징운동', '디자인 보금자리'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5월부터 7월까지 디자인 보금자리 추진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마련하였다. 11월 27일에는 새로운 삶과 디자인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또한 공공주택의 디자인 개선방안을 LH에서 강구하여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를 위한 제도개선 협의를 국토부와 추진하여 3월 12일 디자인 시범단지 제안서 국제공모를 LH, 국토부가 주최하여 5월 28일 디자인 시범단지 국제공모작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후 2010년 6월 17일에 생활맞춤형, 블록형 주택 시범단지 제안서를 공모하여 2011년 10월 성남고등지구 2개 임대블럭, 화성동탄2지구 1개 임대블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디자인 특화단지

로 조성하였으며, 그해 5월 31일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시행(국토해양부 훈령 제830호)를 통하여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 기준을 강화했다.

3. 주요 내용

1) 추진전략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방안'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및 주거문화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보금자리 주택의 품격과 실용성 제고'라는 목표로 '품격 있고 실용적인 보금자리',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 '에너지를 절약하는 녹색 보금자리'라는 3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31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2) 실천과제

① 품격 있고 실용적인 보금자리

'품격 있고 실용적인 보금자리'는 공공주택 디자인이 획일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 새로운 디자인 및 다양한 주거모델의 모색

지구별로 차별화된 디자인 테마를 설정하고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서울 강남 3개 임대단지 2,900세대에 국내외 저명 건축가를 지명하는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했으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명품 디자인 공공주택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장애인·고령자 돌봄, 육아지원 등 거주자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응하는 생활맞춤형 주거모델은 시흥은계와 부천옥길 지구의 임대단지에 구현될 예정이다. 그리고 2차 보금자리 지구부터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응하는 가변형 평면계획을 위해 내력(耐力) 벽체를 없애고 기둥을 도입한 구조형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내부 구조만 변경하는 리모델링이 용이하여 건물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



그림 5-32 서울·경기도 디자인 강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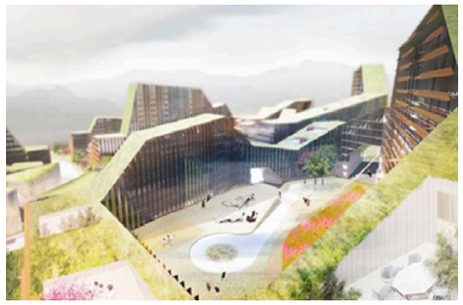


그림 5-33 보금자리지구 조감도

● 경관과 입지특성을 고려한 밀도·층수의 다양화

밀도와 층수 다양화를 위해 평균 18층 이하 층수 제한 규제가 최근 폐지됐고, 단지별로는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여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하게 된다. 도심이나 역세권 등에는 단지외곽을 건물로 둘러싸는 블록형에 고층 타워형을 혼합하여 밀도를 높임과 동시에 도시의 가로망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블록형 단지 시범사업으로 부천옥길지구 1개 단지를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상공모를 통해 새로운 주거모델 제시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5-34 블록형 단지 현상공모



그림 5-35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제도개선

● 디자인 다양화를 위한 제도 정비

창의적인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될 예정이다. 특히 건물 외관을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발코니가 일정범위 내에서 돌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간거리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하였다.

②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를 위해 참여형 커뮤니티 시설을 단지 내에 조성하고, 지구 내 생활권 중심지역이나 생활가로변에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집적시키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 단지 내 참여형 커뮤니티시설의 조성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를 위해 방과 후 학습 공간, 문화교실, 목공방, 유기농 텃밭 등 주민이 참여하며 생산적인 활동으로 함께 가꾸어가는 참여형 커뮤니티 시설을 단지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 지역단위 복합 커뮤니티시설의 조성

공공서비스 이용의 효율성과 지역 단위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 내 생활권 중심지역이나 생활가로변에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집적시키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 단지별로 설치하던 관리사무소 등도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 하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림 5-36 단지내 참여형 커뮤니티시설의 조성예시



그림 5-37 지역단위 복합 커뮤니티시설의 조성예시

● 커뮤니티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이러한 커뮤니티 시설을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센터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여 단지 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육아나 간병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림 5-38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례



그림 5-39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개념도

③ 에너지를 절약하는 녹색 보금자리

'에너지를 절약하는 녹색 보금자리'를 위해 기본에 충실한 그린홈으로 건설하고, 생태기반의 지속가능한 녹색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 실용적인 그린홈 건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단열강화나 창호면적 축소, 대기전력 차단 등 기본에 충실한 그린홈으로 건설하여 에너지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열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호폭 30cm 축소 및 발코니 턱 높이 10~40cm를 상향시키고, 단열재의 성능과 두께를 높이며, 단열성이 우수한 이중창호를 사용하여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를 줄이게 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실시간 요금제를 연계하여 가정의 전력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홈 스마트그리드, 자동감지센서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지능형 LED 주차장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

● 생태기반의 지속가능한 녹색공간 조성

친환경 단지계획으로 마을 숲과 바람 길을 조성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대중교통망과 네트워크화하는 등 생태기반의 지속가능한 녹색공간도 조성한다.

● 보금자리주택 입면 다양화 추진

국토해양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발코니를 활용한 아파

트 입면의 다양한 변화를 추진했다. 2012년 5월 24일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발코니를 층별로 다른 위치에 계획하거나 일부 개방형 발코니를 설계에 도입할 방침을 발표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현상공모도 실시했으며 6월에는 시범지구를 지정해 새로운 디자인의 아파트 문화를 선도했다. 이경석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개발과장은 "그동안 발코니 확장이 실내 공간 활용도를 높여 소비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외관의 단조로움을 유발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아와 아파트 입면의 다양한 변화를 기획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총괄계획자(Master Planner, MP)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3차원 입체계획을 고려한 도시·건축통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또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통합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배포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2년 5월에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개발과, 공공택지기획과는 구체적인 실천내용으로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하여 지구계획 수립 시 사전기획 강화(제15조의4 제1항 신설), 도시,건축 통합계획 수립(제15조의4 제2항 및 별표 1-7 신설), 총괄계획가 제도 개선(제19조 제7항 및 별표 1-7 신설)을 통하여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 다양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해오고 있다. 또한, 2005년 발코니 확장의 합법화 이후 외관의 획일적인 단조로움으로 도시경관의 저해로 지적되어온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코니를 층별로 다른 위치에 계획하거나 일부 개방형 발코니를 설계에 도입했다. 신진건축사 대상 현상공모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아파트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단기간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파급 효과로 기존 집값이 안정되고 신규 주택의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고 또한 새로운 주거유형을 통해 계층 간의 통합, 입주민 만족도 증가와 함께 지역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이 예상된다.

● 실행방안

실행방안으로 디자인 개선, 그린홈 등 보금자리주택의 품질 향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분양가 상승 요인을 상쇄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에너지 30% 절감형 그린홈 공급 시에 공사비가 약 12만 원(3.3m^2당 0.8% 원가 상승)인데 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원가절감 방안도 함께 추진했다.

과도한 지하주차장 및 배관기준 등을 개선하고, 사업초기부터 VE(Value Engineering) 강화 등을 통해 설계금액의 90~95% 수준으로 목표공사비를 제시해 주택건설 과정 전반에 걸쳐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에 매진할 계획이다. VE(Value Engineering)란 설계·설비·시공 등 여러 전문분야의 협력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원하는 품질을 얻고자 하는 활동이다.



그림 5-40 기본에 충실한 실용적 그린홈 건설



그림 5-41 적용검토중인 홈 스마트그리드



그림 5-42 녹색교통 활성화 예시



그림 5-43 생태형 외부공간 디자인 예시

4. 기대 효과

보금자리주택은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1기 위원회에서 마련한 '뉴하우징운동(New Housing Movement)'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전략과 성과를 다른 보금자리주택 지구에도 점진적으로 적용해 민간부문까지 확산된다면 과거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이 저출산·고령화시대와 저탄소녹색성장에 부응하는 21세기 새로운 주택모델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의 아파트 문화를 개선하고 주거문

화를 선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의 개선과 더불어 에너지 절감방안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새로운 주거문화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단기간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파급효과로 기존 집값이 안정되고 신규 주택의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고 또한 새로운 주거유형을 통해 계층 간의 통합, 입주민 만족도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이 예상된다. 특히 중소형 공공분양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주택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제8절
건축행정제도 개선

1. 추진 배경

우리나라의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 발주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수준 저하, 설계공모의 비공개 심사로 인한 로비와 심사결과에 대한 불신 증폭, PQ 제도로 인해 젊은 신진 건축사들의 참여 곤란, 건축사의 디자인 감리 권한배제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인·허가 등 건축행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 과도한 규제 등을 중점 발굴·개선하여 국민 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초년도인 2009년 상반기에 건축행정제도개선을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엔지니어링 발주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수준 저하, 설계경기의 비공개 심사로 인한 로비와 심사결과에 대한 불신 증폭, PQ 제도로 인해 젊은 신진 건축사들의 참여 곤란, 건축사의 디자인 감리 권한 배제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2. 추진 경과

위원회는 건축행정 제도개선을 위해 2009년 3월에 16개 시·도 18개 유관단체에 공문을 보내어 건축행정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출토록 하였다. 시·도로부터 77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183건 등 총 26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이를 법령별로 구분하면 「건축법」 소관 89건, 「건축사법」 소관 9건, 「주택법」 소관 43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소관 21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관 14건, 「도시재정비촉진법」 소관 8건, 기타 법령 소관 76건 등이다.

위원회 기획단은 2009년 6월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검토과제 229건, 자체종결 과제 31건으로 분류를 완료하고, 2009년 7월에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 부처에 의견조회를 실시하였다.

한편 건축행정제도 개선과제는 담당 위원을 선정하고 과제를 전담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009년 9월에는 제도개선 자문단(15명)을 구성하고 가칭 건축산업진흥을 위한 법제를 담당하는 분과와 불합리한 제도·규제개선을 담당하는 분과로 나누어 자문단을 운영하였다. 건축행정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하여 자문단 검토회의는 2009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 14차례 개최하고 주요 건축행정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토의와 검토를 실시하였다.

2009년 10월에는 시공감리와 디자인감리 분리에 관한 감리제도 개선 자문단 토의결과 동 사항은 위원회에서 추진할 명분이 부족하여 과제내용에서 제외하였다.

2009년 11월에 건축행정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부처의 협의 결과, 검토과제 229건 중 208건이 회신되었으며, 수용 15건, 일부수용 7건, 불수용 124건, 기개선 중 36건, 장기검토 9건, 기 시행 17건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

3. 주요 내용

건축행정제도 개선과 관련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1기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국건위 추진 제도 개선 과제발굴 및 건축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건축산업진흥법안을 작성하고 제도개선 과제로서 건축인허가 처리 투명성 확보, 건축허가 관련 평가·심의제도 개선, 건축신고 제도개선, 건축물 인증제도 개선, 건축물 유지관리 개선이라는 5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개최한 제도개선 과제 자문단 토의를 통하여 건축산업진흥법안의 법령명칭을 「건축디자인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건축인·허가처리 투명성 확보 과제는 세움터 운영상황을 보고 추후 검토키로 하였으며, 건축인·허가 평가심의 제도개선 과제는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운영상 문제로 5대과제에서 제외하고, 건축신고 제도개선 과제는 우선 개선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건축물 인증제도 개선과제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과제로 검토 중으로 5대과제에서 역시 제외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개선과제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실행방안을 정리키로 하였다.

한편, PQ, 턴키, 설계공모 등 건축발주제도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위원회의 중점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건축 품격향상과제에 포함하여 별도로 검토하였으며, 2010년 4월에는 건축신고제도 개선과제

에 대한 국토해양부, 지자체 및 건축사단체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협의 결과 신고제도 개선과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건축신고 제도개선에 대한 거시적 명분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한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기 활동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개정', '대형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도입 관련 동향', '건축물 일조권 규정' 등을 다음과 같이 다루었다.

1)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재개정

① 추진 배경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용역의 경우 해당용역수행능력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 항목이 추가되었다. 개정 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로 구성되었던 평가항목이 재무비율평가(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와 신용평가 항목으로 개정된 것이다.

새로이 도입된 신용평가기준은 입찰참가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페이퍼컴퍼니 난립을 방지하여 능력 있는 업체를 보호하고 건축사사무소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신규 및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 용역참여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갖게 되었다. BB° 등급은 연 매출액 5억 원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설계사무실의 경우 수주량 부족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게 현실이다.

표 5-16 건축사사무소 용역 참여 비율

연도	2006		2007		2008		2009	
건수	사무소	비율	사무소	비율	사무소	비율	사무소	비율
0건	834	8%	213	2%	833	8%	2,432	25%
1건	3,673	37%	3,622	37%	2,922	30%	2,092	21%
2건	1,228	13%	1,308	13%	1,155	12%	921	10%
3건	665	7%	803	8%	679	7%	572	6%
4~10건	1,834	19%	1,897	19%	1,936	20%	1,684	17%
10건 이상	1,553	16%	1,944	20%	2,262	23%	2,086	21%

② 추진 경과

국건위에서는 동 사항이 관련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실무회의, 현안협의회 등 조정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특히 2011년 7월 13일에는 신용평가기관 4개소에 자료요청을 하여 건축사사무소의 신용평가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축사사무소의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객관적 자료에 의한 시뮬레이션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되는 건축설계업의 불황 속에서 소규모 또는 신규 사무소를 포함한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를 확대하고 능력 있고 건실한 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었다.

표 5-17 신용평가등급 점수

구분	AAA	AA+~AA-	A+~A-	BBB+~BBB-	BB+, BB°	BB-	B+~B-	CCC+이하	비고
기존(평점)	10.0	10.0	10.0	10.0	10.0	9.0	8.0	6.0	
변경안(평점)	10.0	10.0	10.0	10.0	10.0	9.5	9.0	8.0	

③ 개선결과

국건위는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개선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종합하여 2012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 예규를 개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당초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 70%와 재무평가 30%으로 종합평가하던 것을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2012년 4월 2일 시행되었다.

2) 대형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도입 관련 대응

① 추진배경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구내 건축물의 경우 2002년 9월 서울시에서 조례로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2006년 7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 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결정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3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지

구 내 건축물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② 추진경과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에 연면적 20만m^2이상(조례로 10만m^2로 완화가능)인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 7월 22일 시행예정을 앞두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진행되었다. 건축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형 건축물의 증가추세에 맞춰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설을 위해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관련 업계·학계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동 제도가 중복규제라는 측면 등에서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였다.

③ 추진결과

국건위는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건의사항을 환경부에 전달하고 적의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이와 같은 대형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도입은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축정책으로서 제도도입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국건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동 사항을 「건축기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국건위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 5월 31일 환경부에 심의계획을 통보하였다. 동 사항은 국건위의 심의상정 준비중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시 부결됨에 따라 자연폐기 되었다.

3) 설계·시공·자재의 건축정보 호환을 위한 통합표준체계 구축

① 추진 배경

건축 설계·시공·자재의 건축정보 호환을 위한 통합 표준체계가 미흡하여 건축실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기존 시방서 및 자재정보가 대분류만으로 구분되어 공사시방서 등 서로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 설계도서 작성시 혼선 및 실용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BIM 진행시 발주자별로 요구하는 지침 및 제출도서가 상이하여 자료의 공유 및 용역사간 협업에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건축시장의 글로벌화 및 효율화를 위해 국내에 국한된 표준이 아닌 해외에서도 사용가능한 건축 설계·시공·자재의 건축 정보 호환을 위한 통합표준체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② 주요 내용

국제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설계·시공·자재의 건축정보 호환을 위한 통합 표준체계 구축 및 관련 정보의 DB화를 위하여 BIM 설계, 시방표준, 자재, 인증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축정보의 표준분류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건설정보 분류체계(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81), 내역서 분류체계(건설공사표준품셈), 건축공사수량산출기준(「국가계약법」 제14조, 입찰기준 제19조) 등 관련제도를 통합 조정해야 한다.

또한, 표준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건축설계·시방분야 기준강화, 건축자재 표준화 및 정보 DB화, 건축자재 인증 시스템 국제화 지원을 위해 BIM 등을 고려하여 표준·전문시방서에 자재성능 및 사양을 반영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건축 자재정보 표준 DB 마련 및 라이브러리, 템플릿 등 BIM 활용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하며, 해외건설시장에 통용이 가능한 인증방식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③ 추진 결과

2011년 10월부터 '건축 설계·시공·자재의 건축정보 호환을 위한 통합 표준체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삼우, 건기연 등) 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방안을 2011년 12월에 수립했다. 이후 과제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기술표준원, 조달청, 건기연 등과 관계 부처의 담당자 협의회의를 2012년 1월에 개최하여 과제의 필요성 인식과 R&D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건기평 '12년 국가 R&D사전연구와 연계검토 후 '13년 R&D로 진행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이후 과제의 유사중복 시행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와 BIM 관련 사전연구과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2012년 6월)하였으며 국토부 추진과제에 포함할 것을 검토 협의(2012년 7월) 하였고 그 결과 국토부(건축기획과)에서 추진 중인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하여 건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계환경 구축에 건축설계규정(KBC)의 표준화·국제화, 3D 중심으로 설계 환경 전환, 건축 자재·공법 DB 구축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4) 준주거지역 건축물 일조권 적용관련 규정, 위원회 심의

① 추진 배경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2012년 3월 21일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의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에 관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이 건축주 등 건축 관계자에게 심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국건위에 심의·조정 요청 접수되었다.

이에따라 2012년 3월 22일 16:00에 위원회 9층 회의실에서 위원회 이상정 위원장과 김창수 위원 외 13인의 위원, 부단장, 전략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국토부(건축기획과장), 법제처(경제법령해석과장), 대한건축사협회(정책연구실장, 소속건축사 등 2인)와 기획단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합동연석회의에서 논의하였다.

② 심의조정 결과

「건축법」 제61조 제1항은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인접한 다른 건축물의 일조확보를 위해 북측에서 일정거리 띄우도록 한 규정이고, 동조 제2항은 공동주택에 대해 자신의 주거환경을 위해 창이 있는 벽면에 대해 일정거리 띄우도록 한 것으로 공동주택 이외의 다른 건축물은 적용되지 아니한 규정이다. 따라서 준주거지역 등의 공동주택에 대해 동조 제1항까지 적용토록 하는 것은 일조 조건이 없는 다른 건축물을 위해 공동주택의 채광 등 주거환경을 해치면서까지 보호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입법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심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동의했다.

국건위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준주거지역 등에서는 동 규정이 입법된 이래 지금까지 동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개정 등의 아무런 상황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유권해석으로 적용토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행정행위이며, 동 행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 피해에 따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종전대로 계속 적용하고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개정해 줄 것을 권고하며, 동 권고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강제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4. 앞으로의 계획

2010년 4월 이후 건축행정제도 개선과제는 위원회의 대통령 보고회의 일정 등의 영향과 우선순위 등의 측면에서 타 과제에 밀려 위원회에서 더 이상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였지만, 건축신고제도 및 건축물 유지관리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와 건축디자인산업진흥법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위원회 차원에서 국민편의 증진과 건축디자인 향상 및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 발굴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제9절
2017 UIA총회 서울 유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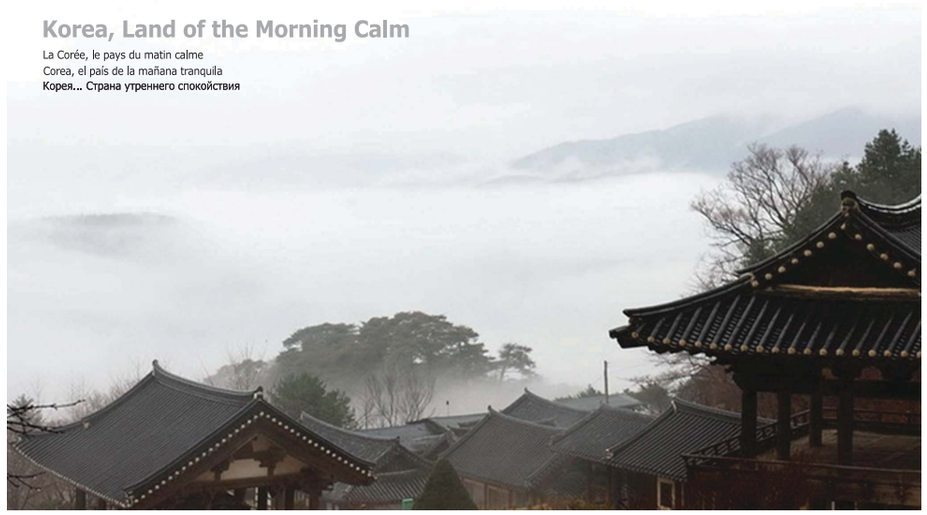


그림 5-44 UIA 유치 브로슈어

1. 추진 배경

UIA는 1948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되어 전 세계 123개국, 130만 건축가를 대표하는 세계 유일의 국제건축가(사)연합단체로, 3년마다 대륙별로 개최한다. 이 총회에는 6,000명 이상의 건축가와 1만 5,000여의 학생이 참석한다. 한국은 1993년, 2002년 대회 유치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실패하였고, 아시아에서는 1999년 베이징, 2011년 도쿄에서 2회만 개최되었다.

국제건축가연맹(UIA)은 124개국, 130만 건축가를 대표하는 UN이 인정한 국제건축가 연합기구로 1948년 스위스에서 설립되었으며, 총회는 건축가 및 학생들이 참가하는 세계건축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건축가협회는 1963년부터 우리나라 대표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2002년 이후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로 구성된 연합단체)으로 등록, 참여하고 있다.

지난 UIA 2011 TOKYO 의회는 1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5,000여 명의 전문가와 건축 및 도시 분야에 관한 학생 및 건축가들이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방사능 재해를 주제로 논의했다. UIA의회는 9월 25~28일 개최되었고, UIA 총회는 9월 29일~10월 1일 개최되었다.

UIA총회는 3년마다 대륙별 5개 권역으로 순환 개최된다. 2014년에는 더반에서 열릴 예정이다. 개최도시에서 차차기(6년 후) 개최도시를 결정하는데, 2017년 개최 도시는 지난 2011년 동경총회에서 서울로 결정되었다. 2017년 UIA 총회 신청 후보도시는 서울, 싱가포르, 멕시코시티 3개 도시였는데 서울이 경쟁국인 싱가폴, 멕시코를 제치고 2017년 제26회 세계건축 대회의 개최지로 결정된 것이다. 서울시는 대회유치를 위해 2010년 10월부터 한국건축단체연합(FIKA)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데 이어 일리노이 공과대학 교수이자 (주)서울건축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성 유치위원장과 FIKA 대표회장을 맡아 유치활동을 펴온 이상림 한국건축가협회 회장(공간그룹 대표)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벌인 끝에 이날 값진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옛것과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에서 도시의 본질을 찾겠다고 호소해 심사위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2. 추진 경과

1) 추진 전략 개요

UIA 2017 SEOUL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의 당위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한국건축단체연합회가 문화, 자연, 기술의 결집을 넘어선 건축에 초점을 맞춘 중추적 최신 테마 프로그램을 홍보했고, 서울시는 접근성, 최신 컨벤션 시설, 세계 일류 숙박시설, 매력적인 여행상품을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 한국건축단체연합회(FIKA)는 모든 UIA 멤버 섹션에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할 최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및 건축 개발 프로그램을 제안
- 국외 참가자들에게 서울은 찾아오기 쉽고, 물가가 합리적이며, 적

응하기 쉬운 도시임을 강조

- 서울은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건축발전을 지원하는 창의적 정책을 편다는 점과 유네스코로부터 디자인 창의도시(Creative City of Design)로 선정되었음을 강조
-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한국중앙정부, 서울시 및 관련 기관들의 광범위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전면적인 지원이 보장되어 있음도 설명
-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옛것과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에서 도시의 본질을 찾겠다고 호소

2) 총회 기간 제안

2017 국제건축가(사)연맹(2017 UIA World Congress of Architects and General Assembly) 서울대회의 일정을 2017년 7월 2일 일요일부터 7월 9일 일요일까지로 제안했다.

- 특히 대학생들의 방학 기간과 전문 건축사들의 휴가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 또한 2017년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의 이슬람교 라마단 기간, 9월 30일 유대교의 욤 키푸르(속죄일), 10월 1일부터 3일까지의 중국 국경일 등 다른 나라 공휴일과도 겹치지 않도록 했다.
- 제안된 일정에 즈음해서 서울에서는 한국 미술 여름 축제, 재즈 축제, 박물관 여름 축제, 국제 만화 및 애니메이션 필름 축제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도 즐길 수 있다.

3) 총회 주제 제안

총회 주제인 'Soul of Seoul, Soul of City(서울의 혼, 도시의 혼)'은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유구한 역사 속에 숨쉬는 한국의 수도, 서울의 고유한 특색들에 기초한다. 강, 하천, 산 등 자연요소뿐 아니라 첨단기술은 서울의 모든 건축 환경에 또 하나의 핵심 자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서울의 문화유산을 통해 도시의 특징을 재정의할 예정이다.

4) 기반시설

첨단 컨벤션 시설로서 코엑스는 서울의 중심상업지구의 심장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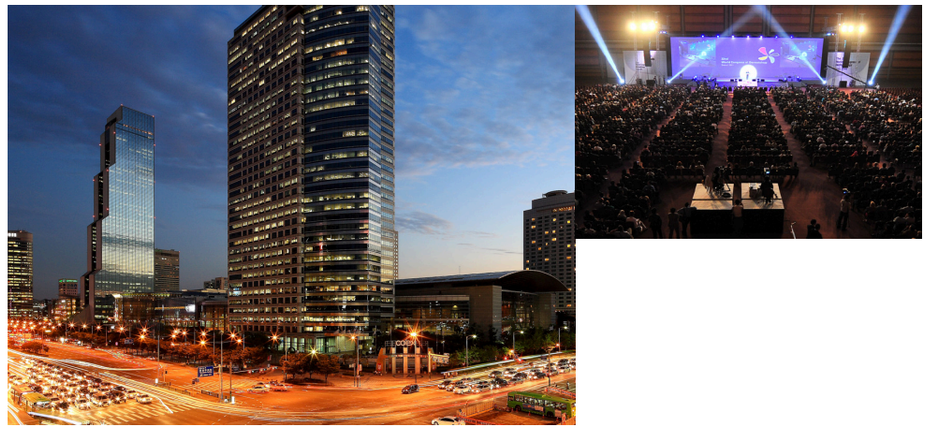


그림 5-45 코엑스 전경과 내부 행사시설

20년 이상 회의산업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엑스에 위치한 5성 호텔 3개, 대형 쇼핑몰을 기본 인프라로 모든 사업, 오락, 쇼핑, 문화 욕구를 한 지붕 아래에서 바로 충족할 수 있다. 코엑스 옆에는 항공기 탑승절차와 출국절차를 밟을 수 있는 도심 공항 터미널(City Airport Terminal, KCAT)이 위치한다.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고 6,000개의 좌석을 갖춘 컨퍼런스 시설, 본 회의를 위한 동시통역 및 녹화 시스템, UIA 총회를 위한 전자투표 시스템 등 모든 기술 설비를 완비하고 있다. 또한 한국건축단체연합(FIKA)는은 2017 UIA 서울 대회에 참석하는 참가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비를 할인한다.

5) 참고 자료: 「서울의 건축」

①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곳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내외국인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은 현대 생활양식과 유구한 역사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다. 21세기 궁극적 발전을 향해 전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은 에코 스마트 계획을 지지하고 있고 이 패러다임 전환은 인류의 성숙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② 활기가 넘치는 곳: 그 가능성의 체험장

신나고, 활기차고, 빠른 속도감, 생동감, 감각적 풍부함과 온기가 있

는 서울은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가능성의 도시다. 서울의 구석구석은 밤낮 없이 사람들로 가득하고 인상적인 상점과 대중문화가 즐비하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는 서울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고자 한다. 플라자의 설계자인 자하 하디드(Zaha Hadid)는 흐름을 건물 구조에 반영해 공간 유연성을 시각화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들러볼 가치가 있는 곳이며,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규범을 접목하고 있다.

③ 녹색 추구: 영혼(Soul)을 향한 유일한 길

한강과 복구된 청계천은 서울의 상서롭고 걸출한 상징이다. 서울 안팎의 여러 산과 근린공원, 수로들은 시민들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다. 북악산과 남산, 인왕산과 낙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구도심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짙은 향기를 느낄 수 있으며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④ 살아있는 역사: 과거와 현재의 연결성

서울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발자취이며 살아 꿈틀대는 역사적인 유산이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보전되어 온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은 우리의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며 도시 공간에 새로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동과 서울시청 주변으로 남아있는 근대문화유산은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우리 역사의 가교로서 역사의 장대한 파노라마를 완성시키고 있다.

⑤ 유비쿼터스 도시

속도와 변화의 아이콘이 된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서울은 막강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유비쿼터스의 도시를 이루고 있다. 쌍방향적인 미디어의 출현으로 서울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새로운 환경으로 거듭나고 있다.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교통, 환경, 방범, 방재, 행정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 서울은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선두를 이끌고 있다.

⑥ 미래의 번영으로 인도하는 첨단기술 산업 클러스터

서울은 가까운 미래에 경제성장을 달성시킬 첨단기술 산업 클러스



그림 5-46 UIA 유치 브로슈어

터를 개발 중이다. 서울은 세계 최고의 디자인 허브가 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전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서울 디자인 올림픽 등 많은 이벤트를 개최해 왔다.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는 2년마다 세계의 여러 도시 중에서, 혁신적 디자인을 증진시키고 디자인을 사용해 도시 환경을 소생시키고 재창조하는 성과를 이룬 도시를 선정해 명예상을 수여하는데, 서울은 2010년에 세계 디자인 수도로서 상을 수상했다

⑦ 미래지향적 경관: 세계를 향한 또 다른 날
서울은 창의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이뤄가고 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UNESCO creative cities)의 일원으로 서울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도시 간 협력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창의산업 육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이룩해가고 있다.

3. 주요 활동

1) 유치활동 지원

'서울의 밤' 만찬회 격려 및 총회 참석 등 서울시와 FIKA의 서울 유치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서울의 밤' 행사 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건배사에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하며 각국의 참석자들에게 서울시의 유치의지 및 공신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 공식 만찬 전, 리셉션을 마련해 청사초롱 장식, 한국 전통놀이를 통해 참가자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 조성

표 5-18 유치위원 담당지역 홍보활동 내용

지역	국가명(표수)	담당위원	담당국가
1지역	Austria 3, Belgium 5, France 7,	이정만 집행위원(총괄)	룩셈부르크, 노르딕국가, 스페인, 독일
(15개국)	Germany 8, Ireland 2, Italy 10,	A. 박제유 실무위원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포르투갈, 말타
73표	Netherlands 5, Nordic Countries	B. 이재림 실무위원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안도라, 네델란드, 벨지움
	(Denmark, Finaland, Sweden, Iceland,	C. 임재용 실무위원	영국, 전시커미셔너
	Norway) 7, Portugal 5, Spain 7, Swiss 4,		
	United Kingdom 7, Andorra 1,		
	Luxembourg 1, Malta 1		
2지역	Baltic Countries(Estonia, Latvia,	조성중 위원장(총괄)	그리스, 러시아, 폴란드, 체코, 시리아,
(30개국)	Lithuania) 3, Belarus 2, Bulgaria 3,	A. 강병준 실무위원	발틱국가,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조지아, 이스라엘
86표	Croatia 3, Czech Republic 4, Georgia 3,	B. 이옥화 실무위원	카자흐스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Greece 6, Hungary 4, Israel 4,	C. 이세영 실무위원	슬로베니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인, 레바논
	Kazakhstan 3, Lebanon 4, FYR of	D. 김성민 실무위원	아프가니스탄,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터키
	Macedonia 3, Poland 5, Romania 4,		
	Russia 5, Serbia 3, Slovak Republic 2,		
	Slovenia 2, Syria 4, Tajikistan 2,		
	Turkey 7, Ukraine 3, Afghanistan 1,		
	Armenia(비활동 1), Azerbaijan 1,		
	Bosnia/Herzegovina 1, Cyprus 1,		
	Kyrghyzstan 1, Palestine 1, Uzbekistan 1		
3지역	Bolivia 3, Brazil 7, Canada 4, Colombia 6,	한종률 집행위원(총괄)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푸에르토리코
(15개국)	Costa Rica 2, Mexico 6, Puerto Rico 2,	A. 정재희 실무위원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브라질,
45표	United States 11, Argentina(비활동 5),	B. 김희준 실무위원	스페인어권 전지역 담당
	Barbados 1, Chile(비활동 5),		
	Ecuador(비활동 6), Honduras 1,		
	Netherlands Antilles 1,		
4지역	Australia 5, Bangladesh 2, China RP 8,	이근창 집행위원(총괄)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21개국)	Hongkong 3, India 7, Indonesia 4,	A. 김지덕 실무위원	태국, 홍콩,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마카오
77표	Japan 7, Kuwait 2, Malaysia 2, Monglia 2,	B. 신춘규 실무위원	몽고, 베트남, 스리랑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New Zealand 2, Pakistan 3,Philippines 6,	C. 정재욱 실무위원	방글라데시, 마카오,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R. of Korea-S.Korea 6, Saudi Arabia 3,		
	Singapore 2, Sri Lanka 2, Thailand 5,		
	Viet-Nam 4, Iran(비활동 3), Macao 1,		
	Ireland 2, Italy 10, Netherlands 5,		
	Nordic Countries(Denmark, Finaland,		
	Sweden, Iceland, Norway) 7, Portugal 5,		
	Spain 7, Swiss 4, United Kingdom 7,		
	Andorra 1, Luxembourg 1, Malta 1		
5지역	Cote d'Ivoire 2, Democratic Republic of	한만원 실무위원(총괄)	이집트, 나이지리아, 가나, 코트디부아르,
(23개국)	the Congo 2, Egypt 7, Ethiopia 2,		남아프리카 (1지역 프랑스, 이탈리아,
41표	Kenya 2, Morocco 3, Nigeria 2,		스위스 추가지원)
	South Africa 3, Sudan 2, Tunisia 3,	A. 심재현 실무위원	콩고민주공화국, 에디오피아, 케냐, 모로코,
	Uganda 2, Angola 1, Benin 1,		튀니지아, 수단, 우간다
	Cameroon 1, Cape Verde 1,	B. 한영근 실무위원	불어권
	Congo(Republic of the Congo) 1,		
	Ghana 1, Mali 1, Mauritius 1, Namibia 1,		
	Senegal(비활동 1), Tanzania 1, Zambia 1		



그림 5-47 2017 UIA총회 서울 유치 추진단, 자료제공 한국건축가협회

- 행사 전문 요원 및 한국참석자들의 한복 착용 등을 통해 한국적인 분위기를 전파
-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자연스러운 대화로 서울의 격을 보여주고, 인간적인 교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홍보
- 특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건배사를 통해 UIA 총회 유치의 필요성 및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여 각국 참가들에게 신뢰성을 제고. 서울시는 유치 성공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협력을 통해 2017 UIA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을 다짐.

2) 건축도시 관련 동향 파악과 건축계의 다양한 노력 청취

2011 UIA 도쿄 총회를 통해 재해 재난 대비, 미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 기후변화에 따른 대처 등 건축·도시 관련 세계적 동향을 파악했다. 특히 기존 건축도시적 맥락과 거주민의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재생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한 건축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했다. 현재 국건위 안건 중 저층주거지 보존방안이나 해피하우스와 같은 도시재생 안건과 녹색건축도시 안건을 꾸준히 개발하고 건축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2017년 유치 결정 총회 참석

왜 한국에서 개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 (총20분)가 있었다.

- Introduction-Seoul 유치프리젠테이션(안정현, 1분)
- FIKA & Seoul 열정(이상림 회장, 1분 30초)
- Seoul 지원의지(이건기 국장, 1분 30초)
- Film1. Opening(동영상): I love Seoul, I love Architecture(1분 35초)
- Theme, Soul of City (김종성 위원장, 3분, 테마설명)
- Young Dream(박정윤, 2분)
- UIA 2017 SEOUL 유치제안(4분 30초)
- Film2. (Main Film) 공존과 기회의 도시, Seoul(3분 25초)
- Performance: U & I Are friends in Seoul(5명, 1분 30초)



4. 성과 및 의의

유치 후보 도시 중 싱가포르, 멕시코시티를 큰 표 차이로 제치고 대한민국 서울이 유치에 성공했다.

- 1차 투표(총 252표)결과: 싱가포르(85표, 33.7%), 서울(123표, 48.8%), 멕시코시티(44표, 17.5%)
- 2차투표(총 252표)결과: 싱가포르(106표, 42.1%), 서울(146표, 57.9%)

UIA 집행부(2011년도~2014년도) 선출에서도 제4지역(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이사에 한종률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이 당선되었다. 서울 총회 개최로 각국 6천 명 이상의 건축가(학생·관계전문가 포함시 3만 명) 방문이 예상되며, 각종 학술행사 및 건축 관련 여행상품 등을 통해 막대한 경제파급 및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통 및 현대 건축문화자산 등 관광자원의 국제적 홍보를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제10절
2014 도코모모 국제회의 서울 유치 지원

1. 추진 배경

제13회 도코모모 국제회의를 유치함으로써 2017년 UIA세계대회와 연계하여 한국의 근대건축과 근대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 건축문화를 홍보하고 그 품격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도코모모(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of building, sites and neighborhoods of the MOdern MOvement, 회장 Ana Tostoes)는 근대건축에 관한 세계적인 학자와 이론가들 그리고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규모 세계 대회이다. 근대건축과 문화유산 및 주변 환경의 기록과 보존을 위하여 1988년 출범한 국제단체로 2012년 현재 56개국이 참여하여 활동 중이다.

한국에서 근대건축에 대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은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동·서양의 모더니즘의 충돌과 확장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근대문화를 재조명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홍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코모모 인터내셔널은 1988년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Eindhoven) 공과대학에서 열렸던 국제회의를 계기로 정식으로 발족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아인트호벤 선언 'DOCOMOMO 헌장'의 정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유네스코 산하 단체다. 현재 59개국의 각 지부에서 추천한 2300여명의 국제본부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건축역사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가, 건축가, 도시, 건축, 토목, 조경기술자, 행정관계자, 시민 등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도코모모 코리아(한국근대건축보존회)는 2003년 5월 근대건축물 조사·연구·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한국근대건축유산 보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2005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다.

2년마다 열리는 도코모모 국제회의는 그동안 1회 네덜란드 아인트호벤(1990년), 2회 독일 데사우(Dessau, 1992년), 3회 스페인 바르셀로나(Barcelona, 1994년), 4회 슬로바키아의 스리악과 브라티슬라바(Sliac and Bratislava, 1996년), 5회 스웨덴 스톡홀름(Stockholm, 1998년), 6회 브라질 브라질리아(Brasilia, 2000년), 7회 프랑스 파리(Paris, 2002년), 8회 미국 뉴욕(New York, 2004년), 9회 터키 이스탄불과 앙카라(Istanbul and Ankara, 2006년), 10회 네덜란드 로테르담(Rotterdam, 2008년), 11회 멕시코 멕시코 시티(Mexico City, 2010년)에서 열렸다.

2. 추진 경과



그림 5-48 도코모모 국제회의 서울 유치, 자료제공 한국건축가협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2012년 8월 6~10일 핀란드 엑스포 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2회 도코모모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개 세션별 발표 및 토론, 위원회 미팅, 원탁회의, 전시회 등이 이어졌다. 전 세계 건축학자 및 건축가 500여명이 참여했고, 국건위(이상정 위원장, 엄운진 연구위원),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김상구



그림 5-49 2014년 도코모모 컨퍼런스 서울 유치 지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상정 , 사진 윤준환

과장 외 2명), 도코모모 코리아(김태영 회장, 김종헌, 김태우 유치위원장, 김종성 고문 등 15여 명) 등 20명이 참석했다.

국건위는 차기 회의 개최도시 제안 발표 때 도코모모 인터내셔널 회장단인 아나 토스토에스(Ana Tostoes)와 이반 블라시(Ivan Blasi), 도코모모 핀란드 회장단인 티모 투오미(Timo Tuomi), 리나 마코넨(Leena Makkonen), 도코모모 일본 회장 야마나 요시유키(Yamana Yoshiyuki) 등 주요 회장단과 이사국 면담을 통해 지지를 요청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도코모모 주요 회장단 만찬과 개회식에 참석해 우리나라 유치 지지를 요청했고, 차기회의 개최 도시 제안 발표 때 연설에 나섰으며, 이후 핀란드건축박물관 및 디자인전시관 주관 행사에도 참석했다.

3. 주요 내용

2014년 제13회 도코모모 국제회의의 한국 유치가 확정되었다. 2014년 9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59개국, 800여 명



그림 5-50 폐막식 후 기념촬영(김태영 회장, 이상정 위원장, 아나 토스토에스(Ana Tostoes) 도코모모 인터내셔널회장, 김종성 고문, 김태우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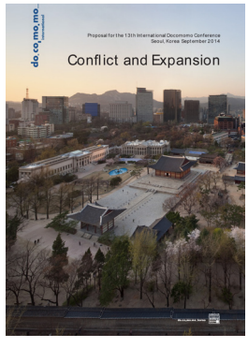


그림 5-51 제안서 표지

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리게 되는 2014년 국제 컨퍼런스 서울 대회의 중심 주제는 '충돌과 확장(Expansion and Conflict)'이다. 도코모모 코리아는 이런 주제 설정을 통하여 "서울 대회가 유럽이나 미국 중심의 모더니즘이 아시아의 전통문화와 충돌하면서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 그 내용과 과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특히 모더니즘의 확장과 충돌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 모더니즘의 본질을 재조명하고 우리 근대문화유산의 독창성과 건축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경복궁 동쪽 옛 국군기무사령부 자리에 세워지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게 될 2014년 도코모모 국제 컨퍼런스 서울 대회의 세부 행사로는 국제·국내 세미나, 국제 심포지엄(학술·기술) 및 워크숍, 도코모모 인터내셔널 국가대표단 회의, 세계근대문화유산 전시, 한국 근대문화유산 투어,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고 있다.

4. 진행 상황

2012년 8월 유치 결정 이후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부처인 문화재청, 도코모모 코리아 등이 모여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 9월에는 도코모모 국제회의 추진위원회 구성 및 행사 준비에 착수했다.

5. 성과와 의의

이번 행사는 아시아권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근대건축 논의에 대하여 많은 회원국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사이다.

'충돌과 확장'이라는 의제로 열리게 되는 이 행사는 유럽이나 미국 중심의 모더니즘이 아시아의 전통문화와 충돌하면서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 그 내용과 과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모더니즘의 확장과 충돌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 모더니즘의 본질을 재조명하고 우리 근대문화유산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특히, 도코모모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원래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이 국군기무사령부로 사용되었다가 미술관으로 사용될 근대문화유산이 보존 및 활용되는 대표적인 예로서, 한국의 근대문화유산 보존운동을 세계적 활동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건위에서는 작년 10월 2017년 UIA(세계건축가연합) 세계건축대회 유치에 이어 이번 도코모모 국제회의에도 이상정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여 지지연설 및 주요 회장단 면담을 통해 한국유치를 적극 지원했다. 제13회 도코모모 국제회의(2014) 유치를 통해 2017년 UIA 세계대회와 연계하여 한국의 근대건축과 근대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한국건축 문화홍보 및 품격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06

평가와 과제

1. 성과와 평가
2. 앞으로의 과제

1.
성과와 평가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간의 양적 공급 위주의 건축정책에서 벗어나 국토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방향 전환의 요구가 건축계 안팎에서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국토경관 향상을 위해 도시공간, 건축물, 가로시설물, 농어촌 경관 등의 디자인이 연계·통합되도록 총괄 조정하기 위해 출범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와 '녹색성장 기반구축' 등 핵심 국정 기조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우수한 국토경관 사례가 늘어나고 녹색건축물과 안전한 생활공간이 확산되고 있으며, 미래성장을 위한 기반도 착실히 마련되고 있다.

분야별로 성과를 종합해 살펴보면, 첫째, 제도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국건위에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를 두어(2009년 1월) 관계부처의 경관·건축계획 등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국토해양부에도 건축문화경관팀, 녹색건축과가 신설되고 고위공무원으로 건축정책관이 새로 생겨나면서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정책수립 및 집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초로 국가 단위의 독립된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2010년 5월)하여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를 위한 중장기 건축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기초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시·도 단위의 지역건축계획도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이다.

둘째, 선진 건축문화 창출을 위한 노력으로서, 국가와 지역의 대표거리 조성 추진, 한옥의 보전 및 활성화, 한국 전통정원의 조성 및 보급 등이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신진건축사의 발굴·육성 방안 마련·시행, 건축교육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등을 통해 선진 건축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병행해서 조성했다. 특히, 건축계,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진흥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여, 건축계의 오랜 염원이 해결단계에 와 있게 되었다(2012년 11월 법사위 상정 중). 이 밖에도, 선진국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젊고 역량 있는 신진 건축사를 발굴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시범사업을 2012년 10개 사업에 걸쳐 진행하여 그 가능성을 엿보았다.

셋째, 국격 향상을 위한 디자인 및 친환경 정책과 관련하여, 국토환경디자인 정책으로서 건축디자인 기준 마련·제시(2009년), 디자인 시범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5건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을 위해 경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관법 개정안 추진(2012년 10월 국회 제출) 등과 친환경 정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2012년 2월), 패시브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보급(2012년 9월) 등 에너지가 덜 드는 녹색건축·녹색도시 만들기 기반도 착실히 조성해 나갔다. 특히, 4대강 수변공간 재생디자인을 통해 비닐하우스로 뒤덮여 방치되어 있던 하천 주변을 친수공간이자 국토경관을 선도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창 면적비 축소, 층고 조정, 창 반사율·차양기준 적용 등 에너지가 덜 드는 패시브 디자인을 통해 에너지를 15% 이상 절감하는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2012년 4월)드리고 적극 추진한 바 있다.

넷째,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2011년 제2기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건축도시정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지속해 왔다. (2년간 12회) 그리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공동으로 건축·도시분야의 담론인 건축설계산업의 위기극복, 건축교육제도의 개선방안, 새 정부의 건축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건축계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2008년 12월 국건위 출범 이후 건축 관련 단체, 주택건설 관련 단체, 관련 기술단체 등과 지속해서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련 업계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갔다. 또한, 건축관련 단체별로 분산 시행해 오던 건축문화 행사들을 집중·내실화하여 건축의 날을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적극 변모시켰다. 어린이 한옥체험교실(2012년 5월), 대한민국건축문화제(2012년 9월), 건축산업대전(2012년 10월),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2012년 11월), 건축문화대상, 공공건축상, 경관대상, 한옥공모전(2012년 12월) 등을 통해 계속해서 건축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밖에도, 단독주택지의 관리서비스 사업인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영유아 보육시설의 개선 및 확충 사업인 해피차일드, 대도시나 중

소도시의 저층주거지 근린 재생, 값싸고 볼품없는 임대주택에서 서민이 만족하고 자긍심을 가지는 행복주택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명품 디자인의 보금자리주택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지속해서 개발하여 추진해 왔다. 한편, 2017년 UIA 서울 총회 유치와 2014년 도코모모 국제회의 서울 유치를 통해, 전통과 현대와 미래, 자연과 도시 등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역동성 넘치는 건축문화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에도, 1기·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조직 내적인 측면과 조직 외부와의 관계적 측면 모두에서 한계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조직 내부적인 모습을 들여다보면 첫째, 정책 발굴과 개발의 역량에서 좁은 의미의 건축에만 한정된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점적인 측면의 건축물에서 선적이며 면적인 공공공간, 공간환경, 연결된 공간, 상호 소통하는 커뮤니티 등 국민 생활환경 전반을 포괄하는 거시적인 아젠다 세팅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이 양적·질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건축행정도 이에 들어맞지 못하고 인·허가 규제 위주의 행정 개선과 민원의 단순처리에 여전히 급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흡했던 사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축도시 관련 정책들을 지속해서 발굴하여 꾸준히 추진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둘째, 인적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건축·도시계획·디자인·조경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나, 다양해진 수요에 맞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외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기획단도 국토해양부와 지자체로부터의 파견에 한정되다 보니, 문화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통합적인 건축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위원회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주요업무인 관계부처의 건축정책의 심의·조정, 주요사업의 지원 등에 있어 체계적인 업무시스템 미비로 정책 확정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심의에만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현상을 낳았다. 또한, 개선방안이 확정되어 관계부처에 실행계획이 통보된 후에도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과제관리시스템이 거의 작동되지 못했다.

조직 외부와의 관계적 측면에서도 국민과 지역주민, 관련 업계에 찾아가는 의견청취의 모습을 적극 구현했지만, 실제 상대방이 원하는,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라는 건축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 채 일방적인 홍보와 정보전달의 기회로만 활용하는 한계를 보였다. 오히려, 관련이 없거나 간접적인 대상 집단들을 통해 건축이 국민의 실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을 기회로 적극 활용하지 못했다.

2.
앞으로의 과제

첫째, 정책 개발 측면에서 우리의 건축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되, 투 트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공간단위의 정주여건 개선사업, 우리 마을 함께 가꾸기, 지역 명소거리 만들기, 아름답고 개성 있는 간판 디자인, 공공시설의 복합 활용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중단기 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건축계의 역량을 점진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건축규제 대폭 완화, 설계 대가 기준 현실화, 발주제도 개선, 건축저작권 문제 정립 등 건축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

둘째, 건축의 역할 확대 측면에서 인구·가구구조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주거복지, 도시재생, 건축과 보육의 결합, 귀농어촌에 대비한 건축, 품격 있는 교육시설 구축 등으로 건축의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건축의 개념을 극복하여 타 분야와 협업하는 상생의 자세가 필요하다. 위원회와 기획단 구성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시민단체, 지역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인문·사회분야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문화·농림부 등의 파견 확대로 부처 간 정책교류를 적극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 측면에서, 정책 발굴 및 기획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 합동 연구개발을 통해 부처 간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연구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와 건축정책 관련 부처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협의체 구성·운영을 상시화하고 합동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관련 건축정책의 유기적인 통합 및 연계·조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부처 간 단편적으로 분산 시행되는 재정 지원사업 중 저소득 취약계층 주택 에너지성능 제고를 위한 개보수 사업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국토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ESCO(지경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농림부) 등으로 나뉘어 집행되고 있다. 또한, 위원회 단장, 부단장 주재 조정회의를 정례화하여 정책 수립 단계별로 사전에 조율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과제 관리카드 작성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본회의에 정례 보고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쌍방향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건축정책 제안 및 불편 해소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주민, 업계 및 지방행정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행사 시 수요자 입장에서 의제 설정이 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끝까지 국민 입장에서 건축행정이 관철되고 건축이 지역주민에게 피부로 체감되는 혜택을 실현할 수 있을 때, 찾아가는 소통의 노력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07

부록

1.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2.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3. 주요 과제별 추진 경과
4. 1·2기 주요 언론보도 내용
5. 주요 활동일지
6. 기획단 직원 현황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위촉위원(13명)

성명	주요 경력
정명원 (위원장)	•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명예회장
	•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원장
	• ㈜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류춘수	• 우송대학교 우송건축설계원 원장
	• ㈜건축사사무소 이공 대표
	•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김인철	•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한국건축가협회 명예이사
	• ㈜아르키움 대표건축가
안건혁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도시설계학회 고문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실 실장
양윤재	•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 서울시 행정부시장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김영섭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서울시 디자인위 부위원장
	• 김영섭+건축문화 대표
김광현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 한국건축학교육협의회장

성명	주요 경력
최두남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DUNAM CHOI ARCHITECTS 대표
손세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
김혜정	•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한국건축설계교수회 회장
	• 한국여성건설인협회 초대회장
최명철	• ㈜단우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한남뉴타운 MP
	•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채선엽	• 동부엔지니어링 전무이사
	• 서울시 건축기술심의위원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
이진숙	• 충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한국색채학회 회장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당연직위원(16명)

기획재정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법제처장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위촉위원(18명)

성명	주요 경력
이상정 (위원장)	•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 前 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
	• 대한건축학회 참여이사
구영민	•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
	• 파리 발데샌대학 교환교수
김선미	• LH공사 처장
	•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
	• 부천 상동 조경설계
김현선	• 김현선디자인연구소 대표
	• 한국경관학회 상임이사
	• 한국공간환경디자인학회 부회장
배시화	• 가천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건축학회 이사
	• 前 여성건축가협회장
백운수	• ㈜미래E&D 대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 前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부회장
이정면	•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前 ㈜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 前 JDA+Architecture
이제선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 도시설계학회 이사
제해성	•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성명	주요 경력
강준모	•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김민수	•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
	• 前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
김창수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
	• 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 수석 부회장
	• 前 한국건축가협회장
김현숙	•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
	•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
백명진	•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 한국도시설계학회 상임이사
	• 前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위원
오경은	• ㈜피아건축 대표
	• 한국여성건축가협회장
	• 前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이정형	•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
	• 前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이진숙	• 충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최막중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당연직위원(9명)

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환경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요 과제별 추진 경과

		1기			2기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선진 건축문화 창출 및 기반조성	국가 및 지역의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경기, 서울, 부산 건축기본계획 수립 완료
	국가상징거리 및 지역대표거리 조성						2008년 8월 15일 대통령 8·15 경축사로 국가상징거리 조성 천명 2008년 12월~2009년 4월 사전기획 연구(국토부) 2009년 6월~2010년 11월 마스터플랜수립 연구(국토부·서울시 공동)
	신한옥의 보급 활성화						동탄1 대체농지를 활용한 한옥마을 시범조성 추진
	한국전통정원의 조성 및 보급						2012년 6월 27일~2012년 12월 23일 정책연구 수행
	건축설계산업 육성 및 발주제도 개선						2010년 12월 23일~2011년 8월 19일 정책연구 수행 2012년 11월 23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안 법사위 상정 2012년 12월 6일~2013년 4월 6일 발주평가제도 개선관련 정책연구 수행중
	신진건축가 발굴·육성						2012년 4월 5일 신진건축가 발굴·육성방안 마련(장기적으로 지속 추진)
	건축교육제도 개선						2012년 8월 20일 제3차 건축도시정책토론회 논의
	건축사 손해배상책임보험 활성화						2012년 3월 18일~2012년 7월 25일 정책연구 수행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2012년 3월 29일~2012년 9월 22일 정책연구 수행
국격향상을 위한 디자인 및 친환경 정책	국토환경디자인 정책						건축디자인기준 수립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						2012년 10월 18일 국회에 경관법 개정안 제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선정						계속 사업
	4대강 수변공간 재생디자인						
	녹색건축 활성화 및 지원						2010년 8월 27일~2011년 1월 23일 정책연구 수행
	공공건축물의 품격향상 및 효율적 관리						2010년 4월 14일~2010년 9월 10일 정책연구 수행
	공공공간 가치창출 및 이용활성화						2011년 7월 26일~2012년 3월 21일 정책연구 수행
	녹색도시 해외수출 지원체계 구축						2011년 9월 13일~2012년 2월 12일 정책연구 수행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도시 정책	전국순회포럼 등을 통한 일선행정과 공감대 형성						연6회 총12회 전국순회포럼 개최
	건축·도시 주요담론 고찰: 건축·도시 정책토론회						총4회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건축문화 축제 내실화						
	해피하우스: 단독주택지 관리 서비스 사업 활성화						
	도심 저층주거지 근린재생						2차례 정책연구 수행 2011년 7월 28일~11월 24일, 2012년 5월 31일~2013년 1월 25일
	해피차일드: 보육시설 개선 및 확충						
	보금자리 주택 품격 향상						
	건축행정 제도개선						2012년 5월 대형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응 등
	2017 UIA 총회 서울 유치 지원						2011년 9월 29일~10월 1일 일본 동경대회 참석
	2014 도코모모 국제회의 서울 유치 지원						2012년 8월 6일~10일 핀란드 헬싱키대회 참석

1·2기 주요 언론보도 내용

연합뉴스 “지방 중소도시 노후·불량주택 26%… 개선 시급”
국토부, 지방 중소도시 정책 토론회 개최

2012년 12월 3일 자 연합뉴스

“지방 중소도시 노후·불량주택 26%… 개선 시급”
국토부, 지방 중소도시 정책 토론회 개최

국토해양부는 3일 전라북도 도청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지역개발학회, 전북도와 함께 지방 중소도시 노후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의 일환이다.

토론회에는 정부와 학계, 민간전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역개발학회의 지방 중소도시 실태조사를 토대로 주거지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지역개발학회 조사 결과 전국의 노후·불량주택 비율은 18%인 반면 지방도시는 26.2%에 달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그동안 주택 성능 개선이 미비해 설비 노후(23.5%), 구조결함(30%), 마감·오염(39%) 등 주택의 품질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만 미만의 도시에서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주택이 8.5%에 달했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이 많아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도 컸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빈집 등 개보수가 불가능해 철거해야 하는 주택도 전국적으로 6천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이날 토론회와 관련 연구 용역,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에 지방 중소도시 노후 주거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박승기 주택정비과장은 “지방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산업 침체, 지자체의 낮은 재정여건 등으로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유인이 적고 성장 잠재율 또한 낮아 주거지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 개선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미숙 기자〉

서울신문 노원에코센터, 전국 제일 녹색건축물
녹색건축대전 최우수 작품 선정

2012년 11월 2일 자 서울신문

노원에코센터, 전국 제일 녹색건축물
녹색건축대전 최우수 작품 선정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장으로 쓰이는 노원에코센터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녹색건축물로 인정받았다. 노원구는 지난 2월 개관한 노원에코센터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공모한 ‘2012 제1회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녹색건축대전은 녹색건축물의 조기 정착과 국민생활 속에서 녹색건축 실현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건축 창출’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실시했다.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8점 등 모두 12개의 건축물을 선정했다. 시상식과 전시회는 21일 오전 9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다.

노원에코센터는 건축비 17억원을 들여 폐수영장 관리실을 리모델링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649㎡)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 전국 최초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지하 150m 깊이에 지열관 3개를 설치하고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해 냉·난방 기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옥상에는 10㎾, 15㎾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 태양열 설비(16㎡)를 설치해 온수로 사용한다.

별도 기계장치 없이 에너지 절약요소 기술만으로 기존 건축물 대비 난방에너지를 88% 절감할 수 있으며, 패시브요소(에너지절약형 건축물) 기술만으로 건물에너지(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를 45% 절감하도록 했다. 그동안 초중고생, 주민 등 1만 500여명이 다녀가는 등 지역 주민들이 함께 배울 수 있는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강국진 기자〉

동아일보 화성 동탄에 300채 규모 한옥마을 조성
국가건축정책위 업무보고

2012년 4월 26일 자

東亞日報

화성 동탄에 300채 규모 한옥마을 조성
국가건축정책위 업무보고

한국 전통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300채 규모의 전통한옥 마을이 조성된다.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5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건위는 동탄신도시에 전통한옥 마을과 함께 한옥 컨벤션센터, 한옥호텔, 전통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국가한옥센터를 통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등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또 선진국의 50% 수준에 불과한 국내 건축설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을 제정하고 청년 · 신진건축가의 건축설계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설계발주 방식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에너지가 덜 드는 건축물과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건축물의 창면적비와 층고 조정, 창반사율, 건물배치, 일사량 등을 감안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바람길, 일사량, 녹지 등을 고려하고 자전거길과 보행로를 우선 조성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4대강 주변 등 농어촌 경관 향상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건축디자인 및 색채 기준도 마련해 국토 전반에 걸친 경관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재영 기자〉

연합뉴스 李대통령 건축 발전하려면 '미친천재' 나와야"
국가건축정책위 보고… "정부 규제도 변화 맞춰 손봐야"

2012년 4월 25일 자

연합뉴스

李대통령 "건축 발전하려면 '미친천재' 나와야"
국가건축정책위 보고… "정부 규제도 변화 맞춰 손봐야"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우리 건축설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세계가 인정하는 `미친 천재'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러면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택문화가 큰 변화를 맞고 있고 우리나라 건축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점에 와있다"면서 "정부도 과거 규제를 향후 변화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을) 트렌드 변화 과정이라고 보고 정부 정책을 잘 수립해야 한다"면서 "국가 건축정책위가 중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그런 제안을 많이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우 기자〉

서울경제 “신진 건축가 키우자…” 한국식 ‘유로판’ 추진
국토부, 올해부터 시범실시

2012년 4월 5일 자

서울경제

“신진 건축가 키우자…” 한국식 ‘유로판’ 추진
국토부, 올해부터 시범실시

정부가 신진 건축가 육성을 위해 한국식 ‘유로판(Europan)’ 사업을 추진한다. 유로판이란 유럽에서 40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2년마다 개최하는 설계공모전이다.

국토해양부는 5일 열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진 건축사 발굴 · 육성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설계공모전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SH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공공기관에서 10개의 설계공모를 발주할 예정이다.

공모는 주로 소규모 아파트나 도서관、문화복지시설에 시범 적용되며 상반기 중 학교시설도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신진 건축사 육성 사업에 나선 것은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턴키 방식의 경우 입찰에 많은 비용이 들고 입찰자격사전심사(PQ)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이 필요해 신진 건축사들의 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능력 있는 젊은 건축사들을 발굴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신진 건축사 대상 설계공모를 정례화하고 사업규모 및 적용 분야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서울경제신문 · 대한건축사협회와 공동 주최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신진 건축사 부문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혜진 기자〉

아시아투데이 국건위, 건축 도시문제 수렴 위해 현장속으로
수도권 건축 도시정책포럼, 21일 수원에서 개최

2011년 11월 17일 자

아시아투데이

국건위, 건축 도시문제 수렴 위해 현장속으로
수도권 건축 도시정책포럼, 21일 수원에서 개최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상정, 이하 국건위)는 지역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의 연속으로 제5차 전국순회포럼인 수도권 건축 도시정책포럼 을 오는 21일 14시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역순회 포럼에는 국건위 이상정 위원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신영수(한나라당, 성남 수정) 조정식(민주당, 시흥 을)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및 지역 건축전문가, 공무원,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월드컵경기장內 컨벤션에서 수도권의 건축 · 도시문화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수도권 지역에 산적한 건축 도시 과제의 해결방향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수도권 주민들이 그 효과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체감형 건축 도시정책과 기후변화 및 재해 재난대비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건축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수도권이 지닌 중요성과 전국적 파급효과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에서도 건축 도시 문화의 중요성을 함께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포럼의 주제는 건축산업 진흥, 도시재생, 경관, 건축자산 활용 등을 선정해 전국의 주요 이슈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과학기술대 강부성 교수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 이란 주제로,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은 저층주거지역 재생방안 이란 주제로, 황순우 (주)건축사사무소 바인 대표는 근대문화유산 보전 활용방안 이란 주제로, 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정책방안 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국건위는 이번 포럼을 통해 수도권의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축 도시정책을 발굴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지역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전국 순회건축 도시정책 포럼이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되는 만큼 경기도 지역특성을 담아 올 6월 전국 최초로 수립한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과 도의 건축문화자산의 우수성 정체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자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홍 기자〉

조선일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도시정책 토론회 가져

2010년 9월 27일 자 朝鮮日報

국가건축정책위, 도시정책 토론회 개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우리는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도시분야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는 2008년 출범해, 국토환경디자인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분야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전문가의 현장 의견을 들어 실용적 건축정책을 수립하고자 마련했다. 서울대 정창무 교수가 '야만의 도시에서 야망의 도시로'라는 주제로, 협성대 이재준 교수가 '도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그린도시 조성'을 주제로, 제일엔지니어링 윤중경 사장이 '삶을 디자인하는 도시계획과 정책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시간에는 산 · 학 · 연 · 관의 대표가 참가해 지정토론을 하고, 방청객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조경학회 등이 공동주관한다. 도시 · 건축분야 기술사 등 도시관련 산 · 학계 관계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정책제안들을 듣고, 품격 있는 도시와 건축을 구현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건축 · 도시정책을 수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누리 기자〉

중앙일보 '싸고 편한 한옥' 정부서 지원한다
'신한옥 플랜' 대통령 보고, 신공법 개발에 360억 투입,
공공택지에 시범마을 조성

2010년 5월 4일 자 중앙일보

'싸고 편한 한옥' 정부서 지원한다
'신한옥 플랜' 대통령 보고, 신공법 개발에 360억 투입

한옥, 고루하거나 고색창연하다. 왠지 품격이 있어 보이지만 경복궁이나 북촌, 또는 남산 한옥마을을 가야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생활과 밀접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양한 용도로 한옥을 되살리려는 민간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도 한옥 살리기를 선언했다.

공사기간을 당길 수 있는 신공법 개발을 지원하고, 들녘과 한옥이 어우러진 풍경을 곳곳에 만들어 국토 디자인을 새로 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건축위)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격 향상을 위한 신(新)한옥 플랜'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농촌이고 서울이고 뜯었다 하면 아파트를 지으니까 조화가 잘 안 된다"며 "대도시나 지방 중소도시에서 한국적 특성은 살리면서 현대적인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옥은 건축비가 3.3㎡당 1000만~1500만원으로 일반 단독주택의 2~3배 수준이다. 비싸기 때문에 짓기가 망설여진다. 정부가 금융 지원과 신공법 개발에 대책의 초점을 맞춘 이유다. 건축위는 땅값이 싼 농어촌 지역에 한옥을 먼저 보급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한옥 신축 시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5000만원을 빌려주고, 5년 거치 후 15년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 연리는 3%로 시중은행 대출보다 저렴하다. 중구난방식 개발을 막기 위해 '농어촌 한옥 표준설계도서'도 개발 보급한다.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는 단독주택지구의 일부를 한옥마을 전용택지로 공급해 한옥마을 시범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건축위 표현대로 '춥고, 불편하며, 비싸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360억원이 투입된다. 방화 · 방재 · 방습 · 방충은 물론 공사기간을 앞당기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신공법 개발이 목표다. 연구개발이 끝나는 2014년 후에는 현재의 건축비에서 최대 40%까지 줄이는 게 목표다.

5년간 건축 밑그림 완성=국토해양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2010~2014년)'을 확정해 보고했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중기전략으로 국토 경관과 디자인, 기술, 산업 등을 아우르는 종합 계획이다. 1차 계획은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건축 · 도시환경 개선 ▶녹색 건축 · 도시 구현 ▶건축 · 도시 산업의 고도화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등 6대 핵심 전략을 선정했다. 전략별로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사업이나 지역별 건축문화 대표 거리 조성 등의 18개 실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궁욱 · 권호 기자 〉

한국일보 보금자리 '명품'으로 거듭난다
국가건축위, 디자인강화 계획

2010년 5월 3일 자 한국일보

보금자리 '명품'으로 거듭난다
국가건축委, 디자인강화 계획, 한옥 신축도 지원·첨단 주택화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이 세련된 디자인과 에너지 절감 기술이 가미된 '명품'아파트로 거듭난다. 옛 주택인 한옥도 '첨단주택'으로 저변이 넓어진다.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품격 향상 방안'등을 확정했다.

우선 보금자리지구별로 디자인 주제를 정해, 산이나 강 등 주변자연환경과 연계된 단지를 만들고 돌출 발코니 등 눈길 끄는 외관 설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구조 변형과 리모델링이 쉽도록, 2차 보금자리지구부터는 집 내부 내력벽을 없앤 무량(無梁)복합구조 기술을 적용하고 단열재와 창호 성능을 개선하는 등 친환경 기술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의 적용으로 보금자리주택은 1% 정도(3.3㎡당 10만원 안팎)의 분양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올해를 '한옥 르네상스'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목표 아래, 농어촌 지역에 한옥을 신축할 경우 5,000만원까지 저리 융자(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해주기로 했다. 또 신규 택지에 지어지는 단독주택 일부는 아예 한옥마을로 짓는 '신한옥 플랜'도 확정했다. 앞으론 한옥도 아파트에 비해 냉 · 난방에서 전혀 뒤질 것이 없도록, 첨단 설계시공기술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 · 도시설계 부문의 5년 단위(2010~2014년) 중기 전략인 '제1차 건축정책 기본 계획'도 확정 발표됐다. 위원회는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 · 도시 분야의 녹색 성장 기반 구축 ▶창조적 건축 문화 실현 등 3대 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6개 핵심 전략 및 18개 과제를 설정했다.

위원회는 첫째 목표인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도로 · 교량 · 철도 · 항만 등 사회기간시설과 공공건축의 디자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녹색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자원순환형 도시기반 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조적 건축문화 분야에서는 지역별 대표거리(브랜드 거리) 조성, 건축자산의 관광자원화 등이 추진된다.

〈이영창 기자〉

연합뉴스 李대통령 "국격에 맞는 도시·주택 개발해야"
국가건축정책委 주재… '에너지절감형 주택' 강조

2010년 5월 3일 자 연합뉴스

李대통령 "국격에 맞는 도시 · 주택 개발해야"
국가건축정책委 주재…… '에너지절감형 주택'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올해 들어 위기가 회복되는 과정에 있고, 그동안 국격도 많이 높아졌다"면서 "우리도 이제 국격에 걸맞은 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적한 뒤 "대도시나 지방 중소도시나 한국적 특성은 살리면서 현대적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과 덴마크 등의 사례를 들면서 에너지 절감형 주택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만 해도 계속 (에너지 절감 주택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면서 "건축학회나 건설업계에서도 그런 것은 잘 안하더라. 일부 있기는 한데 일본과 같이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덴마크) 스톡홀름 교외 도시에 있는 아파트에는 비상계단을 마감도 하지 않고 콘크리트 상태로 그대로 해놨더라"고 소개한 뒤 "우리는 비상계단을 꾸미고 돌로 만든다"면서 "(덴마크에서는) 굉장히 검소하게 지으면서 에너지 절약하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나를 기후 변화에 앞서가는 지도자로 보고 있는데 은퇴 후에 정상들이 찾아오면 에너지 많이 쓰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국격에 맞고 시대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에너지절약 주택 개발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명원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및 민간위원 10명과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업계 관계자,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태평 농림부장관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최중경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강병철 기자〉

연합뉴스 경복궁-한강 구간 '국가상징거리' 조성
국가건축정책위 첫 회의… 뉴하우징운동 등 추진

2009년 3월 30일 자

연합뉴스

경복궁—한강 구간 '국가상징거리' 조성
국가건축정책위 첫 회의…… 뉴하우징 운동 등 추진

정부는 수도 서울의 중심부인 경복궁에서 한강까지 약 7km 구간을 국가정체성과 국민자부심을 표출하는 이른바 '국가 상징 거리'로 조성키로 했다. 또 에너지절약과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뉴하우징(New Housing) 운동'과 함께 '4대강 살리기'의 일환으로 수변공간 디자인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는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경복궁에서 한강에 이르는 구간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럽고 멋있는 대표거리'로 조성키로하고, 현대사박물관 등 역사 ·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한편 기존 시설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광화문~숭례문' 구간에 비해 확장된 것으로, ▲광화문권역(경복궁~청계천)의 국가역사 문화의 중추공간 ▲시청권역(청계천~숭례문)의 수도 도시문화의 중심공간 ▲서울역권역(숭례문~서울역)의 국가수도의 관문, 교류 공간 ▲용산권역(서울역~노들섬)의 미래신성장 동력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에너지 주거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민주택에 최고의 디자인을 도입하는 등 '뉴하우징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 사업의 하나로 영국의 '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 등과 비슷한 형태로 임대주택에 저명한 국내외 건축가가 설계한 우수디자인을 도입하는 등 이른바 '디자인 보금자리' 사업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는 국토해양부 중심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와 병행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수변공간 디자인 사업을 통해 하천과 주변공간을 품격있는 국토환경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프랑스 정부가 추진한 파리 재개발 계획인 '그랑프로제(Grand Projet)' 등과 같이 서울을 문화도시, 녹색 도시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상징거리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이는 서울시가 조성중인 광화문 광장, 문화체육관광부가 계획중인 국민대한민국관 건립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마스터플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 심의와 관계부처의 건축정책 조정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대통령직속기구로 이날 첫 회의에는 정명원 위원장 등 민간위원 13명과 함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승관 기자〉

주요 활동일지

2005년 제1기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12월 제1기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발족

2007년 제2기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12월 제2기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발족
12월 건축기본법 제정

2008년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6월 건축기본법 시행
12월 1일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발족
12월 30일 제1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본회의

2009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1기

1월 16일~17일 위원회 1차 워크숍
2월 14 일~15일 뉴하우징운동 과제 관련 T/F 및 기획단 워크숍
2월 24일 도시수출 국가전략 추진 관련 회의
3월 30일 제1차 대통령 보고회
4월 27일 제2차 대통령 합동보고회(지역발전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
5월 20일 뉴하우징운동 관계기관 협의회
5월 26일 2009년도 제1차 합동연석회의
6월 12일 국가수도와 바다의 소통을 통한 녹색성장 해외전문가 초청토론(앙투완 그랑박)
6월 26일 위원회 2차 워크숍
7월 8일 건축3단체장(대한건축학회·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 초청 간담회
7월 20일 공공건축의 품격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회의
7월 21일 제2차 합동연석회의
7월 27일~9월 1일 국가상징거리 명칭 국민공고 및 심사당선작 발표
7월 31일 건축·도시·조경학회 회장단 초청 간담회
8월 1일 서울시 광화문광장 준공결과 분석 및 확장계획 관계기관 협의회
8월 14일 수변도시 비전공모
8월 20일 건설업·단체 초청 간담회
8월 25일 제3차 합동연석회의
9월 4일 제2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본회의
9월 10일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지역 공모(9월 10일~10월 9일)
9월 15일 국가상징거리 조성 심포지엄
10월 13일 제4차 합동연석회의
10월 28일 한옥활성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회의
11월 3일 제5차 합동연석회의
11월 6일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11월 11일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
11월 17일 제6차 합동연석회의
11월 20일 수변도시 비전공모 당선작 발표
11월 27일 새로운 삶과 디자인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12월 8일 제3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본회의
12월 29일 위원회 3차 워크숍

2010년

1월 7일 건축 3단체 초청 신년 간담회, 국가상징거리 종합계획 수정 관계기관 회의
1월 8일 2010년도 제1차 합동연석회의
1월 25일 제2차 합동연석회의
1월 25일~28일 강 중심 국토 재창조를 위한 친수지역 활용방안 회의
1월 29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방안 관련 회의
2월 1일 해피하우스 홈페이지 개설
2월 2일 전주 덕진구 인후2동 해피하우스 센터 개소
2월 8일 제3차 합동연석회의
2월 10일 건축행정선진화 관련 전문가 회의
2월 24일 국가상징거리 교통처리대책 관련회의, 대구 서구 평리3동 해피하우스 센터 개소
3월 3일 제4차 합동연석회의
3월 11일 서울 마포구 성산1동 해피하우스 센터 개소
3월 30일 제5차 합동연석회의
4월 5일 보금자리주택 디자인 시범단지 국제공모(LH, 국토해양부, 공모작 선정(5월 28일))
4월 13일 제6차 합동연석회의, 제4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본회의
4월 19일 제5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본회의
4월 20일 제7차 합동연석회의
5월 3일 제3차 대통령 보고회
5월 7일~8일 위원회 4차 워크숍
5월 12일 건축정책기본계획 고시
5월 19일 제8차 합동연석회의
6월 3일 4만불시대 건축·도시환경 전망 대응방안 회의
6월 8일 제9차 합동연석회의
6월 30일 '기회의 한국건축' 정책토론회
7월 22일 제10차 합동연석회의
7월 29일 제6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본회의

8월 31일 제11차 합동연석회의
9월 10일 공공건축 품격향상 건축 프로세스 개선 및 에너지효율 제고방안 관련회의
9월 28일 제12차 합동연석회의, '우리는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하나' 정책토론회
10월 22일~23일 위원회 5차 워크숍
10월 28일 제1차 건축·도시 정책아카데미(~2011년 3월 31일까지 제16차 진행)
10월 29일 제13차 합동연석회의,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백서발간 간담회
11월 3일 공공건축 품격향상 개선방안별 관계기관 회의
11월 9일 제14차 합동연석회의
11월 29일 제7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본회의
12월 10일 저탄소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
12월 13일 건축물 유지관리제도 세미나
12월 17일 녹색도시 인증제도 도입 방안 전문가 회의
12월 27일 제9차 건축·도시 정책아카데미
12월 28일 공공건축 프로젝트 추진 사례 세미나

2011년 국가건축정책정책위원회 제2기

1월 6일 제10차 건축·도시 정책아카데미
1월 7일 공사중단 및 방치건축물 정비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1월 11일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교육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1월 21일 비주거 건축물 저탄소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2월 10일 건축전문가(건축사 김영종 종로구청장) 초청 세미나
2월 16일 녹색건축 인증제도 통합 및 브랜드화 방안 관련 관계기관 회의
3월 24일 저탄소 친환경 건축물 현장 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3월 31일 제16차 건축·도시 정책아카데미
4월 14일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발족
4월 16일 현안협의회(위원장·3개 분과위원장·여성 대표위원)
4월 19일 위원회 간담회
4월 30일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발간
5월 2일~3일 위원회 1차 워크숍
5월 11일 현안협의회
5월 18일 건축 5단체장 정례 조찬 간담회
5월 31일 2011년도 제1차 합동연석회의
6월 8일 대통령 주재 조찬 간담회, 제4차 대통령 합동보고회(녹색성장위원회)
6월 15일 건축 5단체장 조찬 간담회, 현안협의회
6월 16일 제1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본회의
6월 24일 제1회 녹색건축한마당(녹색성장위원회, 국토해양부 합동)
6월 29일 2011년 제1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충청권)
7월 13일 건축 5단체장 조찬 간담회, 현안협의회
7월 15일 현안협의회
7월 20일 위원회·기획단 합동,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인제군)
7월 22일 건축 5단체장 조찬 간담회(건축문화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제도기반 구축 관련)
7월 25일 제2차 합동연석회의
7월 26일 건축문화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관련기관 회의
8월 3일 건축물 냉·난방 패턴 변화추이 및 전망 관련 전문가 회의
8월 8일 현안협의회
8월 9일 서민 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 정책방안 관련 회의
8월 10일 건축 5단체장 조찬 간담회
8월 16일 공원·광장 등 공공공간의 확충 및 이용활성화 관련 회의
8월 30일 제2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호남권)
9월 1일 현안협의회
9월 19일 제3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동남권)
9월 21일 제1기·제2기 위원회 합동 조찬 간담회
9월 22일 4대강 한강보 건설 현장 방문
9월 29일~10월 1일 UIA 세계대회 유치 지원(일본 동경)
10월 7일 제4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대경권)
10월 11일 한옥마을 시범조성을 위한 관련 지자체 업무 협의회
10월 12일 경기도 건축정책기본계획 설명회
10월 13일 주택·건설 관련 단체장 초청 조찬 간담회
10월 19일 건축 5단체장 조찬 간담회
11월 9일 신진 건축사 발굴·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
11월 23일 서민 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 정책방안 마련 관련 회의
11월 10일 제3차 합동연석회의
11월 16일 건축 5단체장 조찬 간담회
11월 21일 제5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수도권)
11월 28일 건축설계산업 육성 관련 전문가 회의
12월 2일 건축문화 행사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12월 6일 제6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제주·강원권)
12월 15일~16일 위원회 2차 워크숍
12월 30일 공공건축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인력증원 협의(행정안전부)

2012년

1월 2일 건축 설계·시공·자재의 정보 통합 및 표준체계 구축 관련 관계기관 회의
1월 13일 2012년도 제1차 합동연석회의, 건축문화행사 내실화·활성화를 위한 추진단 회의
1월 16일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관련 관계기관 회의
1월 18일 건축 5단체장 조찬 간담회, 현안협의회
1월 30일 현안협의회

2월 1일 건축교육제도 선진화방안 관련 회의
2월 2일 한옥마을 시범조성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회
2월 9일 제2차 합동연석회의
2월 13일 지적정보 활용 검토를 위한 세움터 구축현황 및 현안사항 발표회
2월 14일 세종시 박물관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관련 회의
2월 15일 조경·소방·전기·정보통신 등 건축 관련 기술단체장 초청 조찬 간담회
2월 29일 해외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수립 및 제도개선 관련 세미나
3월 8일~9일 시·도 건축·도시직 공무원 합동 워크숍
3월 14일 건축 5단체장 조찬 간담회
3월 15일 녹색건축한마당 추진 관련 회의, 신진건축사 발굴·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회의
3월 22일 제3차 합동연석회의
3월 23일 한옥과 함께하는 건축창의체험 추진(5월 4~5일) 관계기관 협의회
4월 5일 제2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본회의
4월 18일 주택·건설 관련 단체장 초청 조찬 간담회, 제4차 합동연석회의
4월 19일 2012년 제1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충청권)
4월 20일 2012년 제1회 건축·도시 정책토론회
(auri 공동주최, 건축설계의 위기,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극복하자)
4월 25일 제5차 대통령 보고회
5월 3일 대통령 직속 전체 위원회 한마당 행사(BH 녹지원)
5월 4일 저탄소 녹색건축·도시 건설을 위한 Mayor's Forum(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주최)
5월 9일 건축 5단체장 조찬 간담회
5월 10일 제5차 합동연석회의, 경인 아라뱃길 현장 방문
5월 24일 청와대 출입 지방지 기자단 초청 오찬 간담회
5월 30일 제2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호남권)
5월 31일 여수세계박람회 전시관 등 건축물 현장 탐방
6월 14일 제6차 합동연석회의, 제1,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백서발간 착수회의
6월 20일 제1회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관계기관 협의회
6월 21일 제2회 건축·도시 정책토론회(auri 공동주최, 건축·도시 관련 공모사업의 성과와 과제)
6월 25일 제2회 녹색건축한마당(녹색성장위원회, 국토해양부 합동)
7월 5일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7월 8일 건축물 패시브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 개발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7월 10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제도기반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7월 11일 제3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동남권)
7월 17일 신진 건축가 초청 조찬 간담회, 건축사 손해배상책임제도 활성화 방안 관련 회의
7월 18일 건축 5단체장 조찬 간담회,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정비방안 관련 회의
7월 19일 제7차 합동연석회의
7월 24일 건축물 패시브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 개발 공개 세미나
7월 30일 제3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본회의
8월 6일~11일 제13회 도코모모 국제회의 유치 지원(핀란드 헬싱키)
8월 8일 건축의 날 훈격 격상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회
8월 16일 제8차 합동연석회의
8월 17일 제1회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시행위원회
8월 22일 원로 건축가 초청 조찬 간담회
8월 30일 제3회 건축·도시 정책 토론회(auri 공동주최, 우리의 건축전문교육, 이대로 좋은가)
9월 12일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당선작 공개심사(LH)
9월 13일 제9차 합동연석회의
9월 14일 제4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강원·제주권)
9월 19일 건축 5단체장 조찬 간담회
9월 20일 제1회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작품공모(9월20일~10월5일)
10월 5일 제1회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작품공모 연장(10월5일~12일)
10월 12일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단 합동 워크숍
10월 16일 지적전산파일·건축사 제공을 위한 건축행정정보화사업단 회의
10월 18일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정비방안 전문가 회의
10월 26일 초고층건축물 층별효용 가치평가 및 제도적 활용방안 관계전문가 회의
10월 31일 제5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대경권)
11월 7일 녹색인증 건축물의 감정평가 기법 및 제도화 방안 관계전문가 회의
11월 8일 제10차 합동연석회의
11월 14일 건축 5단체장 조찬 간담회
11월 15일 학교시설 유지관리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관련 회의
11월 21~23일 2012 제1회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시상식 및 컨퍼런스
11월 22일 제6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수도권)
12월 3일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정책방향 세미나
(국토부, 지역개발학회, 전북연 공동개최)
12월 5일 제4회 건축·도시 정책 토론회(auri 공동주최, 2013 우리의 건축정책을 말하다)
12월 11일 녹색건축대전 수상자 및 신진건축사 설계공모전 당선자 초청 오찬 간담회
12월 12일~13일 위원회 3차 워크숍
12월 17일 한국 전통정원 보급 활성화관련 전문가 회의
12월 18일 건축·도시분야 계획 및 설계용역 발주평가제도 관계기관 회의

기획단 직원 현황

구분	성명	직급(위)	원소속	근무기간
단장	신혜경	국토해양비서관	대통령실	2008년 12월 1일~2009년 8월 12일
	신종호	국토해양비서관	대통령실	2009년 10월 1일~2011년 2월 28일
	이재홍	국토해양비서관	대통령실	2011년 3월 1일~2012년 9월 5일
	정병윤	국토해양비서관	대통령실	2012년 9월 20일~
부단장	강성식	일반직고위공무원	국토해양부	2008년 11월 17일~2009년 11월 29일
	박민우	일반직고위공무원	국토해양부	2009년 12월 1일~2010년 9월 26일
	유병권	일반직고위공무원	국토해양부	2010년 10월 4일~2011년 4월 13일
	한창섭	일반직고위공무원	국토해양부	2011년 4월 13일~2012년 9월 20일
	김동호	일반직고위공무원	국토해양부	2012년 10월 22일~
협력관	권기범	전문계약직(가급)	-	2009년 1월 13일~2010년 7월 31일
	이동환	전문계약직(나급)	-	2009년 2월 28일~2012년 7월 3일
협력관실	이상욱	지방시설사무관	경상북도	2011년 5월 23일~2012년 5월 22일
	허병규	지방시설사무관	강원도	2012년 6월 7일~
	오필기	지방시설사무관	대전광역시	2011년 7월 1일~2012년 6월 30일
	이근호	지방시설사무관	대전광역시	2012년 7월 1일~
	최민아	연구위원	LH공사	2011년 6월 9일~2011년 10월 31일
	이현숙	기술직5급	대한지적공사	2011년 12월 7일~
전략기획과	김동천	과장	국토해양부	2008년 11월 17일~2009년 7월 31일
	윤종호	과장	국토해양부	2009년 8월 1일~2011년 6월 22일
	박병석	과장	국토해양부	2011년 6월 22일~
	박록주	행정사무관	행정안전부	2009년 1월 1일~2011년 2월 24일
	윤석태	행정사무관	행정안전부	2011년 2월 25일~2012년 5월 29일
	허필영	행정사무관	행정안전부	2012년 5월 30일~
	김학두	지방시설사무관	충청북도	2009년 1월 6일~2010년 1월 5일
	유영광	지방시설사무관	전라남도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정동환	지방시설사무관	전라남도	2011년 1월 13일~2012년 1월 12일
	강권	지방시설사무관	광주광역시	2012년 1월 13일~
	배성희	행정주사	국토해양부	2008년 11월 26일~2009년 11월 1일
	곽윤주	행정주사	국토해양부	2009년 11월 2일~2010년 11월 8일
	남선희	행정주사보	국토해양부	2010년 11월 22일~
	최호룡	계약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09년 1월 12일~2011년 3월 4일
	김흥수	계약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1년 4월 25일~2011년 7월 25일
	함경식	계약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1년 7월 25일~2011년 12월 16일
	유호걸	계약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1년 12월 19일~
	이주란	계약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09년 1월 12일~2010년 7월 31일
	김예니	계약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09년 1월 12일~

구분	성명	직급(위)	원소속	근무기간
건축진흥과	엄정희	과장	국토해양부	2008년 11월 17일~2010년 7월 31일
	박승기	과장	국토해양부	2010년 8월 2일~2010년 9월 16일
	김성호	과장	국토해양부	2010년 9월 17일~2011년 9월 14일
	조한권	과장	국토해양부	2011년 9월 15일~
	배성호	시설사무관	국토해양부	2008년 11월 17일~2010년 5월 31일
	김연희	시설사무관	국토해양부	2010년 6월 1일~2010년 8월 1일
	오진수	시설사무관	국토해양부	2010년 8월 2일~
	정태권	지방시설사무관	부산광역시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염준호	지방시설사무관	경기도	2009년 1월 5일~2010년 1월 4일
	황학용	지방시설사무관	경기도	2010년 1월 5일~2010년 3월 10일
				2010년 8월 2일~2012년 1월 4일
	김용천	지방시설사무관	경기도	2012년 1월 5일~
	빈태봉	차장	LH공사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권혁삼	연구위원	LH공사	2009년 8월 3일~2010년 8월 2일
	최민아	연구위원	LH공사	2010년 1월 1일~2010년 3월 10일
				2010년 8월 2일~2011년 6월 8일
	전주영	연구위원	LH공사	2010년 1월 1일~2010년 3월 10일
	김영현	연구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0년 8월 2일~2010년 12월 31일
	임현성	연구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1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
	엄운진	연구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년 1월 2일~2012년 12월 31일
	방종식	기술직4급	대한지적공사	2011년 6월 7일~
	최정희	연구위원	건축사협회	2011년 7월 4일~2012년 3월 19일
건축디자인과	박승기	과장	국토해양부	2008년 11월 17일~2010년 8월 1일
	이우제	과장	국토해양부	2010년 8월 2일~2010년 12월 15일
	박병석	과장	국토해양부	2011년 1월 3일~2011년 6월 21일
	김효정	과장	국토해양부	2011년 8월 12일~2012년 7월 17일
	김용태	과장	국토해양부	2012년 7월 18일~
	김연희	시설사무관	국토해양부	2010년 8월 2일~ 2012년 2월 28일
	권유정	시설사무관	국토해양부	2012년 2월 29일~
	최영수	행정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2008년 12월 31일~2009년 5월 24일
	정은영	행정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9월 16일~2011년 7월 30일
	현정규	행정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8월 1일~
	김영식	지방시설사무관	서울특별시	2009년 1월 1일~2009년 5월 24일
	송종훈	지방시설사무관	서울특별시	2010년 8월 2일~2011년 12월 31일
	안종희	지방시설사무관	서울특별시	2012년 1월 1일~

구분	성명	직급(위)	원소속	근무기간
건축디자인과	김상운	지방시설사무관	제주특별자치도	2009년 5월 25일~2009년 12월 31일
	황학용	지방시설사무관	경기도	2010년 3월 11일~2010년 8월 1일
	유영광	지방시설사무관	전라남도	2010년 1월 1일~2010년 3월 10일
	강성일	차장	LH공사	2009년 5월 25일~2009년 12월 31일
	전주영	연구위원	LH공사	2010년 3월 11일~2011년 10월 31일
	최민아	연구위원	LH공사	2010년 3월 11일~2010년 8월 1일
	임정민	연구위원	LH공사	2011년 11월 1일~
	신민준	계약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0년 8월 9일~2011년 1월 31일
	김현우	계약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1년 2월 1일~
도시디자인과	안정훈	과장	국토해양부	2008년 11월 17일~2010년 2월 17일
(2010년	이우제	과장	국토해양부	2010년 3월 2일~2010년 8월 1일
8월 2일	조태홍	행정사무관	기획재정부	2009년 1월 2일~2010년 7월 31일
폐지)	최영수	행정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5월 25일~2009년 12월 30일
	이희란	행정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8월 17일~2010년 7월 31일
	김영식	지방시설사무관	서울특별시	2009년 5월 25일~2009년 12월 31일
	송종훈	지방시설사무관	서울특별시	2010년 1월 1일~2010년 8월 1일
	김상운	지방시설사무관	제주특별자치도	2009년 1월 1일~2009년 5월 24일
	강성일	차장	LH공사	2009년 1월 1일~2009년 5월 24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1차 인천송도 워크숍(2011년 5월 2일~3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2차 평창 알펜시아 워크숍(2011년 12월 15일~16일)



경인 아라뱃길 방문(2012년 5월 10일)



한강 이포보 방문(2012년 9월 22일)



2012 제1회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대상,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사진 박영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진 남궁선



서울 도서관, 사진 윤준환



구 서울역사, 자료제공 문화서울역 284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